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8.03**



**충청북도**



# 제 출 문

충청북도지사 귀하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03

사단법인 충북경제경영연구원



# 1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제 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	1
2. 계획의 기본방향 .....	1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	2
4. 계획의 범위와 절차 .....	3

## 제 2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1. 일반현황 .....	7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 .....	17
3.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분석 .....	66
4. 정책적 시사점 .....	68
5. SDGs와 연계한 현황분석 .....	70

## 제 3장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1. 국제기구의 노력 .....	77
2. 선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	81
3.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	93
4.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	104
5. 청풍명월21 기본계획 평가 .....	116
6. 미래비전2040과의 연계성 검토 .....	120

## 제 4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1. 지속가능발전 여건변화 전망 .....	127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정 방법 .....	134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정 .....	139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 .....	143

## 제 5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 계획의 개요 .....	149
2. 환경영역 세부 추진계획 .....	152
3. 사회영역 세부 추진계획 .....	167
4. 경제영역 세부 추진계획 .....	194
5. 기타영역 .....	209
6. SDGs와의 연계성 검토 .....	222

## 제 6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	231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기본방향 .....	233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	235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목표설정 .....	243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방안 .....	247

## 제 7장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발전체계 .....	251
2. 법규와 제도 개선 .....	256
3. 추진계획별 관련 부서 .....	259
4. 지속가능발전 조직체계 개편 방안 .....	263

## 2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세부이행계획

1. 세부 이행계획의 개요 .....	1
2. 환경영역 세부 이행계획 .....	2
3. 사회영역 세부 이행계획 .....	42
4. 경제영역 세부 이행계획 .....	63
5. 기타영역 세부 이행계획 .....	93

# 1편 표 목차

[표 2-1] 충청북도 행정구역 .....	7
[표 2-2] 충청북도 월별 평균기온 .....	9
[표 2-3] 충청북도 월별 강수량 .....	10
[표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	11
[표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	12
[표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3
[표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4
[표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4
[표 계속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5
[표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	16
[표2-10] 충청북도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	16
[표2-11]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	17
[표2-12] 국내 총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18
[표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	18
[표 계속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	19
[표 2-14] 충청북도 상수도 현황 및 전망 .....	20
[표 2-15] 충청북도 공공하수처리 재이용 현황(2016) .....	20
[표 2-16]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충주호) .....	20
[표 2-17]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대청호) .....	21
[표 2-18]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 와 전망 .....	21
[표 2-19]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	22
[표 2-20] 국가 생물종 수 및 권역 내 멸종위기 종 수 추세와 전망 .....	23
[표 2-21] 충청북도 생물 종 수 및 국내 생물 종 수 비율 .....	23
[표 2-22]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세와 전망 .....	24
[표 2-23]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24
[표 2-24]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	25
[표 2-25]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	26
[표 2-26]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	27
[표 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	27
[표 계속 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	28
[표 2-28] 충청북도 전체 고용률 .....	29
[표 2-29]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	29
[표 2-30] 충청북도 유형별 고용률 및 실업률 .....	30
[표 2-31]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30
[표 2-32]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현황 .....	31
[표 2-33]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현황 .....	32
[표 2-34]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현황 .....	33

[표 2-35]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34
[표 2-36]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율 추세와 전망	34
[표 2-37]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5
[표 2-38]	전국 성별 경제활동 인구	36
[표 2-39]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36
[표 2-40]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37
[표 2-41]	독거노인 비율	38
[표 2-42]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39
[표 2-43]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40
[표 2-44]	임대주택 재고 현황	41
[표 2-45]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42
[표 2-46]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42
[표 2-47]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42
[표 2-48]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43
[표 2-49]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44
[표 2-50]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45
[표 2-51]	충청북도 다문화가정 현황 (2015.1.1.기준)	46
[표 2-52]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	47
[표 2-53]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	48
[표 2-54]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49
[표 2-55]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율 현황	50
[표 2-56]	전국 주요 사인별 사망률	51
[표 2-5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률	51
[표 2-58]	충청북도 사망원인별 사망률(2015년)	52
[표 2-59]	충청북도 65세 이상 사인별 사망률	53
[표 2-60]	기대수명(전국기준)	53
[표 2-61]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54
[표 2-62]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55
[표 2-63]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56
[표 2-64]	충청북도 교육기관현황	57
[표 2-65]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58
[표 2-66]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59
[표 2-67]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60
[표 2-68]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61
[표 2-69]	문화컨텐츠 사업체 수 현황	62
[표 2-70]	지정등록문화재 시·도별 현황	63
[표 2-71]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	64
[표 2-72]	충청북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65
[표 2-73]	충청북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65
[표 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70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71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	72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	73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	74
[표 3-1] 의제21(Agenda21) .....	78
[표 3-2] 10YEP CSP 주요목표 .....	79
[표 3-3]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	80
[표 3-4] 국제기구들의 노력 .....	81
[표 3-5] 영국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주요내용 .....	82
[표 3-6] 프랑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83
[표 3-7]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분야별 지표 .....	84
[표 3-8]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지표 .....	85
[표 3-9] 유럽연합 지속가능발전 전략 .....	86
[표 3-10] EU의 유럽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발전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	87
[표 3-11] EU의 유럽 녹색수도 사례도시 .....	87
[표 3-12] 독일 프라이부르크 부문별 지표 .....	88
[표 3-13]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	90
[표 3-14]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 .....	91
[표 3-15] 선진국 지속가능발전 사례 요약 .....	92
[표 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	95
[표 계속 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	96
[표 3-17]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	98
[표 3-18]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변화전망 .....	100
[표 3-1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	103
[표 3-20] 제3차 국가에너지 4대 실행 전략 .....	108
[표 5-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	150
[표 5-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이행과제 .....	151
[표 5-3] 1인 1일당 물 사용량 변화 .....	152
[표 5-4]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 확률 강우량 .....	154
[표 5-5]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현황 .....	157
[표 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	158
[표 계속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	158
[표 5-39]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목표지표 .....	160
[표 5-6] 저소득취약계층의 비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역별 비율 .....	168
[표 5-7] 성별 노인 빈곤현황 .....	169
[표 5-8] 시군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 .....	169
[표 5-9] 충북 공공임대주택 현황 ( '14) .....	171
[표 5-10] 충청북도 시·군 인구현황 .....	173
[표 5-11]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	174
[표 5-12] 충청북도 시·군 재정현황 .....	174

[표 5-13] 개인특성별 빈곤율	175
[표 5-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현황(전국기준)	175
[표 5-15]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175
[표 5-16] 시·군별 인구이동	176
[표 5-17] 충북의 성평등 수준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178
[표 5-18] 충북의 성평등수준 - 가족	179
[표 5-19] 비정규직 임금수준	180
[표 5-20]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현황(2016년)	180
[표 5-21] 장애인 고용현황	181
[표 5-22] 장애인 의무 고용률	181
[표 5-23] 충청북도 교육청 재원별 교육예산	183
[표 5-24] 충북 시군별 자살인구·자살률 추이	184
[표 5-25] 청소년(5~24세)의 사망원인	185
[표 5-26]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185
[표 5-27]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186
[표 5-28] 청소년의 흡연을	187
[표 5-29] 청소년의 음주를	187
[표 5-30] 청소년의 사망자 원인(인근도시 비교)	188
[표 5-31]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인근도시 비교)	189
[표 5-32]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인근도시 비교)	189
[표 5-33] 청소년의 흡연실태(인근도시 비교)	189
[표 5-34] 청소년의 음주실태(인근도시 비교)	190
[표 5-35]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을	193
[표 5-36] 시군별 병의원현황	195
[표 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196
[표 계속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197
[표 5-40] 농가 및 농가인구	205
[표 5-41] 경지면적	206
[표 5-42] 로컬푸드 매장 설치 현황	207
[표 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207
[표 계속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208
[표 5-44] 충북지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209
[표 5-45] 충북도민의 가장 주된 사회 불안요인	210
[표 5-46]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10
[표 5-47] 시군별, 성별, 연령별 안전 인식도 측정	211
[표 5-48] 지역별 범죄피해건수, 추정피해건수, 추정피해율	212
[표 5-49] 국선 법률구조 현황(지역별)	213
[표 5-50] 연도별 충청북도 투표율	215
[표 5-51]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 현황	215
[표 5-52] 충청북도 연도별 재정 전망	217
[표 5-53] 충청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현황	217

[표 5-5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충북지역 민관협력기구 설치현황 .....	220
[표 5-55] SDGs 목표의 기본구성 .....	222
[표 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223
[표 계속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224
[표 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225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226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227
 [표 7-1]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채택 방법 .....	 252

# 1편

## 그림 목차

[그림 2-1] 충청북도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	8
[그림 2-2] 충북의 지형 및 수계 .....	9
[그림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	11
[그림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	12
[그림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3
[그림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4
[그림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15
[그림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	16
[그림 2-10]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8
[그림 2-11]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추이 .....	19
[그림 2-12]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 와 전망 .....	22
[그림 2-13]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	22
[그림 2-14]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25
[그림 2-15]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2015년 기준) .....	26
[그림 2-16] 충청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	28
[그림 2-17]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	29
[그림 2-18]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연도별 추이 .....	31
[그림 2-19]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전망 .....	31
[그림 2-20]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연도별 추이 .....	32
[그림 2-21]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유형별 비율(2015년 기준) .....	33
[그림 2-22]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연도별 추이 .....	34
[그림 2-23]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추이 .....	35
[그림 2-24]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 추이 .....	37
[그림 2-25]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및 부양비 추이 .....	38
[그림 2-26] 독거노인 비율 추이 .....	39
[그림 2-27]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추이 .....	40
[그림 2-28]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	41
[그림 2-29]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43
[그림 2-30]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추이 .....	44
[그림 2-31]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	45
[그림 2-32]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추이 .....	46
[그림 2-33] 충청북도 장애인 등록현황 추이 .....	48
[그림 2-34]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비율(2015년) .....	49
[그림 2-35]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	49
[그림 2-36]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을 추이 .....	50
[그림 2-3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 비율(2015년) .....	52
[그림 2-38]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	54

[그림 2-39]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연도별 추이	55
[그림 2-40]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56
[그림 2-41] 충청북도 교육기관 연도별 추이	57
[그림 2-42]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추이	58
[그림 2-43]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추이	59
[그림 2-44]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60
[그림 2-45]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추이	61
[그림 2-46] 문화 콘텐츠 사업체 수 현황	62
[그림 2-47]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 (전국과 비교)	64
[그림 3-1] SDGs 17개 목표	79
[그림 3-2]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97
[그림 3-3]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99
[그림 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102
[그림 3-5] 제4차 국토종합계획	105
[그림 3-6] 제4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	107
[그림 3-7]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성	108
[그림 3-8] 에너지 비전 2030	109
[그림 3-9] 충북 에너지 기본계획 비전	112
[그림 3-10]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체계	113
[그림 3-11] 충청북도 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114
[그림 3-12] 충청북도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 사업 리스트	115
[그림 4-1] SDGs 17개 목표	135
[그림 4-2]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36
[그림 4-3] 타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37
[그림 4-4] 충북도정 비전 및 전략	137
[그림 4-5] 충북 2040 미래비전 체계	138
[그림 4-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141
[그림 5-1] 전 지구 평균기온(1~11월) 편차 시계열	155
[그림 5-2] 충북 여름철 평균기온 변화(최근 10년)	155
[그림 5-3] 전국 쇠퇴도시 현황	165
[그림 5-4] 축소도시현황	165
[그림 5-5]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167
[그림 5-6] 충청북도 유형별 수급자 현황	168
[그림 5-7] 연도별 주택보급율	170
[그림 5-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172
[그림 5-9]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	176
[그림 5-10] 비정규직 월평균 상대임금	182
[그림 5-11] 학력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182

[그림 5-12] 한국의 노인 자살률 .....	191
[그림 5-13] 주요국가 노인 자살률 .....	191
[그림 5-14]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추이 .....	192
[그림 5-15] IMF의 보고서 .....	198
[그림 5-16]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	199
[그림 5-17] 상용정액급여 .....	200
[그림 5-18] 상용 총 근로시간 .....	201
[그림 5-19] 근로시간당 급여액 .....	202
[그림 5-20] 주요 도시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	204
[그림 5-21] 도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	204
[그림 5-22] 경지면적 .....	206
[그림 5-23]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	214
[그림 5-24] 충청북도 청렴도 측정결과 .....	214
[그림 5-25]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현황 .....	218
[그림 5-26] 충청북도 지역소득 주요지표 .....	218
[그림 5-27] 충청북도 지방세 지출현황 .....	219
[그림 7-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	263
[그림 7-2] 충북 지속가능발전 전담 조직 설치(안) .....	264
[그림 7-3] 충북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안) .....	265

## 2편 표 목차

[표8-1] 시군별 생물종수 .....	15
[표8-2]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	15
[표8-3]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	16
[표8-4] 시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16
[표8-5] 시군별 생태계 교란생물 종 수 .....	17
[표8-6] 주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 .....	23
[표8-7] 미세먼지 농도 비교 .....	23
[표8-8] 충북 강력범죄 .....	28
[표8-9] 충북 폭력범죄 .....	28
[표8-10] 충북 아동학대 .....	29
[표8-11] 아동관련지표 .....	30
[표8-12] 지역의료시설 .....	59
[표8-13] 응급의료기관 수(2015년) .....	59
[표8-14]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지표 .....	60
[표8-15] 생산가능인구 추이 .....	65
[표8-16] 주력산업 종사자수 현황 .....	66
[표8-1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81
[표8-18] 충북 신성장산업(6+3)구성 .....	82
[표8-19] 충북지역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 .....	86
[표8-20] 로컬푸드 매장 설치현황(2016년) .....	87
[표8-21] 로컬푸드 매장 운영현황(2016년) .....	88

## 2편 그림 목차

[그림8-1] 공유자원의 종류 .....	78
------------------------	----

# I 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01. 계획의 개요



# 1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01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가. 배경

-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2015년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수립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나. 목적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충청도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2. 계획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세부목표, 정책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 지속가능발전 개념 : 환경 + 경제 + 사회

-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함.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과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국내외 주요 추진 경과 (기울임:국외)

연도	주요 추진 내용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환경개발회의(UNCED)</li> <li>- 리우선언, 의제21 채택</li> <li>-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출범</li> </ul>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시행</li> </ul>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li> <li>·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li> </ul>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li> <li>-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2006-2010)</li> <li>-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li> <li>·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li> <li>-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수립</li> <li>-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li> <li>·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유치(인천 송도)</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li> <li>-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li> <li>-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li> <li>·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0차 UN 총회</li> <li>-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li> <li>· 제3차 기본계획 수립</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li> <li>- 국무회의 심의·확정('16.1)</li> </ul>

## 4. 계획의 범위와 절차

###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이행계획 연도 : 2018년 ~ 2022년(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중기연도 : 중기목표 2027년
  - 장기목표 : 2037년(유엔의 SDGs 2030 목표 연계)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체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연구방향 설정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황 조사 및 전망
  - 관련 현황 조사 및 전망을 통한 여건분석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 수립
  - 분야별 목표 및 주요과제 설정
  - 주요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20년간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충청북도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핵심성과지표 및 성과

## I. 계획의 개요

---

### 나.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 분석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모델 검토
  - 국내 지속가능발전 현황분석, 주요 외국도시의 정책사례 조사
  - 충청북도 현황과 정책 환경 분석
- 자문위원 구성
  - 연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주요과제 선정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분과별 회의 주제 등

## 0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0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1. 일반 현황

#### 가. 위치와 지역적 특성

##### □ 지리적 위치

- 충북은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며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도로서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1개 광역시, 5개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음.
- 동쪽은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의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와 접하고, 서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과 접하고 있음.
- 충북의 지리적 위치는 서북으로 차령산맥과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지에 위치하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36°00'35"에서 37°15'20"간을 차지하고 경도상으로 동경 127°16'40"에서 128°38'15"간을 차지하고 있음.

##### □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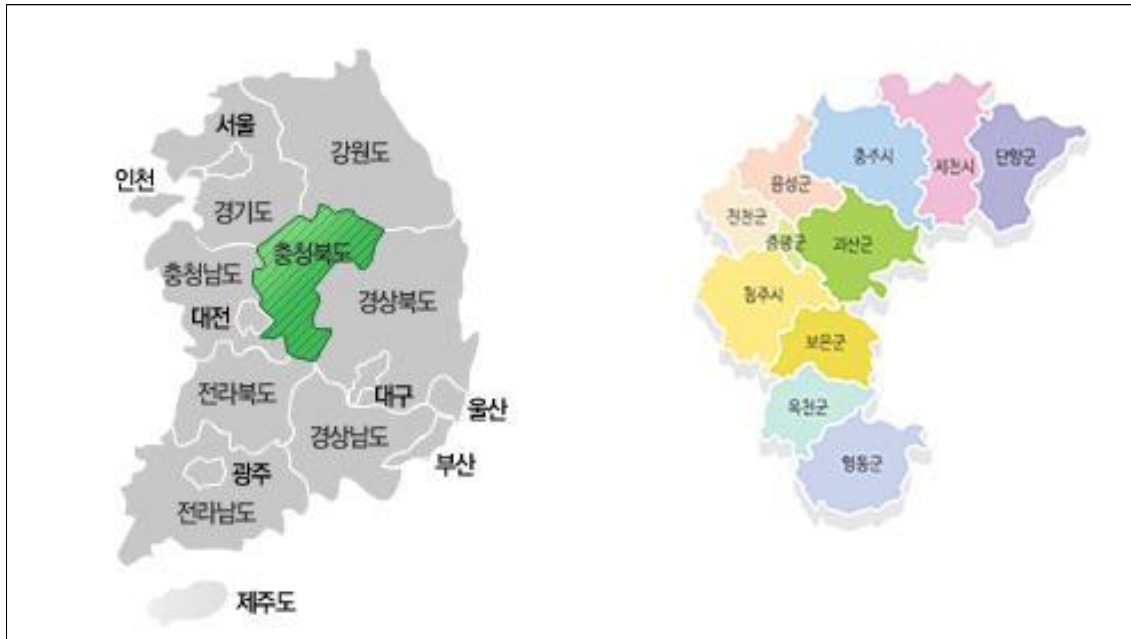
- 충청북도는 청주, 충주, 제천시 3개의 시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 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 15개의 읍과 87개의 면, 5개의 행정동, 136개의 법정동이 구획되어있으며, 제천시와 옥천군에 각각 북부, 남부출장소가 있음.

[표 2-1] 충청북도 행정구역

시	군	구	읍	면	동		통	리	반	출장소
					행정	정		행정		도
3	8	4	15	87	51	136	1,791	2,922	18,864	2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1] 충청북도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 충청북도는 국토공간상으로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 자연환경

- 격해율이 큰 충청북도는 북동쪽에 태백산맥, 동쪽에 소백산맥, 북서쪽에 차령산맥으로 차단된 거대한 분지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예를 들면, 북쪽에 위치한 충주는 서울에 비하여 1월의 평균 기온이 2°C가량이나 낮고 제천은 3°C까지 낮으며 남쪽에 위치한 추풍령은 같은 위도선 상에 있는 포항보다는 2°C나 낮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동쪽 경계 지역은 지형이 험준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달리고 있어 강원도 지방과 같이 전작 중심의 농업경관을 나타냄.
- 하천은 남한강과 금강 2대 하천이 흐르며,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도내에 들어오면서 서남류하다가 단양부근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바꾸고 도중의 제천 황강리를 지나 충주부근에서 달천과 합류하면서 북류하여 경기도를 지나 서해로 흘러 들어감. 강 유역에는 단양 제천 한수 충주 연풍 괴산 음성 등의 침식분지가 발달되어 산지가 많은 동북부지방에 중요한 생산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2-2] 충청북도의 지형 및 수계



#### □ 기후

- 충청북도는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하고, 여름은 습윤한 북태평양에서 부는 남동계절풍으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이룸. 전국적으로는 북한지방과 남한지방의 점이적인 기후로서 온화함.
- 연평균기온은 북부의 단양군이 11.6℃, 남부의 추풍령이 11.5℃로 0.1℃ 차이밖에 안 되나, 1월 평균기온은 단양군이 -4.1℃, 추풍령이 -3.1℃로 1℃ 차를 보이고, 8월은 단양군이 26.1℃인데 추풍령은 24.7℃로 오히려 단양군이 1.4℃ 높음. 중간 지점에 위치한 청주시는 연평균기온이 11℃로 전국 평균기온과 같음.

[표 2-2] 충청북도 월별 평균기온

(단위 : ℃)

구분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	12.5	-1.6	-0.9	5.2	14.0	17.9	23.0	25.5	25.4	22.4	14.4	8.2	-3.5
2006	13.3	0.2	0.7	6.1	12.1	18.9	22.9	23.8	26.9	20.2	17.3	8.7	1.5
2007	13.7	0.5	4.3	7.2	12.4	18.9	23.1	24.7	26.6	21.7	15.4	7.0	2.2
2008	13.4	-1.0	-1.0	7.7	14.4	18.9	22.1	27.1	25.7	25.5	16.0	7.0	0.9
2009	13.0	-2.7	2.8	6.3	12.5	18.8	22.9	24.4	25.6	21.7	15.9	7.4	-0.1
2010	13.0	-3.2	2.1	5.3	10.4	18.5	24.0	26.6	28.0	22.8	14.8	7.0	0.0
2011	12.8	-5.9	1.8	4.5	11.9	19.3	23.7	26.1	26.1	21.3	13.6	1.2	0.0
2012	12.7	-1.9	-1.3	5.8	13.3	19.9	23.8	26.3	27.3	21.1	14.8	6.2	-3.1
2013	13.3	-2.7	0.0	6.4	10.8	19.2	24.6	27.2	28.0	21.8	15.9	6.7	1.1
2014	13.9	0.1	2.9	8.5	14.7	19.8	23.5	26.5	24.9	22.3	15.5	9.0	-1.2
2015	14.0	0.2	2.2	7.5	13.9	20.0	23.7	25.4	26.3	21.5	15.3	9.6	2.5

주) 충청북도청 통계연보(연도별 통계표)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연평균강수량은 전국 평균 강수량 보다 약 100mm가 많은 1,100mm로 다우지역인 소백산맥의 남사면 보다 적게 내린다. 부산광역시·여주시·진주시·마산시·밀양시 등지와 태백산맥 동사면의 강원도 동부지역보다는 적은 편이나, 대구광역시·포항시·인천광역시 등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 강수량의 계절적 배분은 남한의 대부분이 여름 3개월(6, 7, 8월) 간에 50%의 집중강우 현상을 보이는데, 이곳은 58% 이상이 내리기 때문에 간혹 수해를 입는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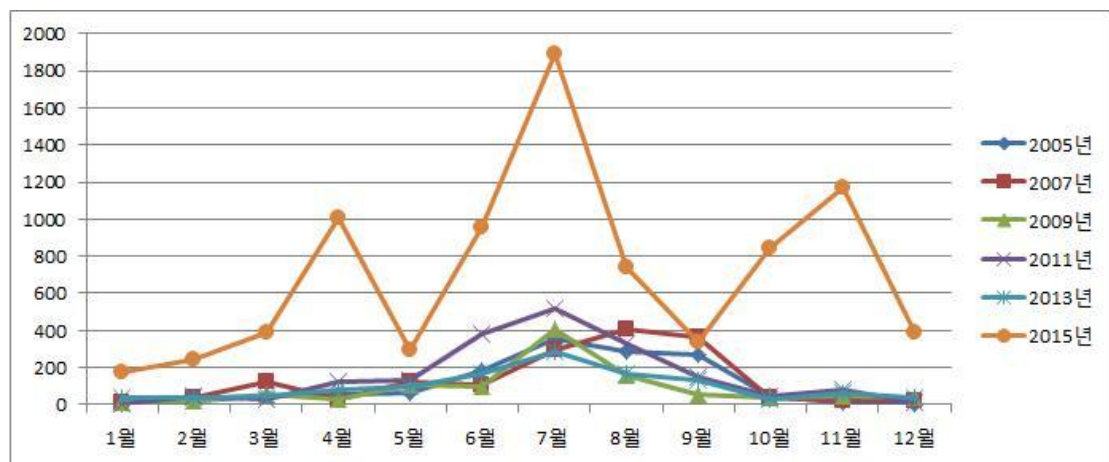
[표 2-3] 충청북도 월별 강수량

(단위 : mm)

구분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	1,337	2	20	44	56	63	182	358	290	266	48	8	3
2006	1,311	25	30	9	90	102	140	708	80	25	25	60	17
2007	1,562	9	38	120	27	127	108	291	409	362	35	16	19
2008	2,007	1,562	9	38	120	27	127	108	291	409	362	35	16
2009	1,044	13	20	51	30	106	94	404	158	52	38	43	34
2010	1,271	39	67	88	69	101	49	175	374	254	19	16	20
2011	1,849	3	43	29	123	135	384	518	330	145	48	79	12
2012	1,392	11	3	73	101	36	82	287	445	195	63	54	44
2013	1,181	40	41	49	82	101	164	282	170	129	29	63	33
2014	1,013	8	12	65	60	38	90	119	284	119	149	43	27
2015	8,429	176	244	392	1,004	298	958	1,889	738	335	841	1,169	386

주) 충북도청 통계연보(연도별 통계표)

[그림 2-3] 충청북도 월별 강수량



## □ 임야 및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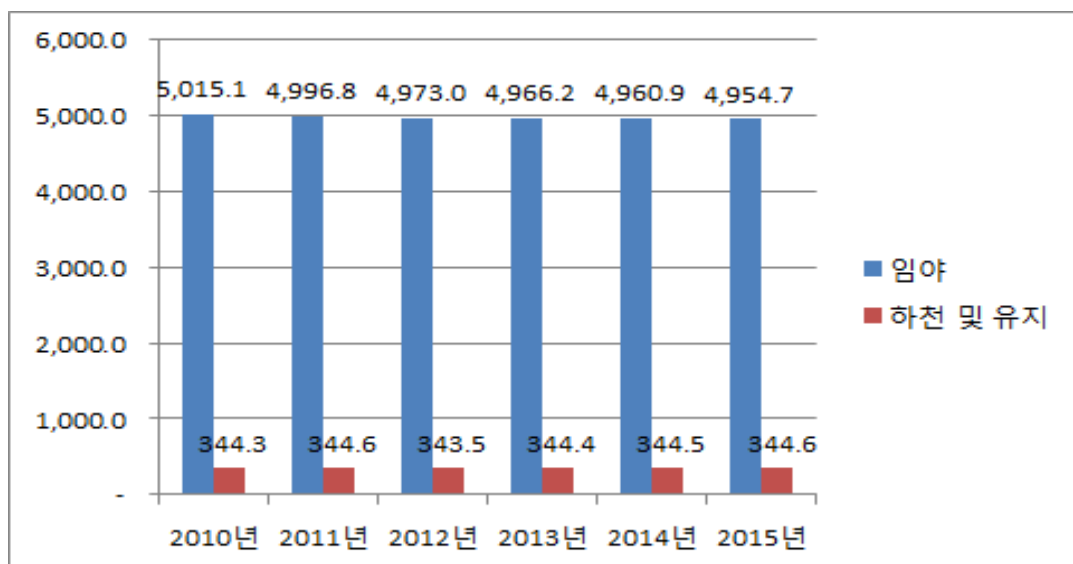
- 충북의 임야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비중인 63.8%보다 다소 높고 하천과 유지의 비중도 전국에 비해 0.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임야의 비중을 보면, 단양군이 82.1%로 가장 높고 증평군이 49.4%로 가장 낮으며 청주시와 음성군, 진천군도 60%를 넘지 않음.

[표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단위: km<sup>2</sup>, %)

구분	전체	임야		하천 및 유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2010	7,433.2	5,015.1	67.5	344.3	4.6
2011	7,433.3	4,996.8	67.2	344.6	4.6
2012	7,406.2	4,973.0	67.1	343.5	4.6
2013	7,407.2	4,966.2	67.0	344.4	4.6
2014	7,407.1	4,960.9	67.0	344.5	4.7
2015	7,407.2	4,954.7	66.9	344.6	4.7

[그림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주) 1.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토지지목별 현황

2. 유지(溜池)는 저수지, 댐, 호수 등을 말함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하천과 유지의 비중은 괴산군이 2.4%로 가장 낮고 옥천군이 7.5%로 가장 높음.

[표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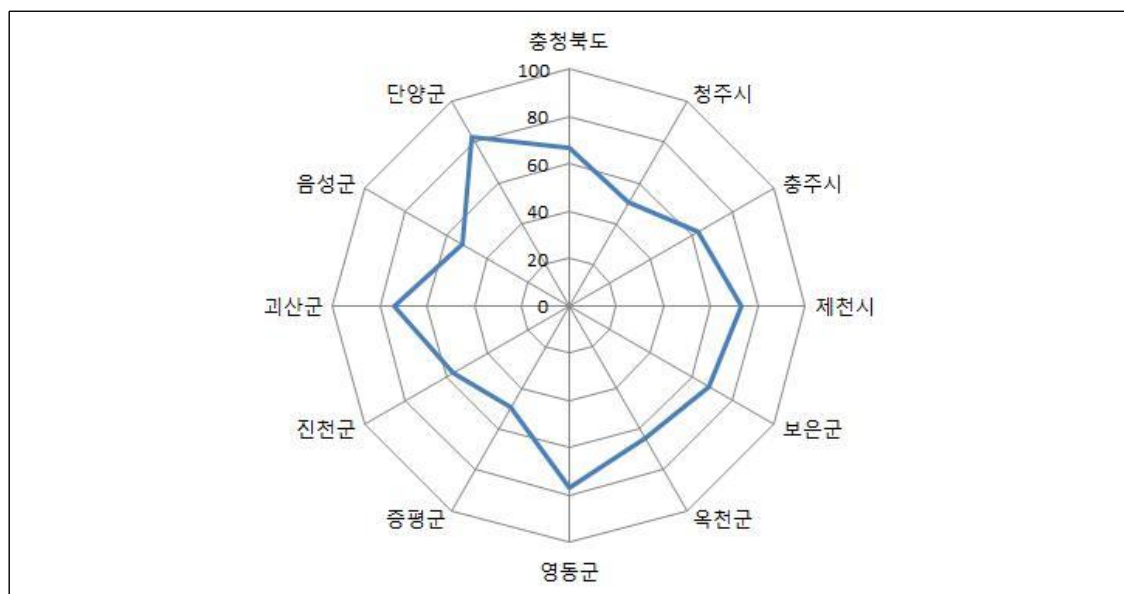
(단위: km<sup>2</sup>, %)

구분	전체	임야		하천 및 유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전국	100,295.4	64,002.7	63.8	4,217.0	4.2
충청북도	7,407.2	4,954.7	66.9	344.6	4.7
청주시	940.3	477.6	50.8	49.4	5.3
충주시	983.6	622.0	63.2	64.0	6.5
제천시	883.5	646.0	73.1	56.5	6.4
보은군	584.3	399.7	68.4	25.6	4.4
옥천군	537.1	346.4	64.5	40.4	7.5
영동군	845.7	652.8	77.2	26.0	3.1
증평군	81.8	40.4	49.4	2.9	3.5
진천군	407.3	231.2	56.8	17.3	4.2
괴산군	842.3	624.5	74.1	20.6	2.4
음성군	520.3	272.4	52.4	17.6	3.4
단양군	781.1	641.6	82.1	24.4	3.1

주) 전국 자료: 2016 한국통계연감

[그림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단위: km<sup>2</sup>, %)



## □ 인구변화

- 충청북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은 2015년 15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5년 167만 명,
- 2035년 173만 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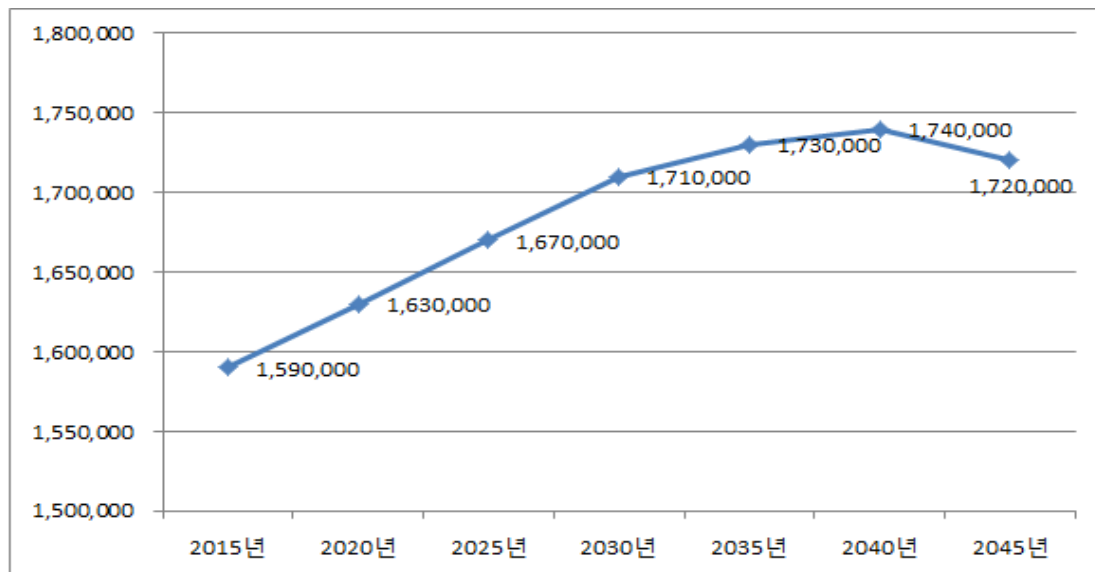
[표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15년 대비 `45년	
								증감	증감률(%)
인구수 (만 명)	159	163	167	171	173	174	172	13	8.3
구성비, 증감률 (%,%p)	3.1	3.1	3.2	3.2	3.3	3.3	3.4	0.3	-

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

[그림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23만 명에서 2025년 36만 명 2035년 54만 명으로 평균 24.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 현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 성별 인구증가 추세 및 전망

- 여성 인구변화 추세 및 전망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약 78만 명에서 2035년 8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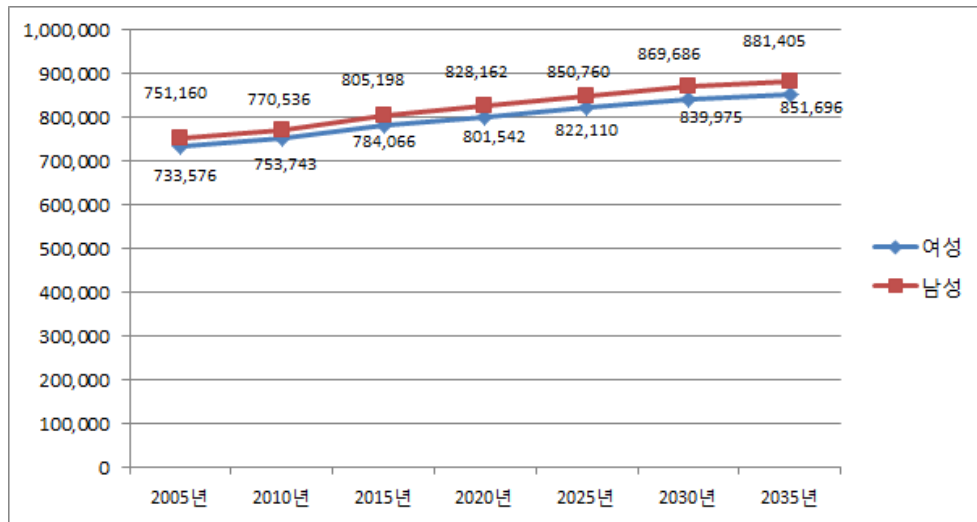
[표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여성	733,576	753,743	784,066	801,542	822,110	839,975	851,696
남성	751,160	770,536	805,198	828,162	850,760	869,686	881,405

[그림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 □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0-49세까지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추세이며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연령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계	1,484,736	1,524,279	1,589,264	1,629,704	1,672,870	1,709,661	1,733,101
0 - 4세	77,748	69,880	70,794	64,866	65,515	66,992	62,822
5 - 9세	101,430	78,152	70,570	69,945	65,009	65,308	66,529
10 - 14세	107,045	101,855	78,911	70,050	70,375	65,138	65,220
15 - 19세	98,148	109,020	108,495	79,141	70,960	71,304	65,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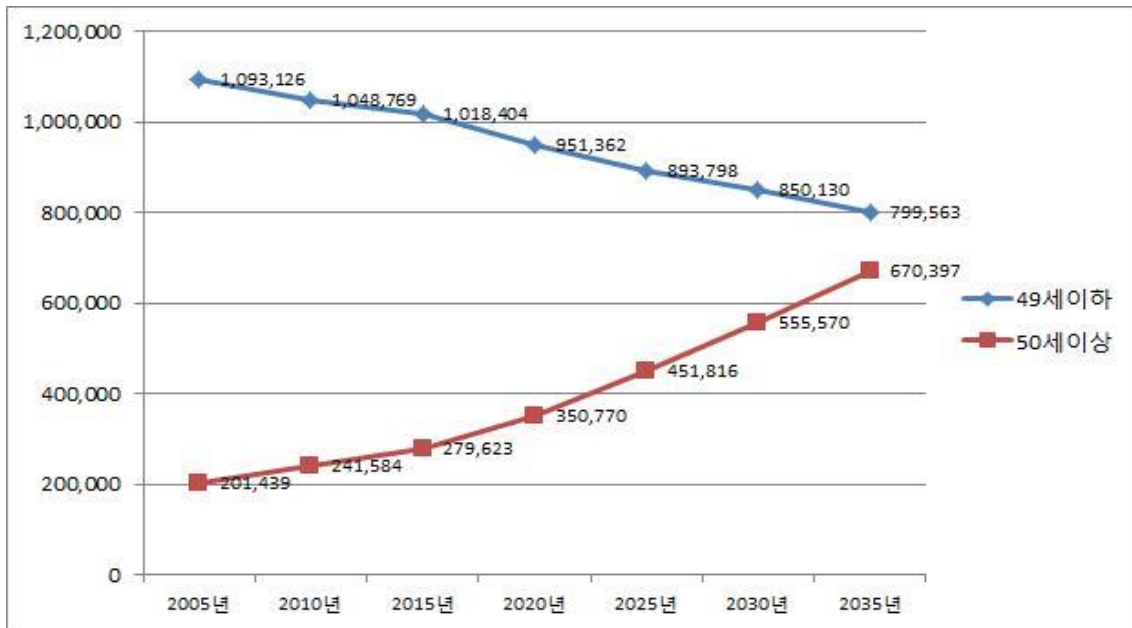
[표 계속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연령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 - 24세	118,440	99,693	111,923	108,805	80,676	72,324	72,099
25 - 29세	105,187	106,915	94,390	108,995	104,073	78,456	70,400
30 - 34세	118,811	106,850	110,179	95,125	109,237	103,253	78,731
35 - 39세	122,739	122,883	112,021	111,558	97,301	110,593	104,205
40 - 44세	125,120	127,044	127,641	112,854	114,147	99,000	112,024
45 - 49세	118,458	126,477	133,480	130,023	116,505	117,762	101,750
50 - 54세	88,239	119,206	132,339	136,561	135,338	121,078	122,344
55 - 59세	64,753	87,191	122,661	137,090	141,330	141,264	126,221
60 - 64세	65,054	65,035	87,162	126,521	141,617	146,007	147,007
<b>65세 이상</b>	<b>173,564</b>	<b>204,078</b>	<b>228,698</b>	<b>278,170</b>	<b>360,787</b>	<b>451,182</b>	<b>537,966</b>
65 - 69세	65,334	64,427	63,694	87,201	126,712	142,426	147,311
70 - 74세	49,673	60,225	62,279	61,877	85,137	124,290	140,519
75 - 79세	30,682	41,920	51,800	56,492	57,909	80,078	117,705
<b>80세 이상</b>	<b>27,875</b>	<b>37,506</b>	<b>50,925</b>	<b>72,600</b>	<b>91,029</b>	<b>104,388</b>	<b>132,431</b>
80 - 84세	17,858	23,122	31,396	42,215	47,326	50,037	69,918
85 - 89세	7,362	10,534	13,947	21,574	29,493	33,975	37,304
90 - 94세	2,223	3,149	4,594	7,134	11,429	15,780	18,649
95 - 99세	377	616	861	1,505	2,480	4,064	5,661
100세 이상	55	85	127	172	301	532	899

[그림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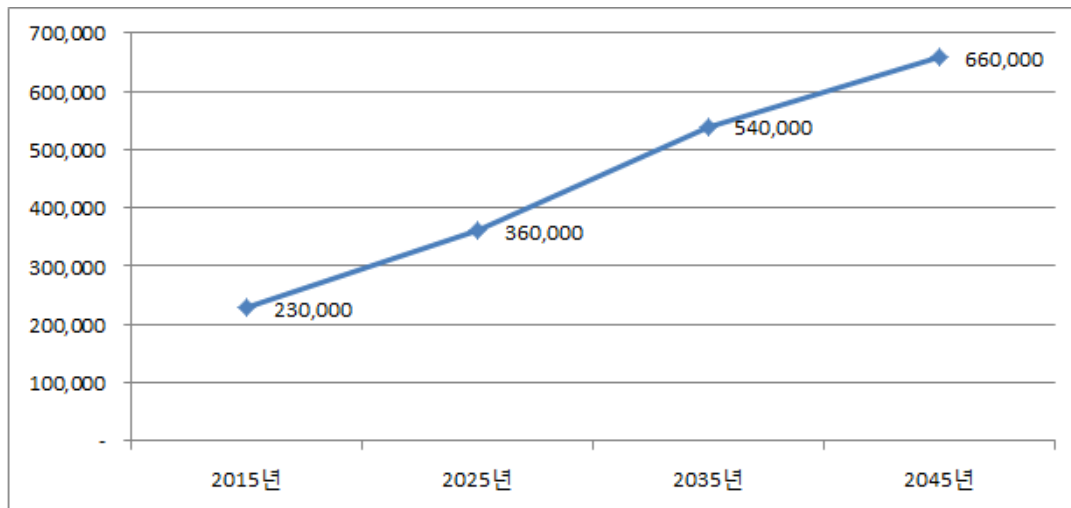
[표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구분	65세 이상 인구 전체(만 명)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15년 대비 증감	2045년 증감률(%)
인구수 (만명)	23	36	54	66	43	189.5
구성비, 증감률 (%,%p)	14.4	21.6	31	38.5	24.1	

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

[그림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단위: 명)



- 충청북도 등록외국인 인구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1.3%를 차지했던 외국인 구성비가 2015년에는 인구대비 3%를 차지하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표2-10] 충청북도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분	충북인구 (내국인+외국인)	충북인구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충북인구대비 외국인구성비(%)
2007	1,525,882	1,506,608	19,274	1.3
2008	1,542,256	1,519,587	22,669	1.5
2009	1,555,789	1,527,478	28,311	1.9
2010	1,579,666	1,549,528	30,138	1.9
2011	1,596,986	1,562,903	34,083	2.2
2012	1,603,281	1,565,628	37,653	2.4
2013	1,611,909	1,572,732	39,177	2.5
2014	1,622,081	1,578,933	43,148	2.7
2015	1,631,954	1,583,952	48,002	3.0

##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

### 가. 환경분야

####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현황

-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통해 대기오염의 정도와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분석함.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는 2005년 기준 27,106천톤Co2eq에서 2015년 34,698천톤Co2eq, 2025년 44,416천톤Co2eq, 2035년에는 56,856천톤Co2eq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인구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사용, 폐기물배출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 1인당 배출량은 2005년 18.21톤에서 2015년 21.83톤, 2035년 31.36톤 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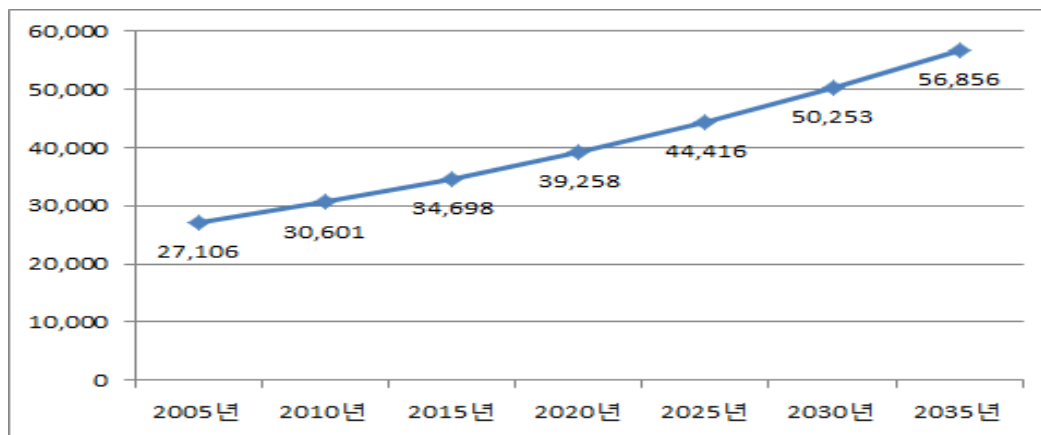
[표2-11]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직접 배출량 (천톤C o2eq)	에너지	13,050	14,761	14,482	19,335	25,813	34,463	46,010
	산업공정	8,813	11,117	11,466	11,466	15,334	17,734	20,508
	AFOLU	-198	-1,400	-1,883	-9,631	-49,257	-251,932	-1,288,546
	폐기물	830	313	1,176	2,036	3,524	6,101	10,561
	소계	22,495	24,791	24,772	26,177	27,663	29,233	30,892
간접 배출량 (천톤C o2eq)	전력	7,188	9,647	13,036	17,602	23,768	32,093	43,334
	열에너지	55	70	65	71	78	86	94
	폐기물	532	893	780	1,019	1,332	1,741	2,275
	소계	7,775	10,610	13,881	18,552	24,827	33,224	44,461
총계(천톤Co2eq)		27,106	30,601	34,698	39,258	44,416	50,253	56,856
인구수(명)		1,488,803	1,549,528	1,589,288	1,642,432	1,697,352	1,754,109	1,812,764
1인당 배출량(톤)		18.21	19.75	21.83	23.90	26.17	28.65	31.36

주)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그림2-10]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천톤Co2eq)



- 국내 총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은 2005년 0.33tCO2eq/백만원 원에서 2015년 0.25tCO2eq/백만원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12] 국내 총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05	2010	2015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O2eq	303	354	376
국내총생산 (당해 년기준)	백만원	920,000,000	1,267,000,000	1,485,000,000
원단위 배출량	tCO2eq/백만원	0.33	0.28	0.25

주) KOSIS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 충청북도의 대기오염도 현황을 살펴보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존의 경우 2005년 0.022ppm/8hours에서 2015년 0.025ppm/8hours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구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SO <sub>2</sub> )	(CO)	(NO <sub>2</sub> )	(PM10)	(O <sub>3</sub> )
	ppm/year	ppm/8hours	ppm/year	(μg/m <sup>3</sup> )/year	ppm/8hours
2005	0.004	0.6	0.019	51	0.022
2006	0.006	0.7	0.020	51	0.022
2007	0.007	0.8	0.021	61	0.023
2008	0.007	0.7	0.021	59	0.021
2009	0.006	0.7	0.021	60	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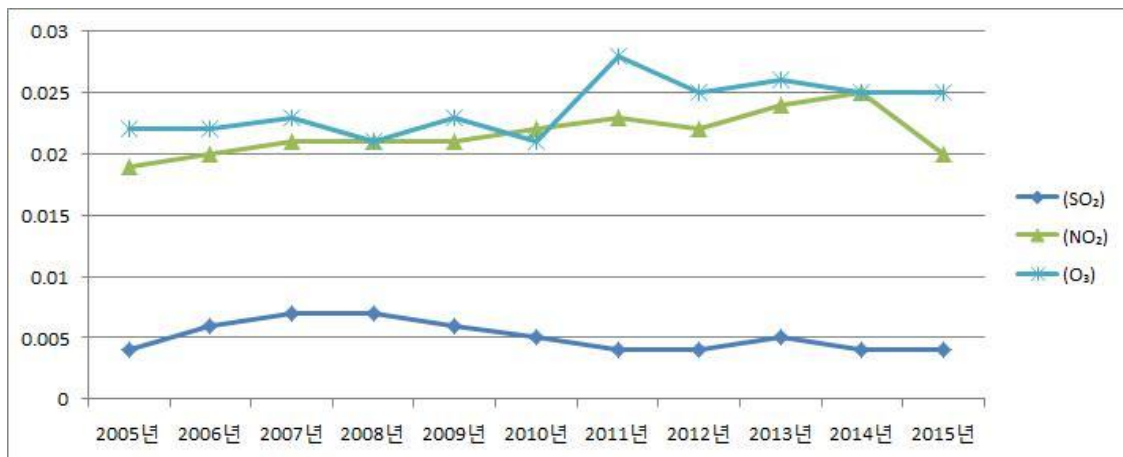
[표 계속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구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SO <sub>2</sub> )	(CO)	(NO <sub>2</sub> )	(PM10)	(O <sub>3</sub> )
	ppm/year	ppm/8hours	ppm/year	( $\mu\text{g}/\text{m}^3$ )/year	ppm/8hours
2010	0.005	0.6	0.022	61	0.021
2011	0.004	0.6	0.023	56	0.028
2012	0.004	0.5	0.022	52	0.025
2013	0.005	0.6	0.024	55	0.026
2014	0.004	0.5	0.025	53	0.025
2015	0.004	0.5	0.020	50	0.025

주) 충청북도 통계연보(연도별 통계표)

[그림2-11]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추이

(단위:ppm/year, ppm/8hours)



#### □ 상수도 현황

- 충청북도의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 보급률은 2015년 90.2%에서 2025년이 되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 시설용량은 매년 0.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급수량은 매년 6.9%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1인당 1일 급수량은 2010년 384리터에서 2035년 719리터로 매년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2-14] 충청북도 상수도 현황 및 전망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총인구(명)	1,573,981	1,616,589	1,658,003	1,699,870	1,742,794	1,786,802
급수인구(명)	1,353,205	1,458,754	1,571,730	1,693,200	1,824,057	1,965,027
보급률(%)	86.0	90.2	94.0	98.6	103.5	108.6
시설용량(m³/일)	349,300	340,100	329,019	318,304	307,938	297,909
급수량(m³/일)	520,150	636,204	778,167	951,776	1,164,118	1,423,834
1인당 1일급수량(ℓ)	384	435	493	559	634	719
급수 전수	195,293	236,623	286,658	347,257	420,666	509,594

- 충청북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 현재 35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시설 용량은 1일 584톤, 연간하수처리량은 181,997톤/년인 것으로 나타남.
- 처리수의 재이용율은 40% 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충청북도 공공하수처리 재이용 현황(2016)

구분	시설(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하수처리량 (톤)	장내용수 (톤/년)	장외용수 (톤/년)	처리수 재이용율(%)
충청북도	35	584	181,997	95,389	12,615	40

- 충주호의 수질 오염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COD기준 I b급(좋음), BOD기준 II급(약간 좋음), 대청호는 2015년 기준 COD기준 II급(약간 좋음), BOD기준 I 급(좋음) 으로 나타남.

[표 2-16]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충주호)

구분	COD	BOD	T-N	T-P	수질등급	
					COD기준	BOD 기준
2005	2.1	1.3	2.378	0.019	II 급수	II 급수
2006	2.2	1.2	2.353	0.018	I b(좋음)	-
2007	2.1	1.2	2.272	0.018	I b(좋음)	-
2008	2.2	1.1	2.116	0.019	I b(좋음)	-
2009	2.2	1.0	2.221	0.018	I b(좋음)	-
2010	2.2	0.9	2.040	0.021	I b(좋음)	-
2011	2.4	1.0	2.260	0.033	I b(좋음)	
2012	2.2	1.0	2.528	0.024	I b(좋음)	
2013	2.3	1.2	2.396	0.034	I b(좋음)	
2014	2.3	1.2	2.430	0.030	I b(좋음)	
2015	2.5	1.2	2.250	0.014	I b(좋음)	II 급수

[표2-17]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대청호)

구분	COD	BOD	T-N	T-P	수질등급	
					COD기준	BOD 기준
2005	2.9	1.0	1.474	0.025	Ⅱ 급수	I 급수
2006	3.0	0.9	1.626	0.021	I b(좋음)	-
2007	3.0	1.2	1.667	0.026	I b(좋음)	-
2008	3.0	1.1	1.543	0.018	I b(좋음)	-
2009	3.1	1.1	1.523	0.02	Ⅱ(약간좋음)	-
2010	3.1	1.0	1.617	0.019	Ⅱ(약간좋음)	-
2011	3.3	1.2	1.816	0.033	Ⅱ(약간좋음)	
2012	3.0	1.3	1.912	0.021	Ⅱ(약간좋음)	
2013	3.2	1.3	1.770	0.022	Ⅱ(약간좋음)	
2014	3.2	1.2	1.582	0.018	Ⅱ(약간좋음)	
2015	3.3	1.4	2.134	0.016	Ⅱ(약간좋음)	I 급수

#### □ 토지 및 녹지 생태자원

- 토지(대지)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지나친 도시화를 지양하고 일정 수준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현재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상생 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생태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다양성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자연자원관리를 통한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와 공존의 수준을 높이하고자 함.
- 친환경 농지면적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공원녹지의 비중, 국가생물종수 및 멸종위기 종수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 녹지, 생태계 주요 척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와 전망을 살펴보면 2005년 2,688ha에서 2035년 7,194ha로 연평균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경우 2005년 82,067톤에서 23,219톤으로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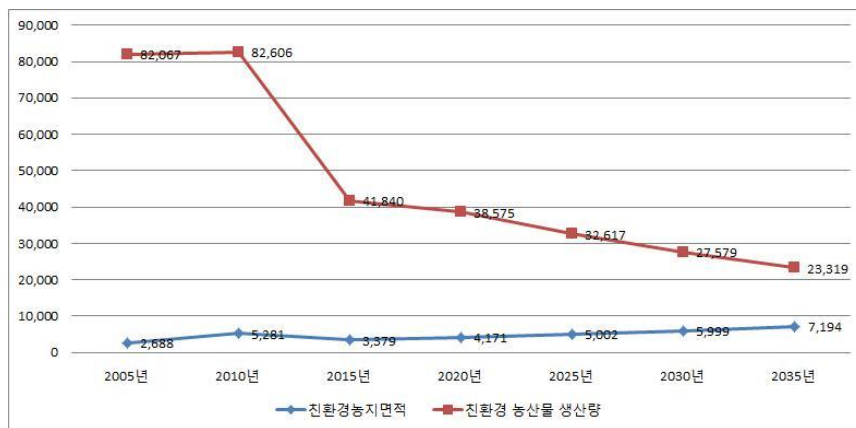
[표 2-18]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 와 전망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친환경농지면적 (ha)	2,688	5,281	3,379	4,171	5,002	5,999	7,194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톤)	82,067	82,606	41,840	38,575	32,617	27,579	23,319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2-12]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 와 전망

(단위 : ha, 톤)



주) 친환경인증관리 정보 시스템 친환경인증통계(2005~2016)

[http://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a](http://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a)

- 충청북도의 공원녹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4.0천m<sup>2</sup>에서 2015년 19.7천m<sup>2</sup>로 연평균 3.6%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로 2035년이 되면 2.5천m<sup>2</sup>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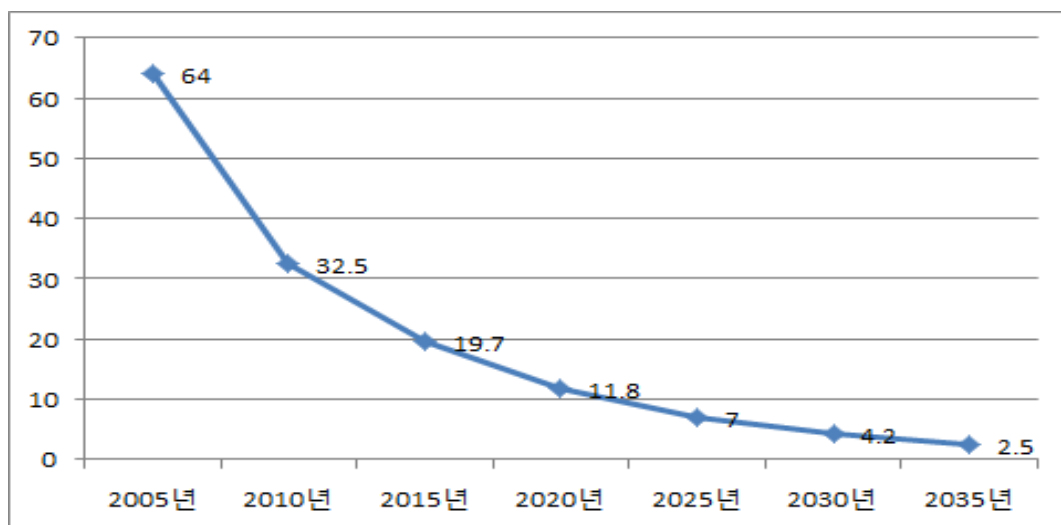
[표2-19]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단위 : 천m<sup>2</sup>)

지표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인구천명 당 도시공원면적	64.0	32.5	19.7	11.8	7.0	4.2	2.5

[그림2-13]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단위 : 천m<sup>2</sup>)



- 국가 생물종수를 살펴보면 2005년 29,916종에서 2015년 42,756종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52,000종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됨.
- 멸종위기 종수는 2005년 34종에서 2015년 56종으로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5년에는 35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2-20] 국가 생물종 수 및 권역 내 멸종위기 종 수 추세와 전망

항목	지표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생물 자원	국가생물 종수	29,916	33,253	42,756	45,000	47,000	50,000	52,000
	멸종위기 종수	34	56	56	50	45	40	35

주) 국립생물자원관 2011~2014연보

- 2015년 현재 충청북도의 생물 종수는 식물 5,405종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종수대비 25.2%의 생물종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충청북도 생물 종 수 및 국내 생물 종 수 비율

구분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담수 어류	기타 무척추 동물	곤충	총계
충청북도 종 수	1,998	42	226	37	84	72	2,946	5,405
국내종 수	4,404	125	522	54	213	-	16,121	21,439
비율	45.4	33.6	43.3	68.4	39.4	-	18.3	25.2

주1) 충북 생물다양성 전략수립(2017)

주2) 한반도의 생물자원 국립생물자원관(2015)

#### □ 고형자원

- 충청북도의 생활폐기물발생량을 살펴보면 2005년 1,707.2톤/일에서 2015년 1,972.8톤/일로 연평균 1.5% 증가추세이며, 2035년 2,657.1톤/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재활용폐기물은 2005년 602.6톤/일에서 2015년 836.6톤/일로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 1,763.8톤/일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 266.5톤/일에서 2015년 377.5톤/일로 연평균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 910.4톤/일이 될 것으로 예측됨.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2-22]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세와 전망

(단위 : 톤/일)

구분	생활폐기물발생량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2005	1,707.2	602.6	266.5
2010	1,774.8	588.3	396.1
2015	1,972.8	836.6	377.5
2020	2,125.3	1,008.1	470.4
2025	2,289.5	1,214.7	586.2
2030	2,466.5	1,463.8	730.5
2035	2,657.1	1,763.8	910.4

주1) 충청도청 통계연보(연도별통계표)

주2) 자연순환정보시스템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10~2015)

### □ 에너지

- 충청북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170,854천TOE에서 2015년 218,608천TOE로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359,671천TOE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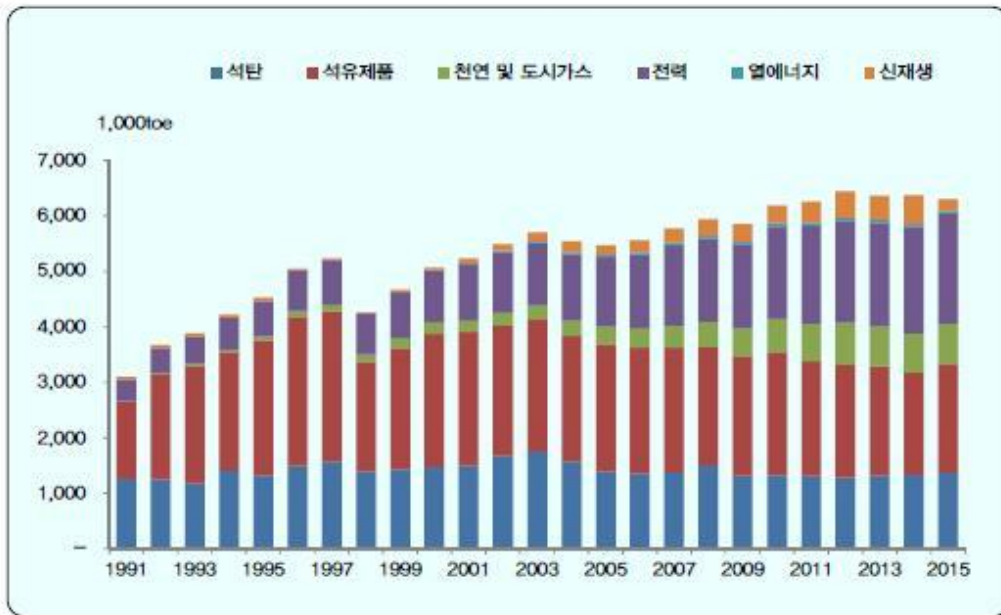
[표 2-23]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단위 : 천toe)

구분	합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2000년	5,058	1,474	2,396	213	922	14	39
2005년	5,469	1,394	2,292	316	1,244	45	178
2010년	6,191	1,327	2,215	595	1,672	57	324
2015년	6,299	1,380	1,954	725	1,974	52	214
2020년	6,788	1,365	1,831	1,101	2,549	84	471
2025년	7,314	1,350	1,716	1,671	3,291	134	1,038
2030년	7,882	1,335	1,609	2,536	4,248	216	2,287
2035년	8,493	1,320	1,508	3,850	5,485	347	5,038

주)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01~2016)

[그림 2-14]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신재생에너지

-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667,702toe로 나타났으며, 그 중 폐기물 신재생에너지가 71.4%로 가장 많았고, 수력 신재생에너지가 18.7%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5.5% 순으로 나타남.

[표 2-24]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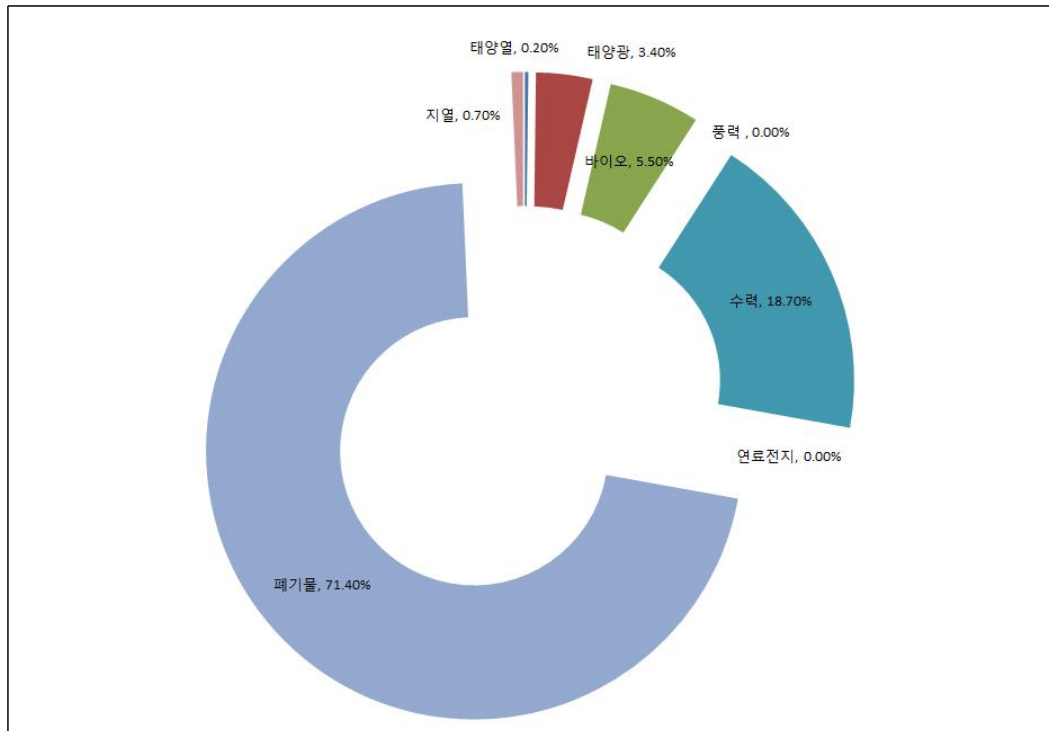
(단위 : to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량	비율(%)
합계	534,461	770,462	1,146,734	1,964,762	667,702	100%
태양열	1,355	1,286	-	667,341	1,297	0.2%
태양광	4,568	6,161	44,365	62,955	23,034	3.4%
바이오	11,342	15,769	9,592	221,731	36,704	5.5%
풍력	3	3	14	14	3	0.0%
수력	202,045	293,457	1,037,100	1,004,001	124,978	18.7%
연료전지	4,336	2	21	25	6	0.0%
폐기물	309,093	451,453	55,642	4,870	476,819	71.4%
지열	1,719	2,332	-	3,825	4,861	0.7%

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1-2015)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15]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2015년 기준)



### 나. 경제분야

#### ▣ 재정 및 지역 내 총생산(GRDP)

-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현재 38.1이며,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표 2-25]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단위 : %)

시도별	전국	충청북도	증감량	증감률
2005	56.2	31.7	-	-
2006	54.4	31.3	-0.4	-1.3
2007	53.6	33.3	2	6.4
2008	53.9	34.2	0.9	2.7
2009	53.6	33.3	-0.9	-2.6
2010	52.2	33.7	0.4	1.2
2011	51.9	32.7	-1	-3.0
2012	52.3	34.2	1.5	4.6
2013	51.1	34.2	0	0
2014	50.3	33.6	-0.6	-1.8
2015	50.6	34.8	1.2	3.6

주) KOSIS 지역통계 재정자립도 현황

- 2015년 기준 충북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GRDP, 2010년 기준 연 간격)은 50.3조 원으로 전국 GDP의 3.44%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충북의 GRDP 성장률은 4.5%로 제주(5.2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충북은 2012년 글로벌 재정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7%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표 2-26]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CAGR
전국	1308.9	1339.0	1376.1	1422.2	1462.7	100.0	2.85	2.82
충청북도	41.9	42.8	45.9	48.1	50.3	3.44	4.50	4.66

주) KOSIS 지역통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 충청북도 산업체 현황

- 충청북도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총 사업체수는 121,493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648,454명으로 나타남.
- 2005년 대비 사업체는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명)

산업별	2005		2010		2015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산업	97,142	450,265	105,756	533,545	121,493	648,454
농업, 임업 및 어업	96	1,346	118	1,488	187	2,348
광업	77	1,097	68	863	91	872
제조업	8,673	122,416	9,073	143,580	12,100	184,6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8	2,238	57	2,300	73	2,277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	285	3,054	416	4,029
건설업	3,392	26,464	3,846	35,814	5,258	41,674
도매 및 소매업	25,388	62,126	26,494	65,993	30,625	79,214
운수업	9,276	23,134	10,045	24,790	10,362	26,623
숙박 및 음식점업	20,855	51,021	22,249	53,966	25,525	65,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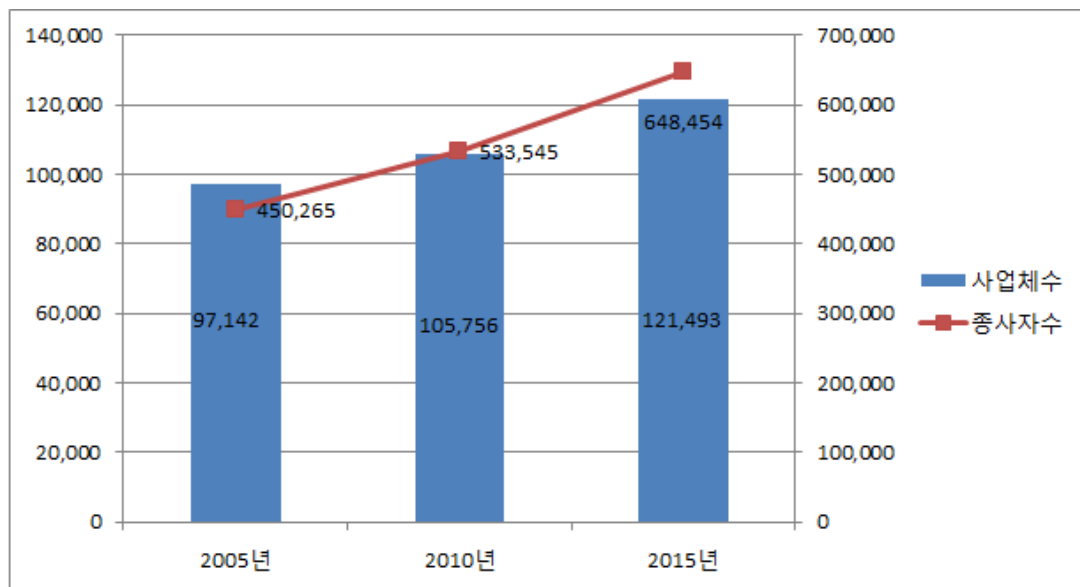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계속 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별	2005		2010		2015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산업	97,142	450,265	105,756	533,545	121,493	648,4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3	3,597	505	5,517	562	5,182
금융 및 보험업	1,142	15,210	1,255	15,403	1,248	16,0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06	8,745	3,380	11,550	3,634	12,4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58	18,143	1,702	12,535	2,223	15,6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115	14,644	1,659	25,1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47	19,597	545	27,864	563	28,917
교육 서비스업	4,276	40,247	5,325	45,472	5,329	50,2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69	9,573	3,321	33,442	4,173	46,4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6	9,999	3,419	9,289	3,598	11,5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100	25,312	12,954	25,981	13,867	30,036

[그림 2-16] 충청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 □ 고용과 실업률

- 충청북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58.1%에서 2015년 62.1%로 연평균 0.3%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라면 2035년 6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2-28] 충청북도 전체 고용률

(단위 : %)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취업률	58.1	59.6	62.1	62.3	63.7	65.1	66.5

주) KOSIS 시도별 고용률

- 충청북도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30-49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까지의 연령층이 79.1%, 65세 이상이 45.2% 순으로 나타남.
- 15세-64세까지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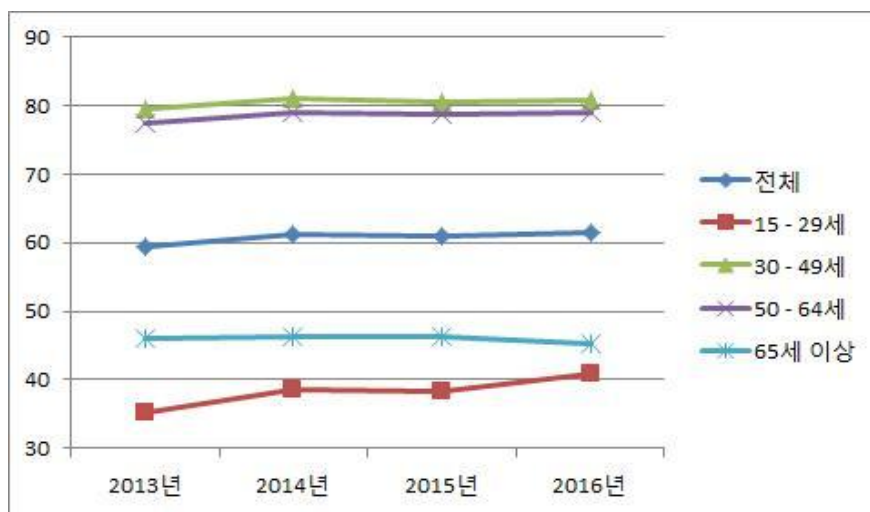
[표 2-29]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명, %)

구분	전체	15 - 29세	3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2013	59.5	35.2	79.5	77.5	46.0
2014	61.2	38.6	81	79.1	46.4
2015	62.1	38.2	80.6	78.7	46.3
2016	62.4	40.8	80.7	79.1	45.2

주) KOSIS 장애인고용률 고용조사 시군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그림 2-17]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충청북도 유형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63.9%로 나타냈으며, 실업자 수는 22만 명으로 경제활동가능인구 대비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0] 충청북도 유형별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만 명, %)

구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2005	1,175	698	682	16	59.4	477	58.1	2.2
2006	1,182	701	686	15	59.3	481	58.1	2.1
2007	1,185	710	694	16	59.9	476	58.5	2.2
2008	1,199	726	710	16	60.5	474	59.2	2.2
2009	1,219	739	723	15	60.6	480	59.4	2.1
2010	1,236	753	737	16	61.0	482	59.6	2.2
2011	1,250	764	746	18	61.1	487	59.6	2.4
2012	1,279	766	751	15	59.9	513	58.7	2.0
2013	1,298	792	776	16	61.0	506	59.5	2.1
2014	1,311	835	810	25	63.7	476.0	61.2	3.0
2015	1,331	850	828	22	63.9	481.0	62.1	2.6

주) KOSIS 고용률 및 실업률

- 충청북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 약 20만3천여 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비 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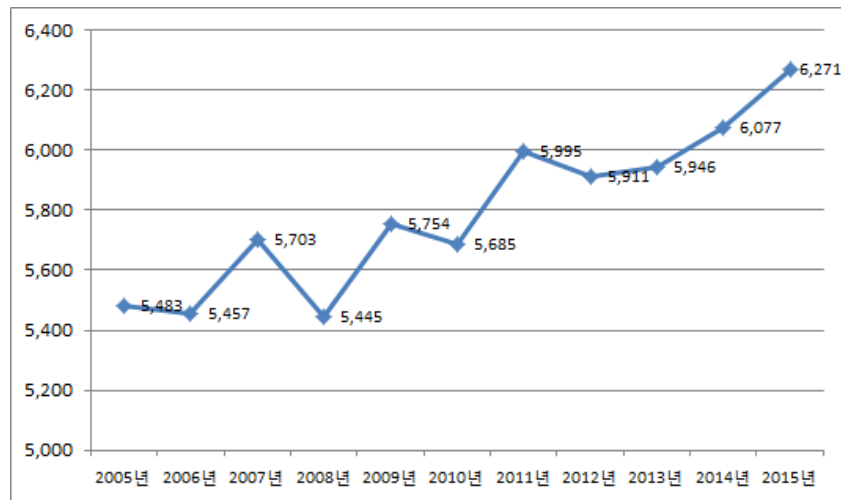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	충북	전국대비 비중
2005	5,483	167	3.0
2006	5,457	150	2.7
2007	5,703	150	2.6
2008	5,445	144	2.6
2009	5,754	170	3.0
2010	5,685	182	3.2
2011	5,995	179	3.0
2012	5,911	158	2.7
2013	5,946	160	2.7
2014	6,077	187	3.1
2015	6,271	203	3.2

주) KOSIS 지역통계 비정규직 현황

[그림 2-18]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



#### □ 사회적 경제

- 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 수는 2011년 26개소에서 2015년 71개소로 59.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1,500개소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 받을 것으로 예측됨

[표 2-32]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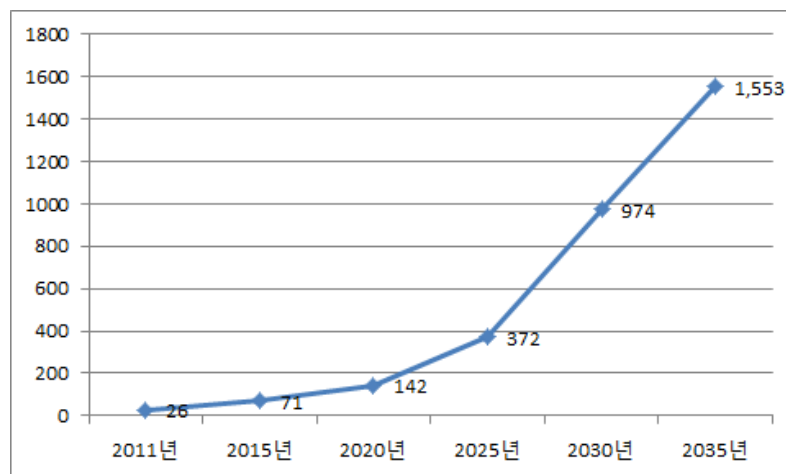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사회적기업	26	71	142	372	974	1,553

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서자료(연도별 인증현황)

[그림 2-19]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전망

(단위 : 개소)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 관광

- 충청북도의 관광 관련 사업체는 2005년 249개소에서 2015년 596개소로 13.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전국대비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3]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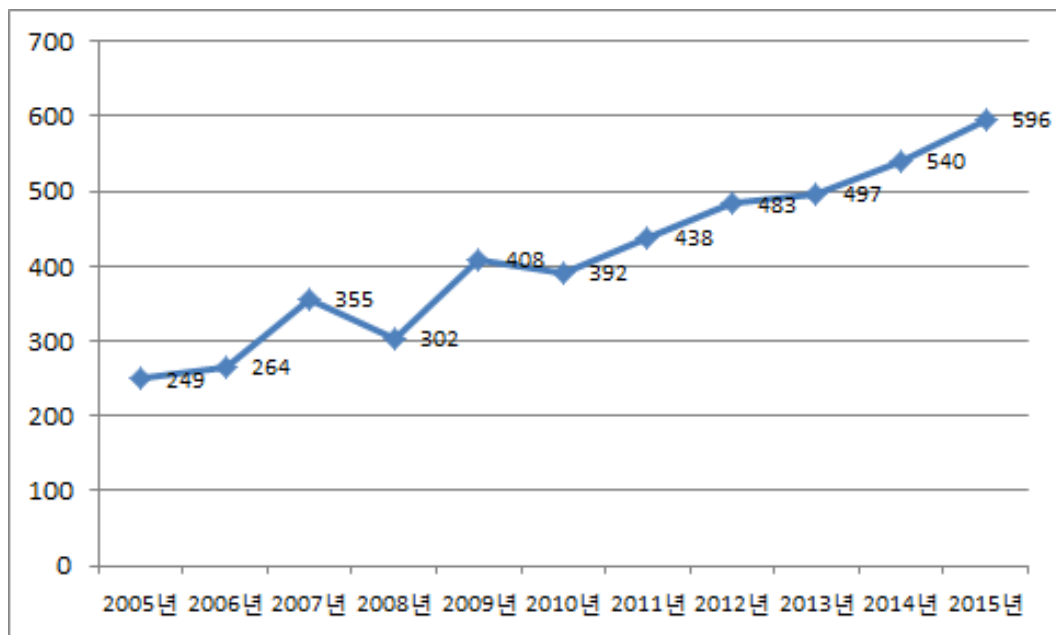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전국	충북	전국대비
2005년	11,548	249	2.2%
2006년	12,267	264	2.2%
2007년	13,692	355	2.6%
2008년	13,210	302	2.3%
2009년	15,881	408	2.6%
2010년	16,613	392	2.4%
2011년	18,196	438	2.4%
2012년	20,121	483	2.4%
2013년	20,525	497	2.4%
2014년	23,156	540	2.3%
2015년	24,268	596	2.5%

주) KOSIS 통계자료

[그림 2-20]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



-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현황은 2015년 기준 185,073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대비 2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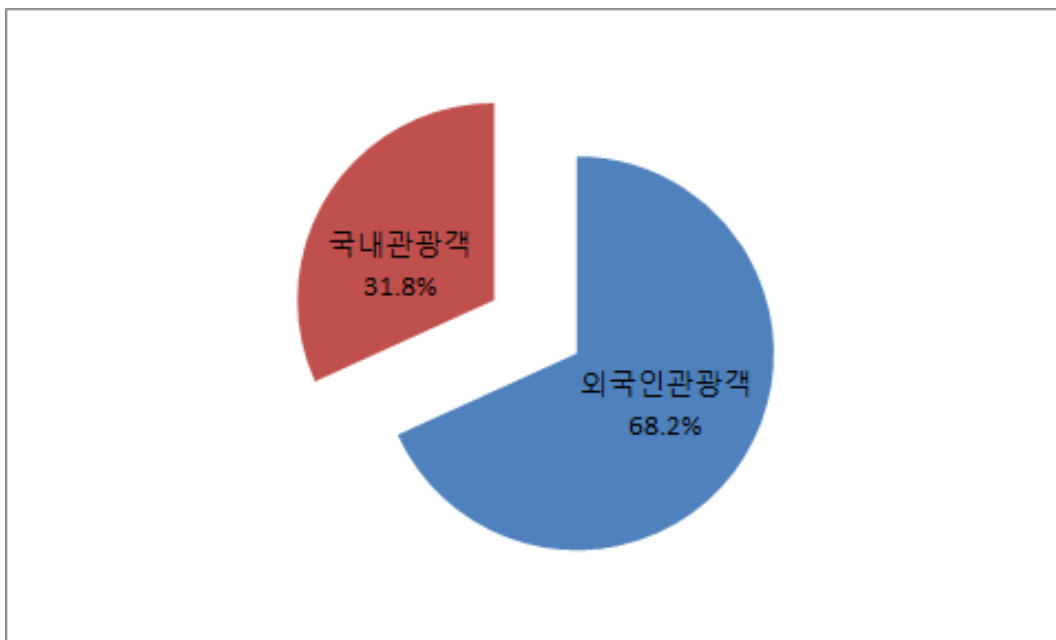
[표 2-34]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관광객	국내관광객	관광객 전체	증감률
2005	55,200	1,932,890	1,988,090	-
2006	528,499	1,314,314	1,842,813	-7.3
2007	540,279	822,753	1,363,032	-26.0
2008	492,740	898,312	1,391,052	2.1
2009	575,184	463,526	1,038,710	-25.3
2010	555,441	486,667	1,042,108	0.3
2011	487,530	276,133	763,663	-26.7
2012	522,880	77,684	600,564	-21.4
2013	239,525	14,850	254,375	-57.6
2014	151,246	79,688	230,934	-9.2
2015	126,251	58,822	185,073	-19.9

주) KOSIS 통계자료

[그림 2-21]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유형별 비율(2015년 기준)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다. 사회분야

####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충청북도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5년 52,532명에서 2015년 49,727명으로 0.5%씩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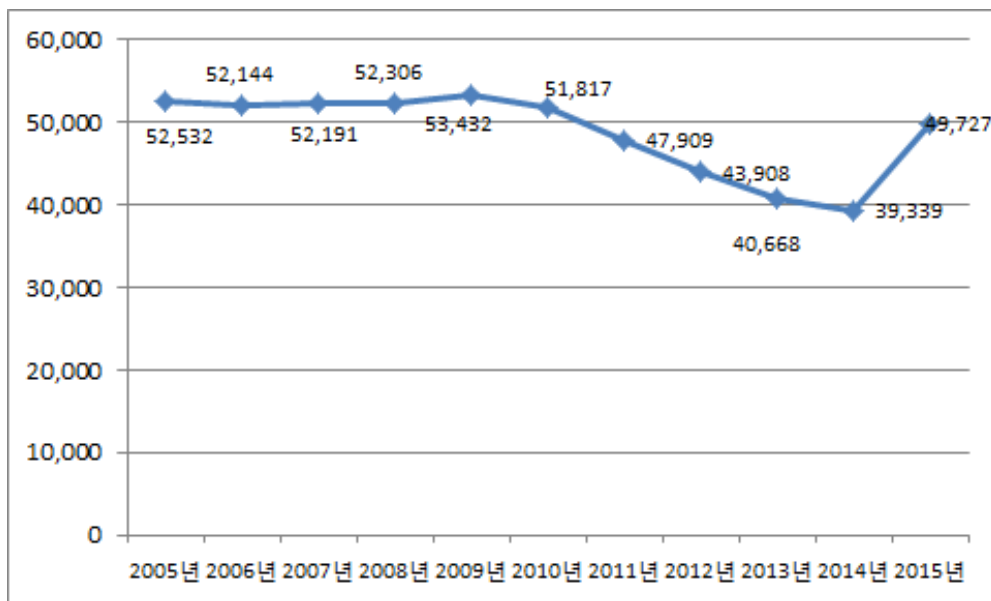
[표2-35]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초생활 수급자	52,532	52,144	52,191	52,306	53,432	51,817	47,909	43,908	40,668	39,339	49,727

[그림 2-22]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기초생활 수급자율의 추세를 보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35년이 되면 1.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표 2-36]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율 추세와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기초생활수급자율	2.5	2.4	2.1	1.9	1.8	1.7	1.6

주) KOSIS 통계자료 (충북기초생활수급자수/충북인구수)\*100 = 충북기초생활수급자율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수급자의 감소폭이 전체 수급자 감소 폭 보다 낮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국현황과 비교해보면 전국 총수급자 대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을 27%수준보다도 다소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7]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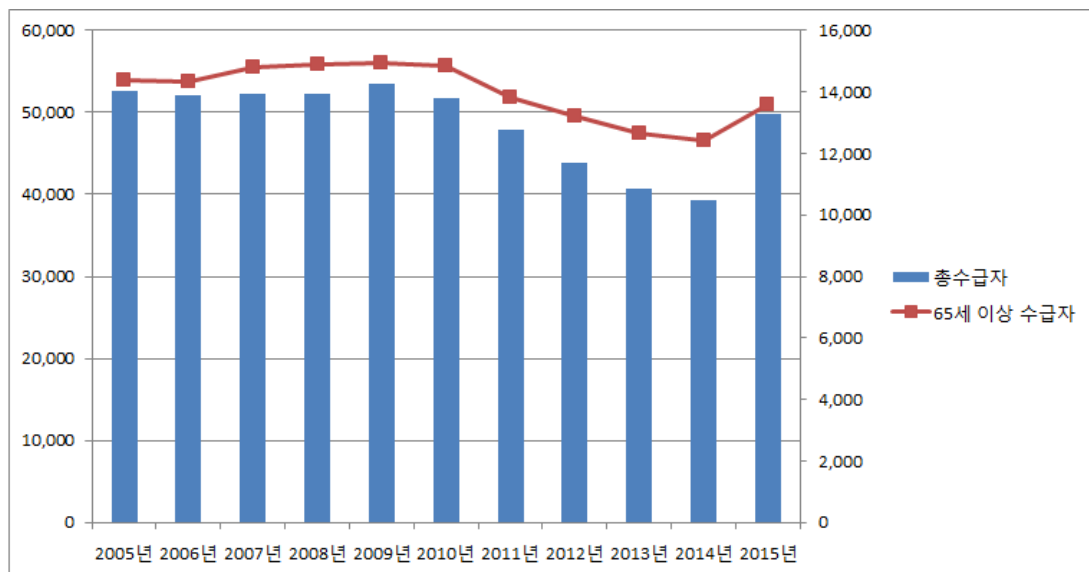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남자	여자	구성비
충청매년	2005	52,532	14,401	3,836	10,565	27.4
	2006	52,144	14,332	3,820	10,512	27.5
	2007	52,191	14,790	4,044	10,746	28.3
	2008	52,306	14,911	4,092	10,819	28.5
	2009	53,432	14,953	4,149	10,804	28.0
	2010	51,817	14,832	4,210	10,622	28.6
	2011	47,909	13,830	3,910	9,920	28.9
	2012	43,908	13,200	3,762	9,438	30.1
	2013	40,668	12,670	3,659	9,011	31.2
	2014	39,339	12,429	3,707	8,722	31.6
	2015	49,727	13,600	4,247	9,433	27.3
전국	2015	1,554,484	419,452	133,292	286,160	27.0

주)KOSIS 통계자료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구성비=(65세 이상 수급자/총수급자)\*100

[그림 2-23]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추이



## 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 사회적 평등

- 전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남가는 73.8%, 여자는 51.8% 수준으로 남자 참가율이 2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8] 전국 성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 천명, %)

전국	전체		남자		여자		남녀 차이 (A-B)
	경제활동 인구(천명)	참가율 (%)	경제활동인 구(천명)	참가율 (A)	경제활동인구 (천명)	참가율 (B)	
2015	26,913	62.6	15,543	73.8	11,370	51.8	22.0

주) KOSIS 성별 경제활동인구 남녀

- 충청북도의 성별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 남자가 72.8%, 여자가 54.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여성 경제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충청북도가 2.4%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활동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39]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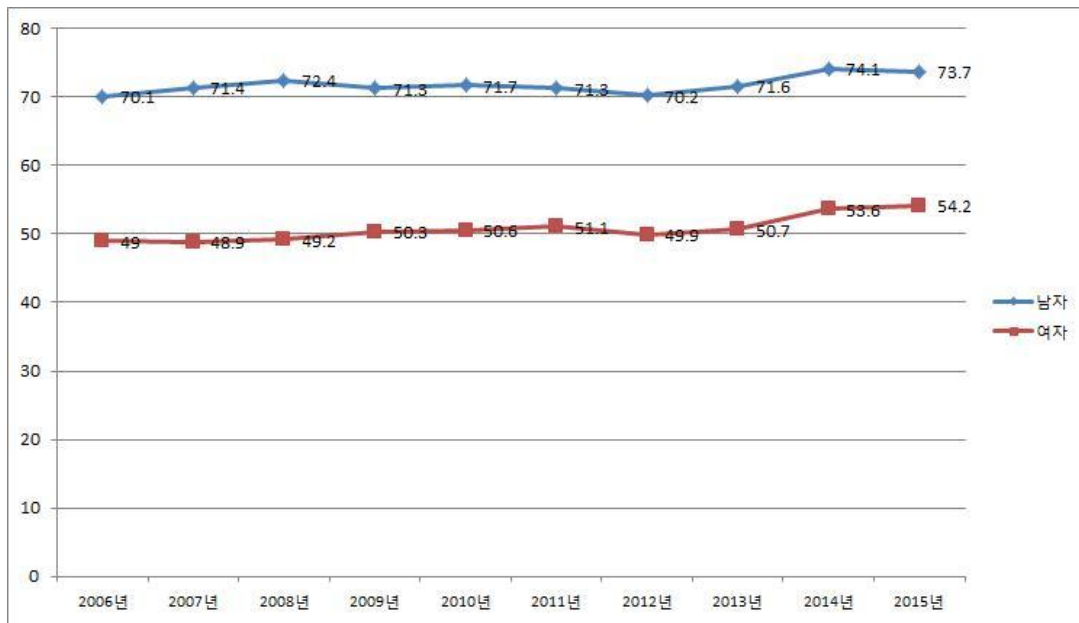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경제활동인구 (천명)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천명)	참가율 (A)	경제활동인구 (천명)	참가율 (B)
2006	701	59.3	404	70.1	297	49.0
2007	710	59.9	413	71.4	297	48.9
2008	726	60.5	425	72.4	301	49.2
2009	739	60.6	426	71.3	313	50.3
2010	753	61.0	435	71.7	318	50.6
2011	764	61.1	439	71.3	325	51.1
2012	766	59.9	443	70.2	324	49.9
2013	792	61.0	459	71.6	333	50.7
2014	835	63.7	480	74.1	355	53.6
2015	850	63.9	487	73.7	364	54.2

주) KOSIS 성별 경제활동인구 남녀

[그림 2-24]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 추이

(단위 : %)



#### □ 노인

- 충청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11.6%에서 2015년 14.5%로 증가하여 2035년 이 되면 23.0% 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지수는 2005년 63.1%에서 2015년 106.7% 수준으로 증가함.

[표2-40]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단위 : 해당인구100명당 명, %)

구분	노인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노인1명당생산 가능인구
2005	11.6	63.1	16.9	5.9
2010	13.0	89.8	18.7	5.3
2015	14.5	106.7	21.1	4.8
2020	16.3	144.1	23.9	4.3
2025	18.3	194.6	27.0	3.8
2030	20.5	262.9	30.6	3.4
2035	23.0	355.2	34.6	3.0

주)KOSIS 통계자료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1)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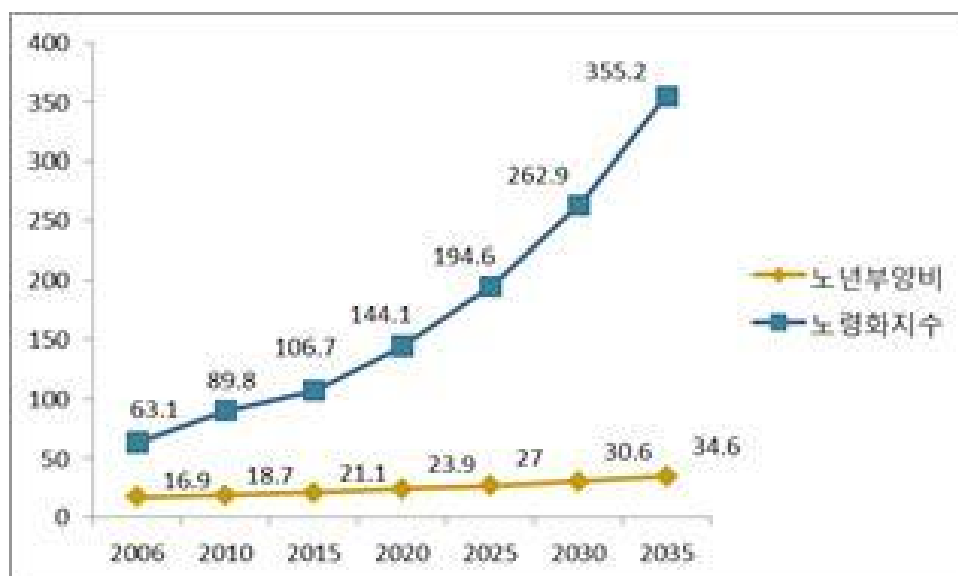
2) 고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 0~14세인구)\*100

3)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인구/65세이상인구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25]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및 부양비 추이

(단위 : 해당인구100명당 명, %)



-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 7.2%에서 2015년 7.7% 수준으로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과 비교해보면 평균 1.2% 가량 높은 수준임.

[표 2-41] 독거노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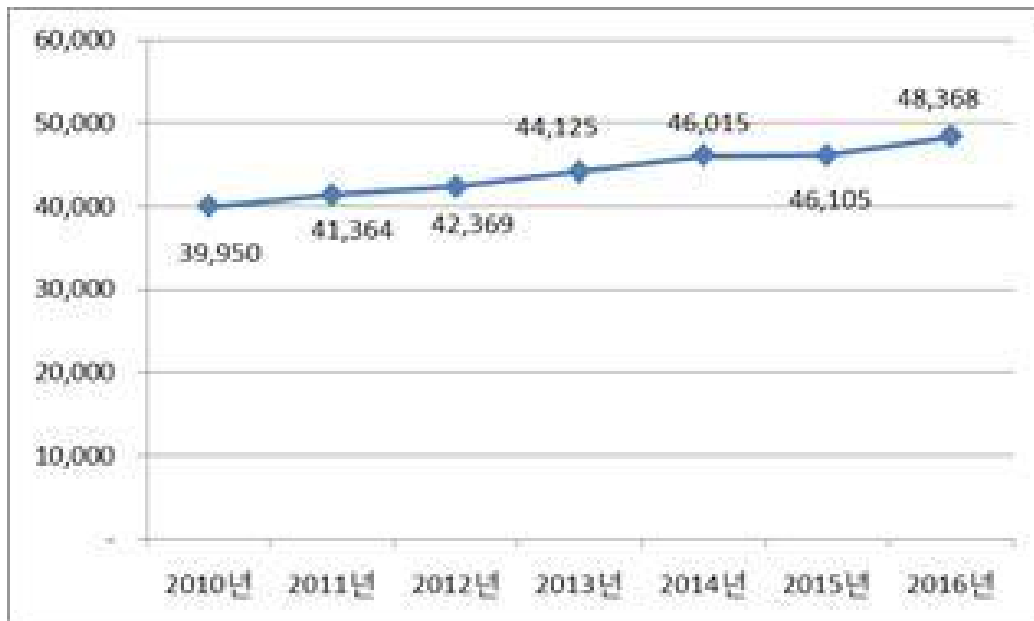
(단위 : %)

시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7	5.7	5.9	6.0	6.2	6.3
서울특별시	3.6	3.7	3.8	4.0	4.1	4.8
부산광역시	5.9	6.0	6.3	6.6	6.9	7.2
대구광역시	5.2	5.3	5.5	5.7	6.0	6.1
인천광역시	3.9	3.9	4.1	4.3	4.5	4.8
광주광역시	4.8	4.9	5.1	5.3	5.5	5.4
대전광역시	3.9	4.0	4.1	4.3	4.5	4.8
울산광역시	3.5	3.5	3.6	3.7	3.9	4.2
세종시	-	-	6.4	5.8	4.8	4.5
경기도	3.6	3.6	3.7	3.9	4.0	4.4
강원도	7.9	8.0	8.2	8.3	8.5	8.6
<b>충청북도</b>	<b>7.2</b>	<b>7.3</b>	<b>7.4</b>	<b>7.6</b>	<b>7.8</b>	<b>7.7</b>
충청남도	8.0	8.0	8.1	8.3	8.4	8.2
전라북도	9.8	9.8	10.0	10.2	10.4	10.1
전라남도	13.4	13.4	13.6	13.8	14.0	12.8
경상북도	10.0	10.0	10.1	10.3	10.5	10.0
경상남도	8.0	8.0	8.1	8.2	8.4	8.2
제주도	7.2	7.1	7.1	7.1	7.1	6.2

주)KOSIS 지역통계 독거노인비율(시도)

[그림 2-26] 독거노인 비율 추이

(단위 : %)



####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06,437명에서 2015년 252,046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2015년 기준 충북전체 인구대비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은 1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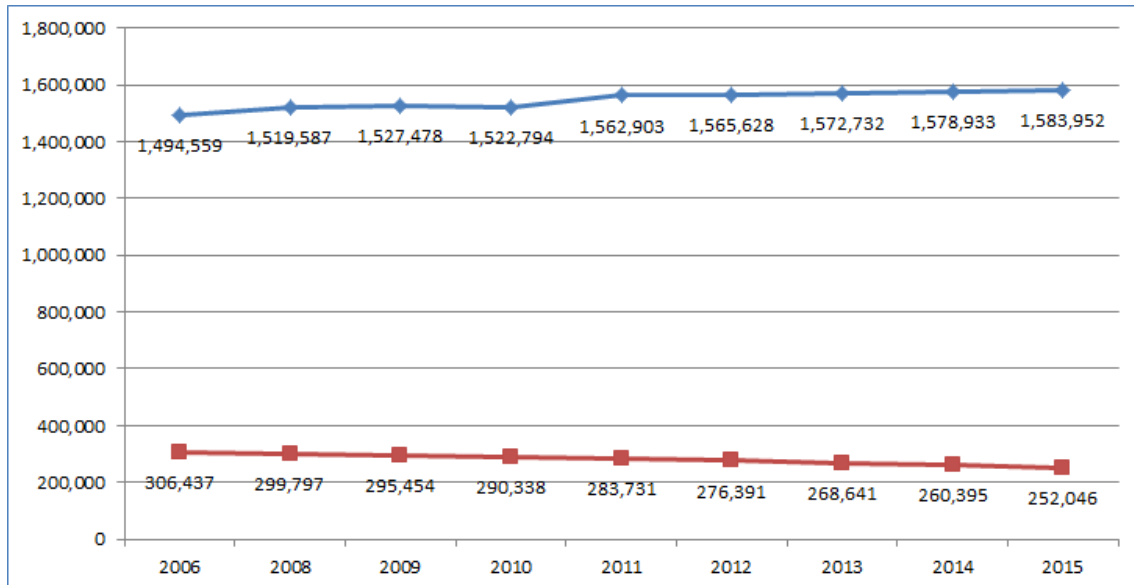
구분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구	계	1,494,559	1,519,587	1,527,478	1,522,794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남	752,742	765,398	769,968	767,722	787,981	789,286	792,862	796,141	798,896
	여	741,817	754,189	757,510	755,072	774,922	776,342	779,870	782,792	785,056
아동·청소년 (5세~19세)	계	306,437	299,797	295,454	290,338	283,731	276,391	268,641	260,395	252,046
	남	161,720	158,221	156,034	152,980	149,159	144,972	140,418	135,849	131,330
	여	144,717	141,576	139,420	137,358	134,572	131,419	128,223	124,546	120,716
아동·청소년 비율(%)		20.5%	19.7%	19.3%	19.1%	18.2%	17.7%	17.1%	16.5%	15.9%

주)KOSIS 지역통계 연령별 인구통계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27]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추이

(단위 : 명)



### □ 주거

- 충청북도의 주택 수를 살펴보면 2005년 520천 가구에서 2015년 669천 가구로 증가하여 연평균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 1,118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주택 보급률은 2005년 102.9%에서 2015년 111.2%로 증가하였으며, 2035년 13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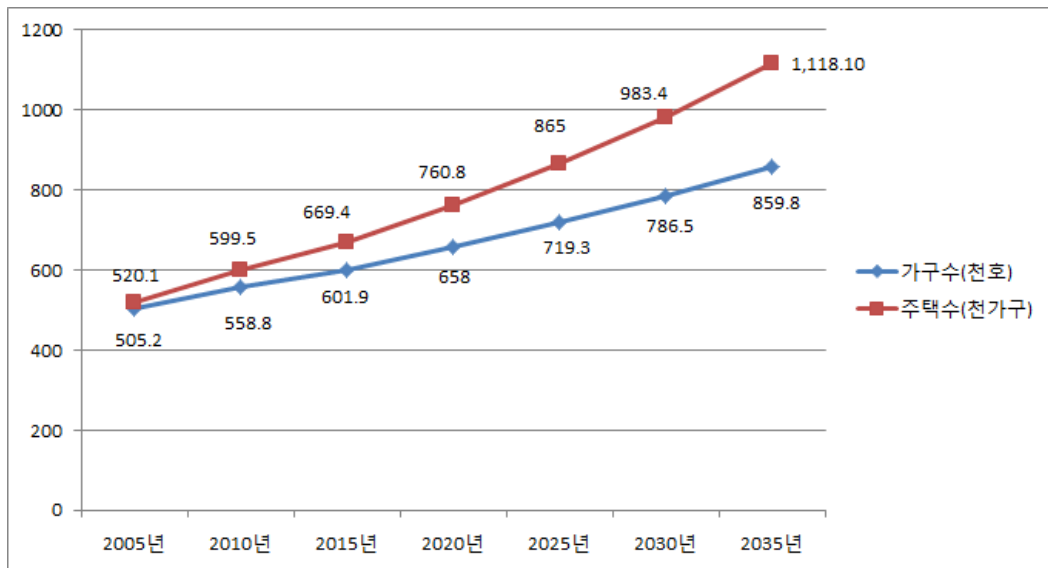
[표 2-43]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단위 : 천호, 천 가구, %)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가구수(천호)	505.2	558.8	601.9	658.0	719.3	786.5	859.8
주택수(천가구)	520.1	599.5	669.4	760.8	865.0	983.4	1,118.1
보급률(%)	102.9	107.3	111.2	115.7	121.4	125.3	130.4

[그림 2-28]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단위 : 천호, 천가구, %)



- 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2010년 64,489호에서 2015년 68,523호로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전국 대비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 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311,369	1,399,227	1,459,513	1,487,421	1,616,221	1,708,716	1,937,685
충북	57,627	64,489	68,486	60,836	60,783	66,664	68,523

#### □ 사회복지

- 전국 사회복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순위가 유사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동 및 여성복지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2-45]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2010	595	25,741	555	261	49	44
2011	598	69,214	679	265	139	45
2012	677	40,071	889	257	54	53
2013	619	55,033	943	276	54	62
2014	838	58,704	1,336	261	65	58
2015	458	58,356	1,455	260	78	58

주)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사회복지시설 수

[표 2-46]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2010	39	4,165	24	7	4	2
2011	37	4,282	23	6	4	2
2012	37	4,282	23	6	4	2
2013	39	4,363	24	8	4	2
2014	39	4,371	26	8	4	4
2015	36	4,409	51	8	4	4

주)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사회복지시설 수

-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시군구청 시설 만족도가 35.6%, 읍면동 주민센터, 39.8%, 사회복지관 53.1%, 복지 관련기관 56.7% 등으로 나타남.

[표 2-47]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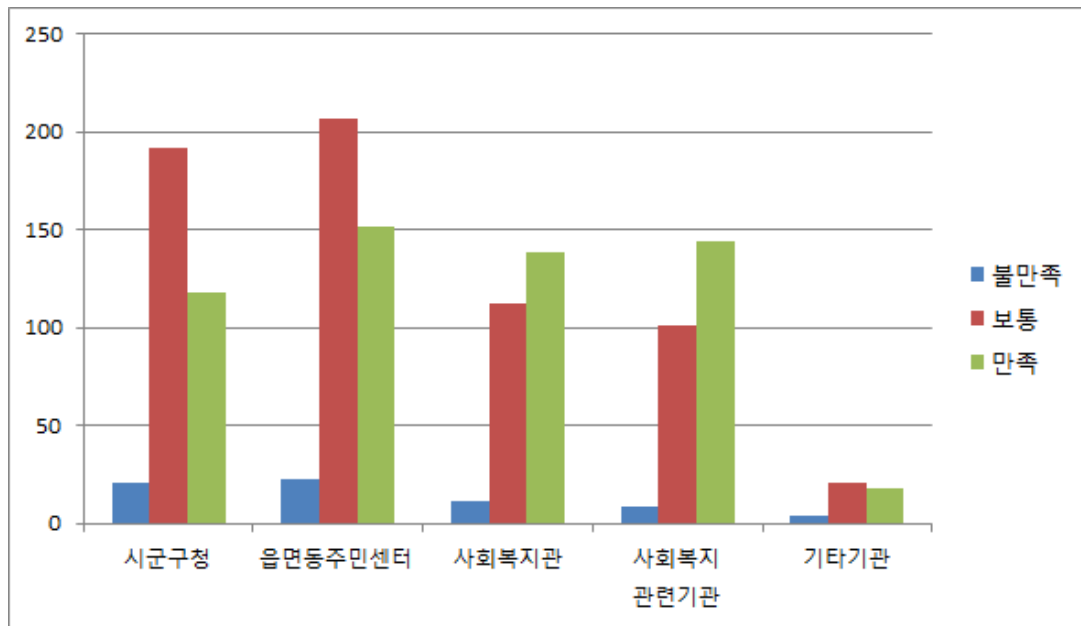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시군구청 이용경험		읍면동주민센터 이용경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사회복지 관련기관 이용경험		기타기관 이용경험	
불만족	21	6.3	23	6.0	11	4.2	9	3.5	4	9.3
보통	192	58.0	207	54.2	112	42.7	101	39.8	21	48.8
만족	118	35.6	152	39.8	139	53.1	144	56.7	18	41.9
합계	331	99.9	382	100	262	100	254	100	43	100

주) 2013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2-29]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4,178명에서 2015년 59,914명으로 연평균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20대가 11,2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9,337명, 50, 60대 각각 2,6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8]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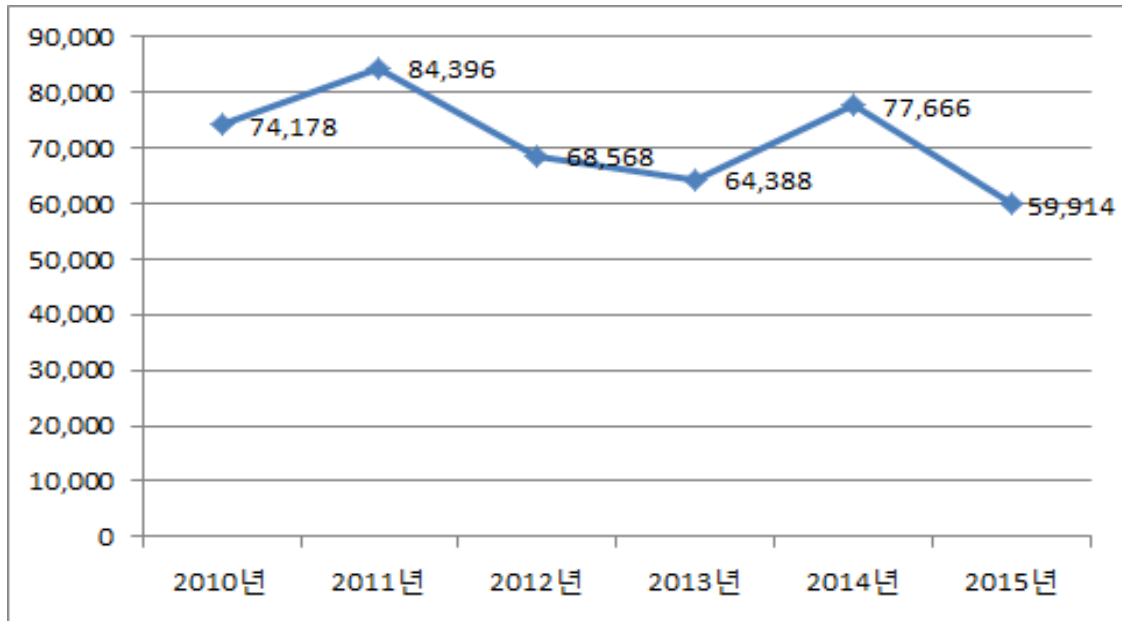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성별			연령별						
		소계	남자	여자	소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0	74,178	37,089	15,095	21,994	37,089	15,567	7,679	2,910	4,640	3,703	2,590
2011	84,396	42,198	17,168	25,030	42,198	18,290	8,905	3,049	4,934	4,183	2,837
2012	68,568	34,284	13,968	20,316	34,284	14,201	8,521	2,621	3,727	3,145	2,069
2013	64,388	32,194	13,395	18,799	32,194	15,445	7,060	2,162	3,037	2,583	1,907
2014	77,666	38,833	15,549	23,284	38,833	10,535	17,219	1,994	2,982	3,084	3,019
2015	59,914	29,957	11,747	18,210	29,957	9,337	11,292	1,534	2,474	2,660	2,660

주) kosis 통계연보(보건 및 사회보장)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30]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추이

(단위: 명)



-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01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감소추세이며, 재학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고등학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4명, 초등학생 3명 순으로 나타남.

[표 2-49]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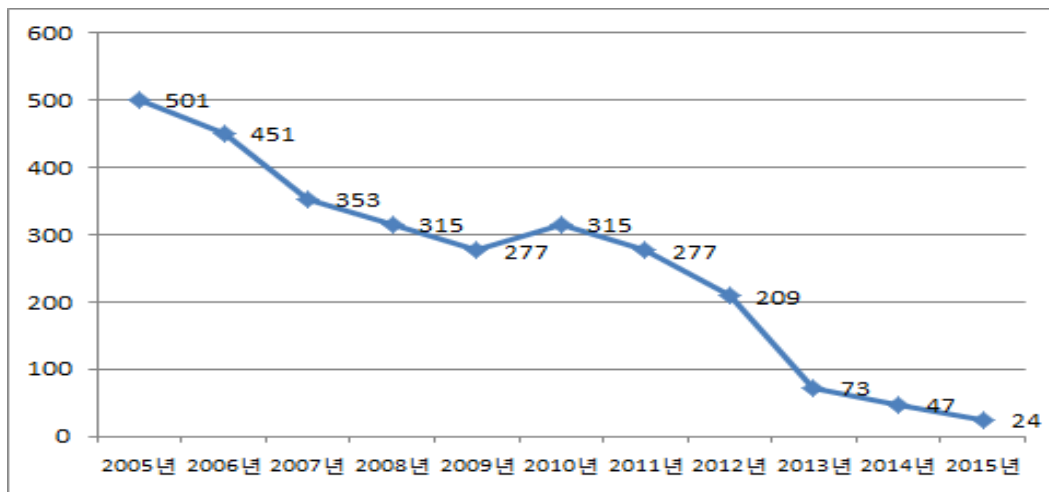
(단위: 가구)

구분	합계	세대주	세대원	재학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2005	501	335	166	12	141	162	173	13
2006	451	295	156	7	103	170	168	3
2007	353	234	119	8	77	130	130	8
2008	315	207	108	5	65	97	146	2
2009	277	179	98	3	41	88	143	2
2010	315	207	108	5	65	97	146	2
2011	277	179	98	3	41	88	143	2
2012	209	145	64	1	30	66	108	4
2013	73	54	19	-	6	12	37	18
2014	47	44	3	3	13	13	18	-
2015	24	18	6	-	3	4	17	-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31]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가구)



- 한부모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가구수는 3,998가구이고 가구원수는 10,18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연차별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이다가 2014년부터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단위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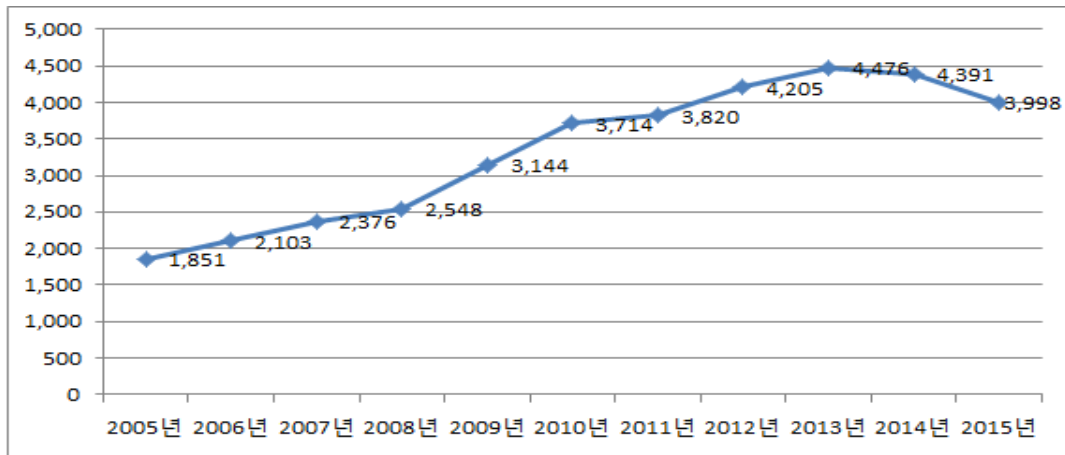
구분	한부모가족 지원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2005	1,851	4,841
2006	2,103	5,502
2007	2,376	6,192
2008	2,548	6,832
2009	3,144	8,472
2010	3,714	9,702
2011	3,820	10,064
2012	4,205	11,069
2013	4,476	11,822
2014	4,391	11,239
2015	3,998	10,180

주) 통계연보(2016)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32]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추이

(단위 : 가구)



- 2014년 기준 다문화가정은 9,34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시가 3,659가구 9.2%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주시가 1,204가구 (12.9%), 음성군이 1,055가구(11.3%) 순으로 나타남.
- 가구원은 29,988명 중 출생을 국내에서 한 내국인이 20,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이민자 외국인이 4,642명, 귀화 내국인이 4,172명 순으로 나타남.

[표 2-51] 충청북도 다문화가정 현황 (2015.1.1.기준)

(단위 : 명)

구분	다문화 가구	가구원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충청북도	9,347	29,988	20,341	4,172	4,642	833
충주시	1,204	3,948	2,742	509	607	90
제천시	802	2,582	1,749	387	393	53
청주시	3,659	11,095	7,358	1,612	1,814	311
보은군	311	1,202	898	142	140	22
옥천군	449	1,708	1,270	211	194	33
영동군	337	1,230	904	131	168	27
진천군	748	2,271	1,454	352	383	82
괴산군	261	919	660	110	135	14
음성군	1,055	3,279	2,083	486	547	163
단양군	209	770	576	95	92	7
증평군	312	984	647	137	169	31

주) KOSIS 지역통계 다문화가정 현황

## □ 장애인

- 충청북도 장애인은 2015년 기준 93,536명으로 2005년 대비 연평균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1.0%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순으로 나타남.

[표 2-52]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장애유형					
		남	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2005	67,086			35,562	6,008	6,598	6,397	514	6,450
2006	75,929	37,101	30,210	38,828	6,891	7,219	7,168	525	6,831
2007	79,826	48,271	31,555	41,545	7,754	7,725	7,975	527	7,157
2008	85,097	50,512	34,585	44,382	8,478	8,232	8,552	545	7,487
2009	90,958	52,805	38,153	47,744	8,920	8,606	9,444	563	7,840
2010	94,654	54,586	40,068	49,440	9,327	8,920	10,173	600	8,195
2011	94,855	54,547	40,308	49,416	9,231	8,966	10,216	626	8,475
2012	94,137	54,138	39,999	48,897	8,995	8,957	10,120	606	8,698
2013	93,563	53,771	39,792	48,436	8,713	8,934	9,935	620	8,973
2014	93,612	53,810	39,802	48,188	8,621	8,952	9,867	624	9,209
2015	93,536	53,726	39,810	47,726	8,651	8,979	9,738	629	9,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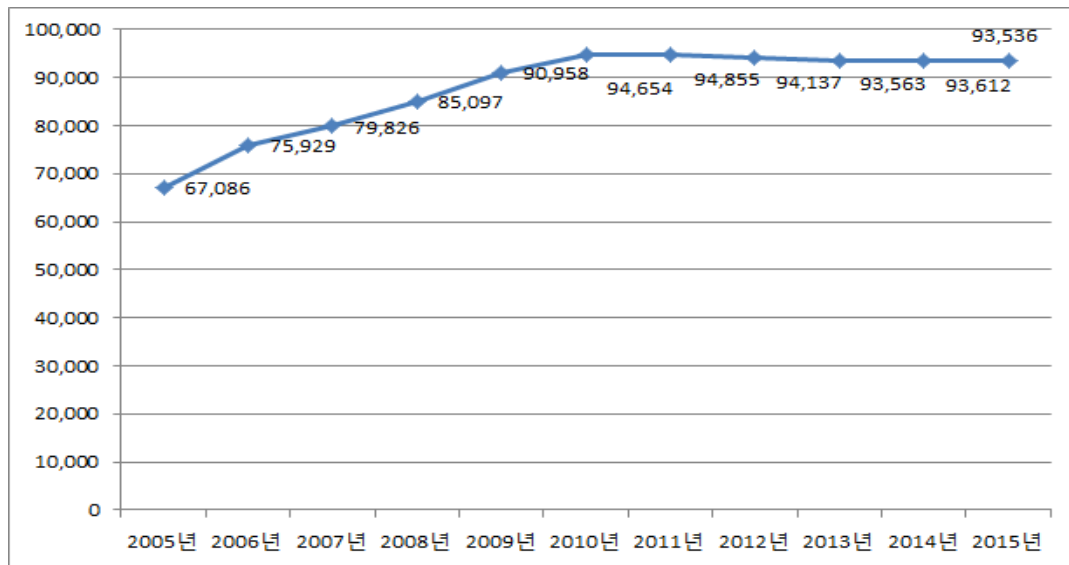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장애유형								
		자폐성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2005	67,086	274	2,412	1,209	342	513	161	44	374	228
2006	75,929	319	2,951	1,277	401	572	170	60	433	278
2007	79,826	322	3,321	1,403	440	617	190	73	457	320
2008	85,097	356	3,347	1,559	448	635	207	84	460	325
2009	90,958	388	3,645	1,624	437	613	227	87	477	343
2010	94,654	431	3,667	1,727	393	594	242	91	509	345
2011	94,855	450	3,603	1,863	287	538	249	93	524	318
2012	94,137	484	3,520	1,972	227	481	270	90	549	271
2013	93,563	512	3,566	2,048	207	434	283	89	567	246
2014	93,612	537	3,660	2,190	187	379	297	86	570	245
2015	93,536	578	3,719	2,336	168	366	315	86	573	245

주) 통계연보(2016)

## 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33] 충청북도 장애인 등록현황 추이

(단위: 명)



-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급은 전체의 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급은 1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53]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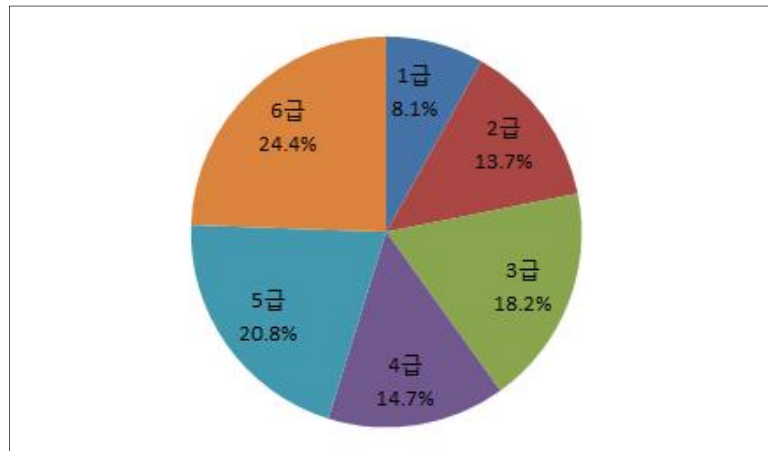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8	8,134	13,642	15,627	12,164	16,863	18,667
2009	8,447	13,979	16,714	13,464	18,550	19,804
2010	8,287	13,668	17,433	14,586	19,615	21,065
2011	8,089	13,490	17,252	14,693	19,819	21,512
2012	7,889	13,153	17,117	14,363	19,762	21,853
2013	15,187	25,731	34,136	27,820	38,903	45,371
2014	7,606	12,877	17,095	14,031	19,474	22,529
2015	7,581	12,854	17,041	13,789	19,429	22,842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34]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비율(2015년)

(단위: 명)



주) 2015년 기준 장애등급별 등록비율

-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7년 1.75%에서 2015년 2.93%로 연평균 8.4%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54]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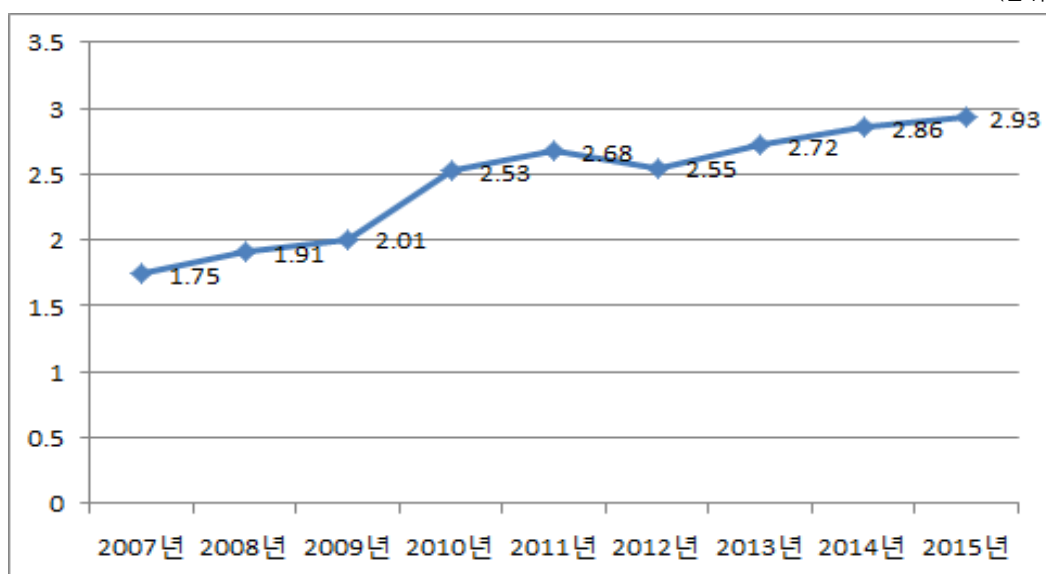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용률	1.75	1.91	2.01	2.53	2.68	2.55	2.72	2.86	2.93

주) KOSIS 장애인 고용률 시도별

[그림 2-35]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단위 : %)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 건강

- 충청북도 흡연율은 연차별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고위험 음주율과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2-55]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율 현황

(단위 : %)

구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비만율
2008	24.5	19.9	20.7
2009	26.7	17.1	22.5
2010	26.7	16.9	21.7
2011	26.3	19.6	24.0
2012	27	16.6	22.7
2013	25.7	19.0	24.5
2014	25.1	21.7	27.4
2015	23.6	19.8	26.5
2016	23.3	21.5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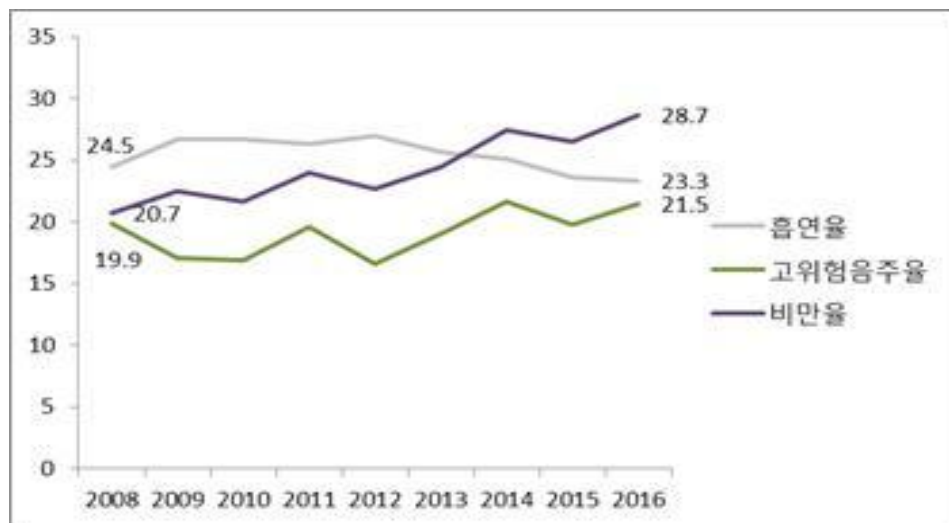
주) e-지방지표(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비만율 표준화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로 정의한다. 최근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 정의 : 체질량지수(kg/m<sup>2</sup>)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그림 2-36]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율 추이

(단위 : %)



- 전국의 주요 사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악성 신생물(암)이 150.8%로 가장 많았으며, 심장질환이 55.6%, 뇌혈관질환이 48.0%, 자살이 26.5% 순으로 나타남.

[표 2-56] 전국 주요 사인별 사망률

(단위 : %)

구분	악성신생물(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2005	133.8	2.3	39.3	64.1	17.2	24.7
2010	144.4	4.1	46.9	53.2	13.8	31.2
2015	150.8	9.9	55.6	48.0	13.4	26.5

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 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

- 충청북도의 주요 사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5년 악성신생물(암)이 176.9%, 심장질환이 58.9%, 뇌혈관질환이 58.0%, 자살이 30.4% 순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사인별 사망률은 전국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2-5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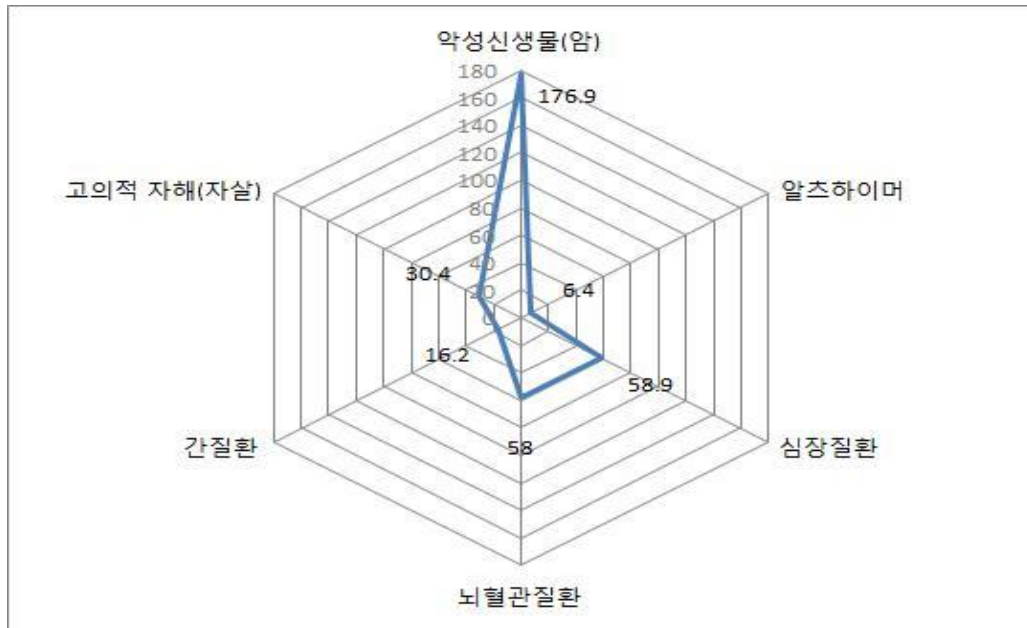
구분	악성신생물(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2005	133.8	2.3	39.3	64.1	17.2	24.7
2010	144.4	4.1	46.9	53.2	13.8	31.2
2015	150.8	9.9	55.6	48.0	13.4	26.5

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 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그림 2-3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 비율(2015년)

(단위 : %)



주) 2015년 기준 사인별 사망률 추이

[표 2-58] 충청북도 사망원인별 사망률(2015년)

(단위 : 명, 인구십만명당 사망률)

구분	남녀전체	남성	여성	사망률 성비	전국여성
전체	677.1	734.6	618.6	1.2	492.1
악성신생물(암)	176.9	217.9	135.3	1.6	114.4
뇌혈관질환	58	56.1	60.1	0.9	20.8
심장질환	58.9	53.3	64.6	0.8	13.9
폐렴	52.2	57.3	47	1.2	56.2
당뇨병	19.9	19.6	20.1	1	49.7
자살	30.4	43.3	17.2	2.5	28
만성하기도질환	17.6	22.7	12.4	1.8	11.1
고혈압성 질환	14.1	7.6	20.8	0.4	6.5
운수사고	16.7	25.9	7.4	3.5	5.8
간질환	16.2	24.6	7.6	3.2	15.5

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사망률 성비 = 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표2-1] 충청

-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사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악성 신생물(암)의 평균 수치가 899.1로 나타났으며, 심장질환이 191.2, 폐렴이 176.1순으로 나타남.

[표 2-59] 충청북도 65세 이상 사인별 사망률

(단위 : 사망률, 십만명당)

구분	악성신생물 (암)	당뇨병	심장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2000	896.9	170.3	168.8	111.5	205.0
2005	933.0	202.8	244.4	53.7	184.1
2010	894.3	105.7	194.0	209.0	118.7
2015	872.3	107.8	157.4	330.1	114.8
<b>평균</b>	<b>899.1</b>	<b>146.7</b>	<b>191.2</b>	<b>176.1</b>	<b>155.7</b>

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 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

- 전국기준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전체 82.0세이고 남성이 79.0세, 여성이 85.2세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전체 기대수명이 86.0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0] 기대수명(전국기준)

(단위 : 세)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차이
2000	76.0	72.3	79.6	7.3
2005	78.6	75.1	81.9	6.8
2010	80.8	77.2	84.1	6.9
2015	82.0	79.0	85.2	6.2
2020	83.2	80.3	86.1	5.8
2025	84.2	81.5	87.0	5.5
2030	85.2	82.7	87.7	5.1
2035	86.0	83.7	88.4	4.7

주) 장래생명표/전국

## 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충청북도의 인구십만명당 조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677.1%로 나타났으며 사망률 성비는 1.2로 나타남.

[표 2-61]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단위 : 명, 인구십만명당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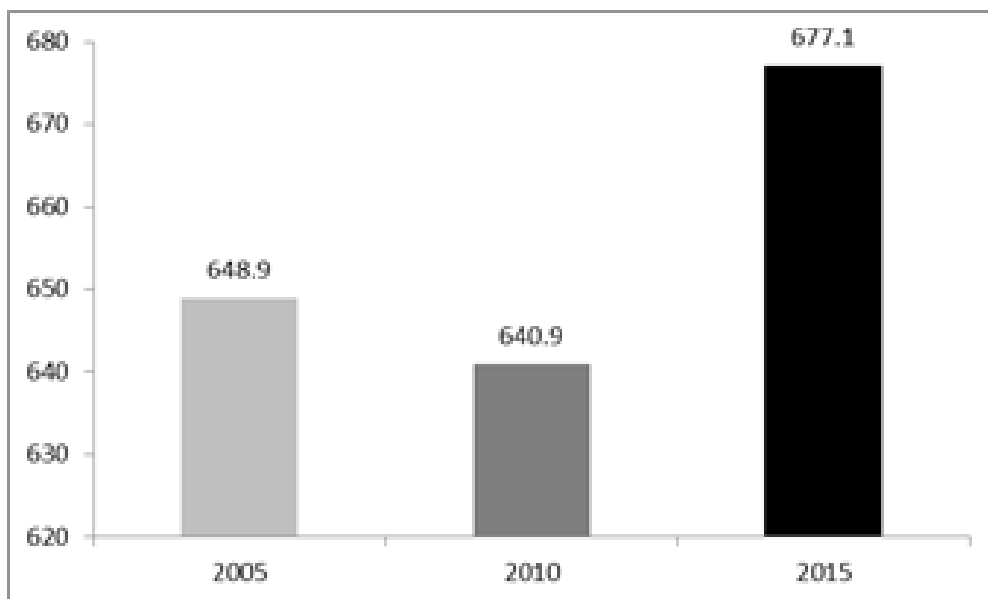
구분	연도	합계	남	여	사망률 성비
충청북도	2005	648.9	726.3	570.4	1.3
	2006	637.4	698.1	575.8	1.2
	2007	642.3	704.4	579.3	1.2
	2008	642.2	717.2	566.1	1.3
	2009	655.4	737.7	571.8	1.3
	2010	640.9	709.2	571.5	1.2
	2011	658.4	729.5	586.3	1.2
	2012	675.8	733.5	617.2	1.2
	2013	665.3	710.4	619.5	1.1
	2014	649.9	716.9	581.8	1.2
	2015	677.1	734.6	618.6	1.2
전국	2015	541.5	591.0	492.1	1.2

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사망률 성비 = 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

[그림 2-38]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단위 : 명, 인구십만명당 사망률)



- 충청북도의 의료시설 수는 2015년 기준 총 1,679개소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12개소, 병원은 37개소, 의원은 811개소로 나타남.
- 보건소는 총 14개소이며, 보건지소는 96개소, 보건진료소는 158개소 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2]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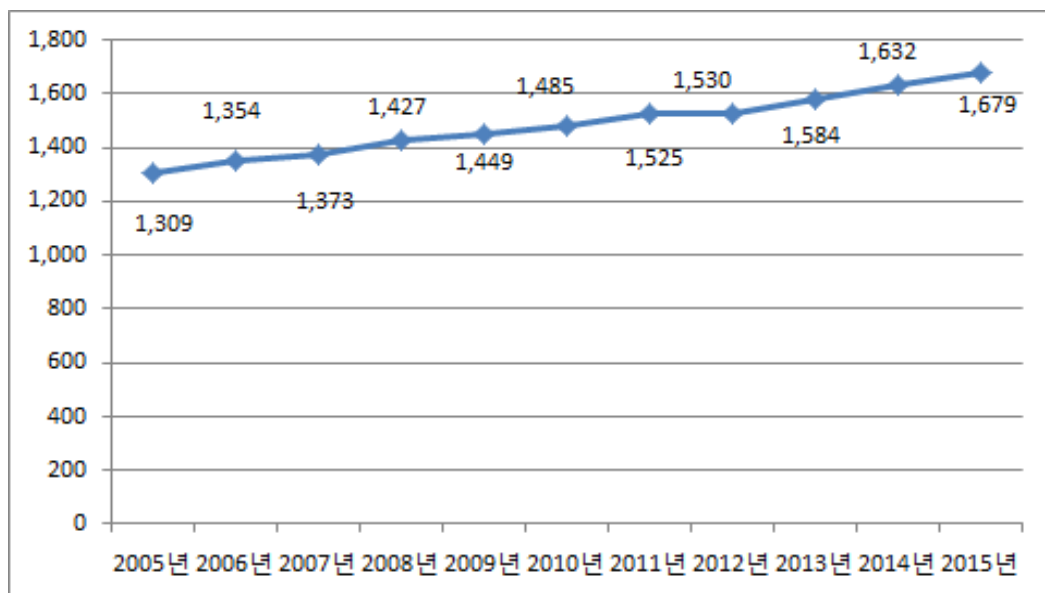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의원수			치과 병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2005	1,309	12	24	736	247	13	93	163
2006	1,354	10	24	754	256	12	93	162
2007	1,373	10	27	775	244	13	94	163
2008	1,427	10	32	758	284	13	94	161
2009	1,449	10	34	759	292	13	94	161
2010	1,485	10	35	768	309	13	95	160
2011	1,525	11	37	783	317	13	94	160
2012	1,530	11	35	759	328	13	95	158
2013	1,584	11	37	772	346	14	95	158
2014	1,632	11	37	788	367	14	95	158
2015	1,679	12	37	811	376	14	96	158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39]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 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06년 1.7명에서 2015년 2.2명으로 연평균 3.3% 증가하는 추세이며 2035년에는 3.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3]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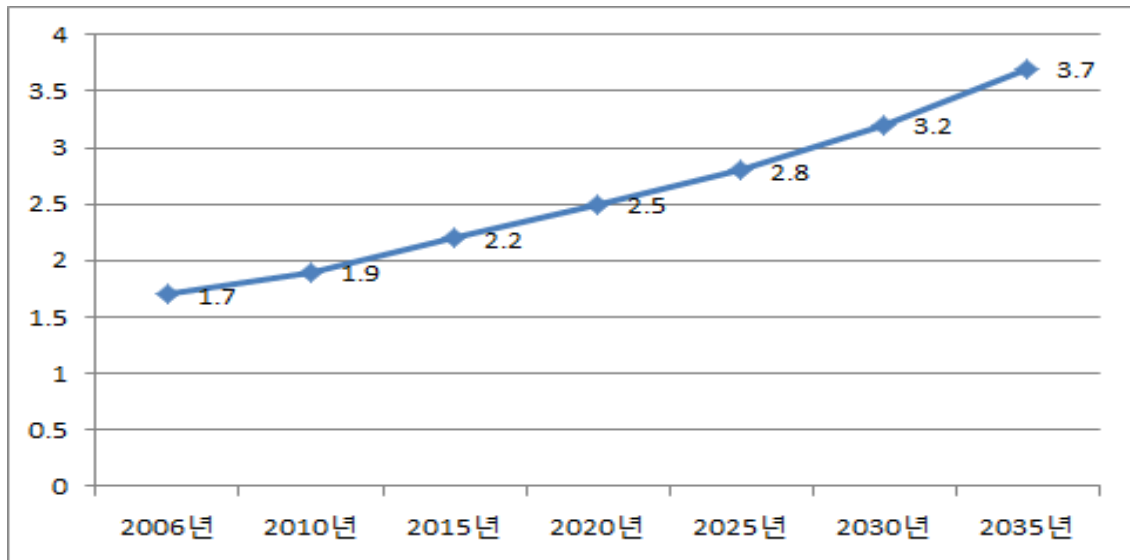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1.7	1.9	2.2	2.5	2.8	3.2	3.7

주) 통계청 e-지방지표

[그림 2-40]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단위 : 명)



## □ 교육

- 충북의 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885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260개교, 중학교가 128개교, 고등학교가 77개교, 전문대 5개교, 대학교 11개교로 나타남.

[표 2-64] 충청북도 교육기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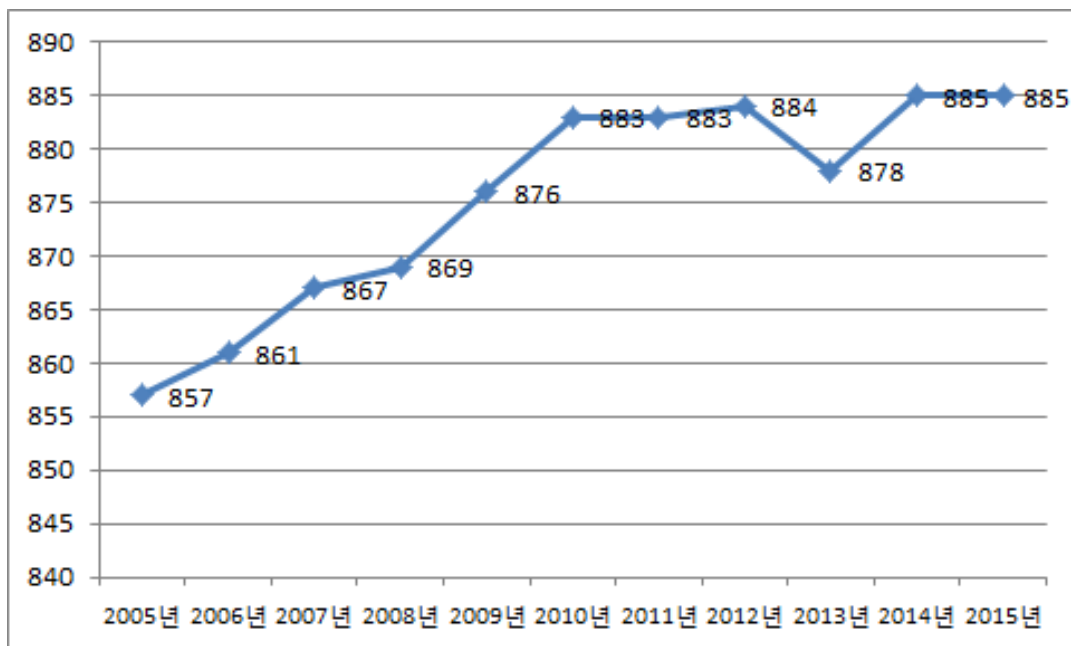
(단위 : 개교)

구분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교
2005	857	343	248	122	79	6	11
2006	861	347	252	123	79	6	11
2007	867	346	254	127	82	5	9
2008	869	349	256	128	82	5	10
2009	876	347	258	131	82	5	12
2010	883	346	259	132	83	5	12
2011	883	344	260	131	83	5	11
2012	884	344	259	130	81	5	11
2013	878	341	259	127	77	5	11
2014	885	344	259	128	78	5	11
2015	885	343	260	128	77	5	11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41] 충청북도 교육기관 연도별 추이

(단위 : 개교)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충청북도의 평생교육기관은 2015년 기준 준 형식 기관이 39개소로 나타났으며,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99개소로 나타남.

[표 2-65]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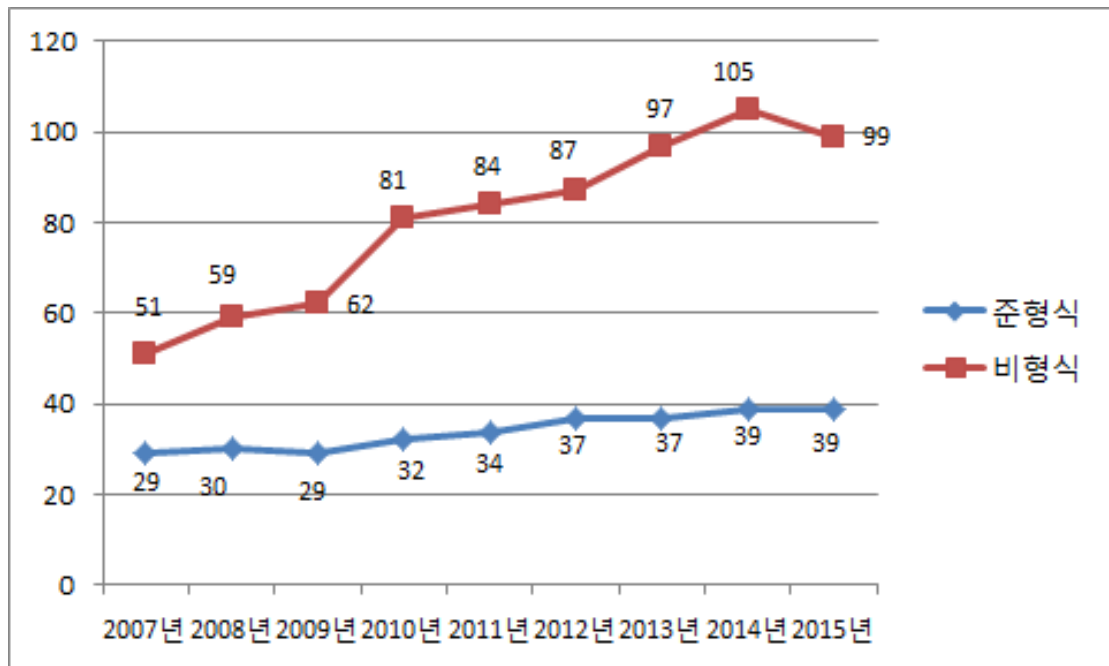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준 형식 평생교육기관	29	30	29	32	34	37	37	39	3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51	59	62	81	84	87	97	105	99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42]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추이

(단위 : 개소)



- 충청북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887개소에서 2015년 1,230개소로 연 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가정보육시설이 55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시설 445개소, 국공립 58개소, 법인 34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2-66]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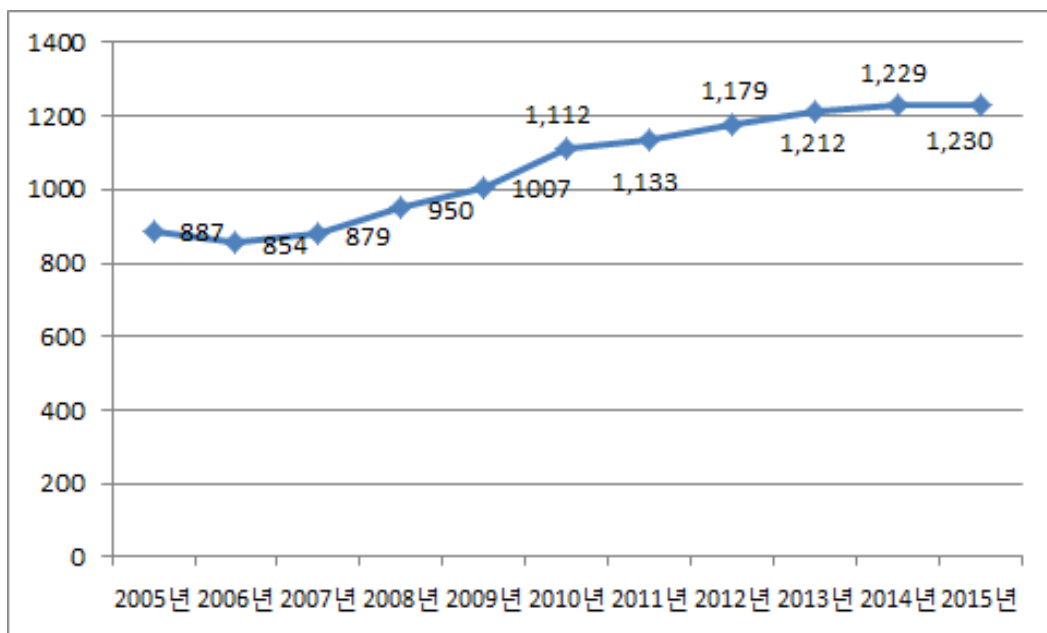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직장	가정
2005	887	34	108	552	-	9	292
2006	854	34	105	543	-	9	268
2007	879	40	105	432	1	10	291
2008	950	42	106	437	1	9	355
2009	1,007	43	106	442	1	12	433
2010	1,112	47	108	449	1	14	493
2011	1,133	51	108	453	2	16	503
2012	1,179	52	108	452	5	20	542
2013	1,212	56	144	434	5	21	552
2014	1,229	56	34	440	7	26	557
2015	1,230	58	34	445	7	28	551

주) 통계연보(2016)

[그림 2-43]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추이

(단위 : 개소)



-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 천 명당 초등학생 수는 2005년 126.6명에서 2015년 85.3%로 연 평균 6.7%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유아(0-4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2005년 12.0개소에서 2015년 17.6개소로 연평균 4.7%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2-67]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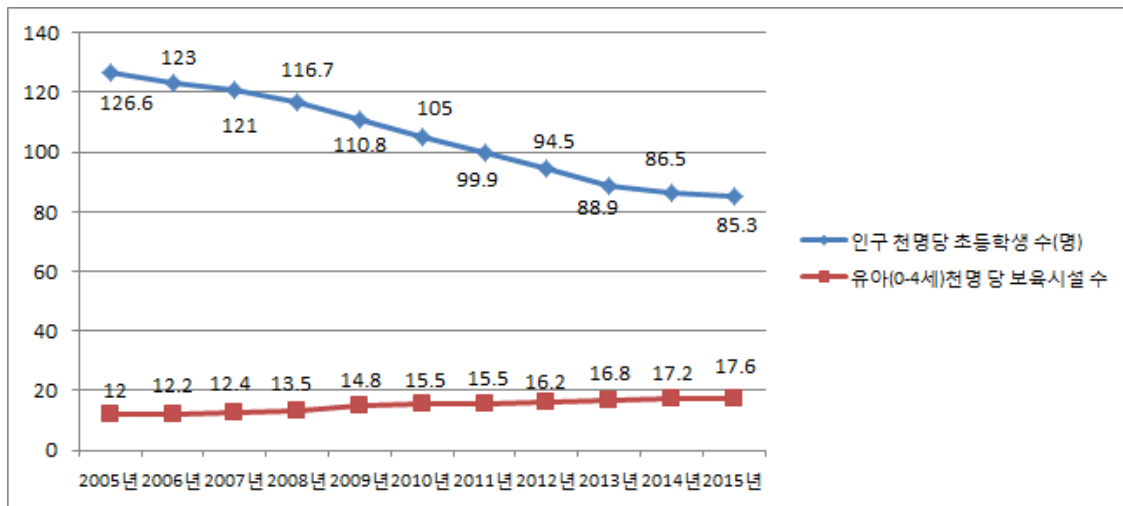
(단위 : 명, 개소)

구분	인구 천 명당 초등학생 수(명)	유아(0-4세)천명 당 보육시설 수
2005	126.6	12.0
2006	123.0	12.2
2007	121.0	12.4
2008	116.7	13.5
2009	110.8	14.8
2010	105.0	15.5
2011	99.9	15.5
2012	94.5	16.2
2013	88.9	16.8
2014	86.5	17.2
2015	85.3	17.6

주) e-지방지표 지역통계

[그림 2-44]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단위 : 명, 개소)



## □ 문화

- 충청북도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2005년 4.3개소에서 2015년 8.0개소로 연 평균 8.6% 증가하는 추세임.
-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 수는 2005년 83.4개소에서 2015년 111.4개소로 연 평균 3.4%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2-68]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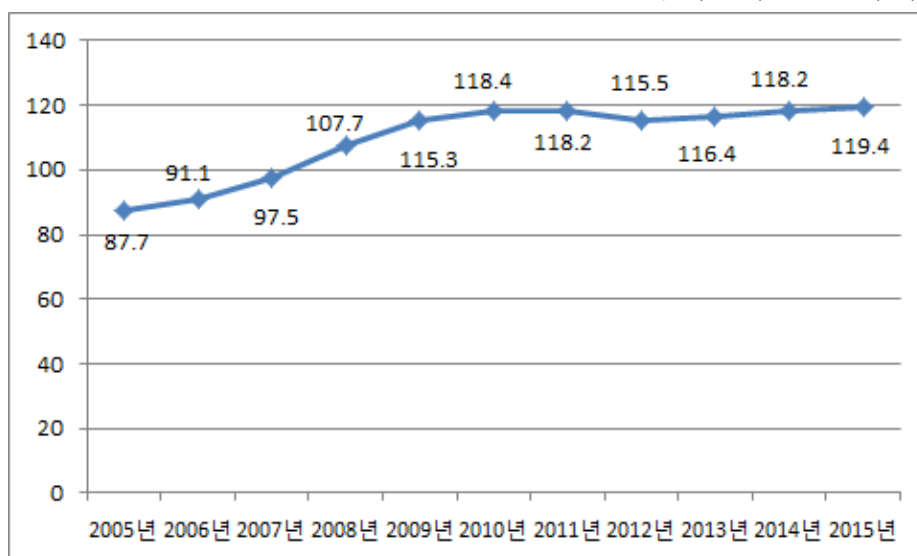
(단위 : 인구십만명당 개소수)

구분	문화기반 시설 수	체육시설 수	전체 합계
2005	4.3	83.4	87.7
2006	4.6	86.5	91.1
2007	5.6	91.9	97.5
2008	5.7	102.0	107.7
2009	6.9	108.4	115.3
2010	6.8	111.6	118.4
2011	6.7	111.5	118.2
2012	7.1	108.4	115.5
2013	7.6	108.8	116.4
2014	8.0	110.2	118.2
2015	8.0	111.4	119.4

주) e-지방지표 지역통계

[그림 2-45]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추이

(단위 : 인구십만명당 개소수)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문화컨텐츠 사업체 수는 2006년 1,929개소에서 2015년 2,761개소로 연 평균 4.8%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전국 문화컨텐츠 사업체 수 대비 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9] 문화컨텐츠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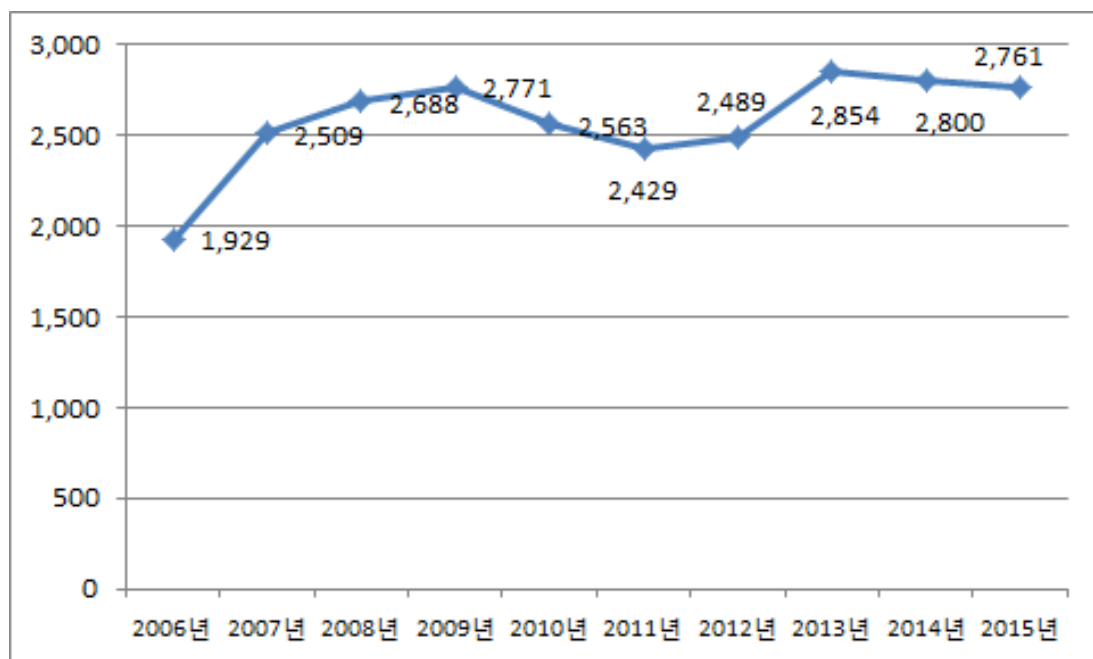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전국	충북	전국대비 비중
2006	34,331	1,929	5.6
2007	52,141	2,509	4.8
2008	49,499	2,688	5.4
2009	51,045	2,771	5.4
2010	46,740	2,563	5.5
2011	46,118	2,429	5.3
2012	46,803	2,489	5.3
2013	45,437	2,854	6.3
2014	44,474	2,800	6.3
2015	45,258	2,761	6.1

주) KOSIS 지역통계

[그림 2-46] 문화 컨텐츠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소, %)



- 충청북도의 지정등록 문화재 수는 2010년 691개에서 2015년 756개로 1.9%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전국 지정등록문화재 수 대비 6.1% 수준임

[표 2-70] 지정등록문화재 시·도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1,065	11,343	11,499	11,893	12,176	12,392
서울특별시	1,373	1,414	1,485	1,521	1,582	1,589
부산광역시	276	283	311	341	371	408
대구광역시	197	204	222	231	235	246
인천광역시	229	233	238	243	248	257
광주광역시	130	131	137	138	144	144
대전광역시	179	181	195	204	208	208
울산광역시	108	116	118	124	132	131
세종시	-	-	38	39	47	41
경기도	885	908	929	958	995	1,006
강원도	541	565	574	598	607	626
<b>충청북도</b>	<b>691</b>	<b>710</b>	<b>720</b>	<b>730</b>	<b>738</b>	<b>756</b>
충청남도	962	986	964	981	997	1,000
전라북도	746	771	715	805	826	843
전라남도	1,132	1,146	1,158	1,163	1,171	1,184
경상북도	1,847	1,872	1,834	1,937	1,955	1,974
경상남도	1,569	1,596	1,630	1,661	1,700	1,757
제주도	200	227	231	219	220	222
전국대비 충북비율(%)	6.2	6.3	6.3	6.1	6.1	6.1

주) KOSIS 지역통계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 □ 안전

-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8.1%에서 2015년 33.9%로 10년 사이 4.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28.7%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범죄 발생률과 비교해보면, 전국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범죄 발생률로 전국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남.

[표 2-71]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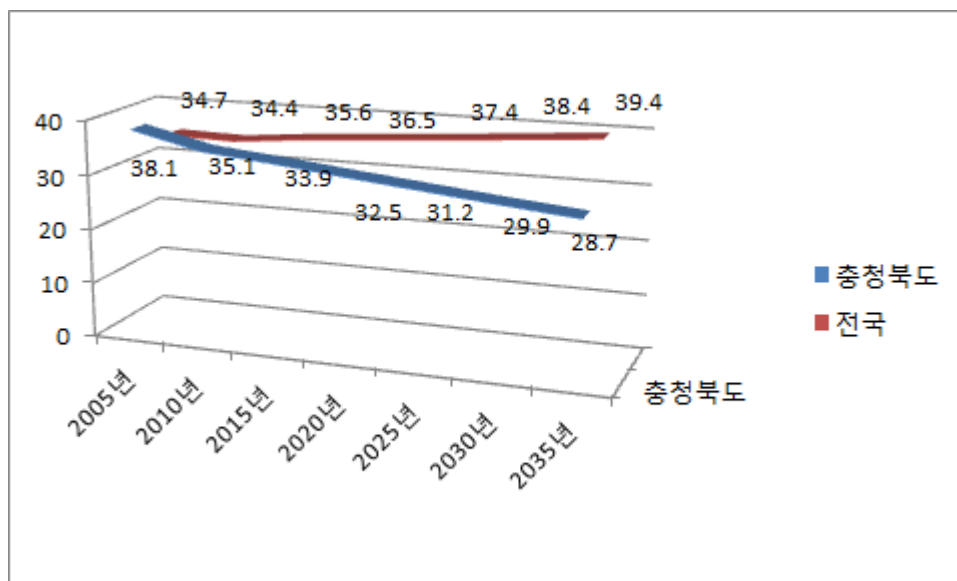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충청북도	전국	비고
2005	38.1	34.7	
2010	35.1	34.4	
2015	33.9	35.6	
2020	32.5	36.5	
2025	31.2	37.4	
2030	29.9	38.4	
2035	28.7	39.4	

주) e-지방지표

[그림 2-47]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 (전국과 비교)

(단위 : %)



-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 인식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3.5%인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47.1%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해보면 안전인식도는 유사한 수치지만 불안인식도는 충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2] 충청북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구분		계	안전함			보통	불안함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2014	전국	100.0	9.5	0.6	8.9	39.6	50.9	39.5	11.4
	충북	100.0	11.9	0.4	11.5	40.5	47.5	36.9	10.6
2016	전국	100.0	13.2	1.1	12.1	41.2	45.5	36.1	9.4
	충북	100.0	13.5	0.9	12.6	39.4	47.1	37.4	9.7

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 충청북도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8,571건에서 2015년 8,50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과 2014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망자수는 2012년 262명에서 286명으로 증가추세이며, 부상자 또한 증가추세로 나타남.

[표 2-73] 충청북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1일평균	부상자수	1일평균
2012	전국	226,878	5,505	15.1	352,458	965.6
	충북	8,571	262	0.7	14,032	38.4
2013	전국	221,523	5,096	14.0	339,265	929.5
	충북	8,696	265	0.7	14,178	38.8
2014	전국	222,234	5,208	14.3	340,140	931.9
	충북	8,636	280	0.8	14,410	39.5
2015	전국	218,660	4,978	13.6	327,411	897.0
	충북	8,501	286	0.8	14,222	39.0

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 3.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분석

#### 가. 환경분야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2010년 대비 2015년에 8.8%가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57.6%가량 증가하여배출량은 약 63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 소비량 증가
  - 2015년 기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71toe로 전국 1인당 에너지 소비량 5.58toe의 66.5%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 4.20toe의 88.3% 수준에 육박함.
  - 기온상승, 극한기상 등의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충청북도 평균기온 2005년 대비 2015년 1.5도 상승
  - \*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 및 국지성 호우 빈번 및 호우 일수 증가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 2014년 현재 충북의 재활용률은 연평균 3.4%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2% 수준으로 타 시도의 재활용률(서울 6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나. 경제분야

- 재정자립도증가
  - 2005년 대비 2017년에 8.2% 증가추세임. 인구증가, 기업유치 등의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고용률 및 실업률
  - 2014년 60%대에 진입하였지만, 같은 기간 충남의 평균 고용률 62.2%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평균 43.4%) 대비2.5%가량 높은 수준이고, 15세~29세까지의 청년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편임.

- 충청북도의 실업률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 3.0%로 급격하게 증가함. 일자리는 많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취업을 기피하는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지만 고용이 안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간의 입장 절충을 위한 정책적 비전이 필요한 상황임.
-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 연평균 21.2%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GRDP(지역 내 총생산)
  - 2015년 기준, 충북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은 50.3조원으로 전국 GDP의 3.4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4.5%의 성장률로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관광
  - 다양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 유치실적 저조

#### 다. 사회분야

- 빈곤
    -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5년 현재 과거 10년간 연평균 2.7% 감소 추세이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평균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충청북도의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여성 경제활동 인구
    - 충북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54.4%로 연평균 2.1% 증가추세 이며, 전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51.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활동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음.
  - 노인 인구비율
    - 충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4.5%로 증가추세이며, 향후 2030년 20%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노령화 지수는 2015년 기준 100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 □ 독거노인 현황

- 충북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16년 기준 노인인구 대비 7.9%로 증가추세이며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건강

- 충북의 흡연율은 감소추세지만 감소폭이 미비하며, 고위험 음주율과 비만율은 증가추세로 나타나 관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큼

## 4. 정책적 시사점

### 가. 환경분야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방안 및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산과 강은 충청북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풍명월'의 위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함.
- 전기차 보급 등 녹색교통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해 녹색교통을 활성화하여야 함.

### 나. 사회분야

- 충청북도는 전국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높은 편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의 여성경제 활동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고 남녀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함.
-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부분에서의 경제활동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충청북도의 고령화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예비노인인구라고 볼 수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48~64세)까지 고려한다면 노인 정책에 통합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됨.
-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육, 주택분야를 포함한 모든 도정 분야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함.
- 다양한 도시재난 발생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시민 문화여가활동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다. 경제분야

-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래재산인 청소년의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젊은 층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경제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추진하여 고용률을 높여나가야 함.
-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함.
- 산업구조의 다양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라. 종합의견

- 충청북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경성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형평성과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한 사회가치의 실현을 비롯하여 시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충청북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고려되는 분야들은 지표로 관리하여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5. SDGs와 연계한 현황분석

- SDGs에서 제시한 17개 목표와 충청북도 현재 현황 및 여건을 목표별로 연계 분석하여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도출 자료로 활용목적이 있음.

[표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SDGs		현황 분석
목표1	빈곤퇴치	<p>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2015년 49,727명, 전체인구대비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0.5% 감소추세</li> <li>-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2015년 13,600명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27.3%)</li> <li>- 2030년 1.7%, 2035년 1.6%로 감소 전망</li> </ul> <p>2. 임대주택 재고 현황 : 2015년 68,523호</p> <p>→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추세이지만 감소 폭이 미약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빈곤층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계층 간의 빈곤격차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함.</p>
목표2	기 아 종 식 과 지 속 가 능 한 농업	<p>1. 친환경농지면적 : 2015년 3,379ha, 2035년 7,194ha로 증가 전망</p> <p>2.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 2015년 41,840톤, 2035년 2,3319톤으로 감소 전망</p> <p>→ 친환경농지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전망했지만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함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용에 대한 현실화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함.</p> <p>농업과 관련하여 충북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p>
목표3	건강과 웰빙	<p>1. 흡연, 음주, 비만율 : 충청북도의 흡연율은 소폭 감소추세지만 음주 및 비만율은 증가 추세임</p> <p>2. 사인별 사망률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임.</p> <p>3. 조사망률 : 인구십만명당 677.1명으로 전국과 비교 시 상당히 높은 수준임.</p> <p>4. 의료시설 수 : 2015년 기준 1,679개소이며 증가추세임</p> <p>5.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 2015년 2.2명이며 증가추세, 2035년 3.7명 예상</p> <p>→ 음주 및 비만율에 대한 위험 인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망률이 높은 충청북도의 원인파악 및 억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SDGs		현황 분석
목표4	양질의 교육	1. 교육기관 현황 : 2015년 총 885개교로 연평균 0.3% 증가추세 - 2015년 유치원 343개교, 초등 260개교, 중등 128개교, 고등 77개교 2. 평생교육기관 현황 : 2015년 138개교로 연평균 9.1% 증가추세 - 2015년 준형식기관 39개소, 비형식 99개소 3. 보육시설 현황 : 2015년 1,230개소 연평균 3.9% 증가추세
		→ 교육기관 수는 연차별 소폭 증가추세이나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기관의 양적인 증가 및 질적인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목표5	성평등	1. 여성인구 : 2015년 약 78만 명 연평균 0.5% 증가추세 2035년 약 85만 명 전망 2. 여성경제참가율 : 2009년 50% 상회, 2015년 54.2% 전국 대비 2.4% 높은 수준
		→ 여성인구는 연평균 0.5% 증가추세이며, 여성경제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경제활동의 질적인 부분에서 제고노력이 필요함.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1. 강수량 : 2015년 8,429mm 2. 하천 및 유지면적 : 2015년 344.6km <sup>2</sup> 3. 수질오염도 - 충주호 : 2015년 COD I b급(좋음), BOD II급(약간 좋음) - 대청호 : 2015년 COD II급(약간 좋음), BOD I 급(좋음) 4. 상수도 - 보급률 : 2015년 90.2%, 2035년 108.6% 전망 - 1인당 1일 급수량(ℓ) : 2015년 636,204ℓ, 2035년 1,423,834ℓ
		→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하천 및 유지 면적은 변화가 없음. 수질오염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충청북도민에게 생태하천 복원, 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SDGs		현황 분석
목표7	깨끗한 에너지	1. 최종에너지 소비량 : 2015년 218,608천TOE 연평균 2.5% 증가 2035년 359,671천TOE 소비 전망 2.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가추세 2015년 3.4%, 2035년 59.3% 전망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폐기물에너지 71.4%, 수력 18.7%, 바이오 5.5% 순임.
		→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 등의 해소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수소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 활성화 및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함.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 고용률 : 2015년 62.1%로 연평균 0.3% 증가추세임. - 연령대별 : 15-29세 연령층 38.2%로 가장 낮음 2. 실업률 : 2015년 2.6%로 소폭 증가추세임 3. 비정규직근로자 : 2015년 약 20만 명, 연평균 2.2%증가 추세 4. 사업체수 : 2015년 121,493개, 연평균 3.0% 증가 추세 - 종사자수 : 연평균 4.4% 증가추세 5. GDRP의 지속적인 성장
		→ 사업체수 및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지만,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래일자리와 창업에 용이한 고용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 인력수급 방안 및 최적형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의 준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 충북은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임. - 2015년 제조업 비중 전체 산업체 수의 약 10% 수준 2.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에 대한 주도적 발전 노력중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 확산
		→ 충북의 타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자료(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2016))에 따르면 신성장 미래 유망산업으로 제조업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을 제시하여 바이오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ICT 융합산업 등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임.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SDGs		현황 여건 분석
목표10	불평등 감소	<p>1. 노인인구 : 약 23만 명, 독거노인 비율 7.7%, 고용률 46.3%</p> <p>2. 15-29세 인구 : 약 11만 명, 고용률(29세까지) 40.8%</p> <p>3. 여성인구 : 약 78만 명 경제참여율 54.2%</p> <p>4. 비정규직 근로자 : 약 20만 명</p> <p>→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로봇의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신 빈곤층 증가, 불평등한 일·가정양립(성별, 공공과 민간), 빈곤 다문화가정 증가 등의 사회취약계층이 증가 또는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비정규직, 청년층, 고령층 등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p>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p>1.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도시 쇠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단위 도시들의 65% 이상이 쇠퇴하고 있음.</p> <p>2. 공공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성과평가 등의 피드백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p> <p>3. 이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 공동체 위주의 사회·경제 조직 확대가 필요함.</p>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p>→ 지역 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외 순 본원 소득, 대형마트의 순 매출, 순이익 조사, 충북 내 전체 시장대비 호혜시장규모, 유통 규모 대비 전통시장 및 지역기반 유통회사를 통한 유통 규모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함.</p>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p>1. 온실가스 배출량 : 2015년 38,525천 톤 연평균 1.1% 증가추세 2035년 63,127톤 전망 - 1인당 배출량 : 연평균 3.6% 증가</p> <p>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005년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오존의 경우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p> <p>3. 고형자원 : 폐기물발생량의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처리량도 증가하고 있음.</p> <p>→ 미세먼지 등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충북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충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4, 5종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또한 교통부문 대기오염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 I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SDGs		현황 여건 분석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1. 충청북도 생물 종수 : 2015년 5,405종 2. 국내종 수 대비 양서파충류 비율이 68.4%, 식물 45.4%, 조류 43.3% 순으로 조사됨.
		→ 최근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종 등의 출몰로 멸종위기에 몰린 생물 종들이 늘어가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생태단절지점 복원, 야생생물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함.

### 03.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03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1. 국제기구의 노력

####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국제연합)의 노력

- UN인간환경회의(UNCHE) :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열림
- 유엔환경계획(UNEP) 10주년 기념행사 - 1982년 5월 케냐 나이로비
  - 나이로비 선언 발표 - 인간과 환경의 조화
  - '나이로비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 198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설립
  -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
  - 빈곤, 인구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을 우리 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규정
- UN환경개발회의(UNCED)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 평가되며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지구환경회담
  -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을 채택
  - 리우환경회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첫째,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써 WCED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채택
- 둘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력과 생물종의 감소를 막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등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 협약
- 셋째,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의 강령인 [의제21(Agenda21)]의 작성

[표3-1] 의제21(Agenda21)

의제 21(Agenda21)	
정의	1992년 6월 UNCED(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 의제21은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사회 경제 부문, 자원의 보존과 관리 부문,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 이행수단 부문 등의 내용을 포함.
내용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
주요그룹 (9개)	여성계(Women), 청소년(Children and Youth), 농민(Farmers),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노동자와 노동조합(Workers and Trade Unions), 기업 및 산업계(Business and Industry), 과학기술계(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원주민(Indigenous people)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Rio+10)
  -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
  - "지속가능발전"도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세계 정상들이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Rio+20)
  - 90개국 각국 정상 포함 180여개국 정부 대표, 지방정부 NGO 등 4만 여명 참석

-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성 수단으로 녹색경제 채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설정 및 이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유엔총회 위임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년 계획 채택 : 리우+20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10YEP CSP)] 채택하고 제 67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전담할 기구로 UNEP를 지정함.
- Post-2015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의 기반을 마련

[표3-2] 10YEP CSP 주요목표

10YEP CSP 주요 목표
1.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및 환경오염의 비(非)동조화(decoupling)
2.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3.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강화
4.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촉진
5. 저탄소 생활양식의 장려
6.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강화

-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SDS) : 2015년 9월 미국 뉴욕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

[그림3-1] SDGs 17개 목표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표3-3]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 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나. 주요 국제기구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 국제기구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표3-4] 국제기구들의 노력

국제기구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EPR)</li> <li>- OECD 회원국 Agenda21 권고 NSDS 수립진행</li> <li>- OECD SDI(지속가능발전지표) PSR 모형 제시</li> <li>- OECD RSD(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 운영</li> </ul>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86개국, 1,000여개가 넘는 세계지방정부 연합체(한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54개 지방정부 가입)</li> <li>- ICLEI 전략계획 및 10대 의제 추진</li> <li>- Local Action21, CCP, LAB, Ecomobility 등 SD 프로그램</li> </ul>
World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Mission Statement에서 극빈층을 근절하고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목표를 제시함</li> <li>-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li> </ul>

## 2. 선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 가.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사례

-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영국 연방정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환경·식품·농촌부의 주도로 연방정부 각 부처와 지역 행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함
  - 국가전략은 포괄적인 틀과 분야별 이행계획으로 구성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예산지출 및 부처별 연도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점검하며, 15개 핵심지표와 147개 국가 및 지방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는 체계
  - 연방정부 내각의 에너지·환경 각료 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추진을 점검

[표3-5] 영국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주요내용

<p>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전략</li> <li>2.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기</li> <li>3. 하나의 지구 경제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li> <li>4. 중대한 위협화 맞서기 : 기후변화와 에너지</li> <li>5. 후회없는 미래 :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기</li> <li>6. 지역에서 세계로 :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공평한 세상 창조하기</li> <li>7. 확산 및 추진강화(지표 67개 포함)</li> </ol>
---------------------------------	---

□ 호주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호주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2012년 10월 지속가능성, 환경, 물, 인구, 지역 사회와 관련된 관료들에게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여 설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2년마다 호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 호주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갖는 함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
-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표체계를 먼저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이슈와 도전 과제들을 토론
-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호주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 보고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보, 기업,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
-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
- 지표체계는 크게 사회 및 인적 자본, 자연 자본, 경제 자본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인구, 문화적 다양성, 지역 간 이동, 토지 이용과 같은 상황 지표까지 수립

- 지속가능성 지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마다 작성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설정됨

□ 프랑스

-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유럽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나라)을 수립하여 이행중임
- 중장정부부처 간 실무그룹에서 전략 분야별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채택 이행
- 국가 전략은 포괄적인 틀인 전략 목표 및 수단과 분야별 이행계획으로 구성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연도보고서와 지표를 통해 이행 점검
- 2003년 수상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자문, 검토 및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함

[표3-6] 프랑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주요내용(목차)
1. 전략목표와 수단 1.1. 원칙과 주요 목표 1.2. 해결해야할 과제 1.3. 통합적인 과제 1.4. 전략적 수단 2. 이행계획 2.1. 9대 주요 분야 2.2. 10개 이행계획 2.2.1.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 2.2.2. 지속가능발전의 행위자로서의 시민 2.2.3. 국토 2.2.4. 경제활동, 기업, 소비자 2.2.5. 기후변화와 에너지 2.2.6. 교통 2.2.7. 농업과 어업 2.2.8. 건강과 환경 위험요소, 공해 등 예방 2.2.9. 연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귀감이 되는 정부 2.2.10. 국제적 행동 3.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12개

□ 독일

-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발표하고 4개의 중점분야 선정함
- 각 분야별 세부분야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표3-7]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분야별 지표

세부분야	지표
자원보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에너지 및 원료생산성을 두배로 증가
기후보호	2008년-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개 온실가스 배출을 21% 감소
재생 가능한 에너지	2000-201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주요 에너지 소비의 4.2%, 전력소비의 12.5%로 증가
토지이용	공터의 비율 증가, 2020년까지 집과 교통에 활용되는 토지 이용을 하루당 30헥타르당 감소
생물다양성	생물종을 보존하고 서식지를 보호 선정된 11개 생물종의 개체 수 보존
혁신	경제적 번영, 친환경적 소비 및 생산을 위하여 혁신적 기술 연구 및 개발, R&D 민간 및 공공 지출을 2010년까지 GDP 3%로 증가
교육 및 연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층의 교육을 증진, 2020년까지 고등교육 25살 청년의 비율을 4%로 감소
친환경적 이동	2020년까지 1999년 대비 도로 교통체증 5%, 도보 교통체증 20% 감소
대기질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대기오염 30%감소
고용	2010년까지 고용비율을 70%까지 증가
평등한 기회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기회 제공 2010년까지 35-39세 여성의 월급을 85%까지 증가

#### □ 스웨덴

- 2001년 향후 25년 장기 전망인 [스웨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하여 이행 중임
- 환경부 주도로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하여 수립하여 이행함
- 국가전략은 비전 및 주요이슈와 핵심 분야별 이행계획으로 구성됨
- 국가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환경부에서 총괄하여 해당부처 전략 이행상태 보고를 통해 점검

□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 지표

- 오스트리아 농림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의 생산성 강화, 깨끗한 수질과 대기질, 자원의 보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수립하였음.
-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56개의 지표 중 26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음

[표3-8]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지표

분야	대표지표
세대 내 및 세대 간 정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국제적 정의	공적개발원조(ODA)
자유	권위주의 지수(Authoritarianism index)
평화와 안전	위험에 처한 빈곤층의 변화
거버넌스 및 참여	단체 내에서의 오스트리아인의 신뢰도
건강과 웰빙	건강수명
영양상태	체질량 지수(BMI)
복지	1인당 GDP
직업 교육의 수준	연령, 성별에 따른 실업률
여가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내 가정생활의 양립 가능성
생활 및 생활 공간	사회적 및 기능적 혼합(mixing)
이동성	인구 이동에 대한 접근성
문화와 예술	문화 활동에 대한 공공지출
교육 및 연구	20-24세 청년의 교육 성취도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PM10 기준 초과정도
방사선	UV 방사선 강도
에너지 및 자원 흐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신재생에너지, 자원투입량 (직접물질투입량, 국내물질소비량)
자연경관	경관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생태계	생물종 서식지 지표로서의 조류 종 및 난과 식물
물	지표수질, 지하수질, 유수량
토양	토양 이용, 비이용토지의 비율
유독성 물질과 환경적으로 해로운 물질	화학적 지표, 특정 화학물질의 소비량
소음	소음 공해
출처 :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2013, Sustainability barometer 2013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유럽연합

-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수립하여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하고 각 회원국이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함
- 전략은 포괄적 틀(Framework) 수준에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시함
- 전략의 이행점검 및 환류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Peer Review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표3-9] 유럽연합 지속가능발전 전략

EU 지속가능발전전략 주요내용(목차)	
1.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책임	
2. 주요목적	
3. 정책지침	
4. 유럽연합지속가능발전전략과 리스본전략의 시너지활용	
5. 더 나은 정책수립	
6. 주요 과제	
-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 지속가능한 교통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자연자원 보존과 관리	
- 공공보건	
- 사회통합, 인구, 이동	
- 국제 빈곤과 지속가능의 과제	
7. 지식사회를 위한 교차이슈정책	
- 교육과 훈련	
- 연구와 개발	
8. 경제적·재정적 도구	
9. 커뮤니케이션, 이해당사자 모집, 성공확대	
10. 이행, 모니터링, 향후관리	

## 나.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 EU의 유럽 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
  - 에스토니아 탈린시의 시장이었던“유리 라타스(Juri Ratas)의 제안으로 유럽도시와 에스토니아 도시협회에 의해 2006년 5월에 시작하여 현재 EU 국가수도를 포함하여 유럽도시들이 이 평가 사업에 참여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매년 한도시를 지정하여 유럽의 환경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선정

[표3-10] EU의 유럽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발전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로 평가된 환경상태에서 가장 녹색화된 도시</li> <li>-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이행과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정도</li> <li>- 도시의 역할모델이 다른 도시를 고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li> <li>- 네트워킹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도시</li> </ul>
○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의 공헌</li> <li>- 지역 교통, 지역의 공적 오픈스페이스의 이용가능성</li> <li>- 주변의 대기질, 소음</li> <li>- 폐기물 저감과 관리</li> <li>- 용수 소비, 폐수 처리</li> <li>- 지역정부의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li> </ul>

[표3-11] EU의 유럽 녹색수도 사례도시

EU의 유럽 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 사례도시	
지방정부	주요내용
스톡홀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까지 탄소중립, 1990년 대비 25% 감축계획</li> <li>- 유럽 도시,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전문연구 방문 프로그램</li> </ul>
함부르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를 1990 대비 15% 감축계획</li> <li>- 300m이내 최적의 대중교통 이용접근</li> <li>- 이동성, 에너지, 기후보호, 자연, 경제, 소비, 녹색도시</li> </ul>
비토리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공간 300m이내 거주</li> <li>- 하루에 1인당 100리터 물 소비 감축</li> </ul>
낭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전차, 버스, 자전거 녹색교통 등</li> <li>-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 개선</li> </ul>
코펜하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75% 감축노력</li> <li>- 2025년까지 자전거 이용 50% 확대</li> </ul>
브리스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수립</li> <li>- 에너지 사용 16% 감소</li> <li>-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계획</li> </ul>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독일 프라이부르크 : 에너지 자립 - 태양도시

-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 남부지역의 인구 20여만명의 도시로 '환경도시의 세계적 모델'로 알려짐. 프라이부르크시가 '환경수도'로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서 151개 지자체 중에 1위를 차지해, 그 해의 '자연 환경보호의 연방수도'로 선정됨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프라이부르크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태양광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절감정책, 교통정책, 쓰레기 정책 등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과 함께 '솔라시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함. 또한 ICLEI 등 60여개의 국내외 환경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음

[표3-12] 독일 프라이부르크 부문별 지표

태양에너지 환경도시 : 프라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너지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정책시행</li> <li>- 1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과 재생가능에너지법</li> <li>- 태양광발전, 열병합발전, 천연가스발전,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추진</li> </ul> </li> <li>○ <b>건축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리오트롭(Heliotrop) 태양 주택 : 난방이 필요한 겨울에는 유리면이 태양을 향하고 여름에는 단열효 과가 뛰어난 단열재가 태양을 바라보며 회전함</li> <li>- 보봉 생태주거단지 :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채택, 자연재료로 건축, 차량통행 제한, 패시브하우스 도입</li> <li>- 솔라하우스 :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 가스나 기름의 공급 없이 에너지 자급자족</li> </ul> </li> <li>○ <b>폐기물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쓰레기 재활용 정책과 보조금 등의 할인혜택</li> </ul> </li> <li>○ <b>교통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량 발생을 방지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인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수단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시설 마련, 자동차의 차선을 줄여 자동차 수요제한</li> <li>- 파크앤라이드 환승체계 구축과 레기오카르테 환승티켓</li> </ul> </li> <li>○ <b>수질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를 흐르는 베히레라는 수로를 활용하여 도심홍수 방지기능과 공기정화, 바람길의 역할, 도시 경관 형성, 드라이잠강(Dreisam River)에 지면 경사식으로 대체하여 자연적인 물길 조성,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li> </ul> </li> <li>○ <b>녹화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적의 43%가 숲이며 독일에서 가장 큰 산림보유, 지속적인 산림관리와 친자연적인 원칙에 입각한 생태시스템 관리</li> <li>- 도시내 어린이 놀이터의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개조, 시 외곽에 3,800개의 텃밭조성</li> </ul> </li> <li>○ <b>교육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철저한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문제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활용·</li> </ul> </li> </ul>

#### □ 미국 미네소타 지속가능발전 원칙

- 미네소타의 지속가능발전 원칙은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관한 공동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임
- 미네소타 원칙은 생태, 경제, 형평성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야로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다룸.
- 미네소타 원칙은 전 주지사 아르네 칼슨이 지명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미네소타 라운드테이블]이 1998년에 개발함
- 미네소타 원칙은 후손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재생가능한 자원의 활용,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
- 선도적인 주 전체의 계획으로서 미네소타 지속가능발전 원칙은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역 수준을 넘어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함
- 미네소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상호 의존성 : 경제적 번영, 생태적 건강, 자유와 정의는 연계되어 있다. 우리의 장기적 복지는 이 4가지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지역적 결정은 그 지역과 세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책무 : 우리는 모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경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 내린 결정의 영향과 후손들의 필요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보존 : 미네소타 주민은 필수적인 생태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환경의 생명 부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며, 우리의 재생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지표 : 미네소타 주민은 공공정책과 민간 활동을 장기적인 경제 번영, 공동체의 활력, 문화적 다양성, 건강한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 책임의 공유 : 모든 미네소타 주민은 파트너쉽과 개방적인 협력 정신으로 환경과 경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누구든 다른 개인, 공동체, 주, 국가, 혹은 후손들에게 자기 행동의 비용을 전가할 권리가 없다.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원가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미국 :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워싱턴 D.C는 시민의 형평성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천 명의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
-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은 9개 분야의 워킹 그룹 구축(건축환경, 기후, 에너지, 식량, 자연환경, 교통, 폐기물, 물, 녹색경제)
- 각 분야마다 목표, 타겟, 이행계획(actions)이 수립되었으며, 이들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음
- 계획 수립 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각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확산시키는 한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킴

[표3-13]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분야	목표
일자리(Jobs)	녹색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 수를 5배 증가
건강(Health)	도시 비만을 50% 감소
건축환경 (Built Environment)	250,000명의 신규·현재 거주자를 유입·유지
기후(Climate)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에너지(Energy)	도시 에너지 소비량 50%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50% 증가
식량(Food)	인구의 75%가 로컬푸드 섭취
자연환경(Nature)	지역의 40%에 캐노피(tree canopy)조성: 모든 거주민들이 자연녹지에 도보로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교통(Transportation)	보행, 자전거, 환승 부담률 75% 달성
폐기물(Waste)	모든 분야의 재활용 및 저소비를 통한 폐기물 제로화 달성
물(Water)	도시 내의 모든 수로를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도시 전역지역의 75%를 빗물 재활용을 위해 사용
녹색 경제(Green Economy)	지역기반 소규모사업 3배로 발전. 도시 실업률 50% 감소

#### □ 미국 시애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지표

- 미국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지표는 민간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지표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시애틀 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지역 내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시애틀'이 다양한 참여그룹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직함.
-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지표 프로그램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세 부분을 대상으로 지표를 개발.
- 지속가능한 시애틀이 개발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는 그 개발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제공함
  - 정책 결정권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망라한 폭 넓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공동체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

- 지속가능한 시애틀 지표는 정부의 공식지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각인시켜 정부 자체의 지표를 만들도록 유도함.

[표3-14]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문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연어의 산란을 위한 지역하천으로 회귀 수</li> <li>· 연간 좋은 대기질을 기록한 날 수</li> <li>· 보행자편의 기준에 맞는 시애틀 도로의 비율</li> </ul> </li> <li>- 인구와 자원 부문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킹카운티의 총인구수</li> <li>· 킹카운티내에서의 1인당 소비된 물의 양</li> <li>· 킹카운티에서 1인당 발생되고 재활용된 고형폐기물의 양</li> <li>· 1인당 가솔린 소비량과 차량운행 거리</li> <li>· 1인당 소비된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li> </ul> </li> <li>- 경제부문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가지 순위내의 고용업체에 집중된 고용의 비율</li> <li>· 기본적 필요성 자원을 위해 요구되는 평균 임금을 위한 노동시간</li> <li>· 가난에 직면한 어린이의 비율</li> <li>· 중간 또는 저소득 세대주의 주택 보유가능성</li> <li>· 1인당 건강지출액</li> </ul> </li> <li>- 문화와 사회부문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체중으로 태어나는 태아의 비율</li> <li>· 청소년 범죄율</li> <li>· 공동체 봉사의 어떠한 형태에라도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li> <li>· 지역의 일반선거에 투표한 인구의 비율</li> <li>· 성인 문명률</li> <li>·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이용률</li> <li>· 예술에의 참여</li> </ul> </li> </ul>

## 다. 선진국(국가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사례 요약

[표3-15] 선진국 지속가능발전 사례 요약

국가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Securing the Future(영국 연방정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li> <li>- 분야별 이행과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보호 및 환경질 제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및 공평한 사회 건설 등으로 구성됨</li> <li>- 연방정부 각 부처와 지역·지방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전체 틀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함</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2012년 10월 지속가능성, 환경, 물, 인구, 지역사회와 관련된 관료들에게 지속가능성 안전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여 설치</li> <li>-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표체계를 먼저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이슈와 도전과제들을 토론</li> <li>- 호주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갖는 함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유럽의 역동성 주도하는 나라」수립하여 이행 중임</li> <li>- 분야별 이행계획은 9대 주요 분야와 사회, 시민, 국토, 경제활동(기업, 소비자),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통, 농업과 어업, 건강과 환경 위험요소 및 공해 예방, 정부, 국제적 행동 등 10개 이행계획으로 구성됨</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발표하고 4개의 중점분야 선정(4대 중점분야 :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li> <li>- 각 분야별 세부분야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자원보존, 기후보호, 재생 가능한 에너지, 토지이용, 생물다양성, 혁신, 교육 및 연수, 친환경적인 이동, 대기질, 고용, 평등한 기회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함</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향후 25년 장기 전망인 「스웨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하여 이행 중임</li> <li>- 핵심 분야는 미래 환경, 기후변화, 인구와 공중보건, 사회단결/복지/안전, 고용과 학습, 경제성장과 경쟁력, 지역발전, 지역사회계획, 지속가능발전 도구, 이행과 향후조치 등으로 구성됨</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 해당부처와 지자체에서 이행함. 국가전략은 포괄적 틀(framework) 수준에서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함</li> <li>- 주요 정책방향은 자연자원 이용과 보호의 균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시민 평생복지, 경제, 국제적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분야별 이행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li> <li>- 86%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했으며, 대표적인 산업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이행계획 수립하고 이행 중임</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4년 주기로 「Sustainable Action(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li> <li>- 분야별 이행계획은 국내전략과 국제전략 등으로 구성됨</li> <li>- 전략의 포괄적 틀(Framework)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li> <li>- 광역지자체(province) 단위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함</li> <li>- EU 차원의 Peer Review 참가국들은 이행계획을 지속가능발전전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농림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의 생산성 강화, 깨끗한 수질과 대기질, 자원의 보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수립</li> <li>-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56개의 지표 중 26개의 대표지표를 선정</li> </ul>

### 3.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 가. 리우선언 이후

- 의제21(Agenda21)의 채택과 국가 실천 계획의 수립
  - 우리나라는 1992년 UN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방안으로서 의제21(Agenda21)이 채택된 이래,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전략추진의 기반은 개별 부처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제도·기구 확대에 더하여 부처 간 조정 기능 및 정책종합 기능을 포함한 제도적 발전에 의하여 조성되어 왔음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선포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 1996년 3월에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2000년 6월 5일에 새로운 전략적 종합계획인「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함
  - 1997년에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Rio+5)에서 채택된 의제21 향후 이행계획에 따라 2000년 9월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립함
-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의 합의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 우리나라는 2002년 WSSD에서 도출된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JPOI)에 합의하고, 2005년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
  -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에 따라 2005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
-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개요
  - 지방의제21은 총체적으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역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프로그램임
  -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제21」 실천계획과 조직이 등장함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의제21의 수립체계에서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 학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이며,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 기본계획

- 2005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 국가)」을 선포하였음.
- 2006년 10월 국내 최초로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과 실천계획인「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됨.
- 2011년 8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국토·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 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대 세부이행과제로 수립하였음.

##### □ 지표

- 2006년 10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의 지표도 동일하게 설정되었음.
- 지표는 사회 분야(6개 영역, 12개 항목, 25개), 환경 분야(5개 영역, 11개 항목, 27개), 경제 분야(3개 영역, 11개 항목, 25개)의 총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보완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표를 만들었음.

[표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01)빈곤인구비율
			02)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실업률
		1-2. 노동	04)근로시간
			05)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1-3. 남녀평등	06)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07)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2-1. 영양상태	08)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09)영아 사망률
		2-3. 수명	10)기대여명
		2-4. 식수	11)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2)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13)사회복지지출
			14)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중등학교 순 졸업률
			16)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공교육비 지출
	4. 주택	4-1. 생활환경	18)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19)주택 수(인구 1천 명당)
			20)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5. 재해·안전	5-1. 범죄·재해	21)범죄발생률
			22)자연재해 피해
	6. 인구	6-1. 인구변화	23)인구 증가율
			24)인구 밀도
			25)고령인구비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26)온실가스 배출량
			27)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28)GDP당 온실가스배출량
		1-2. 오존층	29)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3. 대기질	30)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2. 토지	2-1. 농업	31)농지면적 비율
			32)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비율
			33)식량자급률
			34)화학비료 사용량
			35)농약 사용량
		2-2. 산림	36)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37)1인당 도시공원 면적
		2-3. 도시화	38)목재 벌채 정도
			39)도시화율
			40)수도권 인구 집중도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1)연안오염도
			42)폐기물 해양 투기량
			43)갯벌 면적 증감
		3-2. 어업	44)수산자원량
			45)어업양식장
	4. 담수	4-1. 수량	46)취수율
			47)1인당 1일 물 소비량
		4-2. 수질	48)4대강 수질 오염도
			49)하수도 보급율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0)자연보호지역비율
			51)국가생물종 수
			52)멸종위기종 수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표 계속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53)국내총생산(GDP)
			54)1인당 GDP
			55)경제 성장률
			56)GDP 대비 순 투자율
			57)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60)GDP대비 대외채무비율
		1-4. 대외원조	61)GNI대비 공적대외원조(ODA)비율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62)자원생산성
		2-2. 에너지사용	63)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64)총 에너지 공급량
			65)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66)에너지원단위
		2-3. 폐기물관리	67)생활 및 일반 폐기물 발생량
			68)지정폐기물 발생량
			69)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2-4. 교통	71)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2)자전거 도로 총 연장
			73)자동차 사고건수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3-2. 정보인프라	75)PC보유 가구 비율
			76)온라인 신청가능 민원 종류
		3-3. 과학기술	77)GDP 대비 R&D 지출 비율

## 다.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

### □ 비전과 목표

- 경제·사회·환경·균형발전, 21세기 선진국가, 현세대·미래세대 공동번영이라는 비전 속에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자연자원의 지속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 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4대 전략을 세우고, 48개 이행과제를 수립함

[그림3-2]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의 이행성과 점검 차원에서 77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경제적·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제와 사회의 양적 성장기반은 개선되었으나, 소득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되었음
- 평균수명, 상하수도 보급률,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량 및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이 증가하고, 근로시간 및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하는 등 양적 성장지표는 뚜렷한 개선의 추세로 나타남
-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수도권 인구집중도, 빈곤인구비율 및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격차 등이 증가하고, 산림 및 갯벌 면적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자원 지표는 저하 추세

####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 및 이행과제의 평가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제시된 4대 전략부문의 48개 이행과제들은 계획수립 이후 일어난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에 따른 이행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시된 성과목표들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표3-17]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전략명	단위	계	과제완 료	정상추 진	추진지 연	기타
계	(개)	238	54	176	7	1
	(%)	100	23	74	3	0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개)	93	22	67	4	0
	(%)	100	24	72	4	0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개)	39	7	30	2	0
	(%)	100	18	77	5	0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개)	76	22	53	0	1
	(%)	100	29	70	0	1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개)	20	0	19	1	0
	(%)	100	0	95	5	0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	(개)	10	3	7	0	0
	(%)	100	30	7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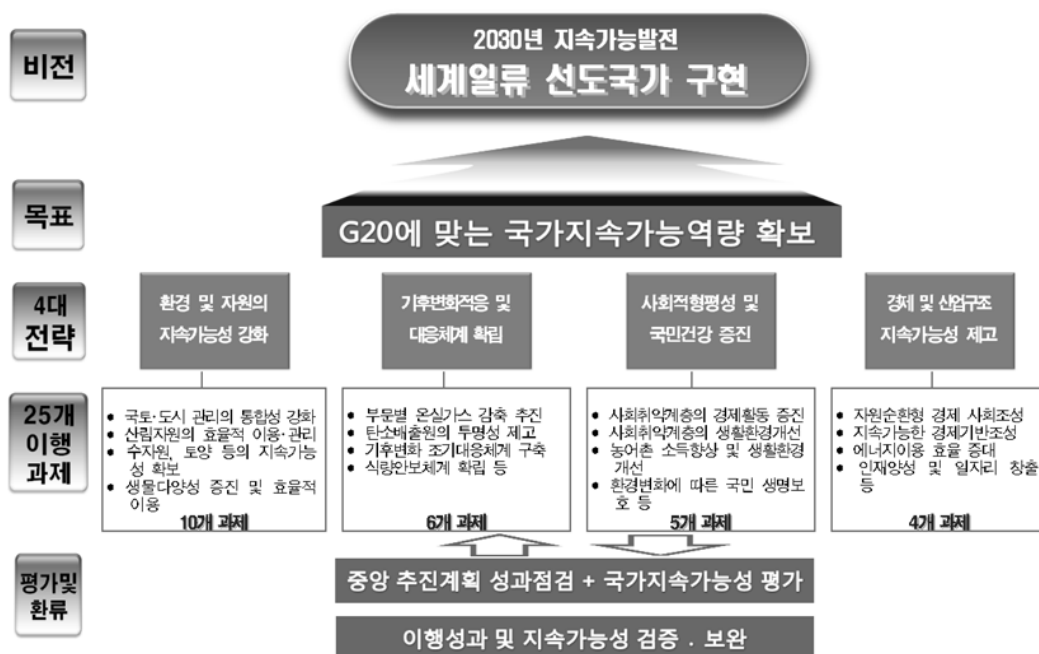
출처 : 환경부 외. 2011.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 라.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의 수립과 성과

### □ 비전과 목표

- 2011년 8월에는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종료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의 확보를 목표로 삼음
-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10개 과제),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6개 과제),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5개 과제),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4개 과제)라는 4대 전략에 총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함
-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하여 성과 점검과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함

[그림3-3]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출처 : <http://ncsd.go.kr/app/sub03/22.do>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표3-18]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변화전망

분야	주요지표	2010년	2015년	2030년	OECD평균 (2010년 회원국평균)
환경	하천수질오염도 (BOD, ppm)	1.48	0.95	0.95	2.7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	50	40	35	35
	1인당 물 소비량(L/일)	332 (‘09)	308	242	2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 <sub>2</sub> )	10.31 (‘08)	8	8	10.61 (‘08)
	1인당 도시공원 면적(m <sup>2</sup> )	11.3	14.4	20	19.79 (‘06)
경제	1인당 GDP(USD)	20,591 (‘09)	26,508	37,833	33,732 (‘08)
	에너지원단위 (TOE/천 \$, 2000년 PPP기준)	0.197 (‘09)	0.178	0.123	0.161 (‘09)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54	4.33	11.0	7.7 (‘08)
	고용율(%)	63.8 (‘08)	64.3	66.7	66.7 (‘08)
	GNI 대비 ODA 비율(%)	0.12	0.25	미정	0.32
사회	빈곤인구비율(%)	15	13	10	11(‘06)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14 (‘09)	0.300	0.280	0.311 (‘09)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5.3 (‘08)	60.0	73.0	72.2 (‘08)
	고령인구비율(%)	10.7	15.1	28.3	14.8(‘08)
	기대수명(년)	80.5 (‘09)	81.4	84.03	81.6 (‘09)

출처 : 2012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 □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의 성과

- 지속가능한 국토·산림·해양 관리 추진
- 멸종위기종 복원, 습지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하천 수질개선, 취약지역 물 복지 향상 등 수자원 관리
- 국제기구 유치·설립(UNOSD '11년, GCF '12년) 등 국제협력 내실화
- 산업,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탄소 배출원 투명성 제고 및 탄소 흡수원 증대 추진
- 기후변화 대비 체계 확립
- 사회취약계층 경제·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공공보건 의료 강화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

#### 마.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의 내용

##### □ 구성 및 특징

-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
  - ※ SDGs 국내외 이행 체계 구축은 글로벌 지표('16.2월 유엔통계위원회 확정), 이행 검토 체제('16.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반영
-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포럼, 자문)에 따른 위협요인 반영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

- (환경)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
- (사회) 양성평등,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사회 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정책 강화
- (경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
- (종합)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 강화

[그림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출처 : [http://ncsd.go.kr/app/sub03/22\\_tab3.do](http://ncsd.go.kr/app/sub03/22_tab3.do)

[표3-1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4.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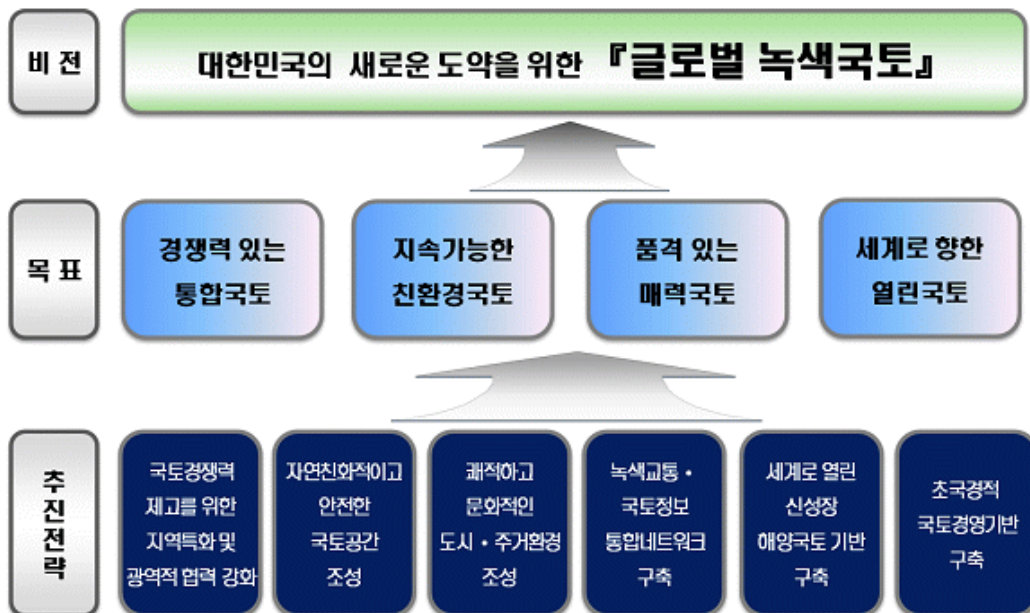
### 가. 국가 계획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년~2030년)
  - 계획의 범위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 여건 분석 - 대외 여건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
    -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 국가 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 여건 분석 - 대내 여건
    - 기후변화, 자원사용,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계획의 비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 있는 '매력국토'
  - 세계를 향한 '열린 국토'

[그림3-5] 제4차 국토종합계획



#### □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 비전 :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선진 환경복지국가 실현
- 목표
  -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 안전 생활환경 조성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 강화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확립
    -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확보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안전한 물 공급 및 친수공간 확대
    - 생태계와 공존하는 생활 기반 조성
    - 농어촌 환경 서비스 보급 확대
    - 도시의 생활 불편 해소
  -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한 국토·자연 자원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
    - 국민 참여환경 거버넌스 구축
  - 글로벌 환경 협력 확대
    - 동북아 지역 환경 공조 체계 강화
    -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개도국 환경개선 지원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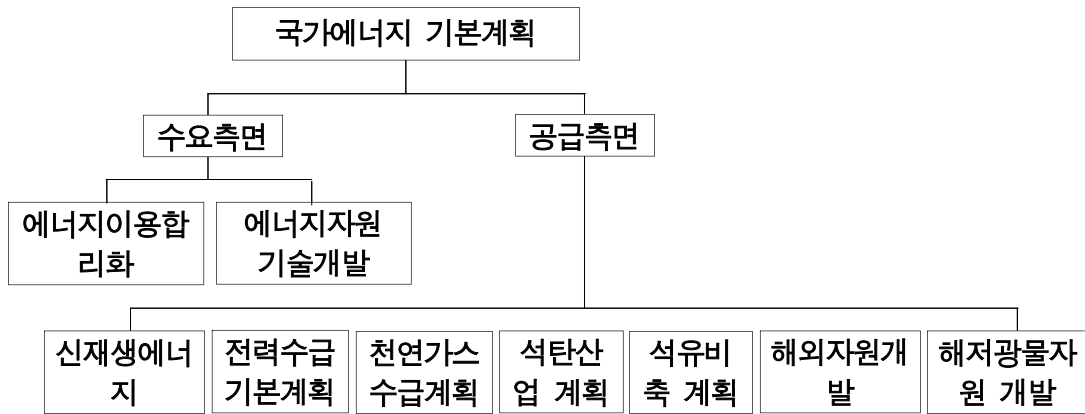
[그림3-6] 제4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



□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2008~2030) 장기 에너지계획
- 국내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

[그림3-7]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성



[표3-20] 제3차 국가에너지 4대 실행 전략

분야		AS-IS (2008)	TO-BE (2030)	비전
에너지원 단위		0.341	0.185 46% 개선	에너지 저소비사회구현
에너지 비중	화석에너지 비중	83.0%	61.0%	에너지 공급의 탈화석에너지화 실현
	신재생에너지 비중	2.4%	11.0%	
에너지기술 수준		60.0%	세계 최고 수준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 및 복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2%	40.0%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빈곤층	7.8%	전체 해소	

□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 비전 2030

[그림3-8] 에너지 비전 2030



□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년)

○ 비전

-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Growth)

○ 목표

-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2009~2030)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 목표
  - 단기목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장기목표 :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추진전략
  -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적응 프로그램 마련
  - 적응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국내 파트너십 구축
  - 국제협력과 기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적응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나. 충청북도의 관련 계획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3~2017)

- 지역간 불균형 실태 및 원인분석
- 국내·외 균형발전정책 동향
- 충청북도 균형발전정책 평가
-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2014~2018)

- 2차 5개년계획 기간인 2014년 ~ 2018년간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 는 충청북도의 5년간(2014~2018) 녹색성장 추진계획 마련
- 계획 내용의 범위
  -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제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개요
  -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 충청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국가전략과 연계한 분야별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 수립
-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에 따른 소요자원 및 투자자원 조달 방안
- 녹색성장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 및 기대효과 분석
- 성과 목표 및 지표 제시

#### □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 ○ 계획 수립 목적

-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다양한 환경요인의 현황과 변화를 전망하여 각 분야에 대한 비전과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시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 계획의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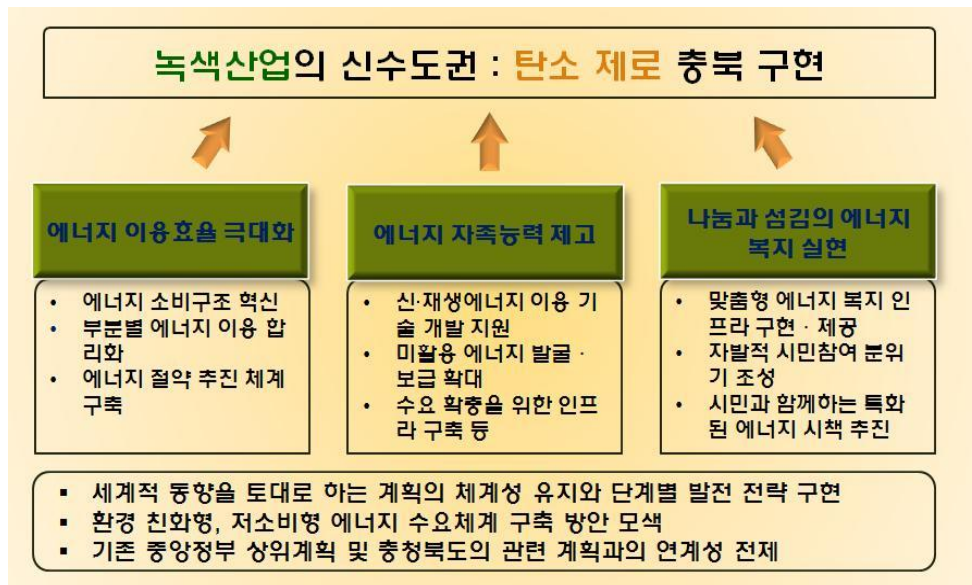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과 연계
- 충청북도 환경특성 분석·조사 및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와 미래전망
- 기존 환경보전종합계획(2007~2015)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환경정책 방향, 부문별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방안 제시
- 공간 환경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체계 및 투자·재정계획
-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분야 도출

□ 충북 제4차 지역 에너지 계획

○ 도정 비전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구현

- 민선 5기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의 구현을 위해 생명(바이오 메스 등을 활용한 탄소 제로 도시 구현)과 태양(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활용함

[그림3-9] 충북 에너지 기본계획 비전



○ 기본 방향

- 지역에너지 계획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충청북도 지형·기후·인구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수립
-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 등을 기초로 지역 에너지 수요 전망과 공급대책 수립
- 현재의 환경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부합된 에너지원별 공급대책 수립
- 충청북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요처의 에너지 공급대책 및 폐열 발생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 실태 조사

[그림3-10]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체계



○ 추진 전략

-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 에너지 자족능력 제고
- 나눔과 섬김의 에너지 복지 실현

□ 충청북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6~2020)

○ 비전 및 목표

- 지속가능발전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 기반, 통합적 접근, 참여 활성화 등의 원칙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점 추진 과제 및 내용

- 중점추진과제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시스템 마련을 제시하고 있음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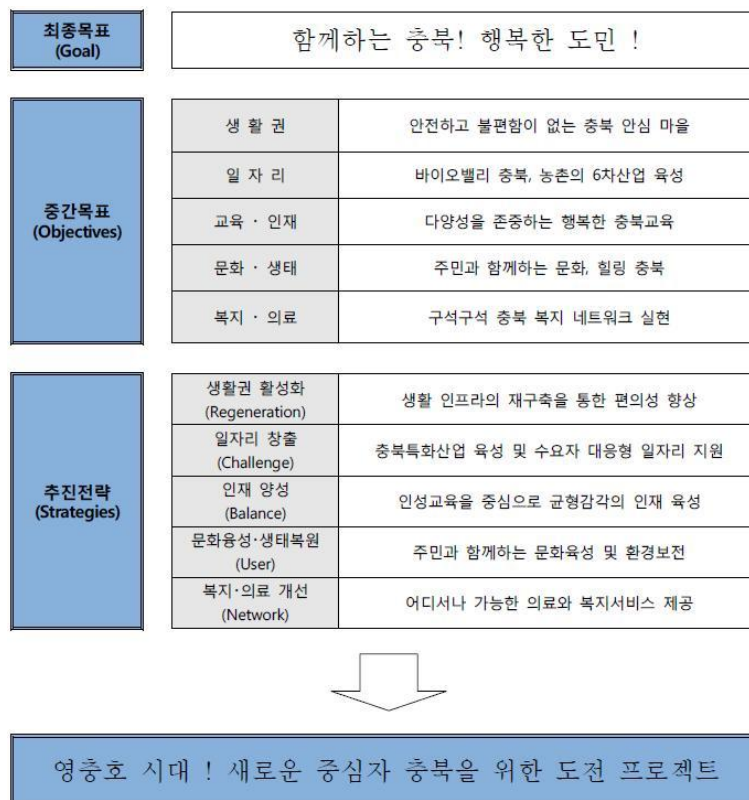
#### □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량 및 목표 설정, 적응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건물, 교통, 산업, 농축임업,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생활문화 분야 등 총 7개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대비하고, 탄소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지속경영가능 방안을 제시하였음

#### □ 충청북도 발전계획(2014~2018)

- 계획의 목적
  - 영종호 시대를 대비한 충청북도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충청북도 연계사업 발굴 : 5대 부문별, 5대 생활권별
  - 연계사업 추진 방안 : 운영 및 지원조직, 평가시스템 등
- 발전 비전

[그림3-11] 충청북도 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충청북도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사업

- 목표 : 생활권간 광역 교통 네트워크 서비스 향상
- 추진전략
  - 지역 간 연결도로 접근성 개선(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 철도서비스 개선으로 철도이용편의 증대
  - 청주공항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항 활성화

[그림3-12] 충청북도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 사업 리스트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투자액 (백만원)	
			총예산	국비
고속도로 건설사업 (1건)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서청주) 6차선 확장	'16~'18	405,000	405,000
광역도로 건설 (1건)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14~'18	416,200	397,000
광역철도건설사업 (1건)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14~'18	616,500	616,500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건)	• 음성~괴산 국도 건설	'14~'18	98,000	98,000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 (2건)	•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18	5,091	0
	• 남부3군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15~'18	1,000	3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18	11,530	7,819
공항 활성화 (1건)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화	'14~'18	172,800	146,000
대중교통 활성화 (2건)	• 남부3군 버스요금 단일화	'15~'18	100	0
	• 자전거 렌탈 네트워크 구축	'15~'18	300	150
합계 (총 10건)			1,726,521	1,670,769

## 5. 청풍명월21 기본계획 평가

### 가. 청풍명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계획

<p>환경개선목표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설치, 절대보전지역과 개발지역 분리 등을 조성.</li> <li>- 복개하천의 원상회복을 위해 하천변 콘크리트 구조물제거, 직강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li> <li>- 도시공원확보 및 하천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완충녹지를 확대.</li> <li>- 생태계 복원기법의 지속적 개발 및 자연사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li> <li>- 향토수종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li> </ul>
<p>도시환경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원의 종류별 교목위주의 조림에 의하여 녹화면적을 확보함.</li> <li>-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보도부분의 폭원 2.5m 이상의 도시 내 도로에 있어서는 가로수 및 식수대를 정비.</li> <li>- 하천부지의 녹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유수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함.</li> <li>-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기존 수림의 보존, 표토의 보전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하도록 개발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li> <li>- 도시녹화를 위해 충북의 고유 특색을 지닌 수목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li> <li>- 도시 내의 사적 등 향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토지, 대규모 도시공원 등 도시의 핵이 되는 녹지경관을 보전.</li> </ul>
<p>농촌환경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물, 토양환경의 부하가 자연의 물질순환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 등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강화.</li> <li>-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으로 토양, 수질, 대기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li> <li>- 농업환경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 전국다원의 사업으로 전개.</li> <li>-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농촌 환경 파괴요인을 제거하는데 공동 노력함.</li> <li>- 음식물 및 농작물 쓰레기의 퇴비화와 폐자재 재활용 사업을 민간관리 운영방식으로 유도하고 지원.</li> <li>- 농촌지역단위의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산간농촌지역에 고효율의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함.</li> <li>- 시·군민들로 하여금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대기환경 장기목표(~2010)	지표	현황 (1995년 평균)	환경기준 (기준치 이하)	단기목표 (2001~2010)
	SO <sub>2</sub>	청주 0.018	연간평균 0.03	청주 0.012
		충주 0.014		충주 0.010
		제천 0.012		제천 0.008
	TSP	청주 59	연간평균 150	청주 45
		충주 43		충주 35
		제천 46		제천 35
	CO	청주 1.1	8시간평균 9 1시간평균 25	청주 0.8
		충주 1.2		충주 0.9
		제천 1.2		제천 0.9
	NO <sub>2</sub>	청주 0.022	연간평균 0.05	청주 0.022
		충주 0.020		충주 0.020
		제천 0.021		제천 0.021
	O <sub>3</sub>	청주 0.016	8시간평균 0.06 1시간평균 0.1	청주 0.013
		충주 0.018		충주 0.013
		제천 0.011		제천 0.008

에너지환경 장기목표(~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LPG와 혼합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충주권역에 LNG를 공급함.</li><li>- 도시가스 공급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 거부감과 타 연료와 의 가격 구조를 조정.</li><li>-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앞에서 언급한 시설 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시행함.</li><li>- 에너지 수급체계에 걸맞은 종합에너지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li></ul>
----------------------	--

폐기물 장기목표(~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로 재활용율 50%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폐 에너지회수율 50%를 달성.</li><li>- 부식성 폐기물의 퇴비화율 80% 달성.</li><li>- 경제성 있는 재활용품 생산과 폐기물 재생연료를 상업적으로 생산.</li></ul>
--------------------	---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p>사회경제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 취약계층과 소외그룹 생활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수립과 시행, 개별사업의 계획과 관리에서 광범위한 사회계층 다양한 집단. 일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함.</li> <li>-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산, 기술 및 기업경영은 재활용될 수 없는 잔여물과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폐기물을 배출시켜 사용 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품을 생산함.</li> <li>-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주기를 통해 폐기물 배출을 극소화할 수 있는 생산, 기술 및 경영방식으로 전환해 청정생산 촉진 및 정착 시켜야함.</li> <li>- 기업이 정신은 시장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도전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창조하는 원동력임.</li> <li>- 고용, 환경, 에너지부문이 균형을 이루어 지여고한경이 최적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지역산업구조를 이에 상응하는 청정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환경교육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 또는 대청·충주호 주변지역에 대표하는 동·식물, 토양, 암석, 물 등 자연자원을 전시할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함.</li> <li>- 대청·충주호 등 인공적 호소지역에 건설 이전의 자연·역사·문화시설 및 물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료를 전시·보관할 물박물관을 건설함.</li> </ul>
<p>토지이용 장기목표(~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토지자원의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 활용방안을 개발함.</li> <li>- 지역환경 용량을 고려한 개발규모 및 속도를 조절함.</li> <li>- 도시와 농촌의 택지개발과 교통대책을 통합함.</li> <li>-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공생형 단지 조성.</li> </ul>

## 나. 청풍명월21 기본계획 관련 추진사업

구분	사업명	비고
종합	환경수도선언	미추진
	충북환경선언문 기념비 축조	미추진
	농업용저수지를 생태공간, 생태교육장으로 개발	문암(청주), 만뢰산(진천), 호암지(충주)생태공원 외 10개소
	환경친화적 소재 허브원의 조성	미추진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충원대학교내 자연사박물관
	자연탐방로의 개설	국립공원(월악산, 속리산, 소백산)외 5개소
	다목적댐 수질 보전팀제 운영	미추진
대기 개선사업	청정연료의 확대보급 공단 외곽지역 그린벨트 조성	- 관련 추진사업 LNG 확대, 태양광발전시설조성, 온실가스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참여확대, 태양광보급사업, 천연가스차보급
수질 개선사업	2010년까지 도시계획구역 설정된 군,면 소재지에 고도처리시설 갖춘 하수처리장 완비함.	- 관련 추진사업 수질오염총량 관리 적극적 대응, 노후 상하수도 교체 도민 참여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맑은물 공급사업	기존 저수지 활용 상류지역 점오염원을 완전 제거한 청정 상수공급체계를 구축함	- 관련 추진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도입,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수질관리 확대
도심교통여건 개선사업	도심 교통정책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수단(버스)환승장 건설	- 관련 추진사업 오송역 세종청사 첫 마을 간선버스 운행, 저상버스확충,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출퇴근 심야버스 운행추진
	교통정체 현황 점검 및 시간대별 가변차로 시스템을 구축함.	미추진
도심녹지 공간확대	시설녹지가 설치된 대로변, 가로공간에 2줄별 가로수길을 조성 녹지공간 확보 및 보행자 쾌적성을 제고시킴.	- 관련 추진사업 수변공원조성(다수건), 도시공원조성(다수건), 생태공원조성(다수건)

## 6 미래비전2040과의 연계성 검토

☑ 기후환경분야		
건강을 지키는 안심사회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안심적응 프로젝트 추진(단기)</li> <li>■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기반 전 방위 재난 대응체계 구축(중기)</li> <li>■ 도민들이 따뜻한 밀착형 생활안전 체계구축(중기)</li> <li>■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기후·환경 리빙랩 지원(단기)</li> </ul>	SDGs 13과 연계검토
ICBM 기반 복합재난안전체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기후변화 모니터링강화(중기)</li> <li>■ ICBM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중기)</li> <li>■ 재난안전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단기)</li> </ul>	SDGs 13과 연계검토
친환경미래에너지 자립 및 기후환경산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감축기술 연구개발 지원(중, 장기)</li> <li>■ 온실가스 저감실천 사업 추진(단, 중, 장기)</li> <li>■ 수소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활성화(장기)</li> <li>■ 태양광발전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완성(장기)</li> <li>■ 기후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중,장기)</li> <li>■ 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의 육성(단기)</li> <li>■ 대청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호수연구단지 조성(중기)</li> </ul>	SDGs 7과 연계검토
스마트 그린시티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공간환경정보 고도화 및 공유(중기)</li> <li>■ 충북 기상환경정보 센서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장기)</li> <li>■ 충북스마트 그린시티 추진(장기)</li> </ul>	
생태가치 증진 및 고품질 환경서비스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생태용량 증대기반 생태휴양 인프라 구축(단기)</li> <li>■ 생활밀착형 고품질 환경서비스 강화(단기)</li> </ul>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맑고 풍부한 물 환경 및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중기)</li> <li>■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단기)</li> </ul>	SDGs 6과 연계검토

☑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슬림화(단기-장기)</li> <li>■ 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운영 (중기)</li> <li>■ 충북형 기본소득제 도입(장기)</li> <li>■ 지역중심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중기~장기)</li> </ul>	
협력과 배려의 지역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 확대(단기)</li> <li>■ 스마트 고령친화환경 조성(단기~중기)</li> <li>■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양성(단기~장기)</li> <li>■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 (중기)</li> </ul>	SDGs 11과 연계검토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 양성평등정책 확산(단기~중기)</li> <li>■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중기)</li> <li>■ 외국인 정착지원 및 다문화 존중 사회 조성(단기)</li> <li>■ 다세대통합형 지역사회 조성(장기)</li> </ul>	SDGs 5, 10과 연계검토

☑ 일자리 분야		
양극화가 없는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실업 대응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단기, 중기, 장기 선택)</li> <li>■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단기, 중기, 장기 선택)</li> <li>■ 취약계층 고용확대 (단기, 중기, 장기 선택)</li> <li>■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li> </ul>	SDGs 8과 연계검토
교육 혁신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공동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인재 교육시스템 전환</li> <li>■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li> <li>■ 전 생애 평생학습 연계 체제 구축</li> <li>■ 미래대응 직업진로교육 확대</li> </ul>	SDGs 4와 연계검토
미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일자리와 창업이 용이한 고용생태계 구축</li> <li>■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단기)</li> <li>■ 4차 산업혁명 수요 인력수급시스템 구축(단기, 중기, 장기 선택)</li> <li>■ 4차 산업혁명 최적형 고용정책거버넌스 구축(단기)</li> <li>■ 사회적경제 육성 및 혁신가 양성</li> </ul>	SDGs 8과 연계검토

### Ⅲ.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 산업경제 분야		
R&D경쟁력 확보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기반 기초 응용과학 연계 체제 구축</li> <li>■ R&amp;D First Mover 플랫폼 구축</li> <li>■ 융합 혁신기술 전략화</li> </ul>	SDGs 9, 12와 연계검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 산업기반 신영역 발굴</li> <li>■ 충북형 제조업의 서비스 가치사슬화</li> <li>■ 도전적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li> <li>■ 충북형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li> </ul>	SDGs 9, 12와 연계검토
농업농촌 첨단화 및 기능의 다차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기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 팜 확대</li> <li>■ 농업생태계 변화 대응</li> <li>■ 식품가공 및 초고속 유통 혁신</li> <li>■ 에너지/자원 순환 농업 인프라 구축</li> </ul>	SDGs 2와 연계검토
공유경제 인프라 및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li> <li>■ 공유자원 발굴 및 비즈니스/문화 모델 확산</li> <li>■ 공유경제 기업 육성 및 규제적 제도 개선</li> </ul>	SDGs 9, 12와 연계검토

☑ 행정 분야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행정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르네상스 포럼(단기)</li> <li>■ 충북도민 비전단 운영(단기)</li> <li>■ 지방정부의 미래전략실 구성·운영(중기)</li> <li>■ AI를 이용한 미래인사 전략실 운용(중기)</li> <l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장기)</li> <li>■ 세계와 소통하는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중기)</li> <li>■ 도민 르네상스(e-Democracy) 실현(중기)</li> <li>■ 인간성 존중을 위한 스마트한 지방정부(중기)</li> <li>■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행정체계 개편</li> </ul>	SDGs 11, 16과 연계검토
주민주권적 주민참여 기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주민참여 비전2040 선포와 공유</li> <li>■ 네거티브 방식의 충북 주민참여 법 제도 정비</li> <li>■ 모든 단위 행정에 주민참여 사다리 놓기</li> <li>■ 주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성과계약제</li> <li>■ IoT기반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li> <li>■ CPS 기반 주민참여 통합 오픈 플랫폼 구축</li> <li>■ 스마트 주민참여 지원 로봇 및 인공지능 개발, 활용</li> <li>■ 모든 단위 행정에 주민참여 사다리 놓기(중기)</li> <li>■ 주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성과 계약제 시행(중기)</li> <li>■ IoT기반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li> </ul>	SDGs 11, 16과 연계검토
첨단기술과 도민참여 기반 치안안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치안 운용체계 정비</li> <li>■ 치안R&amp;D 및 치안산업 육성</li> <li>■ 도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li> <li>■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설계) 추진</li> </ul>	SDGs 11, 16과 연계검토

☑ 도시공간 분야		
포용적,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기반의 마을만들기와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도시재생(단기)</li> <li>■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활력증진(중기)</li> <li>■ 공공 공간의 도시정의 실현 : 효율적 배치 및 접근성 향상(장기)</li> <li>■ 스마트 에너지 접목형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장기)</li> <li>■ 도시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스마트형 도시인프라 유지관리(단기)</li> <li>■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단기)</li> <li>■ 노인주거, 1인가구, 전원주택, 동호인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중기)</li> <li>■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보급(중기)</li> <li>■ 세계화와 동반한 글로벌 주거문화 지원(단기)</li> </ul>	SDGs 11, 16과 연계검토
ICT 기반 지속가능 농촌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 축소를 통한 소거점 중심지 육성</li> <li>■ ICT기반 스마트 타운 건설</li> <li>■ 4차산업 수용력 확보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li> </ul>	SDGs 2와 연계검토
국가 초고속교통망 허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X축 교통망 구축으로 강호축 활성화 (단기)</li> <li>■ 오송 중심의 국가 초고속교통 허브기능 완성(장기)</li> <li>■ 충청권 관역 BRT 구축 및 순환체계 구축(중기)</li> <li>■ 충청권 광역철도의 완성(중기)</li> <li>■ 행복택시 단계적 확대(단기)</li> <li>■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체계 재검토(중기)</li> <li>■ 인구 과소지역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중기)</li> <li>■ 지역특성별 저비용 신교통체계 서비스 공급(중기)</li> <li>■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거점에 무인 공유교통 서비스 공급(장기)</li> <li>■ 도시내 개인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중기)</li> </ul>	SDGs 11과 연계검토
성장거점 스마트화 및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3 오송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li> <li>■ 혁신도시 개발구역 확장</li> <li>■ 혁신도시 스마트 시티 재편과 기존산업단지의 스마트 재생</li> <li>■ 오송~오창~혁신도시 네트워크 강화</li> <li>■ 강호축 신성장 클러스터 구축</li> </ul>	



## 0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0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1. 지속가능발전 여건변화 전망

#### 가. 사회경제적 요인

##### □ 경제

-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향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사회구조와 인간의 생활에 복잡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회전반에 걸친 대내외적인 환경은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 국가 경제가 하락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이행과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경제 또한, 내수부진의 지속,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위험요인 속에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가계부채의 확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 소득격차 증대, 실업률의 증가 등의 생활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회의 취약계층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내수침체, 고용부진, 물가불안 등은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전체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정책은 노동수요 부족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 고용의 축소 역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축소 시키면서 소득격차의 주원인으로 판단됨

##### □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 현재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이며, 앞으로도 항상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 등 사회보장비 부담, 노인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을 비롯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한계,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의 이유가 만혼과 출산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일용직 비율은 고용불안정의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 연령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의로서비스 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 소득 격차

- 국제적인 금융위기 지속에 따른 국내경제 둔화와 자영업 구조 조성,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가 심화되면서 다수의 중산층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빈곤의 세습화 및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중산층의 축소 특히 소득격차의 심화는 빈곤층의 양산 이외에도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교육기회의 양극화, 건강불평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과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을 심화시킴.
-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를 폭넓게 배분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능 강화, 특히 사회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 특히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 다민족·다문화사회

- 80년대 후반에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인권침해·차별 등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외국인의 국내정주가 허용되면서부터 우리사회는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지만 위기 다문화 가정의 발굴의 어려움으로 지원의 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군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에게 체계적인 군민의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지속적 인구유출과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추진함.

#### □ 여성 경제활동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기능의 변화, 요보호 가족원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과 현재 가족의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요보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아울러, 가족의 해체로 인한 한부모가정과 1인 빈곤가구의 증가는 소득분배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비중이 줄고 맞벌이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 가족기능의 변화로서 가족관계와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 온 보육, 노인수발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함.
- 선진국과는 달리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완화되어 감에 따라 고임금 전문직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하향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 여성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나. 환경적 요인

#### □ 충북의 생태계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 증대

- 충북 생태계위협요인 가중될 전망이며, 아열대 기후변화로 생물 서식지 교란, 새로운 질병발생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예상되며,
- 반면에, 도민들의 우수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충청도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 지속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 증가, 고도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취약성 증대 및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불안감의 가중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전망

#### I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 가까운 미래에 효율적으로 위험을 감지,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될 전망
  - 위험 또는 재난·재해로부터 도민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응한 예측기술개발 및 사전투자가 필요
- 충북 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가적 요구 증대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의 에너지, 교통, 산업, 도시 부문에서 저탄소 대응책마련 시급
- 기후변화 적응 미흡 시 생태계, 농업, 건강 등의 리스크 가중
- 기후변화로 인한 충북의 산림/생태계 가치변화
  - 봄철 가뭄으로 인한 토양수분 부족 및 건조현상 심화, 생물 계절 불일치, 해충의 월동 생존율 증가, 산불 증가로 인한 수목 피해 등
  -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생태계, 하천 산지 및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에너지부문의 득과 실
  - 냉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공급 불안정,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이상기후 대응 산업의 수요 증가, 환경컨설팅 산업·신재생산업 매출 증대 기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 등
- 기후변화로 인한 충북의 농축산부문 피해 우려
  - 농작물 재배 시기 및 적지 변화, 겨울철 온도 증가로 인한 해충 및 질병 확산, 기상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붕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증가, 극한 기상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및 질병, 사망 심화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 우려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사망률 증가, 기온 및 습도 상승으로 인한 여름철 질병 및 감염병 증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및 부상자 증가, 미세먼지(황사) 및 한파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증가 등

- 기후변화로 인한 국토부문에 대한 피해 우려
  -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인한 기반시설 기능저하 및 마비, 급경사지 토사유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교량 등 하천시설 붕괴, 대설로 인한 교통시설 기능저하,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붕괴, 도시 열섬효과 심화 등
-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물(상수원)부문 피해 우려
  - 기온상승에 따른 조류로 인한 수질악화, 가뭄으로 인한 하천지류 건천화, 가뭄으로 인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지하수의 난개발, 홍수로 인한 수리시설 파괴, 농작물 증발산량 증가로 인한 물수요 증가 등
-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과 충주댐의 수질 악화
  -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 댐 내부의 퇴적물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대형 댐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
  - 대청댐과 충주댐은 2040년에는 노후화되어 안전성에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상류로부터의 지속적인 오염물질 유입과 퇴적, 그리고 기온 상승에 따른 녹조현상의 증대로 상수원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용저수지 수명 한계에 다다를 것,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됨에 따라 하류지역의 하천 수질도 악화되어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생수판매 증대에 따라 지하수의 사용량이 증대될 것이며, 하천의 유지유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하천 생태계에도 위협이 됨
- 대기오염을 비롯한 생태적 건강성 악화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증가 우려
- 충북의 생물종다양성 악화우려
  - 급격한 도시화, 대기 및 토양 오염 심화 등으로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생태적 균형이 파괴될(변형) 가능성이 큼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인 확산 우려

#### I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기후변화 위험은 기존의 양극화 구조 심화우려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적응능력이 낮은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집중됨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이 기존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자원 사용 기회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환경 및 안전서비스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 도시로의 집중은 환경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시지역의 환경관리를 더욱 어렵게 함
  - 도시 인근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과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증대, 도시열섬현상에 따른 폭염피해 증가
- 충북의 안전위협요인 및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와 맞물려 충북 시군 내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재난 위험요인 증가. 급진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
  - 신종 복합재난·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지진, 신종 바이러스 등)이 항시 우려되고 있으며, 교통수단, 등산, 스포츠, 축제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로 도민 생활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향후 재난은 여러 재난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복합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 원인을 찾는 것에 용이하지만,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사전 대비하는 부분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슈퍼태풍, 지진, 가뭄, 폭염 등 극한기상현상 발생 대비 방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매년 피해가중 위험
- 수요자인 도민이 정책결정 및 실행의 중심으로 변화
  -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나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ICT 기반 직접 소통하는 양방향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될 것으로 전망됨.
  -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어서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

- 피해지역의 활동인구 정보를 기반으로 예·경보와 상황전파, 현장수습, 피해확산방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가능함.
  - 초연결사회에서는 도민이 능동적으로 안전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개방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가 구축 될 것
- 충북형 지능재난안전망 구축
- ICBM을 활용한 도민 맞춤형 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 빅보드, 생활안전지도, 커뮤니티 맵핑, 어플 등을 연계하여 사전예방, 재난발생 시의 피해저감 등의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 지능형재난안전망 : 초연결사회에서는 도시 곳곳에 적용된 센서기술과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사전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 기상관측 및 예보의 정교화 및 맞춤형 서비스
- 기상-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현재 관측 장비의 한계성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됨.
-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등 기상관측용 디지털기기의 확대
- 도시열 관측을 위해 열 감지 카메라를 방재용 드론에 설치하고 초소형 공기 오염 측정센서를 부착하여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
  - 사물인터넷(IoT)적용 산업과 기상예측 데이터와의 결합
  -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충북 맞춤형 기상예보결정모델 서비스 제공

##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정 방법

### 가. 비전선정 방법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크게 국제기구 및 국가 정책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지역특색 및 발전방향, 지속가능발전 수요, 최신 기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비전 선정은 충청북도 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및 여건분석·전망을 통해 키워드를 발굴하여 조합하는 형식으로 비전을 선정함.
- 국제기구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검토
  - 현재 국제기구인 UN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영역별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충청북도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충청북도만의 비전을 제시함.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Rio+10)
  -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
  -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 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
  - “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을 주제로 채택하여 기존의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의 전환
  - 빈곤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임을 공감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 : 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합의하고, 경제와 형평성 문제를 통합하는 노력과 동시에 여성, 청년, NGO, 과학자의 참여를 강조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Rio+20)
  - 90개국 각국 정상 포함 180여 개국 정부 대표, 지방정부 NGO 등 4만 여명 참석
    -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성 수단으로 녹색경제 채택
    - Post-2015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의 기반을 마련

10YEP CSP 주요 목표
1.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및 환경오염의 비(非)동조화(decoupling)
2.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3.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강화
4.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촉진
5. 저탄소 생활양식의 장려
6.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강화

-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SDS) : 2015년 9월 미국 뉴욕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 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

[그림4-1] SDGs 17개 목표



- 키워드 발굴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선정은 충청북도의 각 분야 전문가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하위 분과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과 앞서 분석한 현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발굴함.

#####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향점 도출

- 앞서 분석한 충청북도의 환경, 경제, 사회, 도시, 안전,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여건전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충청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여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

#### 나. 지속가능발전 비전 관련 사례

##### □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 비전 :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 4대목표 : 1. 건강한 국토환경

2. 통합된 안심사회

3. 글로벌 책임국가

4. 포용적 혁신경제

[그림4-2]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 타 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 서울시 비전 :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 □ 서울시 목표

1. 환경영역 :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2. 사회문화영역 :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제고
3. 경제영역 :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 광주시 비전 : 지속가능한 백년광주 실현

□ 광주시 목표

1. 자연속의 생태공동체
2.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3.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
4.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그림4-3] 타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

목표

[환경]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

[사회문화]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제고

[경제]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12대 전략[환경4개,사회문화4개,경제 4개]

과제

28개 과제 [환경9개,사회문화10개,경제9개]

지표

30개 지표 [환경10개,사회문화10개,경제10개]

비전

지속 가능한 백년광주 실현

목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4대 전략

자연속의 생태공동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16대 과제

탄소중립과 대기질

수자원 지속가능성

도시 및 녹지공간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

미래형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저속 가능한 개발기반 강화

건강-환경기반 확대

노동-환경기반 확대

공공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역량 강화

평가체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성 영향분석평가(사전평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에 의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추진체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충청도정 비전 및 전략

- 민선 6기 도정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도민으로 설정하여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세부적으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4-4] 충청도정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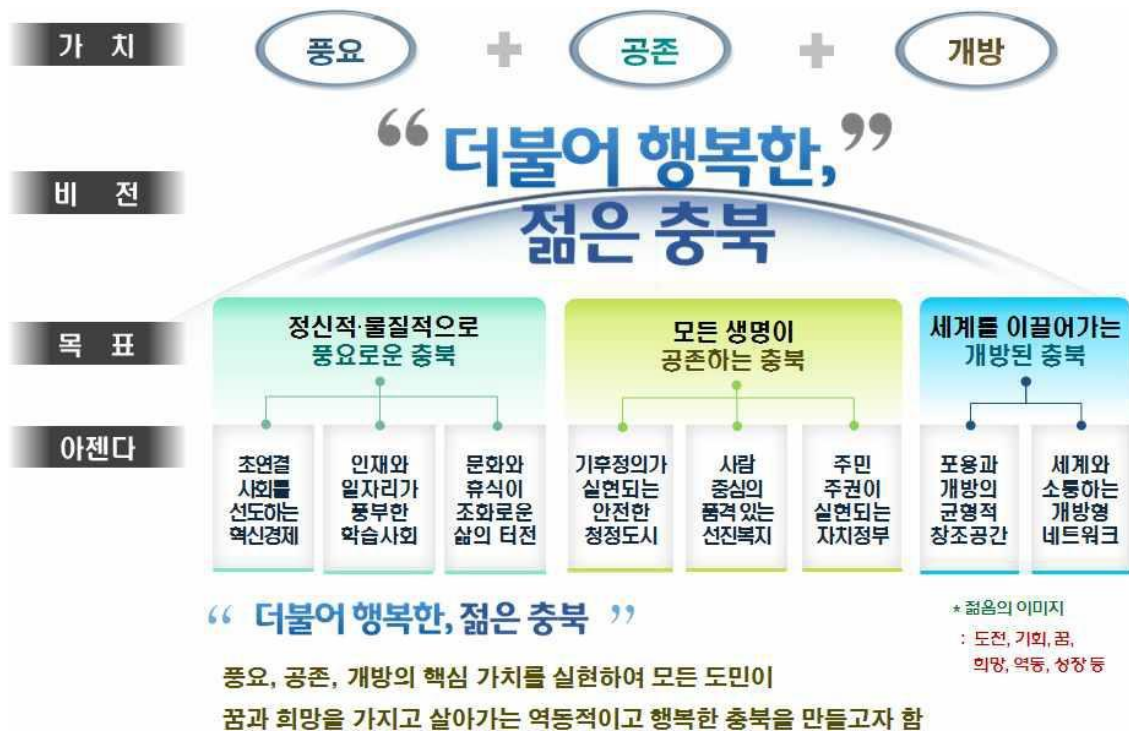


#### I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 충청북도 미래비전2040 영역별 비전

- 충북 미래비전2040은 풍요, 공존, 개방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충북,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충북, 세계를 이끌어가는 개방된 충북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함.
-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8대 아젠다를 마련하여 목표별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충북을 만들어 가기위한 비전 체계를 수립함.

[그림4-5] 충북 2040 미래비전 체계



###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정

#### 가. 키워드 도출

- 풍요, 공존, 개방
  - 충북 2040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써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융합을 토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며, 미래형 인재가 혁신을 주도하는 충북을 만들고,
  - 청정한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되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지속가능 발전지역을 구현하며,
  - 상생기반의 포용적, 개방적 도시모델 확산과 국토 및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세계화 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글로벌 리더 충북을 만들어 가고자 함.
- 공동체
  -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했던 20세기를 성찰하고, 주민들의 영역별 참여의지 및 기회확대로 개인의 참여보다 같은 생각과 보편적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써의 참여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소규모 공동체에서부터 대규모 공동체 등이 집약되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화합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하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함.
- 미래
  - SDGs는 충청북도 및 국가의 발전 미래 지표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청풍명월
  -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환경적인 의미와 충청북도민의 결백하고 온건한 성품을 대표함.
  - 자연, 환경 등 다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며, '청풍명월'한 충청북도는 미래의 가장 큰 가치지표라 할 수 있을 것임.

#### I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

##### □ 행복, 건강, 젊음, 인간

-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있음.
- 이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의 키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미래지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출되었음.

##### □ 생명과 태양의 땅

- 충북의 브랜드 슬로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생명산업(바이오밸리 조성)과 태양광 산업(솔라밸리 조성)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
- Bio(생명산업)와 Solar(태양광산업)를 형상화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표현한 것으로 "3+1프로젝트"와 "11개 시군, 읍·면·동"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을 상징
  - ※ "3+1프로젝트" =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 + 청주공항 경쟁력강화
- 충청북도는 도민의 에너지와 자부심을 하나로 모아 충청북도 미래핵심가치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미지를 시각화(디자인)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지속 전개.

##### □ 충북의 도기

- 심벌마크는 "밝은 해", "푸른 산", "맑은 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 도기의 흰색 바탕은 충북도민의 순수함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함.

##### □ 충북의 마스코트

- "고드미"와 "바르미"는 21C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를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친근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충북과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한 것임. 예로부터 중원 문화의 발상지요,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북 전래의 선비 정신과 기상을 바탕으로 21C 새 시대를 "울곧고", "바르게"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나. 비전(안) 설정

### □ 충북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

→ “상생”, “평등”, “풍요”

- 충북의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는 포용, 평등, 풍요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미래 세대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물려주고, 모두가 풍요로운 충북을 실현해 가고자 함.
- **상생**의 가치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고, 사람 간 화합과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여 포용으로써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가치를 지님.
- **평등**은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여 어디서나, 누구나 모두가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 없이 행복함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짐.
- **풍요**는 산업의 급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및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충북을 조성하여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짐.

### □ 비전(안) 제시

- 충청북도는 포용, 평등, 풍요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도민이 상생하는 희망 공동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함.

[그림4-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의  
희망공동체 충청북도**

마. 목표(안) 선정

-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회복함으로써 미래 후손에게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도시”를 물려주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며, 미래형 인재가 혁신을 주도하여 “포용과 상생의 혁신경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계층 간 물질적, 정신적 격차를 최소화 하고 어디서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평등한 희망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

목 표 (안)	
환경영역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
경제영역	포용과 상생의 혁신경제 추구
사회영역	정의롭고 평등한 희망공동체 구현

##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

### □ 선언문 작성 개요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전략수립의 선행단계로 선언문을 작성하여 정책의 큰 기본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의 의견조율 및 합의를 통해 다양한 영역별 지향점을 통합할 수 있는 비전선정을 위함임.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과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 선언문 내용

- 항상 도민이 최우선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비전 제시
- 첨단화, 글로벌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지
- 환경·기후, 산업·경제, 도시재생·사회 등의 지향점 통합
-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응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문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을 통하여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다.

이에 충청북도는 『청풍명월21』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충청북도는 자연, 인간, 공동체의 이념을 토대로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과 배려의 성품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힘써 왔다.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IT, BT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이며, 강호축의 중심지로서 비상해 가고자 한다.

충청북도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도민 통합시대를 지향하고 이를 도정이념으로 삼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선언한다.

**하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및 심화시켜 더욱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녹색충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다양한 생물 종과 공존하는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저탄소 생활양식과 인식전환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하나,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조성하고, 모든 도민이 상생하는 희망공동체를 조성한다.**

하나,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여 선순환경제를 추구한다.

하나, 로컬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강화에 나서고, 지역별·부문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18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 0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0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의 목적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고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최근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주요 정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충청도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자 함.

#### 나. 계획의 구성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전략과 이행과제를 수립함.
- 환경영역, 사회영역, 경제영역의 목표별로 12개의 전략과 2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함.
- 환경영역은 4개 전략과 9개의 이행과제, 사회영역은 4개 전략과 6개 이행과제, 경제영역은 4개 전략과 6개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행정과 거버넌스 등의 기타영역으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의 희망공동체 충청북도		
목표	<b>환경</b>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	<b>사회</b> 정의롭고 평등한 희망공동체 구현	<b>경제</b> 포용과 상생의 혁신경제 추구
전략	1.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푸른 충북 조성 2.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3.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 4. 안전한 사회기반 체계 구축	1.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구현 2.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충북 3. 양질의 교육체계 지속적 지원 4.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1.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2.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촌사회 조성 4.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북 만들기
이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li> <li>■ 지표종을 선정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강화</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 진입</li> <li>■ 생활양식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확립</li> <li>■ 포용적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li> <li>■ 혁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기반 마련</li> <li>■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li> <li>■ 주민안전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안전 마을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북</li> <li>■ 지역 간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li> <li>■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청북도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도민의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하는 충북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li> <li>■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를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청북도 조성</li> </ul>
기타 이행 과제	1.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2.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활성화		

[표5-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이행과제

환경	■ 목표 :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	
	전략 01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녹색 충북 조성
	이행과제	①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 ② 지표종을 선정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강화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 구축
	전략 02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구축
	이행과제	④ 순환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 진입 ⑤ 생활양식의 변화
	전략 03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
	이행과제	⑥ 교통시설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조성
	전략 04	안전한 사회기반 체계 구축
사회	■ 목표 :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현	
	전략 05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구현
	이행과제	⑪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북 ⑫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 06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충북
	이행과제	⑬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 ⑭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청북도 조성
	전략 07	양질의 교육체계 지속적 지원
	이행과제	⑮ 가치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추구
	전략 08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경제	■ 목표 : 포용과 상생의 혁신경제 추구	
	전략 09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행과제	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하는 충북 조성
	전략 10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이행과제	⑱ 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강화 ⑲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전략 11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촌사회 조성
	이행과제	⑳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전략 12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북 만들기
기타	이행과제	㉑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청북도 조성
	㉒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㉓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활성화	

## 2. 환경영역 세부 추진계획

### 가.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녹색 충북 조성

□ 이행과제 ① :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

#### ■ 안전한 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현상의 증가할 것이고, 수질(지하수 포함) 및 토양 오염이 점점 심화되어 자연 그대로 또는 간단한 처리만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거의 없음.
- 충북의 상수도보급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안심하고 공공 상수도를 직접 마시는 인구는 많지 않음(별도의 통계가 없음). 또한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지하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부재)
- 물 사용량(의존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가뭄 등 물 부족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음.

[표5-3] 1인 1일당 물 사용량 변화

(단위 : L/인·일)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평균	346	340	337	332	333	335	332	335	335	335
충북	361	367	371	361	384	396	406	419	421	435

- 1인당 물 소비량, 상수도 보급률, 노후 상수도 개수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 깨끗한 물 - 안심하고 물장구를 칠 수 있는 하천관리

- 충북의 하천오염은 최근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하천인 영동천, 보강천, 소옥천, 미호천, 무심천, 달천, 제천천 등의 수질은 환경부 수질기준 Ⅱ ~ Ⅴ 등급을 나타내고 있어 안전하게 물장구를 치며 놀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하천에 대한 관심과 주민에 의한 오염 감시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생활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는 하천을 보다 가까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천에서 물장구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물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 미생물 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 충청북도의 주요 하천의 수질을 환경부 수질등급 기준 I, II 등급으로 유지·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질항목 기준 : BOD, 대장균군수(물놀이 및 수질의 안전성을 위함)

#### ■ 풍부한 물 - 갈수기에도 농촌마을의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관리

- 기후변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농촌지역 불투수층 증가, 도시화 증대 등으로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을 하천이 증가하고 있음
- 가뭄에 대응할 수 있고 수생태가 건강할 수 있는 하천의 유지유량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하천의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음
- 종합적인 수자원관리, 물 사용의 체계적 관리,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살아있는 하천으로 회복시켜야 함
- 하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며, 농촌마을의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하류지역의 중규모 이상의 하천이 건강하고 깨끗해 질 수 있음
- 이에 갈수기 시기에도 유량이 있는 소하천을 조사하여 활용 대책을 수립하고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 □ 이행과제 ② : 지표종을 선정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강화

##### ■ 하늘 지표 - 황새와 제비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

- 70-80년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황새나 제비가 이제는 보기 힘든 조류가 되었고, 친환경 지표종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음
- 조류(새)의 생태계 보호 지표로서 황새와 제비를 선정하고, 이들이 돌아오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황새나 제비는 생태계 사슬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의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 황새와 제비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 육상지표 - 반디와 가재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

- 70-80년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반디나 가재가 이제는 보기 힘든 조류가 되었고, 친환경 지표종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음
- 생태계 보호 지표로서 반디와 가재를 선정하고, 이들이 돌아오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이행과제 ③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 구축

■ 도시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 5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0.6°C~1.5°C정도의 한반도 기온상승을 전망. 이러한 기온상승은 특정 지역에 다량의 수증기 유입을 유도하여 극한 강수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높임
-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0명에 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07명에 달해 전체 사망자 중 76.7% 차지
- 충북의 최근 10년간의 호우 피해액은 1,500억 원, 복구액은 3,320억 원에 달함
- 그 동안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발생 패턴과 강도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반복
- 2017년 7월 충청권 홍수 시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기록

[표5-4]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 확률 강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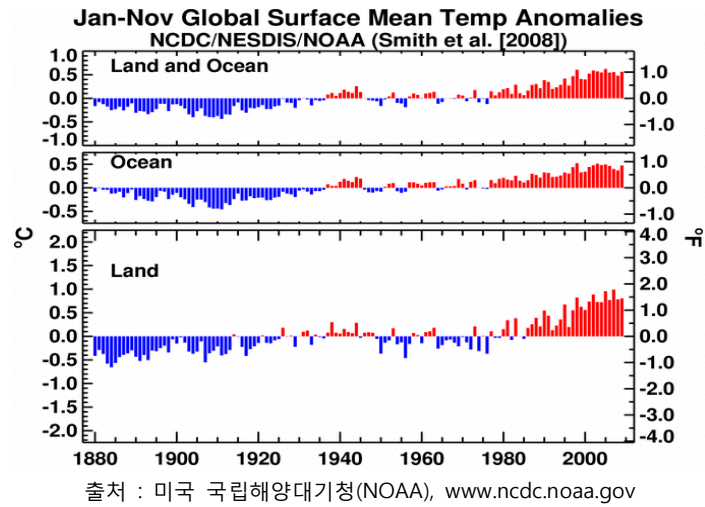
관측소	빈도 (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mm)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15시간	24시간
청주	30년	71.9	102.1	125.8	143.3	163.4	202.0	219.0	238.2
	50년	77.1	110.1	136.2	155.1	176.7	218.4	236.9	256.9
	80년	81.8	117.5	145.7	166.0	188.9	233.4	253.2	273.9
	100년	84.1	120.9	150.2	171.1	194.7	240.5	260.9	282.0
	200년	91.0	131.7	164.2	187.1	212.6	262.5	284.8	307.0
	500년	100.2	-	182.6	-	236.3	291.6	-	340.0
자체 강우량 (충북도청)		1.0	1.5	8.5	78.5	185.0	295.0	-	-

출처 :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확률 강우량(1967~2012)

■ 극한 폭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 인류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20세기 이후 지구적 기온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에 가까울수록 기온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WHO에서도 21세기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
  - 2015년 전 지구 해수면온도가 20세기(1910~2000년)의 평균 해수면온도보다 0.69°C 높았으며, 2016년 전 지구 평균기온(1~11월) 역시 20세기(1910~2000년)의 평균기온(14.0°C)보다 0.94°C 높아 관측이 시작(1880년) 이래 전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

[그림5-1] 전 지구 평균기온(1~11월) 편차 시계열



- 최근 5년간 (2011~2015년) 전국에서 총 4,228명의 온열질환자 발생<sup>1)</sup>
- 발생장소는 실외 79.9%, 실내 20.1% 차지, 특히 실외작업장 33.6%, 논·밭 21.7%, 길가 15.0% 순으로 발생
- 충북 역시 최근 10년 사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뚜렷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월과 7월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5-2] 충북 여름철 평균기온 변화(최근 10년)



자료 : 기상청 국내기호자료

1) 출처 : 201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대기환경 통합관리**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지구적 심각성 증대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백년간 평균기온 0.74℃ 상승,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1.5℃ 상승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 증가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 강화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회의 신기후체제 합의
  - 신기후체제에 우리나라 2030년까지 BAU대비 37% 저감 목표 공표
-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장 중요한 의제

**나.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이행과제 ④ : 순환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

■ **순환 에너지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률 증대**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사회적 상황에서 원전 및 화력 발전소의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 간 월경성 대기오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우리나라의 친환경에너지 자립도는 3% 이내에 머물고 있음
- 충북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가 아직 한 군데도 없으며, 다만 다목적댐(충주댐, 대청댐)과 괴산댐에서 수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
- 시설용량 : 충주댐 400,000KW, 대청댐 90,000KW, 괴산댐 2,600KW

[표5-5]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위 치	용량(KW)	비 고
양양풍력발전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3,000	
양양소수력발전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1,400	2,000KW이하
태안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14,000	
삼랑진태양광발전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3,000	
가로림조력발전소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520,000	
강원풍력발전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980,00	
양구풍력발전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000	
제주덕천풍력발전소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0,000	
보령제1소수력발전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5,000	
보령제2소수력발전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2,500	

□ 이행과제 ⑤ : 생활양식의 변화

■ 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1992년 리우 회의는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와 생산의 패턴'문제를 지목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이 등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으로 정의되며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아젠다로 채택
- 충청북도는 지난 1997년 광역단위의 환경보전 계획 및 실천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 실천항목을 제안, 환경수도로써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목표로써 충청북도 지방의제21(청풍명월21)에 반영
- 청풍명월21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민행동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생태, 도시/농촌 환경, 대기/수질 환경, 폐기물처리, 사회경제, 환경교육, 토지 이용에 관한 각 주체별 역할(시민, 기업, 행정기관)과 환경목표를 제시.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구분 (단위)	지표	현황 (1995년 평균)	환경기준 (기준치 이하)	단기 목표 ( ~2000)	장기 목표 (2001~2010)
대기 오염 (ppm)	SO <sub>2</sub>	청주0.018, 충주0.014, 제천 0.012	연간평균0.03	청주0.015, 충주0.012 제천0.010	청주0.012,충주0.010, 제천0.008
	TSP1)	청주59, 충주43, 제천 46	연간평균150	청주55, 충주40, 제천40	청주45, 충주35, 제천35
	CO	청주 1.1, 충주 1.2, 제천 1.2	8시간평균 9 1시간평균 25	청주1.0, 충주1.1, 제천1.1	청주0.8, 충주0.9, 제천0.9
	NO <sub>2</sub>	청주 0.022,충주 0.020, 제천 0.021	연간평균0.05	청주0.022, 충주0.020, 제천0.021	청주0.022,충주0.020, 제천0.021
	O <sub>3</sub>	청주 0.016, 충주 0.018, 제천 0.011	8시간평균0.06 1시간평균 0.1	청주0.015, 충주 0.015, 제천 0.010	청주0.013,충주0.013, 제천 0.008
실내 공기 (ppm)	TSP1)	137	300	130	120
	CO	3.1	20	3.0	3.0
	CO <sub>2</sub>	538.3	1,000	530	450

[표 계속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구분 (단위)	지표	현황 (1995년 평균)		환경기준 (기준치 이하)	단기 목표 ( ~2000)	장기 목표 (2001~2010)
수질 오염 (mg/ℓ)	BOD COD	충주댐	대청댐	I 급수 1 II 급수 3 III 급수 6 IV 급수 8 V 급수 10	충주댐 BOD 1.0이하 COD 2.4이하 대청댐 BOD 1.6이하 COD 4.0이하	충주댐 BOD 0.8이하 COD2.0 이하 대청댐 BOD1.0 이하 COD2.0 이하
		1.0 2.4	1.6 4.0			
폐기물 (%)	소각 처리율	생활폐기물 4.1 사업장일반폐기물 62.3		-	생활폐기물 50 사업장일반폐기물 80	생활폐기물 100 사업장일반폐기물 100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19.5		-	생활폐기물 30	생활폐기물 50
주택가 (dB(A))	소음도	낮:50, 밤:44		낮:50, 밤:40	낮:50, 밤:42	낮:48, 밤:40

자료 : 청풍명월21, 충청북도(1997)

- 201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SDGs를 반영한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기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심의 목표 지표를 지역 환경으로 확장하는 등의 발전적 성과를 이루어냄.

- 유엔 SDGs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을 목표로 국가의 역할과 기업, 시민의 참여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의 달성, 식품을 포함한 폐기물 발생의 실질적 감소, 삶의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전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그러나 충청북도가 2017년 작성한 환경보전계획은 기존 '청풍명월21'에서 담고 있는 각 주체별 역할 및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과제 등이 충분히 환경목표에 반영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2016년~2025)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충청북도"를 비전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역 환경에 대한 10개 분야, 31개 추진전략, 10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9개의 목표 지표를 포함 이에 따라 시민, 기업, 행정의 참여를 통해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 실천형 목표 지표를 환경목표로 고려할 필요 있음.

[표5-39]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목표지표

제3차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제2차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부문	분야	목표지표	목표지표	달성여부
자연 환경	자연 환경 분야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계획공원면적	미달성
		도민공원 조성	1인당 계획공원 면적	달성
		생태계서비스 구축		
		도시생태지도 작성		
	대기	대기오염 측정망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미달성
		미세먼지*	미세먼지	달성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	달성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미달성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구축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	달성
		생활오염배출원 개선지원사업	대기/수질 크린-시스템 확충	미달성
	수질	주요하천 수질개선 목표 만족	주요하천 수질개선	미달성
		상수도 보급율	상수도 보급율	달성
		하수도설치율	하수도 보급율	미달성
		하수관거 보급율	하수관거 보급율	미달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하수 보조관측망	달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수종말처리시설	미달성
자연 환경	토양/ 지하수	토양지하수 연계측정망		
		오염복원사업		
		토양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이용량*		
생활 환경	소음 진동	환경소음기준강화 (일반/도로변)*	주거지역 소음 (도로변)	미달성
		소음지도 작성 및 홈페이지 구축		
	폐기물	폐기물매립율*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미달성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미달성
		폐기물 재활용시설	생활폐기물재활용율	미달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타운 설치		
	환경 보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환경보전기금 조성	달성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배출사업소 기술지원	미달성
		화학물질사고 관련 조례제정	자율점검업체 확대지정	파악어려움
		전문인력 관리	환경친화기업 지정확대	미달성
지역 환경 분야	환경경 제사회 통합	녹색기업 인증 수		
		녹색제품 구매율		
		환경분쟁조정 처리율		
	기후변 화대응/ 에너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도 가입률		
		공공부문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소형태양광 설치지원사업(민간)		

주) \*발전방향이 역순인 지표

## 다. 사람중심의 교통 문화 확립

- 이행과제 ⑥ : 교통시설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조성

### ■ 보행약자의 사고특성을 반영한 안전도로를 조성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하여 '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감소추이에 있으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 사망자수 : ('78년) 5,114 → ('91년) 13,249 → ('13년) 5,092 → ('14년) 4,762 → ('15년) 4,621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명(32위/34개국), OECD 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명
-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0.44명 ('14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0.3명에 비해 높게 발생하고, 우리사회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

### ■ 생활밀착형 교통안전문화 조성

- 최근 보행자(전체 교통사고의 약 30%), 노인운전자(국내 고령화율 약 14%), 스몸비(스마트폰+좀비) 교통사고 등 사회구조 및 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통안전이슈 대두
-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사고 이슈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도민의 이해도가 낮음
- 또한 자전거, 스쿠터 등의 이용이 늘고 있으며, 신유형의 교통사고들이 증가함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라. 안전한 사회기반 체계 구축

- 이행과제 ⑦ : 포용적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 ■ CPTED를 활용해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

-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환경의식 변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전한 정주환경 평가의 중요지표가 되고 있음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여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을 중심으로 기존 CPTED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었으나 대책만으로 범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쇠퇴지역이나 취약지역의 활용성이 떨어지며,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마포구 영리동\_CPTED디자인



학생 및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 ■ 아동과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설계 적용

- 전 세계적으로 좋은 도시들의 특징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배려의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회복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핵심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아동·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은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설계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에서 실천적 계획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여성친화거리조성\_전남 여수시



여성친화도시\_부산 사상구

자료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427010017672>, <http://localgov.co.kr/221071060101>

■ 환경 친화적 교통기반 조성하여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

-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중요한 공원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도시서비스 접근과 공공장소의 확충과 접근로 개선을 추진함
- 지난 UN Habitat III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인 '도시에 대한 접근성'(Right to the City)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과 접근로 개선을 추진
- 도시기반시설의 환경적 설계를 통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시서비스 접근과 공공시설 확충 추진
- 지역교통수요의 급격한 증대와 고속교통망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교통수요자는 환경 친화적 교통기반 조성으로 녹색교통망 구축, 자전거도로 확충, 무장애거리 (Barrier Free) 등 질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분담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경관.식생을 고려한 환경설계기법을 통해 21세기형 쾌적한 교통서비스망 확충
- 자전거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녹색교통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도턱 제거 장애인, 노약자 신호체계를 추진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확립방안 마련

□ 이행과제 ⑧ : 혁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기반 마련

■ 새로운 재난유형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마련

- 도시의 스마트화에 따라 교통, 상·하수처리, 에너지, 복지, 정보관리 등 분야에서 센서기반의 재난관리 기술이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개별적으로 기능했던 도시기반시설은 통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기술과 융합되어 도시 전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음.
- 4차산업의 현실화로 촉발되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초연결사회의 실현과 함께 센서 및 인터넷 기술이 사회기반시설의 새로운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우리사회가 그 동안 경험하지 못 한 다른 차원의 재난위험 환경으로 대두됨.
- 따라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스마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난 관리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AR/VR기술 활용 재난안전 교육·체험 인프라 확대

- 이론교육 중심의 재난교육은 피교육자의 참여도와 학습효과가 낮고, 안전체험을 위한 H/W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
- 최근 증강(AR)·가상(VR)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재난안전교육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증대
- 기존 안전체험관 또는 공공체육·문화시설 내 재난안전 증강(AR)·가상(VR)체험인프라를 설치하여 도민에게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친숙한 재난안전 체험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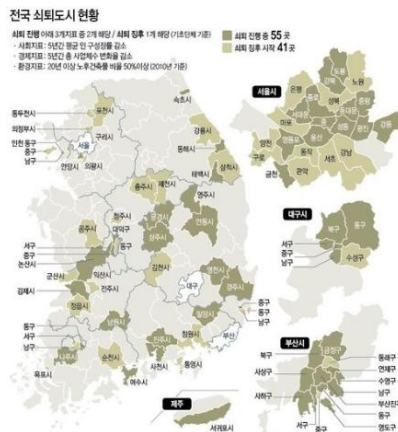
□ 이행과제 ⑨ :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화함

- 도시의 외연적 확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의 발전 이면에 도시의 쇠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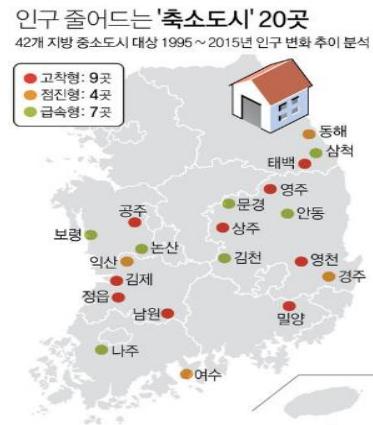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도시 쇠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단위의 도시들의 65% 이상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의 원인적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능동적 처방으로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개소 지정, 2016년 도시재생일반지역 33개 지정 등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주도의 하향식 추진,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이 아닌 사업 위주의 방식으로 인해 도시쇠퇴의 근본적 원인이 치유되고 있지 않음.

[그림5-3] 전국 쇠퇴도시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그림5-4] 축소도시현황



-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동네 단위의 소규모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쇠퇴도는 노후건축물 비율, 사업체 변동, 인구변동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도시의 쇠퇴 원인에는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부분의 분석 기분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 해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 분석이 필요

## ■ 소규모 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개방형 지역공동체 조성

- 도심공동화에 따라 도시 쇠퇴가 급격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쇠퇴화된 도심지역 내의 초등학교가 과소학교 혹은 폐교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 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심쇠퇴의 원인과 소규모화되는 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사회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함

-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해 경제적 활동까지 영위하기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즉, 사회적 경제공동체를 형성
- 주민, 상인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 사업에 참여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공동체가 대두되고 있음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행과제 ⑩ : 주민안전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안전 마을조성

■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조성

- 최근 범죄, 화재, 응급환자,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환경 개선정책은 행정의 주도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서비스의 대상인 주민의 체감도는 낮음
-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개선하는 주민활동(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
- 주민참여방식인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도시재생 유형 중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사업과 안전개선사업이 융합된 개념의 안전도시정책 수요 증대
- 이에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마을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대응력 향상

- 마을의 범죄, 화재, 심정지,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소방 및 경찰 등 지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의 수준이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시 발견자신고-응급후송-의료기관처치 순으로 대응단계에 따라 대응주체가 분리되어 개별 안전사고 대응에 한정되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안전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발적 마을안전시스템이 중요
- 행정차원의 마을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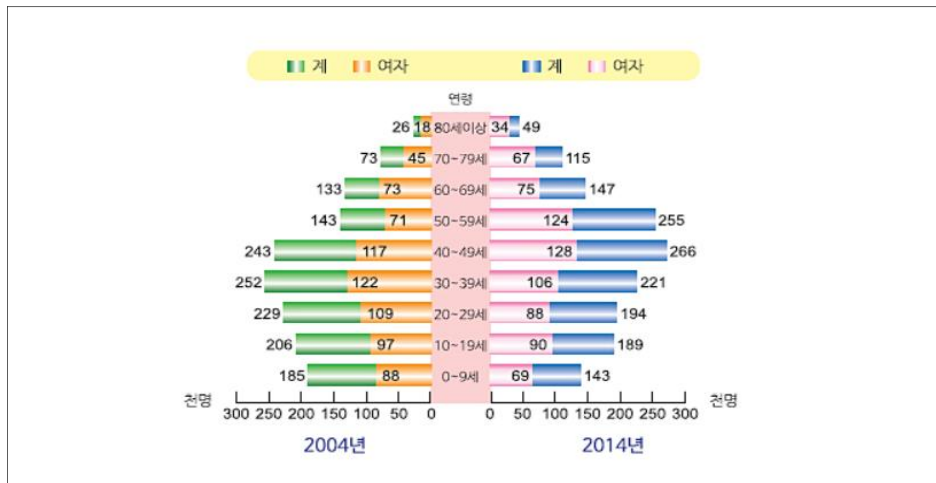
### 3. 사회영역 세부 추진계획

#### 가.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 구현

- 이행과제 ① :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북
- 11개 시·군 간 빈곤격차 해소
  - 충청북도의 시군별 인구비중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충청북도 인구(1,616,589명)의 52.2%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 도시화율은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 인구, 2015년) 충북 전체의 73.77%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집중되어 있어 향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가능함.

[그림5-5]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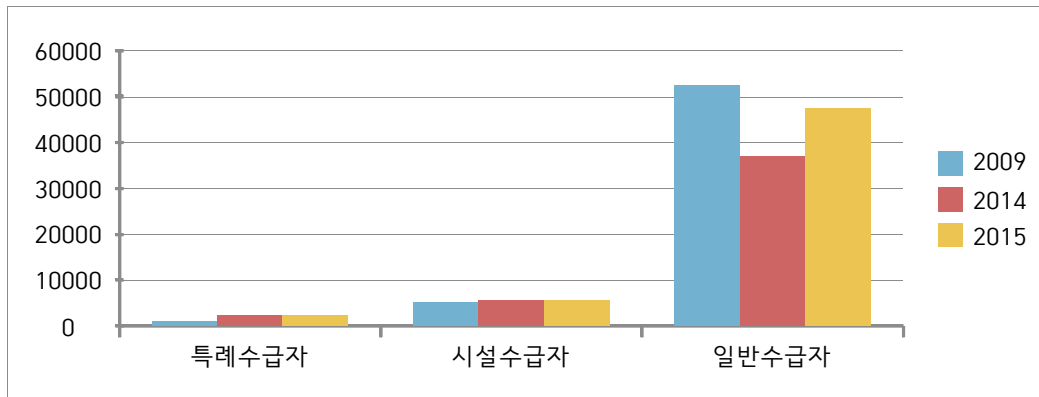
(단위 : 명)



- 충북 11개 시군의 고령화율이 높고(평균 14.8%, 2015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지역별로는 보은, 괴산, 영동, 단양, 옥천 초노령화 사회로 진출하였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1,646,363명 중 충북 55,359명(일반수급자 47,411명 시설수급자 5,632명, 특례수급자 2,316명)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의 3.43%. 성별 현황은 남성 25,108명, 여성 30,25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림5-6] 충청북도 유형별 수급자 현황



- 도민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 11개 시군의 빈곤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선정이 중요함.

[표5-6] 저소득취약계층의 비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역별 비율

(단위 : 명)

지역	총수급자(2015)			
	가구수	합계	남성	여성
청주시	13,994	23,226	10,354	12,872
충주시	4,983	8,229	3,698	4,531
제천시	3,887	6,134	2,683	3,451
보은군	1,207	1,753	803	950
옥천군	1,312	2,479	1,133	1,346
영동군	1,510	2,272	1,018	1,254
증평군	707	1,035	451	584
진천군	1,272	1,983	897	1,086
괴산군	1,277	2,051	969	1,082
음성군	1,871	4,664	2,435	2,229
단양군	1,017	1,533	667	866
계	33,037	55,359	25,108	30,251

자료 :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3.43%)이 낮다고 해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주민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는데, 이는 높은 재산가치로 인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생활보장이 어려운 빈곤계층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함. (차상위계층)
- 충북도내 독거노인현황
  - 전체 59,838명(2015년, 충북 노인장애인과)중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로 적절한 사회보장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 남녀의 생애주기

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직업경험 보다는 가사와 돌봄 등으로 자신을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이 노년을 맞이한 여성들이 더 가난한 상황임.

[표5-7] 성별 노인 빈곤현황

(단위 : 명)

분 류	성별/비율		소계/비율	총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남	2,904 (29%)	10,055(16.8%)	59,838
	여	7,151 (71%)		
저소득 노인	남	936 (17.8%)	5,245(8.76%)	
	여	4,309 (82.2%)		
일반	남	13,190 (29.6%)	44,538(74.4)	
	여	31,348 (70.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지역 편차가 존재하나 전체 충청북도 평균은 71.87%이며, 전체 노인인구 대비 80% 넘는 지역이 11개 시·군 중 6개 지역에 해당함.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급자 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5-8] 시군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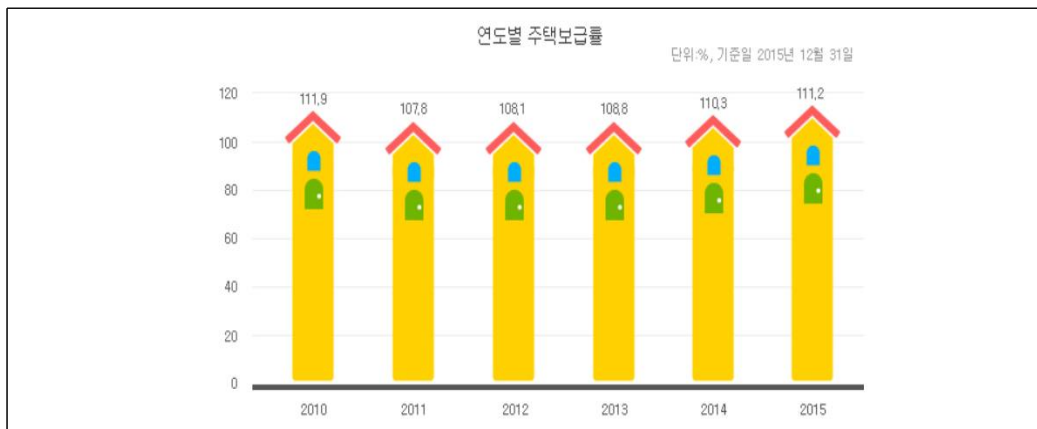
구분	전체노인대비 기초노령연금수급자(명)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2015	234,813	97,290	137,523	168,754	61,350	107,404	71.87	63.06	78.10
청주시	88,656	36,462	52,194	57,927	20,051	37,876	65.34	54.99	72.57
충주시	33,948	14,016	19,932	25,149	9,239	15,910	74.08	65.92	79.82
제천시	23,594	9,988	13,606	17,315	6,557	10,758	73.39	65.65	79.07
보은군	10,124	4,104	6,020	8,298	3,111	5,187	81.96	75.80	86.16
옥천군	12,932	5,383	7,549	10,393	3,929	6,464	80.37	72.99	85.63
영동군	13,621	5,510	8,111	11,182	4,207	6,975	82.09	76.35	85.99
증평군	5,150	2,115	3,035	3,624	1,265	2,359	70.37	59.81	77.73
진천군	10,988	4,562	6,426	7,576	2,658	4,918	68.95	58.26	76.53
괴산군	11,454	4,823	6,631	9,185	3,559	5,626	80.19	73.79	84.84
음성군	16,517	7,092	9,425	11,781	4,395	7,386	71.33	61.97	78.37
단양군	7,829	3,235	4,594	6,324	2,379	3,945	80.78	73.54	85.87

자료 : 노인장애과

### ■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 주거 취약계층
  - 주택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정상적 주택이 아닌 비주택 거주 가구
  - 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
  - 주거권을 침해받는 경우 역시 주거취약계층이라 분류

[그림5-7] 연도별 주택보급율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 경제적인 부담 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아 물리적 주거환경도 나쁜 상황임.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지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부족한 상황.
- 열악한 주거시설로 인한 주거불만족 개선 필요
  - '14년 충북사회지표조사결과를 보면, 열악한 주거시설 31.3% (청주 39.8%,충주 47.2%), 교통 불편 20.0% (보은 31.3%, 제천 29.2%), 문화시설부족 13.5% (음성 23.5%,진천 18.0%) 순으로 주거불만족사유를 들었음.

- 적절한 주거를 위한 사회·공공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6.31%로 월세가구의 4분의1 수준임.
  -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14년 기준 충북 총 8,210호로 증평군의 358가구를 제외하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에 소재함.
  -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평균 5.47%보다 약간 상회하지만 전체가구의 24.3% 11만여 가구가 월세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표5-9] 충북 공공임대주택 현황 ( '14)

(단위: 호)

계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전세임대
44,119	6,139	2,071	25,475	2,137	6,014	2,283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8,151호 제외하면 총 주택총량 569,678호의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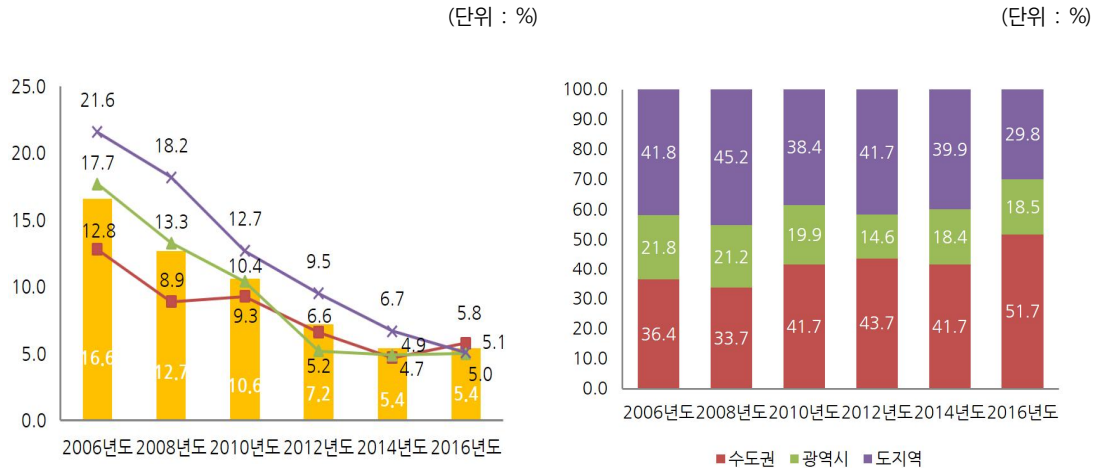
- 2013년말기준 충북의 저소득가구<sup>2)</sup> 31,193가구의 37%가 월세거주, 무상거주가 34.8%, 23.6%가 자가 주택 거주, 4.7%가 전세거주로 나타나고 있어 월세부담완화 대책이 필요함.
- 전세가격상승과 월세부담가중
  - 전세수급동향<sup>3)</sup>은 101.7('15.7)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14년 112.5로 전년대비 5.19% 상승.
  - 충북의 월세거래동향은 83.8 (전국 64.0)로 공급자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14년 기준 116,304호 24.3%가 월세가구인 반면 전세 가구는 14.4%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16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2014년과 동일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102.7만가구로 2014년 대비 다소 증가함
  - 시설기준, 침실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2)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저소득가구 (중위소득 50%이하로 탈수급 및 수급신청탈락자로 2014년 충북의 기초생활수급가구는 44,964가구임, 2013년 말 기준 노숙자쉼터와 시설입소가구를 제외  
 3) 전세수급동향 :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임 100은 균형, 한국감정원 기준 '15.7 종합 전세수급동향은 전국 111.3% 서울지역 117.3% 세종은 94.2 % 충북지역은 ' 15년 2월부터 107%대를 기록. 단독주택은 좀 더 균형에 가까워 충북 100.7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도지역의 비율은 2014년과 비교하여 1.6%p가 감소한 5.1%,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1.1%p, 0.1%p가 증가한 5.8%, 5.0%를 나타냄

[그림5-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주거급여(임차인가구지원(임차급여), 자가가구지원(수선유지급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뉨.
  - 2017년 7월말 현재 충북도 전체 주거 급여대상자는 24,473가구(2015년 충북 전체 가구 수는 601,856)에 지급되고 있으며, 소득 상위 43%로 인정되고 있음.
  - 시스템 상에는 월세, 전세, 자가 정도는 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 상황은 각 단위 사회복지사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 이행과제 ② : 지역 간 격차 해소

####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보장

- SDGs에서 불평등 의제는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을 목표로 하는 단일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적 불평등의 감소 목표로 소득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완화 및 역량강화, 기회의 평등 및 결과의 불평등 감소 등이 제시.
- 우리나라는 SDGs를 반영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와 “지역 간 격차해소”를 연계하여 사회통합을 목표로 채택

- 충청북도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써 시·군별 경제적 기반과 인구사회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격차해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기준 충북의 인구는 총 1,616,589명으로 전체 인구의 73.8%가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4.5%의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
- 외국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천군, 음성군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음.

[표5-10] 충청북도 시·군 인구현황

(단위 : 명, %)

구분	세대수	인구수			외국인 비율	65세이상 고령자비율
		합계	남	여		
2015	669,503	1,616,589	819,031	797,558	2.0	14.5
청주시	336,408	842,960	423,206	419,754	1.3	10.5
충주시	87,463	211,976	107,163	104,813	1.9	16.0
제천시	59,856	137,609	68,851	68,758	1.1	17.1
보은군	16,147	34,731	17,335	17,396	1.3	29.1
옥천군	22,967	53,193	26,814	26,379	1.5	24.3
영동군	23,586	51,251	25,545	25,706	1.1	26.6
증평군	15,790	37,260	19,076	18,184	1.6	13.8
진천군	29,750	72,818	38,816	34,002	6.6	15.1
괴산군	19,620	39,477	20,154	19,323	1.7	29.0
음성군	43,279	104,316	56,464	47,852	7.6	15.8
단양군	14,637	30,998	15,607	15,391	0.8	25.3

자료 : 충북 통계연보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는 사업체 종사자 기준 64,35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8%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으며 시 단위 보다 군 단위 지역의 종사자 비율이 높음(시 평균 37.1%, 군 평균 41.8%)
- 성별로는 여성 266,424명, 남성 377,429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41.4%로 남성 대비 71%에 불과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11]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
	합계	여성대표자	합계	남	녀	
2015	121,516	47,627	643,853	377,429	266,424	39.8
청주시	58,351	23,107	321,242	181,864	139,378	38.1
충주시	17,089	6,748	78,318	44,668	33,650	36.9
제천시	12,381	5,101	50,140	28,026	22,114	36.4
보은군	2,878	1,158	12,466	7,412	5,054	35.9
옥천군	4,017	1,522	19,303	11,296	8,007	36.3
영동군	3,548	1,462	15,445	8,782	6,663	30.1
증평군	2,670	1,062	12,040	6,748	5,292	32.3
진천군	6,097	2,173	44,070	28,953	15,117	60.5
괴산군	2,809	1,132	13,204	7,830	5,374	33.4
음성군	8,705	2,874	63,613	42,930	20,683	61.0
단양군	2,971	1,288	14,012	8,920	5,092	45.2

주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자료 : 충북 통계연보

- 지역별 재정 충족도는 37.59%로 재정 수요에 비해 수입액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하고 재정력이 수요 대비 50%를 넘는 자치단체는 없음.
- 시군별 재정력의 편차는 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역 전반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5-12] 충청북도 시·군 재정현황

(단위 : %)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정력지수)
2015	28.1	65.6	37.6
충청북도	23.7	40.4	52.9
청주시	27.1	54.8	51.9
충주시	19.0	65.0	31.2
제천시	14.1	60.0	19.9
보은군	7.4	61.6	16.6
옥천군	10.0	59.6	17.8
영동군	7.3	58.6	12.4
증평군	11.2	53.9	26.3
진천군	25.7	61.3	40.1
괴산군	7.1	54.8	14.8
음성군	20.2	58.7	33.5
단양군	9.6	57.3	17.2

주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X 100

2)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 교부전기준

자료 : 충북 통계연보

[표5-13] 개인특성별 빈곤율

(단위 : %, %p)

개인특성별		개인특성별 상대적 빈곤율(2016년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	시장+공적 이전 빈곤율	시장-공적 지출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갭
전체		19.5	16.7	18.9	16.0	35.4
성별	남자	17.4	14.7	16.9	14.0	34.1
	여자	21.6	18.7	20.9	17.9	36.4
연령대 별	아동연령층[18세 미만]	12.4	12.1	11.8	11.5	27.3
	근로연령층[18-65세]	13.3	11.7	12.8	11.1	31.4
	은퇴연령층[66세 이상]	63.1	50.5	61.8	48.1	43.3
혼인상 태별	미혼	14.5	13.1	13.9	12.5	33.5
	배우자 있음	18.4	14.6	17.9	13.8	33.9
	사별	56.2	49.1	54.7	47.4	45.4
	이혼	41.0	38.9	38.5	36.4	36.4
종사상 지위	취업자	12.5	10.8	11.9	10.1	28.6

자료 : 통계청,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표5-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현황(전국기준)

(단위 : %, %p)

고용형태	2016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특수형태제외)	90.7	89.7	90.1	98.1
정규근로자	95.7	98.3	98.2	98.3
비정규근로자(특수형태제외)	72.1	59.4	56.7	97.4
재택/가내근로자	58.9	56.6	59.4	95.8
파견/용역근로자	93.8	94.0	92.5	98.0
일일근로자	57.4	11.1	11.1	98.1
단시간근로자	69.0	65.6	63.7	95.5
기간제근로자	86.9	94.9	89.7	98.8
한시적근로자	45.1	36.4	35.0	93.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5-15]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단위 : 만원)

가구특성별		가구당 평균 소득(2016년 기준)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4,883	3,199	1,122	220	274	67
가구주 성별	남자	5,566	3,679	1,310	256	274	47
	여자	2,549	1,559	479	99	273	138
취업자 수	0인	1,419	201	50	249	671	248
	1인	4,235	2,968	809	192	220	45
	2인	6,529	4,360	1,732	238	177	22
	3인 이상	7,937	5,286	2,222	237	176	16
가구 유형	한부모가구	3,054	1,811	705	95	292	151
	조손가구	2,175	682	265	119	817	293
	노인가구	1,462	189	218	252	605	199
	다문화가구	4,328	2,996	1,062	63	171	36
	장애인가구	3,513	1,778	894	185	554	102

자료 : 통계청,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시·군별 인구 유입-유출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5-16] 시·군별 인구가동

(단위 : 명, %)

구분	총이동		순이동		
	전입(이동률)	전출(이동률)	(이동률)	남 자	여 자
2015	214,626	213,188	1,438	1,532	-94
	-13.7	-13.6	-0.1	-0.2	0
청주시	117,932	122,333	-4401	-2101	-2300
충주시	27,594	28,237	-643	-146	-497
제천시	18,081	18,653	-572	-368	-204
보은군	3,846	3,521	325	196	129
옥천군	4,450	4,263	187	115	72
영동군	5,579	5,343	236	213	23
증평군	5,350	3,609	1741	910	831
진천군	10,464	7,777	2687	1441	1246
괴산군	5,403	4,626	777	434	343
음성군	13,038	11,946	1092	787	305
단양군	2,889	2,880	9	51	-42

자료 : 충북통계연보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시·군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수준 현황

[그림5-9]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

(단위 : %)

구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전 체]	9.1	29.1	50.4	9.1	2.4	38.2	50.4	11.4
시 군 별	청주시	8.0	26.8	52.7	9.7	2.8	34.8	52.7
	충주시	8.8	30.0	50.7	8.6	2.0	38.8	50.7
	제천시	10.3	33.0	48.6	6.7	1.3	43.4	48.6
	보은군	13.0	27.3	52.4	6.7	0.7	40.3	52.4
	옥천군	8.3	26.5	51.7	11.1	2.4	34.8	51.7
	영동군	13.9	29.1	51.0	5.2	0.8	43.0	51.0
	증평군	12.1	33.7	44.7	7.4	2.1	45.8	44.7
	진천군	9.8	30.6	49.6	8.5	1.5	40.4	49.6
	괴산군	12.8	31.9	46.5	6.8	2.0	44.6	46.5
	음성군	10.4	38.5	35.7	11.5	3.8	48.9	35.7
	단양군	11.5	28.5	49.0	9.1	2.0	40.0	49.0
성별	남자	9.6	29.9	48.6	9.2	2.6	39.6	48.6
	여자	8.6	28.2	52.1	8.9	2.2	36.8	52.1

자료 : 「2016년 충북의 사회지표」

## 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충북

- 이행과제 ③ :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

###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통해 인권을 보장

-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같은 폭력이외에도 데이트 폭력이나 무차별 여성혐오 폭력으로 유형과 수위가 확대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성인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성폭력을 1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은 21.3%, 남성은 1.2%로 여성 피해가 훨씬 많음.
- 2013년 가족폭력실태조사에서 배우자로부터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여성응답자는 총 493명이며, 이중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8.2%, 남성응답자는 420명으로 이중 3.9%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19세 이상 응답자).

강력범죄 피해자 수(명) -여성비율=여성피해자/피해자 수	충북현황	남성	여성	여성비율	기준년도
	807	126	681	84.4%	2016

\*자료: 2017 지속가능발전충북포럼(6.28)

- 여성폭력 방지 대책이 다각도로 모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남성 가해자 중심의 소극적 범죄 처벌과 여성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에 미진하여 여성이 인권적 주체로 자기실현을 이뤄가지 못함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여성을 상대로 하는 폭력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분석을 통해 여성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충북여성의 주체적 삶을 위한 인권강화를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여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안전 도시환경 구축.
- 충북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에 활용하고 향후 연차별 과제 이행 점검에 활용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안전 체감도를 높임.

[표5-17] 충북의 성평등 수준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완전평등수준=100)

구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성비)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격차	평균점수
충북	59.2	75.0	67.1
전국	65.2	65.1	65.2

\*자료: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

○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압박이 아니라 인권침해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폭력 없는 사회 형성이 필요함.

#### ■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3%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음(유리천정).
-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리더십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정책의 채택 특히 재정 임금 사회정책과 보다 나은 평등의 점진적 달성이 필요함.
- 낮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 하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낮음.
- 중간관리직부터 현저하게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 일·생활균형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적극 지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육과 가사가 대부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어 일-가정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일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성별역할의 틀을 제거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지향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연차적 목표치를 설정, 확대하도록 함.
- 여성이 아닌 부모 모두가 양육과 가사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
-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시에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지표

[표5-18]충북의 성평등수준 - 가족

(단위: 완전평등수준=100)

구분	가사노동시간성비	육아휴직자성비
충북	26.8	55.8
전국	26.3	59.1

자료: 2016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

□ 이행과제 ④ :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청북도 만들기

■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 충북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소득수준 차이가 최소화 되어야 함. 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보면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 18,21원 비정규직 12,076원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6.3%임.
- 충북도가 관내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임금산출 기준 변경할 수 있음. 충북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적용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로 적용지침을 바꾸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관련규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에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동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19] 비정규직 임금수준

시점	정규근로자(A)	비정규근로자(B)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
	시간당임금총액 (원)	시간당임금총액 (원)	B/A*100
2010	14,388	8,236	57.2
2011	15,289	9,372	61.3
2012	16,403	10,437	63.6
2013	17,525	11,259	64.2
2014	18,426	11,463	62.2
2015	17,480	11,452	65.5
2016	18,212	12,076	66.3

자료: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5-20]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현황(2016년)

항목	전체근로자(특수형태제외)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특수형태제외)
고용보험 (%)	90.7	95.7	72.1
건강보험 (%)	89.7	98.3	59.4
국민연금 (%)	90.1	98.2	56.7
산재보험 (%)	98.1	98.3	97.4
상여금 (%)	55.3	65.8	22.9
퇴직금 (%)	-	-	-
퇴직연금 (%)	47.0	55.5	20.7

자료 2016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실업률도 높음. 장애 보장구수리와 잦은 진료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움. 더구나 장애여성은 가정에서 돌봄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도 떠안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
- 장애인은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빈곤할 확률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실업 중인 장애인의 삶의 질 격차는 심함. 2016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36.4%에 그치고 있음.

[표5-21] 장애인 고용현황

항목	2016			
	전체	수도권	광역시권	기타 시도
15세 이상 인구 (명)	2,441,167	1,016,951	462,230	961,985
경제활동인구 (명)	941,052	404,115	165,852	371,084
취업자 (명)	880,090	374,096	155,598	350,396
실업자 (명)	60,961	30,019	10,254	20,688
비경제활동인구 (명)	1,500,115	612,836	296,378	590,091
경활률 (%)	38.5	39.7	35.9	38.6
실업률 (%)	6.5	7.4	6.2	5.6
고용률 (%)	36.1	36.8	33.7	36.4

자료: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지난 20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은 300명사업장에서 50명사업장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2012년 통계를 보면, 민간 2.5% 공공부문 3%에 그치고 있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의 고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나, 장애인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스러워 함. 심지어 '외모 상 장애 표시가 나지 않는 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자' '장시간 서서 일할 수 있는 자' 등 차별적 조건을 내걸기도 함.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를 최하로 하는 것이지 최상의 조건은 아니므로 높일 필요가 있음.

[표5-22]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위 : %)

장애인 의무 고용률(%)	2014	2015	2016
	3.0	3.0	3.0

## ■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경제활동 측면에서 고용 기회와 근로임금의 형평성 확보를 중시해야 함.
- 2017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정규직=100)은 53.5%로 드러남.

[그림5-10] 비정규직 월평균 상대임금



자료 : 이데일리 2017년 2월 19일, 박종오 기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 불과, 임금격차 사상 최대'

- 또한 2012년 이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청년·노인·저학력자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 추세임. 아래 그림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며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림5-11] 학력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정규직	고졸 미만	51.2	55.6	56.8	55.5	56.7	55.4	61.0	57.3	58.3	57.3	58.2	58.3	60.0	61.4
	고 졸	33.5	37.6	38.2	36.5	37.5	36.8	38.1	36.4	37.9	37.8	37.3	36.6	37.1	38.0
	전문대졸	23.9	28.8	27.1	29.1	28.1	24.7	25.8	24.6	25.7	24.3	23.2	24.3	24.3	24.8
	대졸 이상	20.3	26.1	24.7	24.1	24.8	22.3	21.0	21.0	21.9	20.9	20.8	20.6	20.1	19.9

자료 : 이데일리 2017년 2월 19일, 박종오 기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 불과...임금격차 사상 최대'

## 다. 양질의 교육체계 지속적 지원

- 이행과제 ⑤ : 가치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추구.

### ■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체계 구축

- SDGs에서 교육 분야의 개발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며 보편성과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도 적용 가능한 교육목표와 다른 목표와의 연계성을 통해 교육 개발의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간 교육개발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고등학교의 수학을/진학을, 성별 대학 입학률 등에서 거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의 개발목표가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임.
- 교육의 질적 수준과 관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선진국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 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를 성과지표로 채택
- 세계시민교육 관련 SDGs 목표체계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SDGs 4.7)로 구성되며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충북의 경우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추진 체계의 다양화로 인해 통합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반 사회교육으로 이루어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은 교육 예산의 12%에 불과(2016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표5-23] 충청북도 교육청 자원별 교육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2,421,187	2,366,762	2,486,700
이전수입	1,928,583	1,948,595	2,052,503
중앙정부이전수입	1,663,481	1,676,823	1,735,57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544	260,643	298,371
기타이전수입	11,558	11,129	18,558

자료 :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공유와 실천 행동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 간, 행정 내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라.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 □ 이행과제 ⑥ :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보장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지난 1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 연령별 자살률 통계자료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미세하게나마 감소한 경향을 보였지만, 70대(8.5%)와 80대 이상(6.4%)은 자살률이 더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인(65세 이상)의 10.9%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 24.4%, 외로움 13.3%,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1.5%, 배우자, 친구 등의 사망 5.4% 순이었음.
- 한국인구학회 '한국 사회 자살률의 변동과 원인'에 따르면 2005~2011년 7년간 자살을 분석한 결과, 7년간 자살률 평균은 충청북도가 인구 10만 명당 31.3명이 목숨을 끊어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5-24] 충북 시군별 자살인구·자살률 추이

(단위: 명, 십만명당)

구분	2005		2010		2014	
	자살인구	자살률	자살인구	자살률	자살인구	자살률
전국	13,836	27.3	15,566	31.2	12,011	24.7
충청북도	487	32.7	550	35.9	493	31.5
청주	164	26.1	181	28.0	0	-
충주	74	35.8	86	41.6	81	39.1
제천	59	42.6	56	41.2	56	41.2
청원	43	35.9	62	41.1	0	-
보은	9	23.9	17	49.0	6	17.7
옥천	21	37.4	16	29.7	21	40.3
영동	18	34.5	24	47.7	16	31.8
진천	23	38.2	31	50.4	25	38.8
괴산	24	61.4	20	54.6	24	63.4
음성	30	35.0	32	35.6	35	37.4
단양	17	49.4	10	31.6	14	45.6
증평	5	16.3	15	45.1	9	26.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4)

#### ○ 충북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 2015년 충북지역 청소년(5~24세)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이 가장 많고, 다음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순으로 나타남.

- 2015년 충북지역 청소년(5~24세)의 사망 원인은 인구 10만 명 당 「고의적 자해(자살)」 8.6명, 「운수사고」 5.0명 순으로 나타남.

[표5-25] 청소년(5~24세)의 사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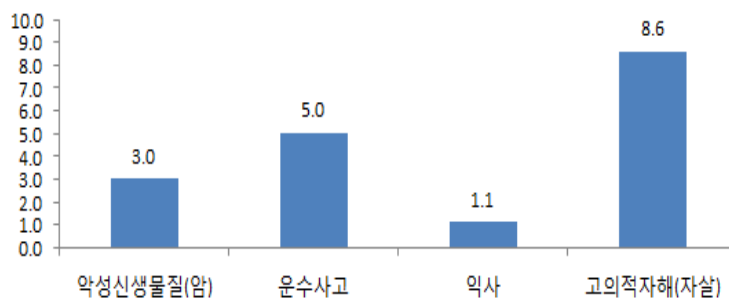
(단위 : 명, 인구 10만 명 당)

구분		청소년 사망자 수 (전체)	주요원인별			
			악성신생물 (암)	운수사고	익사	고의적 자해 (자살)
연도 세	2014	78(21.3)	9(2.5)	18(4.9)	4(1.1)	18(4.9)
	2015	93(25.7)	11(3.0)	18(5.0)	4(1.1)	31(8.6)
	5~9세	6	2	2	-	-
	10~14세	6	-	1	-	1
	15~19세	32	4	10	-	5
	20~24세	49	5	5	4	25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14년, 2015년

사망률 = 사망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0 ※ ( )의 수치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 충북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보다 1.1%p 증가한 41.0%임
- 전국 37.4%에 비해 3.6%p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50.1%로 남학생 32.6%보다 17.5%p 높게 나타남

[표5-26]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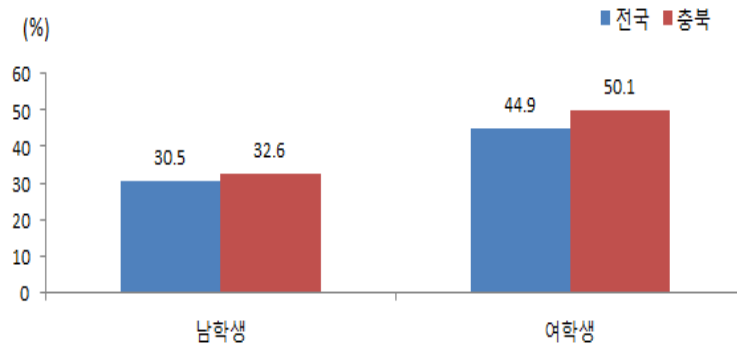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35.4	29.6	41.7
	2016	37.4	30.5	44.9
충북	2015	39.9	31.2	49.3
	2016	41.0	32.6	50.1

자료 :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5년, 2016년

주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16년 충북지역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보다 3.2%p 증가한 28.3%로 나타났으며, 전국 25.5%에 비해 2.8%p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33.0%로 남학생 24.0% 보다 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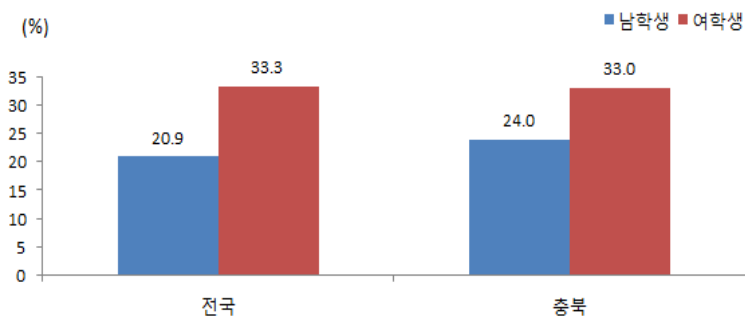
[표5-27]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23.6	19.7	27.8
	2016	25.5	20.9	33.3
충북	2015	25.1	19.5	31.2
	2016	28.3	24.0	33.0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2016년 충북지역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6.9%로 남자 10.7%, 여자 2.9%로 나타났으며, 전국 6.3%에 비해 0.6%p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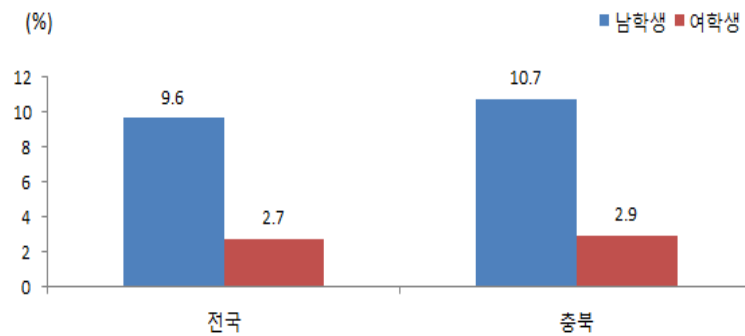
[표5-28] 청소년의 흡연율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7.8	11.9	3.2
	2016	6.3	9.6	2.7
충북	2015	9.0	13.7	3.9
	2016	6.9	10.7	2.9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2016년 충북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2.5%p 감소한 17.1%임.
- 전국 15.0%에 비해 2.1%p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학생 19.9%, 여학생 14.0%로 나타남.

[표5-29] 청소년의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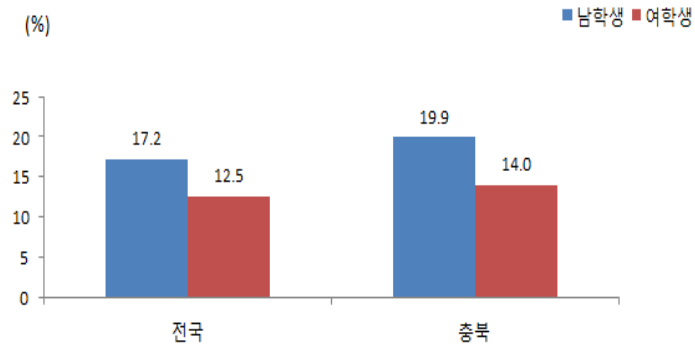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16.7	20.0	13.1
	2016	15.0	17.2	12.5
충북	2015	19.6	22.4	16.6
	2016	17.1	19.9	14.0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30] 청소년의 사망자 원인(인근도시 비교)

(단위 :명, 인구 10만 명 당)

구분		청소년의 사망자 수	청소년의 주요원인별 사망원인			
			악성신생물 (암)	운수사고	익사	고의적자해 (자살)
대전	2014	88(22.8)	14(3.6)	12(3.1)	5(1.3)	27(7.0)
	2015	76(20.1)	10(2.6)	21(5.6)	2(0.5)	21(5.6)
	5~9세	4	1	2	-	-
	10~14세	9	2	2	-	2
	15~19세	30	4	8	1	10
	20~24세	33	3	9	1	9
세종	2014	5(15.9)	0(0.0)	2(6.4)	-	1(3.2)
	2015	3(7.0)	1(2.3)	-	-	1(2.3)
	5~9세	-	-	-	-	-
	10~14세	1	-	-	-	-
	15~19세	1	1	-	-	-
	20~24세	1	-	-	-	1
충북	2014	78(21.3)	9(2.5)	18(4.9)	4(1.1)	18(4.9)
	2015	93(25.7)	11(3.0)	18(5.0)	4(1.1)	31(8.6)
	5~9세	6	2	2	-	-
	10~14세	6	-	1	-	1
	15~19세	32	4	10	-	5
	20~24세	49	5	5	4	25
충남	2014	113(24.4)	19(4.1)	17(3.7)	-	39(8.4)
	2015	120(26.2)	16(3.5)	24(5.2)	4(0.9)	42(9.2)
	5~9세	12	3	4	1	-
	10~14세	14	1	3	-	4
	15~19세	38	3	7	2	15
	20~24세	56	9	10	1	23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각 년도

사망률 = 사망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0

※ ( )의 수치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임. ※ 주요 원인별로 청소년 사망자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5-31]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인근도시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35.4	29.6	41.7
	2016	37.4	30.5	44.9
대전	2015	36.9	31.4	42.9
	2016	38.8	31.1	47.2
세종	2015	32.6	27.6	37.8
	2016	35.4	28.1	42.9
충북	2015	39.9	31.2	49.3
	2016	41.0	32.6	50.1
충남	2015	36.9	29.8	44.8
	2016	39.6	32.5	47.4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표5-32]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인근도시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23.6	19.7	27.8
	2016	25.5	20.9	33.3
대전	2015	23.6	20.2	27.4
	2016	26.7	20.7	33.3
세종	2015	22.8	16.6	29.1
	2016	26.2	22.5	30.0
충북	2015	25.1	19.5	31.2
	2016	28.3	24.0	33.0
충남	2015	23.7	20.3	27.4
	2016	26.2	22.7	30.1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표5-33] 청소년의 흡연실태(인근도시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7.8	11.9	3.2
	2016	6.3	9.6	2.7
대전	2015	7.0	11.3	2.4
	2016	6.2	9.6	2.5
세종	2015	6.6	10.8	2.2
	2016	6.3	10.3	2.3
충북	2015	9.0	13.7	3.9
	2016	6.9	10.7	2.9
충남	2015	8.1	12.0	3.9
	2016	6.6	9.2	3.7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34] 청소년의 음주실태(인근도시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16.7	20.0	13.1
	2016	15.0	17.2	12.5
대전	2015	15.4	19.9	10.5
	2016	13.1	15.2	10.8
세종	2015	17.3	23.0	11.5
	2016	12.5	14.4	10.6
충북	2015	19.6	22.4	16.6
	2016	17.1	19.9	14.0
충남	2015	19.4	23.0	15.4
	2016	17.7	20.2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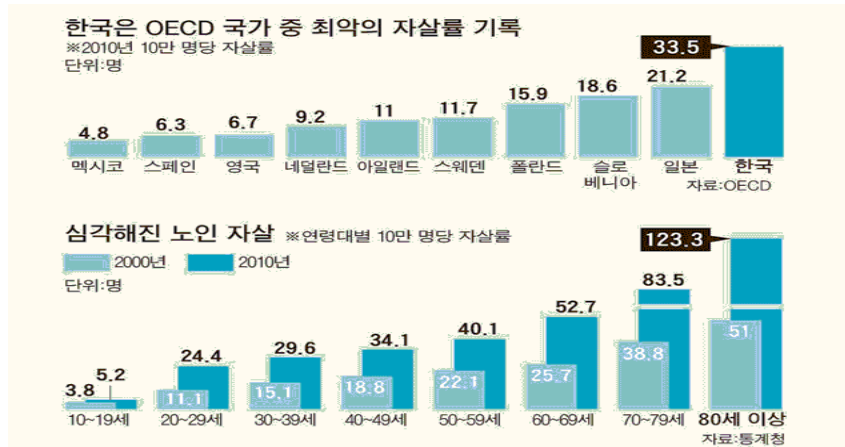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 노인문제에 대한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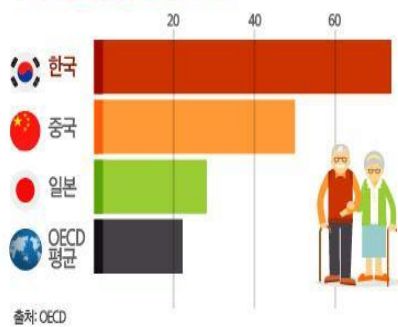
-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흔함. 이러한 경우에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질환 장애로 인한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우울증,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특히 신체적인 불편감과 통증이 수반되는 장애일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충북은 94.69명으로 3위, 대전은 82.03명으로 5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지역 노인의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남(2015년 한국콘텐츠학회).

[그림5-12] 한국의 노인 자살률



### 한국 노인자살률 OECD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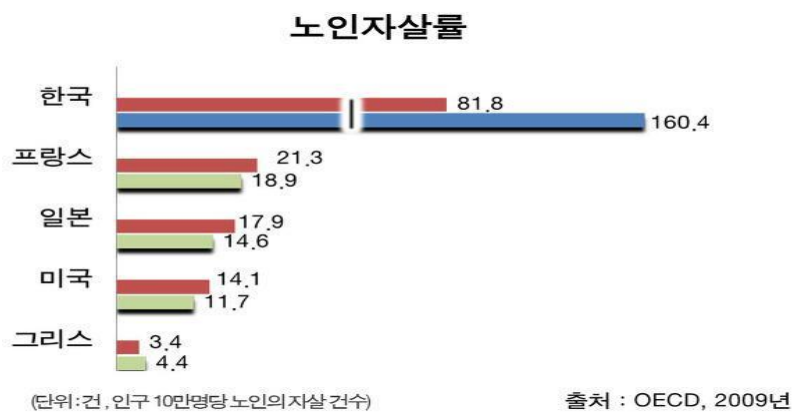
65세 이상 10만명당 자살자 통계 (2011)



10만명당 연령별 자살자수 통계 (2015)



[그림5-13] 주요국가 노인 자살률



[그림5-14]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추이



○ 충북도민의 행복지수 저조

-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말함. 충북인의 행복지수는 57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별 행복도 조사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조사에서도 경제·치안·의료시설·공원여가시설·주거 등 대다수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소득에 따른 행복지수는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 500만원 구간 내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소득과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이론) 역시 확인됨.
- 충북참여연대 조상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충북도민 행복지수는 타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행복도가 가장 낮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행복지수가 62점으로 가장 높았고, 40~50대가 54점으로 가장 낮았음. 음주와 흡연에 관한 조사에서는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의 행복지수가 흡연자, 음주자에 비해 5~10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충청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측정하여 평가

■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질환예방 강화

- 발생률이 높고 전염률이 높은 감염병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도 체계적으로 진행·관리 함.

- 감염병 중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한 병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대상이 되는 전염병이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여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충청도내 학교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결과 2.4%가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집단시설 결핵 감염은 2014년 4,158건에서 2015년에는 9,32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음. 특히, 만 15세부터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10~14세 4.2명, 15~19세 23.5명임. 우리나라는 80명으로 2위로 포르투갈의 23명보다도 월등하게 높음.
- 이에 따라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등학생의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도내 전체 84개 고교 가운데 39개 학교 4,088명을 검진했는데 2.4%인 99명이 잠복결핵감염자로 나타남.
-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충북의 어린이 천식환자 수가 전국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 5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6년간(2006~2011년) 천식 진료비 지급 자료를 보면 2011년 도내 12세 이하 천식환자는 3만5,168명에 달했음.
- 2016년 충북지역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율은 2015년보다 3.9%p 증가한 33.1%로 나타남.
- 충북지역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율은 전국 35.5%에 비해 2.4%p 낮은 수준
- 성별로 보면 남학생 32.6%, 여학생 33.7%로 나타남.
-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5년)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 추세이며, 천식은 8.8%로 나타남.
- 인구 1천명당 환자수는 경북(188명)이 가장 많았고, 충남(179명) > 충북(177명) > 대구(168만명) > 인천(167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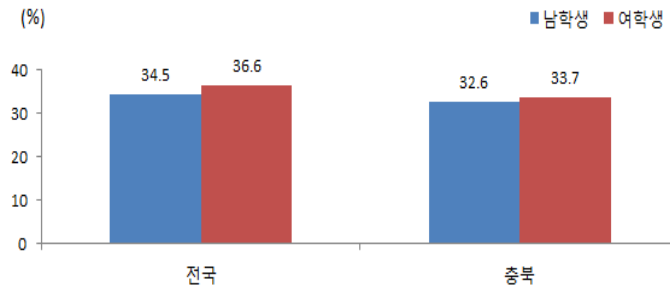
[표5-35]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율

(단위 : %)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5	33.2	33.2	33.3
	2016	35.5	34.5	36.6
충북	2015	29.2	30.4	27.8
	2016	33.1	32.6	33.7

자료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년, 2016년

주1)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율 :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공공보건 시설은 낙후지역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충북의 경우 청주에 시설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향후 공공보건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충북의 경우 청주시를 제외하면 충주시, 제천시나 그나마 시지역이라서 낙후도가 떨어지지만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은 공공보건 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이를 위해 공공보건 시설의 확대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충북지역 병원 병상 수 현황
  - 충북지역의 병원 병상 수는 19,699개이며, 이 중 청주시 8,503개, 충주시 2,227개, 제천시 2,443개, 보은군 736개, 옥천군 1,129개, 영동군 666개, 증평군 176개, 진천군 723개, 괴산군 365개, 음성군 2,520개, 단양군 211개로 나타남.

[표5-36] 시군별 병의원현황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 원	조산 소	부속 의원	보건 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 소	합계
2015	12	37	811	6	37	376	4	385	1	10	14	96	158	1,679
청주시	6	21	447	1	12	226	2	221	1	7	4	15	25	944
충주시	2	3	116	-	5	43	1	43	-	2	1	13	16	215
제천시	2	1	82	1	5	24	1	36	-	-	1	8	11	152
보은군	-	2	16	-	2	5	-	7	-	-	1	7	15	32
옥천군	1	-	27	1	3	11	-	13	-	-	1	8	16	56
영동군	-	1	23	-	3	10	-	14	-	-	1	10	17	51
증평군	-	2	17	-	-	8	-	8	-	-	1	1	1	36
진천군	1	-	25	1	2	15	-	14	-	1	1	7	7	59
괴산군	-	2	10	1	-	5	-	5	-	-	1	12	17	23
음성군	-	4	41	1	4	23	-	20	-	-	1	8	18	93
단양군	-	1	7	-	1	5	-	4	-	-	1	7	15	18

○ 충청도민 건강검진 인구 현황

- 2015년도 기준 충청북도의 전체 검진대상 인원은 1,055,607명으로 1차 검진을 831,638명이 받아 79%의 수검율을 보였고, 2차 검진 대상 인원은 85,501명으로 2차 검진을 29,361명이 받아 34%로 나타남.
- 이중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남자가 565,937명으로 1차 검진을 받은 452,690명이 받아 80%의 수검율을 보였고, 2차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남자가 57,086명으로 2차 검진을 받은 21,656명이 받아 38%의 수검율을 보임.
- 또한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여자가 489,670명으로 1차 검진을 378,948명이 받아 77%의 수검율을 보였고, 2차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여자가 28,415명으로 2차 검진을 받은 7,705명이 받아 27%의 수검율을 보임.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 명, %)

구분		2015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율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율
합계	합계	1,055,607	831,638	79	85,501	29,361	34
	남자	565,937	452,690	80	57,086	21,656	38
	여자	489,670	378,948	77	28,415	7,705	27
청주상당구	합계	569,414	449,335	79	46,005	15,747	34
	남자	305,944	245,169	80	30,741	11,638	38
	여자	263,470	204,166	77	15,264	4,109	27
청주서원구	합계	61,161	47,923	78	4,421	1,539	35
	남자	32,092	25,492	79	3,054	1,142	37
	여자	29,069	22,431	77	1,367	397	29
청주흥덕구	합계	77,013	61,757	80	5,466	1,909	35
	남자	40,315	32,829	81	3,693	1,411	38
	여자	36,698	28,928	79	1,773	498	28
청주청원구	합계	91,842	74,348	81	6,525	2,482	38
	남자	49,562	40,912	83	4,448	1,883	42
	여자	42,280	33,436	79	2,077	599	29
충주시	합계	63,817	51,959	81	4,603	1,623	35
	남자	35,992	29,898	83	3,220	1,262	39
	여자	27,825	22,061	79	1,383	361	26
제천시	합계	73,760	56,802	77	6,876	2,810	41
	남자	39,102	30,394	78	4,705	2,109	45
	여자	34,658	26,408	76	2,171	701	32
보은군	합계	47,707	38,067	80	3,818	1,588	42
	남자	25,153	20,341	81	2,436	1,085	45
	여자	22,554	17,726	79	1,382	503	36
옥천군	합계	12,794	9,514	74	1,323	222	17
	남자	6,428	4,787	74	768	141	18
	여자	6,366	4,727	74	555	81	15
영동군	합계	19,404	15,073	78	1,906	510	27
	남자	9,959	7,750	78	1,176	358	30
	여자	9,445	7,323	78	730	152	21
증평군	합계	18,093	13,541	75	2,044	358	18
	남자	9,284	7,055	76	1,290	255	20
	여자	8,809	6,486	74	754	103	14

[표 계속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 명, %)

구분		2015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율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율
합계	합계	1,055,607	831,638	79	85,501	29,361	34
	남자	565,937	452,690	80	57,086	21,656	38
	여자	489,670	378,948	77	28,415	7,705	27
진천군	합계	12,526	9,693	77	1,044	333	32
	남자	7,057	5,627	80	737	256	35
	여자	5,469	4,066	74	307	77	25
괴산군	합계	27,072	21,617	80	2,395	774	32
	남자	15,479	12,510	81	1,599	555	35
	여자	11,593	9,107	79	796	219	28
음성군	합계	13,992	9,978	71	1,115	182	16
	남자	7,234	5,203	72	683	130	19
	여자	6,758	4,775	71	432	52	12
단양군	합계	38,877	30,530	79	3,532	1,198	34
	남자	22,429	17,886	80	2,363	889	38
	여자	16,448	12,644	77	1,169	309	26

## 4. 경제영역 세부 추진계획

### 가.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이행과제 ①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하는 충북

#### ■ 상생의 지역경제 확대

- IMF의 보고서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 '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라 밝혔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
- 이 보고서는 159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힘. 또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였음.
- 이밖에 이 보고서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하였음.
- 나아가 "극심한 불평등 상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해 국제경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함.

[그림5-15] IMF의 보고서

The screenshot shows the IMF website with the report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highlighted. The report is by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and Evridiki Tsounta, published on June 15, 2015. It is available as a free full text PDF file (1,704KB). The summary states that the report analyzes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from a global perspective, its drivers, and what to do about it. It finds that increasing the income share of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actually increases growth while a rising income share of the top 20 percent results in lower growth—that is, when the rich get richer, benefits do not trickle down. This suggests that policies need to be country specific but should focus on raising the income share of the poor, and ensuring there is no hollowing out of the middle class. To tackle inequality, financial inclusion is imperative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hile in advanced economies, policies should focus on raising human capital and skills and making tax systems more progressive.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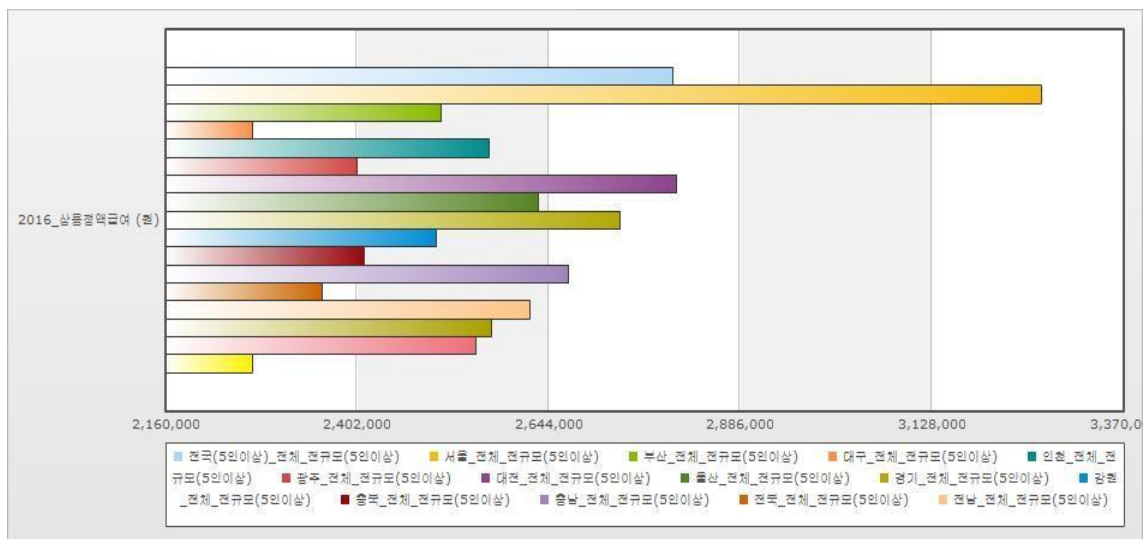
### ○ 국제노동기구(ILO)의 4가지 전략적 목표

- 일자리 확대
- 노동권 보장
- 사회적 보호
- 사회적 대화 확대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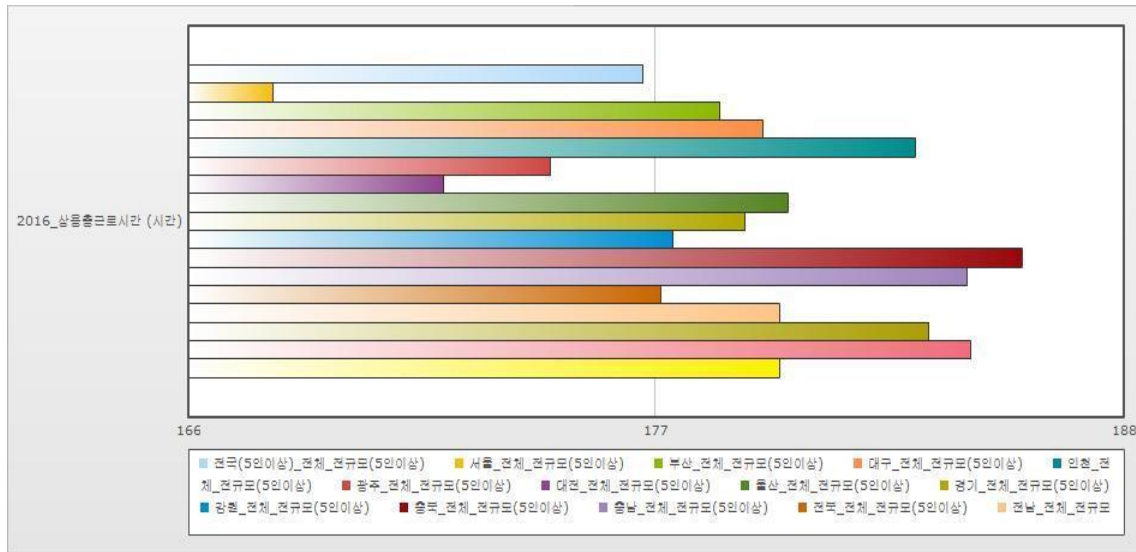
- 임금과 노동시간, 안전보건과 모성보호에 대한 규제
-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효과적 체제 구축
- 노동시간 단축, 일·가족·삶의 균형
- 중소기업에서 노동보호의 확대
- 비정규노동자 보호
- 사업장에서 심리·사회적 위험과 폭력 금지
- 스트레스와 정신보건 문제를 개선 등 실현
- 충북 내 일자리의 질을 2016년 임금수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 중에서 11위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림5-17] 상용정책급여



자료: 고용노동통계포털 2017년 08월, 지역별(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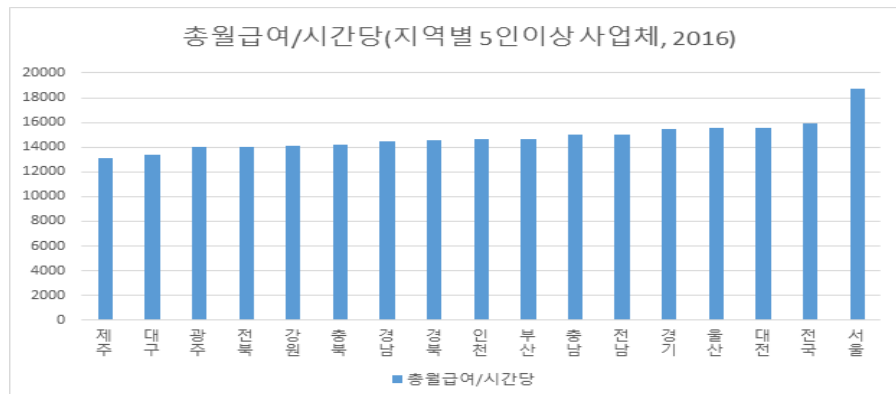
[그림5-18] 상용 총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통계포털 2017년 08월, 지역별(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반면 2016년 상용 총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의 근로자들이 최장시간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 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 충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향점 : 고용안정성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차별 방지
  - 근로시간당 임금수준 증대
  -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 활동 보호
  - 기존 통계자료의 제한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목표 설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절대적 급여수준보다는 근로시간당 급여액을 타 지역과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적절함
  - 고용부 통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아래 그림 참조)에 따르면 근로시간당 급여액이 충북은 전국 16개 지역 중에서 하위권(1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지표 관리가 요구됨

[그림5-19] 근로시간당 급여액



자료: 고용노동통계포털 2017년 08월, 지역별(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환경제공

-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률은 61.5%, 실업률은 3.5%이고 청년세대(20~29세)의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9.2%로(통계청, 2017년 7월 기준)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필요
- 충북지역 소재지 및 대학졸업자들이 충북지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어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환경조성 및 취업률 향상
- 청년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충북지역 경제성장 도모

### 나.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 이행과제 ② : 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 ■ 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외부의존적인 외생적 성장이 아닌, 자급(自給)을 위한 내생적 성장이어야 함. 이는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지역이 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함. 즉 지역순환경제여야 함.
- 지역의 필요와 문제는 도민(시민), 지역기업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즉 도민의 관점에서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란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와 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화의 효과적인 수급 그리고 지역기업의 관점에서 (혁신적인)창업 및 경영 유지를 위한 기반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구인 및 구직접근성

- 필요한 직업훈련의 편의성, 관심 직종 구직 및 직종 중심 순환 이직을 통한 전문성 유지, 전문성뿐만 아니라 성향(조직문화) 등을 고려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인력 순환시스템)

○ 정보접근성

- 도민의 필요와 욕구 트렌드에 대한 Big-Data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지역기업의 대응전략 수립 및 창업을 위한 사회·인구학적 흐름과 트렌드 Big-Data 등 시장조사 지원

○ 창업친화성

- 창업 인큐베이팅 관련 하드·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 친환경 기업 활성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소규모제조업 활성화와 창업 용의성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및 특화(핀셋) 공단 등 기반 구축
- 지역순환경제는 승수효과(乘數效果) 면에서도 우수함.

<승수효과: 투자(소비)에 의한 작·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한 개념>

-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원의 식품을 L 마트에서 소비했을 때, L 마트가 100만원을 전부 서울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지역 내 100만원 소비만 일어났으므로 승수는 1이 됨.
- 이와 달리 L 마트 주인이 50만원을 지역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레스토랑 주인은 25만원을 지역농산물 구매에 사용했을 경우 지역 내에는 최종적으로 175만원의 소비가 일어났으므로 승수는 1.75가 됨

[참조] 전라북도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2013.02.19.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 농민장터(지역유통) 사례

- 수출 중심의 대규모 지역농은 1달러의 농산물을 판매하면 지역에 최종적으로 1.7달러 총 소득 발생시킴. 이에 비해 농민장터에서 소비된 1달러는 지역에 최종적으로 2.8달러 소득발생을 가져옴
- [참조] Viki Sonntag, Why Local Linkages Matter: Findings from the Local Food Economy Study (Seattle, WA: Sustainable Seattle, April 2008)

※ 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2013.02.19.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 미국 디트로이트 로컬 푸드 사례

- 지역농식품(지역제품) 사용이 20% 증가할 경우, 지역소득이 5억 달러 증가하고 신규로 4,7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천만 달러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참조] Oran Hesterman. Buying Local Makes Economic Sense.

<http://zesterdaily.com/world/buying-local-makes-economic-sense>(Accessed 2013.1.30)

※ 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2013.02.19.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 □ 이행과제 ③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외부 의존성을 낮추면서 지역의 자급률을 높여야 함
-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역외 대기업 자본에 의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입점 제한 및 영업 규제를 확대해 나아가할 근거 마련을 위한 이들 업체의 영업활동 및 지역경제기여도를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그림5-20] 주요 도시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도표 19 지역별 대형마트당 인구수(주요 도시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빅3합계	416	61	29	28	18	14	14	8	3
이마트	158	30	7	8	8	3	5	2	1
롯데마트	117	12	9	9	1	4	6	2	0
홈플러스	141	19	13	11	9	7	3	4	2
인구수(만명)	5,172	995	350	294	249	152	147	117	28
가구수(만호)	2,124	419	145	117	99	60	59	45	9
대형마트당 인구수(만명)	12.4	16.3	12.1	10.5	13.8	10.8	10.5	14.7	9.5
대형마트당 가구수(만호)	5.1	6.9	5.0	4.2	5.5	4.3	4.2	5.7	3.1

자료: 각 사,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주: 세종시는 조치원을 포함한 수치

[그림5-21] 도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도표 20 지역별 대형마트당 인구수(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빅3합계	115	13	12	20	20	29	16	11	5
이마트	50	6	3	8	9	8	4	3	3
롯데마트	32	3	5	7	3	12	7	4	1
홈플러스	33	4	4	5	8	9	5	4	1
인구수(만명)	1,268	155	159	209	270	337	186	190	64
가구수(만호)	498	69	68	90	118	138	79	84	27
대형마트당 인구수(만명)	11.0	11.9	13.2	10.5	13.5	11.6	11.7	17.3	12.8
대형마트당 가구수(만호)	4.3	5.3	5.7	4.5	5.9	4.8	4.9	7.6	5.3

자료: 각 사,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자료 : 한국경제, 2017 유통백서

## 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촌사회 조성

### □ 이행과제 ④ :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유지

- 충청북도는 농업정책의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친화도 충북건설'로 삼고 있음. 여기에 5대 전략목표, 20개의 과제를 선정해 정책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인구의 축소는 심각한 수준임.
- 더욱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급속한 축소가 예상되어짐. 또한 이와 연관되어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인 유기농생산면적도 축소되고 있어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구는 2000년 92,132가구에서 2011년을 증가이후 귀농귀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농촌의 고령화를 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지표로 농업 및 농촌인구의 적절한 유지는 기본이 될 것임.
- 농가당 인구도 2014년 2.5명으로 축소는 보이는 경향을 보이며, 경지면적의 경우 2000년 134,587ha로 점적으로 축소는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업 생산기반의 경지면적 변동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지표로 필요함.

[표5-40]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농업 가구 수	농가인구				농가당인구
		계	남	여	인구대비(%)	
'00	92,132	277,534	137,815	139,719	18.5	3.0
'10	79,963	211,522	105,235	106,287	13.4	2.6
'11	80,185	207,174	102,838	104,337	13.3	2.6
'12	79,024	202,735	99,667	103,068	12.9	2.6
'13	78,717	197,410	97,460	99,950	12.6	2.5
'14	76,436	187,752	92,687	95,065	11.9	2.5
전국('14)	1,120,776	2,751,792	1,339,783	1,412,009	5.4	2.5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보고서'

[표5-41] 경지면적

(단위:ha)

구분	경지면적	논	구성비 (%)	밭	구성비 (%)	가구당 경지면적	논	밭
'00	134,587	64,905	48.2	69,682	51.8	1.45	0.70	0.75
'10	116,973	50,999	43.6	65,974	56.4	1.46	0.64	0.83
'11	115,821	49,222	42.5	66,599	57.5	1.44	0.61	0.83
'12	117,718	49,443	42.0	68,275	58.0	1.49	0.63	0.86
'13	114,530	48,062	42.0	66,468	58.0	1.45	0.61	0.84
'14	112,097	45,164	40.3	66,933	59.7	1.47	0.59	0.88
전국('14)	1,691,113	933,615	55.2	757,498	44.8	1.51	0.83	0.68

[그림5-22] 경지면적



자료 : 통계청'농업조사보고서

## ■ 로컬푸드 이용 증대

- 지역의 농산물의 이용은 생산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농업, 농촌의 기반을 유지함은 물론,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다.
- 충청북도의 로컬푸드 매장 및 로컬푸드 장터가 24곳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 및 매출, 참여농민의 변동은 로컬푸드 사업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비율은 이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각 시군별로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

**[표5-42] 로컬푸드 매장 설치 현황**

충청북도 로컬푸드 매장명		
음성농협로컬푸드매장	진천농협로컬푸드매장	충주농협로컬푸드매장
낭성로컬푸드매장	상당용암직거래장터1	상당용암직거래장터2
한우리직거래장터	흥덕구청광장장터	모아모아직거래장터1
모아모아직거래장터2	두레장터	충북농협금요장터
청주MBC로컬푸드직거래장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흙살림
청원생명블루베리농민장터	지구농부협동조합	하늘농부유기영농조합
문의공동체협동조합	가톨릭농민회 우리농	두꺼비살림
옥천푸드직매장	해인(도담)	

자료: 충청북도 청풍명월 21실천협의회 (로컬푸드실태조사)2016년

**[표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매장명	위치	개장년도	매장규모	입지한곳	연매출액	일방문객 평균	참여 농가수	연간영업 일수	납품회원
음성 농협	음성	2015	120	농촌지역	-	1700	175	365	175
진천 농협	진천	2014	227	농촌지역	10억	1300	175	362	100
충주	충주	2015	198	도시내 매장없음	800억	100	150	360	50명
낭성	청주	2015	60	농촌지역	11억	80	50	365	50
상당용암 직거래장 터	청주 용암	2015	550	도시내 매장없음	1억1천	200	35	35회	35
한우리직 거래장터	성화 장전	2015	950	도시내 매장없음	7천8백	300	34	30회	34
흥덕구청 광장장터	흥덕 구청 광장	2015	1000	도시내 매장없음	1억6천	300	21	30회	21
모아모아 직거래장 터	주중동 마로니에 공원	2015	1500	도시내 매장없음	1억7천	800	44	40회	44
모아모아 직거래장 터	내수 초정문화 공원	2015	700	도시내 매장없음	2억7천	800	44	40회	44
청주MB C로컬푸 드직거래 장터	청주MB C 앞	2015	560	도시내 매장없음	3억5천	1000	70	40회	30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 계속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매장명	위치	개장년도	매장 규모	입지한곳	연매출액	일방문객 평균	참여 농가수	연간영업 일수	납품회원
두레장터	청주에버 세이브	2015	298	도시내 매장없음	1억8천	5000명	33	19회	33
충북농협 금요장터	충북농협 광장	2015	500	도시내 매장없음	3억3천	1000	26	35회	26
청원생명 블루베리 농민장터	문의 남계리	2015	1500	도시내 매장없음	2억9천	500	20	30회	20
청원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청주 오창	2009	4082	농촌 지역	67억	-	500	200	500
흙살림	청주 복이	2009	2000	농촌 지역	12억	-	120	200	5120
문의공동체 협동조합	청주 남일 화당	2014	500	농촌 지역	7천	-	50	200	50
해인 (도담)	홍덕구 신촌	2010	2188	농촌 지역	28백만	-	300	200	300
지구농부 협동조합	청주 문의 도원	2010	300	농촌 지역	68백만	-	100	200	100
하늘농부 유기영농 조합법인	청주 오창 가곡	2010	300	농촌 지역	58백만	-	100	200	100

자료: 충청북도 청풍명월 21실천협의회 (로컬푸드실태조사)2016년

### 라. 공동체 중심의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 □ 이행과제 ⑤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 좋은 충청북도 조성

##### ■ 마을주민 주도 경제공동체 활성화

- Richard Heinberg(리차드 하인버그)는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란 책을 통해
-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징표로 다시 경제성장을 예전으로 돌리려는 모든 근시안적이고 무익한 시도는 실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근거한 것이라 함.
- 핵심 이유는 자원위기(고갈), 환경위기(기후변화), 금융위기(경제위기)의 복합성
- 새로운 시대의 생존가능성은 과거 선조들처럼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운동과 지역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음.

## 5. 기타영역

### □ 이행과제 ① :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폭력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이며 이를 위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을 목표로 하는 4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
-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범죄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평화' 의제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아동 학대 방지, 불법적자금 및 무기유입·조직적 범죄의 근절, 테러 및 범죄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범죄 발생률'을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포함·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범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은 2010년 3,836.5→3,679.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형법범죄의 발생률은 같은 기간 1,627.6건→1,852.5건으로 증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 전체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을 포함한 5대 중대 범죄의 발생건수는 2011년 19,732건→2015년 17,17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나 폭력 및 강간·추행과 같은 신체적 및 성적 폭력에 대한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충북지방경찰청 경찰통계).

[표5-44] 충북지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1	19,732	11,014	46	45	108	92	507	412	10,365	3,880	8,706	6,585
2012	18,239	10,755	39	39	83	71	501	433	9,158	3,559	8,458	6,653
2013	18,124	11,908	34	36	54	51	584	520	9,086	4,684	8,366	6,617
2014	17,269	12,057	33	34	55	57	526	504	8,230	4,503	8,425	6,959
2015	17,173	12,687	34	34	43	40	572	559	7,562	4,385	8,962	7,669
2016	16,134	12,628	32	33	26	25	626	621	6,134	3,800	9,316	8,149

자료 : 충북지방경찰청, 충북 경찰통계

- 전체 강력 범죄 발생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0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의 피해자 수는 724명→2015년 8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 피해자 비율이 84.4%에 달할 정도로 높음(2016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보고서)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같은 기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건수는 2010년 20,102건→ 2015년 26,492건으로 증가하였으며(2015 충북 통계연보),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 발생 및 의심사례는 644건→945건으로 증가(각 연도별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 범죄 발생 및 폭력피해자의 증가는 안전사회를 위협하는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2016년 현재 충청도민은 '범죄의 발생'을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표5-45] 충청도민의 가장 주된 사회 불안요인

(단위 : %)

연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 적 위험	자원 고갈	도덕 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격차 로 인한 계층갈등	기타
2010	44.4	17.8	24.6	20.1	31.6	3.4	22.1	18.9	45.4	16.2	0.3
2012	34.1	16.7	18.4	24.3	28.3	5.4	28.3	15.4	55.5	17.6	0.1
2014	39.2	18.6	18.9	45.2	21.2	3.9	34.6	14.4	48.1	19.2	0.4
2016	36.8	12.9	22.1	23.1	31.5	3.1	30.1	26.3	58.8	20.2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복수응답)

- 이에 따라 폭력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소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작동기제 마련이 요구됨.
- 강력 범죄 피해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5-46]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지역	범죄구분	2014	2015
충청북도	강력범죄발생건 수	7,300	7,898
	강력범죄(흉악)	839	858
	강도	55	45
		97	37
		652	741
	강력범죄(폭력)	6,496	7,075
	강력범죄피해자 수*	698	807

\*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2016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보고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내부자료 분석결과를 참조'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청주지방검찰청 통계자료)

- 범죄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두려움 저하

[표5-47] 시군별, 성별, 연령별 안전 인식도 측정

지역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2016
충청북도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46%
	구분	별로 두렵지 않다	28.1%
		전혀 두렵지 않다	17.9%

자료 : 충청북도, 2016 사회조사

- ‘평화 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폭력 범죄의 발생은 지역별 발생건수 및 피해자의 성, 연령별 차이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지역차원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충북지방경찰청을 포함한 경찰 및 검찰 통계는 지역별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 공포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범죄 피해 유형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못함.
    - 아울러 폭력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폭력방지 및 인권교육의 실시율 또한 시군별, 교육기관별, 교육대상별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평화의제의 발굴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불식하기 위한 지역 의제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군별 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폭력방지교육의 실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충청북도 만들기

-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치 질서의 확립, 평등한 사법 권리의 보장, 비차별적 법 집행 등 실질적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 규모는 1,648,171건으로 추정되며 발생 건수 대비 신고율은 신체적, 성적 폭력 및 협박 등이 포함되는 강력범죄의 경우 25.9%의 수준에 불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충북의 경우 범죄 피해 추정율은 14세 이상 인구의 3.11%, 피해규모는 42,148건으로 추정되고 있음.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5-48] 지역별 범죄피해건수, 추정피해건수, 추정피해율

지역별	2014년 기준				
	피해건수 (건)	표본 (명)	추정피해건 수 (건)	14세이상 인구추정 (명)	추정피해율_가구원 가중치 (%)
합계	566	14,976	1,648,171	44,039,788	3.74
서울특별시	82	2,058	354,733	8,747,300	4.06
부산광역시	37	910	116,887	3,009,838	3.88
대구광역시	18	773	51,901	2,149,175	2.41
인천광역시	43	895	124,965	2,496,863	5.00
광주광역시	21	611	45,290	1,296,611	3.49
대전광역시	31	533	70,096	1,318,079	5.32
울산광역시	25	534	52,805	976,217	5.41
경기도	75	2,250	334,981	10,630,380	3.15
강원도	30	707	57,419	1,313,141	4.37
충청북도	24	749	42,148	1,357,202	3.11
충청남도	36	829	84,058	1,973,632	4.26
전라북도	25	798	51,384	1,570,502	3.27
전라남도	30	771	63,228	1,534,566	4.12
경상북도	30	994	74,351	2,322,738	3.20
경상남도	39	1,153	100,152	2,844,448	3.52
제주특별자치도	20	411	23,773	499,096	4.76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범죄 발생 건 수 대비 피해 건 수의 차이는 낮은 신고율에서 비롯되며 이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 폭력 및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신고·접수된 폭력 피해자의 수를 통해 사법 정의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법률구조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표5-49] 국선 법률구조 현황(지역별)

지역별	2016 1/2		2016 2/2	
	인원수 (명)	건수 (건)	인원수 (명)	건수 (건)
합계	8,522	8,522	8,772	8,772
서울특별시	1,028	1,028	869	869
경기도	1,465	1,465	1,851	1,851
강원도	393	393	471	471
충청북도	764	764	896	896
충청남도	656	656	425	425
경상북도	1,265	1,265	1,403	1,403
경상남도	1,804	1,804	1,677	1,677
전라북도	698	698	637	637
전라남도	239	239	327	327
제주특별자치도	210	210	216	216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

#### ■ 신뢰할 수 있는 지방 행정문화를 구축

- SDGs에서 거버넌스는 다른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써 개발목표가 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최종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포괄적이고 참여 지향적이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요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SDGs는 건전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투명한 제도 구축,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의적인 의사결정권 보장,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 보호, 테러 및 범죄·폭력예방을 위한 국내제도 강화, 비차별적 법률 및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SDGs를 반영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을 거버넌스 관련 이행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 수준의 참여적, 공개적 행정 문화가 견인되고 있음.

- 청렴에 대한 정부정책의 강화로 부패에 대한 인식은 최근 10년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부패인식 차이는 33.8% 차이가 발생

[그림5-23]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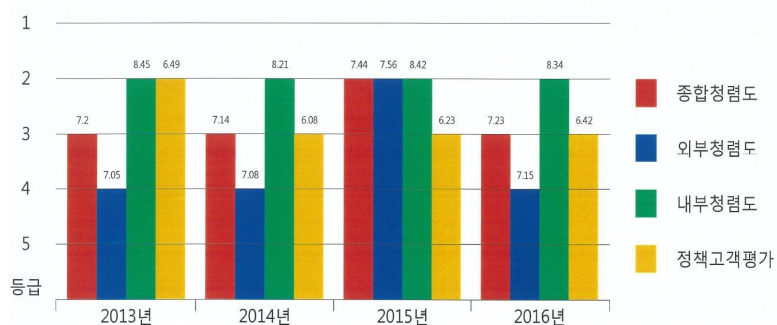
'부패하다' 응답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44.3	53.7	62.8	59.2	51.9	△7.3%p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38.1	37.7	43.7	49.4	5.7%p
전문가	-	-	-	40.6	51.7	48.9	37.0	-	64.3	55.2	55.4	0.2%p
외국인	-	-	-	40.5	37.0	21.3	15.3	27.1	42.8	26.2	17.8	△8.4%p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12.9	13.5	21.2	14.0	18.1	4.1%p

※ 2016년 유형별 조사 시점 : 일반국민(9~10월), 기업인(10월), 전문가(10월), 외국인(10월), 공무원(10~11월)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 충북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범죄 발생은 2010년 100건→2015년 84건으로 감소하였으나(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평가 및 정책고객평가의 청렴도 인식 수준은 소속 공무원의 평가에 비해 부정적임.
- 2016년도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청렴수준은 외부청렴도 7.4점, 내부 청렴도 7.82점, 정책고객평가 6.43점이며 충청북도는 외부청렴도 7.15점, 내부 청렴도 8.34점, 정책고객평가 6.42점으로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수준이 낮음.

[그림5-24] 충청북도 청렴도 측정결과



주) 내부 청렴도 :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최근 일 년 간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하여 내부평가(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대상), 외부평가(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 정책고객평가(해당기관 관련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시민단체 등 대상)로 부패 정도를 평가·공표(단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 제외)
-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충청북도 의회의 경우 직무관계자 평가 6.9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6.04점, 지역주민 평가 5.48점으로 광역의회 직무관계자의 평균 청렴도 평가 6.4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6.20점, 지역주민 평가 5.29점에 비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행정 및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의 외부평가가 내부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은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의 저해요인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 지방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요청됨.

[표5-50] 연도별 충청북도 투표율

연도별	선거명별	투표율
2010	지방선거	58.8
2012	대통령선거	75
2014	지방선거	58.8
2016	국회의원선거	57.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표5-51]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 현황

구분			충북	시군	전국
위원회	전체 위원회 수		96	817	1,814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명)		74	325	1,068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비율(%)		77.1	43.1	58.9
위촉 직 위원	전체 위촉직 위원 수		1,299	7516	28,912
	여성 위원	수	551	2426	9,825
		비율(%)	42.4	32.3	34
	연령별 분포*		자료없음		
	지역별 분포*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충청북도 정보공개청구결과 수립자료)

□ 이행과제 ②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각 주체별 역할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각 주체별 역할 강화 및 파트너십을 요구하였으며 MDG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제 개발 목표의 단독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SDGs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여국 중심의 이행 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주체들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각 개발 주체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는 KOICA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플랫폼 구축 및 ODA(공적 대외원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SDGs반영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개도국의 지원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동북아 환경공조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
- 그러나 국고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제적 개발 목표의 달성을 이루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충북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가 31.8%에 불과하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소비 심리의 반등 등 경제 전망이 호조세로 전화될 가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세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 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전체 1인당 지역 총 생산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분배 구조가 악화되어 지방 정부의 세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

[표5-52] 충청북도 연도별 재정 전망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11,589	4,959,052	5,058,371	5,211,128	5,315,756	25,255,896	3.10
자체수입	1,057,346	1,082,368	1,108,651	1,136,595	1,165,137	5,550,097	2.50
의존수입	2,585,895	2,822,533	2,893,815	3,008,943	3,082,899	14,394,085	4.50
지방채	60,000	63,000	70,000	75,000	80,000	348,000	7.5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8,348	991,152	985,905	990,590	987,721	4,963,716	△0.50
세 출	4,711,589	4,959,052	5,058,371	5,211,128	5,315,756	25,255,896	3.10
경 상 지 출	1,008,968	1,016,154	1,021,491	1,042,177	1,035,332	5,124,122	0.60
사 업 수 요	3,702,621	3,942,898	4,036,880	4,168,952	4,280,424	20,131,775	3.70

주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주2.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 - 1] × 100

자료 :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5-53] 충청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현황

(단위 : 천원)

시점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
2010	25,894	22,247	13,122	11,164
2011	27,497	23,268	13,341	11,748
2012	27,971	24,023	14,061	12,281
2013	30,162	26,027	14,456	12,673
2014	31,417	26,381	14,761	13,014
2015	32,990	27,878	15,658	13,376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충청북도가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우선 지역의 소득 창출 및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이 요구됨.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림5-25]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728,437	696,183	854,664	967,948	100	9.94
취득세	400,317	365,037	424,901	516,621	53.37	8.87
등록면허세	33,737	33,924	39,179	46,848	4.84	11.57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레저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131,557	136,782	216,836	227,397	23.49	20.01
지방소득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25,644	26,908	30,721	32,314	3.34	8.01
지방교육세	132,099	129,463	139,042	145,556	15.04	3.29
지난년도수입	5,083	4,069	3,985	-787	-0.08	-11.46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2015) 금액 / 최초연도(ex: 2012) 금액) ^ (1/3) - 1

자료 : 충청북도 재정성과 평가

[그림5-26] 충청북도 지역소득 주요지표

(단위: 조원, %, %p)

주요지표		2013	2014	2015	증감
<b>지역내총생산및지출(명목)</b>		47.4	49.8	52.7	2.9
(전국대비 비중)		(3.3)	(3.4)	(3.4)	(0.0)
• 경제성장률(실질)	총생산	7.4	4.8	4.5	-0.2
	제조업	-0.3	-4.4	5.7	10.1
	건설업	13.3	4.8	4.9	0.1
	서비스업 <sup>1)</sup>	0.1	-2.2	6.5	8.6
지출	민간소비	4.9	4.2	3.1	-1.1
	정부소비	3.2	2.6	3.3	0.8
	건설투자	-4.9	3.1	3.0	0.0
	설비투자	0.9	-0.5	7.2	7.6
생산구조 <sup>2)</sup>	설비투자	-8.7	-8.4	2.4	1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6	3.0	4.2	1.2
	농림어업	4.2	3.9	4.1	0.2
	제조업	44.5	44.0	43.5	-0.5
지출구조 <sup>3)</sup>	건설업	5.4	5.2	5.6	0.4
	서비스업 <sup>1)</sup>	44.7	45.4	45.2	-0.2
	민간소비	42.0	41.4	40.5	-0.9
	정부소비	19.3	19.3	19.1	-0.2
지역총소득(명목)	건설투자	15.9	15.3	15.7	0.4
	설비투자	13.1	11.1	10.9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2	6.1	6.1	0.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2	6.1	6.1	0.0
<b>지역총소득(명목)</b>		40.9	41.8	44.5	2.7
(전국대비 비중)		2.8	2.8	2.8	0.0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율)		86.3	84.0	84.5	0.5
소득구조 <sup>4)</sup>	피용자보수	41.0	42.9	43.2	0.3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	23.6	20.1	20.2	0.1
	순생산 및 수입세	9.4	10.5	10.6	0.1
	순생산 및 수입세	9.4	10.5	10.6	0.1
<b>개인소득<sup>5)</sup>(명목)</b>		22.7	23.4	25.0	1.6
(명목증감률)		3.6	3.0	6.8	3.9

1) G, 도매 및 소매업 + ... + S, 기타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포함)

2) 총부가가치(기초가격, 명목)=100

3)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100

4) 지역총소득(명목)=100

5)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자료 : 통계청, 2015년 지역소득통계

[그림5-27] 충청북도 지방세 지출현황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197,911	100.00%	159,567	100.00%	△38,344	△19.37%
일반공공행정	11,538	5.83%	12,673	7.94%	1,135	9.84%
공공질서 및 안전	81	0.04%	58	0.04%	△22	△27.75%
교육	6,986	3.53%	3,045	1.91%	△3,941	△56.41%
문화 및 관광	5,722	2.89%	2,262	1.42%	△3,460	△60.47%
환경보호	223	0.11%	1,485	0.93%	1,262	564.90%
사회복지	19,342	9.77%	15,224	9.54%	△4,118	△21.29%
보건	734	0.37%	3,475	2.18%	2,741	373.14%
농림해양수산	14,330	7.24%	12,711	7.97%	△1,619	△11.30%
산업·중소기업	30,679	15.50%	31,246	19.58%	567	1.85%
수송 및 교통	8,466	4.28%	7,641	4.79%	△825	△9.74%
국토 및 지역개발	66,099	33.40%	38,917	24.39%	△27,182	△41.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9,371	9.79%	9,725	6.09%	△9,646	△49.8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4,340	7.25%	21,104	13.23%	6,764	47.17%

자료 : 충청북도, 재정성과 평가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 이념이 선언된 이후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행동계획에 따라 지역 수준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전개.
- Rio 지구환경 정상회의는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에 대한 행동강령을 통해 '의제21의 목표, 정책, 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결요건은 의사결정예의 공동참여'임을 선언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녹색도시 부산21」을 시작으로 총 220개에 달하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채택하고 지역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치·2016. 2. 현재 103개 민관협력체계가 상설 운영 중에 있음.
- '사람중심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원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반영되어 SDG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주요 이행과제로 제시.
- 충청북도는 1997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 행동계획 '청풍명월21'을 채택하고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3개 시에서 민관협력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음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충청북도의 글로벌 이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 있음.

[표5-5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충북지역 민관협력기구 설치현황

지역		추진기구		기구창립	지원조례	의제수립	지속가능발전계획
		상설	행정				
충청북도		○		1999.07.09	○	1999.04.15	수립 중
기초자치단체	청주시	○		2011.12.06	○	2011.09.	
	충주시	○		2000.11.29	○	2000.11.29	
	제천시	○		2000.05.25		2000.05.20	
	괴산군			2000.07.15	○	2000.07.15	
	단양군			2000.04.25		1999.11.08	
	보은군			2000.11.07		2000.10.12	
	영동군			2000.12.02	○	2000.12.02	
	옥천군			2000.11.15		2000.08.27	
	음성군			2000.09.06		2000.12.01	
	증평군		○		○		
	진천군			2001.04.25	○	2001.05.12	

자료 :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평가·환류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는 2015년 이후 개발의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스템이슈를 부각시켰으며 그 결과 지속적이고 세분화된 통계의 구축과 모니터링 실시가 이행수단의 강화 목표로 제시.
- 우리나라는 '의제21' 이행 계획을 통해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라 매 2년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단위에서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채택, 지역별 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 충청북도는 1997년 작성한 '청풍명월21'을 중심으로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환경목표를 채택,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을 추진·점검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2008년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글로벌 이슈에 대응.
- 현재 시행중인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는 2016년도에 개정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동 조례는 지방의제 21의 역할을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발전으로 재규정하고 추진기구의 역할을 의제발굴 및 전략 수립, 평가, 조정, 협력 등으로 확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지표 평가 결과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 수준의 통계자료 생산 및 평가 결과의 환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한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2013~2014), SDGs의 도내 반영을 위한 사전 지표점검 결과(2017)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측정가능한 지표의 양과 성별·연령별·지역별 세분화된 통계자료 부족,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지역 수준의 통계 자료 확보 및 다양한 주체들의 모니터링 참여 기회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통로 확대 등을 최우선 지역과제로 제안.

## 6. SDGs와의 연계성 검토

### 가. SDGs 목표의 기본구성

- SDGs의 목표는 크게 3개의 영역과 1개의 공통과제, 8개의 분야로 구분됨.
- 사회영역의 경우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빈곤퇴치, 건강 등의 분야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은 환경관리, 생태보전, 도시안전 등의 분야와 목표로 구성, 경제는 식량, 농업, 산업, 순환경제 등의 분야와 목표로 구성됨.
- 기타영역의 공통과제는 교육, 이행기제 등의 분야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5-55] SDGs 목표의 기본구성

영역	분야	SDG's 17개 목표	비 고
사회	보건/복지	1. 빈곤퇴치	
		3. 건강과 웰빙	
	여성/불평등	5. 성평등	
		10. 불평등감소	
환경	환경/생태	6. 깨끗한 물과 위생	
		7. 깨끗한 에너지	
		15. 육상생태계 보호	
	도시/안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공동체	
		13. 기후변화와 대응	
경제	식량/농업	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산업/경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공통과제	활성화전략	목표4. 양질의 교육	
	이행기제	목표16.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목표17. 지구촌 협력	

## 나. SDGs 목표와의 연계성

### □ SDGs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 앞서 계획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기준으로 SDGs의 목표와 연계를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3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됨.

[표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SDGs		충북 목표	분야
목표1	빈곤퇴치	1.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구나 살고 싶은 충청북도	보건/복지
목표2	기아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2.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식량/농업
목표3	건강과 웰빙	3.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서비스제공	보건/복지
목표4	양질의 교육	4. 가치의 공유 -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목표5	성평등	5. 여성의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및 모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	여성/불평등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6.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자원관리	환경/생태
목표7	깨끗한 에너지	7. 순환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시대로 진입	환경/생태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충청북도를 조성	산업/경제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9. 지역친화경제 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산업/경제
목표10	불평등감소	10.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북 만들기	여성/불평등
		11. 지역 간 격차 해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포용적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하며 보편적인 사회기반시설 조성	도시안전
		13.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기반마련	
		14. 교통시설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를 제공	
		15. 도시 재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16. 주민안전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 안전마을 조성	
		17.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 좋은 충청북도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 계속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SDGs		충북 목표	분야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확립	18.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산업/경제
		19. 생활양식의 변화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20.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조성	도시/안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21. 생물지표종을 선정하고 보전	환경/생태
목표16	정의/평화/효과 적인 제도	22. 지속적발전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공통과제
목표17	지구촌 협력	23.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추진 활성화	

□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를 영역별로 검토한 결과 사회영역의 이행과제는 5개, 환경영역의 이행과제는 10개, 경제영역 5개, 공통영역 3개로 총 23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됨.

[표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영역	충북 이행과제	내용
사회	<b>보건/복지</b>	
	1.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구나 살고 싶은 충청북도	① 11개 시·군 간 빈곤격차 해소
		②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3.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보장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질환 예방강화
		③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구축
	<b>여성/불평등</b>	
	5.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및 모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①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통해 인권을 보장
		②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③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④ 일·생활균형을 위한 성평등 정책 적극지원
	10-1.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북 만들기	①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②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③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보장
	10-2. 지역 간 격차 해소	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보장
환경	<b>환경/생태</b>	
	6.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자원 관리	① 안전한 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② 깨끗한 물 - 안심하고 물장구 칠 수 있는 하천관리
		③ 풍부한 물 - 갈수기에도 농촌 마을에 물이 흐르도록 관리
	7. 순환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 진입	① 순환 에너지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률 증대
	15. 생물지표종 선정 및 보전	① 하늘 지표 - 황새와 제비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
		② 육상지표 - 반디와 가재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
	12-2. 생활양식의 변화	① 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V.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영역	충북 이행과제	내용
환경	도시/안전	
	11-1. 포용적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하며 보편적인 사회기반시설 조성	① CPTED를 활용해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
		②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환경설계 적용
		③ 환경 친화적 교통기반 조성하여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
	11-2. 혁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기반마련	① 새로운 재난유형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마련
		② AR/VR기술 활용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인프라 확대
	11-3. 교통시설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를 제공	① 보행약자의 사고특성을 반영한 안전도로 조성
		② 생활밀착형 교통안전문화 조성
	11-4. 도시재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①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화
		② 소규모 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개방형 지역공동체 조성
		③ 사회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
	11-5. 주민안전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안전 마을조성	①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② 마을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응능력 향상
	11-6.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 좋은 충청북도	① 마을주민주도 경제공동체 활성화
	1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 조성	① 도시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② 극한폭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③ 대기환경 통합관리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영역	충청 이행과제	내용
산업 · 경제	식량/농업	
	2. 지역순환 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을 유지
		② 로컬푸드 이용 증대
	산업/경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충청북도 조성	① 상생의 지역경제 확대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
		③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제공
	9.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① 지역친화경제기반 및 창업기반강화
	12-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①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공통 과제	교육	
	4. 가치의 공유	①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제도	
	16.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 환경조성	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②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충청북도 만들기
		③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문화 구축
	지구촌 협력	
	17.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활성화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확대
		③ 평가·환류활성화



## 0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0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 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념정립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주는 통계적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을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 경제, 사회 각 표간의 상호연계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임.

#### 나.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정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들기 한 작업에 착수함.
- 그 결과 1996년과 2001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로 적용됨.
- 이후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지표 한 개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 표를 발표하게 됨.

#### 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필요성

- 지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환경과 관련된 발전 정도, 자연자원·생태학적 기능·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영향 및 결과, 서로 다른 발전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데 필수적임.

- 지표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 과제의 이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음.

### 라. 지표의 목적과 기능

#### □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와 화과정을 모니터링함.

#### □ 정책수요 파악

- 지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 목표 공유와 통합적 접근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충북도민, 기업, 행정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 소통수단

- 필요시 지표의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 충청북도의 관련 정책과 도정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여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기본방향

### 가. 지표설정 원칙

- 충청북도의 지표는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연관성을 기준으로 설정함.
- 구체성
  - 지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지표는 현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와 도민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측정가능성
  - 지표는 평가를 위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사용에 제약이 크지 않아야 함.
  - 제3자가 검토하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달성가능성
  -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표에 반영되어야 함.
  - 지표의 목표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상황의 개선과 발전을 가져와야 함.
- 연관성
  -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지표가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연관성을 높여 계획과 지표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나. 지표설정 방법

- 본 연구진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자문위원단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자문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해 지표를 설정함.
- 위에서 제시한 원칙인 구체성과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량화 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전략과 이행과제를 감안한 지표를 설정함.
- 기존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고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향후 통계자료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앞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전략별 이행과제와 추진계획을 기본틀로 하여 이행과제별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함.

###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 가. 환경영역 지표설정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수자원 관리	1. 1인당물소비량	LPCD, L/인·일	■ 충청북도 총 물사용량 대비 충청북도 총 인구수
	2. 상수도보급률	%	■ 광역, 지방, 간이 상수도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상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
	3. I~II등급 하천의 비율	%	■ 충북 소재의 지방하천의 하천수질을 환경부 수질등급 I, II 등급으로 유지·개선 ■ 수질항목 기준 : BOD, 대장균군수(물놀이 및 수질의 안전성을 위해)
	4. 갈수기 유량이 있는 소하천 비율	%	■ 주요 갈수기(3 ~ 6월) 시기에 지방하천의 제1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 중 물이 흐르는 하천의 비율 ■ 소하천협의회 또는 소유역협의회 등 지역주민 조직을 통해 조사 가능
	5. 빗물 재활용율	%	■ 충북도내 빗물을 활용한 재활용 비율
에너지	6.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충북의 사용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비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가능에너지 :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의 보급률</li> <li>✓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영업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지표평가에 어려움이 있음</li> </ul> </li> <li>■ <b>에너지 관련 기존 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성(OECD),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 농도(미국),</li> <li>✓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국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경기), 온실가스 배출량, 총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비율(서울)</li> </ul> </li> </ul>
기후 변화	7. 홍수발생 재해건수	건	■ 충북도내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건수
	8. 홍수재해로 인한 이재민 인구수	명	■ 충북도내 집중호우, 장마 등의 재해로 인한 이재민 인구수
	9. 폭염일수	일	■ 30°C 이상 기온발생 일수
	10. 온열질환자 수	명	■ 더위,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자 수
대기 오염	11. 대기오염 배출량	톤/ μg/m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초미세먼지</li> <li>- 오존, 황사, 1인당 온실가스 등</li> </ul> </li> </ul>

## V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생태계	12. 생태지표종 서식지 비율	%	• 충북 전체 면적 중 육상생태 지표종(반디, 가재)이 서식(또는 발견되는)하는 지역의 면적비율
	13. 멸종위기종수	종	• 충북도내 멸종위기 야생종 수
	14. 야생동물 보호구역 비율	%	• 충북 전체 면적 중 야생동물 보호구역 비율
도시환경 / 안전	15. 지역 내 인구대비 공원, 녹지 등 사회 기반시설 비율	%	• 지역 내 인구대비 사회기반시설(공원, 녹지, 보행자 도로 등)의 비율
	16. 시군별/유형별 친화도시 인증건수	%	• 시군별 여성, 아동, 노인 친화도시 인증 건수
	17. CPTED 인증건수	%	• 충북도내 CPTED설계 인증 건수
	18. 무장애도시 설계 적용 건수	건	• 무장애도시 설계 적용 건수 :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 무장애도시 설계가 적용된 건수 측정
	19. AR/VR기술 적용 체험 시설 수 및 이용자수	개소/명	• 충북도내 AR/VR기술 적용 체험 시설 수 및 이용자수
	20. AR/VR기술 적용 교육시설수 및 이용자수	개소/명	• 충북도내 AR/VR기술 적용 교육시설수 및 이용자수
	21. 네트워크 장애 건수	건	• 충북도내 공공기관, 기업 등 네트워크 장애 건수
	22. 도시계획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주민교육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함.</li> <li>• 주민참여율은 지역 문제 및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 비중으로 산출</li> <li>• 주민참여율은 현안별, 사업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산출</li> </ul>
	23. 거버넌스 구축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의체, 사업협의체, 주민회의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파악을 위함.</li> <li>• 지역별 주민회의, 지역협의체, 사업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개수와 활동정도의 비중으로 산출</li> <li>• 기초 쇠퇴현황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의 선정 및 쇠퇴지역별 현안사업, 정부 혹은 지자체 지원사업 등 지역사업 현황분석 등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 비율 산출</li> </ul>
	24. 마을자치 공동체 및 결사체 수		• 마을단위 자치공동체 및 결사체 수
	25. 폐교 혹은 소규모 초등학교 수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퇴 지역 내 초등학교 수의 변화 추이(20~30년)</li> <li>▪ 소규모화된 초등학교의 활용율 및 지역사회 활용율</li> </ul>
	26.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현황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현황 분석 및 활동율 분석</li> <li>▪ 사회적 경제주체의 현황(업종, 유형, 설립시기, 주요 사업내용, 인원 등) 분석</li> <li>▪ 지역의 쇠퇴여부에 따른 사회적 경제주체의 특화지역(쇠퇴지역, 비쇠퇴지역의 특화여부 등)의 분석</li> </ul>
	27. 마을단위 생활 안전 사고 건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읍,면,동)단위 범죄발생건수</li> <li>▪ 마을(읍,면,동)단위 화재발생건</li> <li>▪ 마을(읍,면,동)단위 교통사고건수</li> <li>▪ 마을(읍,면,동)단위 심정지환자수</li> </ul>
	28. 중대범죄 발생률	%	▪ 충북도 내 중대범죄 발생 비율(인구 10만명당 건수)
	29. 공원녹지	천m <sup>2</sup>	▪ 충북도내 공원녹지 면적
	30. 교통사고 건수	건	• 충청북도 내 교통사고 건수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폐기물	31.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포함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양(연간 발생량 대비 1일, 1인 기준)</li> <li>자료 : 시군 환경통계/행정통계</li> </ul>
	32. 산업폐기물 발생량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산업별/ 기업별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산업 폐기물 발생량</li> <li>자료 : 시군 환경통계/행정통계</li> </ul>
	33. 폐기물 재활용량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총량 중 재활용되는 쓰레기(폐기물)의 비율</li> <li>자료 : 시군 환경통계/행정통계</li> </ul>
	34. 녹색기업 인증건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전체 기업(업체) 수 대비 환경 친화 인증 기업(업체) 수</li> <li>자료 : 시군 환경통계/행정통계</li> </ul>

## V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나. 사회영역 지표설정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빈곤	1. 기초생활 수급자율	%	충북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2. 연금 가입율	%	충북 전체인구 대비 연금가입 인구
	3. 건강보험 가입율	%	충북 전체인구 대비 건강보험가입 인구
	4. 공공임대주택 수/보급율	호	충북도내 공공임대주택 수 -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주택 등 충북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5. 공공임대주택 신청건수 대비 대기건수	건	충북도내 공공임대주택 신청건수 대비 대기건수
	6. 공공임대주택의 녹지비율	%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녹지비율 → 타시군(경기도 등)과 비교하여 녹지비율 증가대책 마련 필요
	7. 시군별 재정자립도	%	충북도내 시군별 재정자립도
	8. 슈바베지수		충북전체의 가계소득비 중 주거비용 차지비율 → 슈바베지수 25% 이상시 빈곤층에 속함.
건강	9. 자살률	%	충북 전체인구 대비 자살 인구 수
	10. 자살예방사업추진건수	건	충북도내 자살예방 교육, 캠페인 등의 건수
	11. 행복지수	%	충북도민 행복지수 조사
	12. 결핵환자 수	명	충북도내 결핵환자 수
	13. 독감예방접종자 수	명	충북도내 독감예방 접종자 수
	14. 시·군별 병원 및 병상수	개소/개	충북도내 시·군별 병원 수 병원별 병상 수
	15. 건강검진 수검율	%	충북도내 건강검진 대상인구 대비 건강검진 수검인구
	16. 암질환 사망률	%	충북도민 사인 별 사망자 중 암질환으로 사망한 인구 비율
	17. 흡연율	%	충북 전체 인구 중 흡연 인구 비율
	18. 시군별 병원 및 병상수	개소/개	충북도내 시군별 병원 수 및 병상수
	19. 시군별 응급센터 수	개소	충북도내 시군별 응급센터 수
교육	20. 도민 참여형 교육·행정 거버넌스 구축율	%	산식 :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 수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 통계
	21. 지속가능 발전 교육 투자 예산	원	충북도내 전체 교육예산 대비 지속가능발전 교육 투자예산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예결산서
	22. 지속가능발전 교육 참여 도민 수	%	시군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참여 도민 수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통계
여성가족 / 안전	23. 중대범죄 피해자 성비	%	충북도내 중대범죄 피해자 중 남·여 비율
	24. 혼자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비율	%	충북도민 대상 설문 개발 및 조사
	25.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명	충북도내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26. 위험환경 개선율	%	여성안심귀갓길, 안전마을,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마을방범대 운영 등의 확대 수 통계자료 생산 필요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여성가족 / 안전	27.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	충북도 내 경제활동가능 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 인구
	28. 여성직장인 평균 연봉	원	충북도내 여성직장인 평균 연봉
	29. 각종 위원회의 관리직 여성 비율	%	시군별 각종 위원회 소속 여성인구 대비 관리직 인구
	30. 육아휴직 자 성비	%	고용센터 육아휴직 신청자의 남·여 비율
	3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충북도내 만5세 이하 인구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인구
불평등	32. 비정규직 근로자 수	명	충북도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
	33. 비정규직 평균 연봉	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34.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	%	정규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비정규근로자 평균임금
	35. 장애인 취업률	%	충북도내 장애인 인구 중 취업인구
	36. 노동취약계층 고용률	%	충북도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의 고용률
격차해소	37. 시·군별 사회보장 수급권자 수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전체 인구(사업체) 대비 4대 보험 가입자 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li> <li>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사학/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li> <li>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제도로써 질병, 노령, 실직 등에 대한 소득보장의 성격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수요 감소 및 근로자 개인별 복지 충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li> <li>산업별로는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용·복지 효과를 기대</li> <li>자료 : 4대 보험 관리공단, 시군별 보험관리공단 지사, 통계청 사회보험 가입율</li> </ul>
	38. 시·군별 주민취업률	%	충북도내 시·군별 취업 비율
	39. 시·군별 여성 고용률	%	충북도내 시군별 여성인구 고용비율
	40. 시·군별 인구 유입률	%	충북도내 시군별 유입 이동 인구
	41. 시·군별 이주민 인구수	명	충북도내 시군별 이주민 인구 수
	42. 시·군별 이주민 경제활동 참여율	%	충북도내 시군별 이주민 경제활동 참가 인구 비율
	43. 시·군별 노령 연금 수급자 수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시·군별 노인 인구 대비 공적 연금수급자 수(국민연금/공무원연금/특수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li> <li>자료 : 연금통계</li> </ul>
문화생활	44.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수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식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수</li> <li>자료 : 충청북도, 시/군 행정통계</li> </ul>
	45. 시·군별 문화예술 공간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율</li> <li>산식 : 시·군별 문화/예술 공간 활용율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 참여자 수</li> </ul>

## 다. 경제영역 지표설정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농촌경제	1. 시·군별 농지면적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의 11개시군의 경지면적의 증감을 측정하기 위함.</li> <li>경지면적의 논, 밭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구분 없이 경지면적을 시군단위로 파악하기 위함.</li> <li>각 시군의 농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경지면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li> </ul>
	2. 유기농 인증면적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시군의 유기농 인증면적</li> <li>지속가능한 생산방식으로 각 시군의 유기농 인증면적으로 측정</li> </ul>
	3. 농촌인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구와 더불어 농촌인구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인구 대비 20%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li> </ul>
로컬푸드	4. 로컬푸드 매장 수 및 매출액	개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매장 및 장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매장의 수와 매장별 매출액을 지표로 한다.</li> </ul>
	5.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시군별로 학교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농산물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li> </ul>
	6. 로컬푸드 생산자 수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매장 및 시장에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li> </ul>
지역경제	7.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도내 시군별 고용 및 실업 비율</li> </ul>
	8. 고용 규모별 기업 수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사업자 제외</li> <li>ex) 4인 이하 기업, 9인 이하 기업, 29인 이하 기업, 99인 이하 기업, 299인 이하 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li> <li>특정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의존성이 큰 것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기반이 되어 적정하고 다양하게 유지하는 정도를 보고자 함.</li> </ul>
	9. 지역친화 기업 수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전체 경제비율 대비 지역친화기업의 비율, 또는 충북전체 기업 수 대비 지역친화기업의 수</li> <li>* 지역친화기업(가칭):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니어클럽, 장애인작업장 등, [친화기업] 여성, 장애인, 고령자친화기업 등, [친환경기업] 녹색인증 등 친환경 인증 기업 등</li> </ul>
	10. 최저임금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도내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li> </ul>
	11. 지역 내 경제 활동인구수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의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지역 내 경제활동 비율</li> </ul>
	12. 지역 기업의 도민 고용률 및 정규직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기업의 도민 고용률 및 정규직 비율</li> </ul>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근로환경	13. 시군별 임금수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 11개 시군별 평균임금 조사</li> <li>비교 분석결과로 지역별 임금수준 측정</li> </ul>
	14. 시군별/규모별 근로시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근로시간당 급여를 지역내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임금격차를 측정하기 위함.</li> <li>업종별, 업체별 총 근로시간 조사</li> <li>2교대, 3교대 시행업체 근로 시간대 조사</li> </ul>
	15. 지역청년 고용률	%	충북도내 지역청년 고용비율
	16. 청년 창업 건수	건	충북도내 청년의 창업 건수
	17. 청년 창업 생존율	%	충북도내 청년창업 후 지속영업 비율
	18. 비정규직 근로자 수	천명	충북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수
	1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	%	충북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산업기반	20. 지역외순수취분원소득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총생산(GRDP)와 지역총소득(GRNI) 간의 차이</li> <li><math>GNI = GDP + \text{국외순수취분원소득}</math></li> <li>지역 필요를 지역이 해결하는 정도를 확인 및 지역순환경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li> </ul>
	21. 공유기업 수	개소	충북도내 공유기업 수
	22. 충북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율	개소	충북도내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 비율
	23. 시군별 산업단지조성 규모 및 친환경단지 조성율	명	충북도내 시군별 산업단지조성 규모 및 친환경단지 조성율
순환경제	24.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도내 대형마트의 매출 대비 일자리창출 실적</li> <li>대형마트의 지역주민 정규직률, 고용유지률</li> </ul>
	25. 충북 유통규모 대비 지역기반 유통 규모	개소	충북 유통규모 대비 전통시장 및 지역기반유통회사 규모
사회적 경제	26. 사회적 경제 조직 수	개소	충북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 수
	27. 사회적 기업 생산량	%	지역내 총생산 대비 사회적 경제 기업 생산량(마을기업, 협동조합)

라. 기타영역 지표설정

관련주제	지표	단위	산출방법
제도	1.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식	▪ 산식 : 주민투표율
	2.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수	명	▪ 산식 : 충청북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성별, 연령별, 시·군별 분포)
	3. 행정정보의 공개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 중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전체 공개 대상 자료 수 대비 공개자료 건 수</li> <li>▪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정보공개청구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대상으로 지정된 자료를 제외한 행정정보 전반에 대해 사전 공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li>▪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li> </ul>
	4. 법률구조단 활동건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법률구조 건 수</li> <li>▪ 자료 : 대한 법률구조공단 충북 통계</li> </ul>
거버넌스	5. 자체예산 증감율	%	▪ 산식 : 지역 내 총 생산(GRDP) 대비 지방세 비중
	6.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	개	▪ 산식 :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 자치단체의 수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인원	명	▪ 산식 :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기관, 단체, 기업의 수
	8.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을 위한 예산	원	▪ 산식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간 운영 예산 지원 액
	9. 지역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식	▪ 산식 : 지방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자치단체 수
	1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측정 지표 수	개	▪ 산식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시·군 지속가능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수(광역-기초자치단체 공통지표)
	11. 세분화된 통계자료확보	개	▪ 산식 : 각 영역별 세분화된 지표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건/수)
	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수	개	▪ 산식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 위원회 구성
	13. 평가결과의 환류	식	▪ 산식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현황 보고(연도별)
	14.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유입인구 증대(관광객수)		▪ 산식 :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

##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목표설정

- 본 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이므로 최종목표연도는 2018년-2037년으로 함.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별 목표설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을 기준으로 국가의 주요지표를 적용함.
- 주요지표의 목표설정은 국가 및 충청북도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여 목표를 설정함.
- 목표설정 연차별 기준은 10년 단위로 하였으며 본 계획의 시작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2037년이 최종 목표연도이므로 2020년, 2030년, 2037년으로 작성함.

### 가. 환경영역

정책범주	지표	단위	측정방법	기준연도 (2010)	현황 (2015)	목표		
						2020	2030	2037
대기오염 /기후	미세 먼지농도	$\mu\text{g}/\text{m}^3$	미세먼지의 농도 * 국가목표 5년 단위 $5\mu\text{g}$	61	51	49	46	4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 $\text{CO}_2$ / 인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9.75	21.83	20.0	18.0	16.0
수자원	1인당 물소비량	ℓ	충청북도 총물사용량 대비 충청북도 총 인구수	384	435	415	395	380
	수질	등급	대청호 BOD	1.0	1.4	1.3	1.2	1.1
			충주호 BOD	3.1	3.3	3.0	2.7	2.5
			괴산호 BOD	0.6	1.4	1.2	1.0	0.8
도시환경	공원녹지	천 $\text{m}^2$	충북도내 공원녹지 면적	32.5	19.7	25.0	30.0	35.0
도시안전	중대범죄 발생률	%	충북도내 중대범죄발생 비율 (인구 10만 명당 건수)	33.6	33.8	31.3	27.0	23.0
	교통사고 건수	건	충북도내 교통사고 건수	8,571	8,501	7,651	6,886	6,286

## V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정책범주	지표	단위	측정방법	기준연도 (2010)	현황 (2015)	목표		
						2020	2030	2037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율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비율 * 1차에너지 대비 보급비율 * 연간 약6.5% 증가목표	5.2	3.4	4.5	7.4	11.4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율	%	폐기물 재활용율	33.1	42.4	47.4	52.4	59.3

## 나. 사회영역

정책범주	지표	단위	측정방법	기준 연도 (2010)	현황 (2015)	목표		
						2020	2030	2037
자립기반 강화	국민연금 가입비율	%	충북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율	33.6	37.7	42.0	52.0	6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충북도내 경제활동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50.6	54.2	60.0	65.0	69.0
	장애인 고용율	%	충북도내 전체고용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인구	2.5	2.9	3.9	4.5	5.0
건강한 사회 구현	자살율	%	충북도내 자살율	35.9	31.5	25.0	20.0	15.0
	건강검진 수검율	%	충북도내 건강검진대상 인구 대비 건강검진 수검율	68.0	79.0	82.0	85.0	88.0
	암질환 사망율	%	충북도민 사인별 사망자 중 암질환으로 사망한 인구비율	167.1	176.9	160.0	150.0	140.0
	흡연율	%	충북전체 인구 중 흡연인구 비율	26.7	23.6	18.0	13.0	10.0
불평등 감소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비	%	정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근로자 평균임금	57.2	65.5	75.0	80.0	85.0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 주택 수	호	충북도내 공공임대 주택 수	64,489	68,523	78,000	86,000	90,000
문화생활	문화예술 공간 수	개소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 개소수(체육시설 포함)	118.4	119.4	130.0	140.0	150.0

## VI.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다. 경제영역

정책범주	지표	단위	측정방법	기준 연도 (2010)	현황 (2015)	목표		
						2020	2030	2037
경제기반 강화	취업률	%	15세 이상인구 중 취업자 비율	59.6	62.1	62.3	65.1	67.0
	실업률	%	15세 이상인구 중 실업자 비율	2.2	2.6	2.0	1.5	1.0
	청년 고용률	%	15-29세 인구중 고용 비율	33.8	38.2	45.0	50.0	55.0
	비정규직 근로자 수	천명	충북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수	182	203	180	150	130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 수	개소	충북도내 사회적 기업 수	26	71	142	974	1,600
관광 활성화	관광객 수	천명	충북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18,478	11,508	20,000	25,000	30,000
농업경제 기반강화	농촌인구 수	명	충북도내 농가인구 수	211,522	18,752	190,000	200,000	210,000
	로컬푸드 매장 수	개소	충북도내 로컬푸드 매장 수	5	20	30	35	40
주력산업 확대	주력산업 종사자 수	명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43,518	53,147	60,000	65,000	70,000

##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방안

### 가.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주체와 방법

#### □ 평가주체

##### ○ 충청북도 '지속가능운영위원회' 구성

- 근거 :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하면 국가 지속가능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 지속가능운영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그러나 현재 발의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지방지속가능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음.
- 역할 : 지속가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추진

##### ○ 운영위원회 평가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 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년 임기로 하고 연임도 가능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행정지원

- '충청북도 지속가능운영위원회 구성' 조례 법안발의 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평가 방법

##### ○ 평가주기

- 지속가능성 지표평가는 2년 주기로 함
- 이행계획이 2018년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2019년 성과에 대한 평가는 2020년에 수행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환경, 경제, 사회, 기타(안전, 도시재생, 행정 등) 4대 영역의 관련 세부지표별 계량적 평가를 시행함.
- 각 부문별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2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매년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함.
- 각 세부지표별 수관부서의 담당자는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지속가능평가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지속가능평가위원회는 2년 주기의 변화내용과 중장기(2025, 2030, 2035) 목표대비 달성수준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나. 평가결과 보고서 구성체계

### □ 평가개요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범위와 방법

###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상황

-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이행계획
- 주요 추진 성과

###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

- 지표체계와 평가방법
- 영역별 지표평가 결과

### □ 종합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도출

- 중장기 목표 대비 달성수준 종합평가
- 향후 정책과제 및 지표체계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시

## 07.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 07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 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발전체계

#### 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논의와 새로운 정책의제 제안 방법

- 지속가능발전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불가능하며, 민-관-학-협 등 지역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할 수 있음.
- 충청북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를 설치하여 충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지속협은 도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규·복합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제발굴 T/F가 이를 추진함.
- 의제는 지속협 회원, 공무원, 도민 누구나 수시로 제안할 수 있음.
- \* 다만,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 이행계획 수립·추진, 민간이행네트워크 운영, 도민 교육·홍보 등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역할을 수행함.
- 의제 발굴대상은 크게 신규의제, 지표개선, 복합의제로 구분할 수 있음. 신규의제란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의제를 의미함.
- 복합의제란 환경,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의제를 말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선방안과 신규지표의 발굴 또한 대상이 됨.
- 지속협 회원,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의제는 우선 의제발굴 T/F에 회부되어 타당성과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기획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의제를 채택함.
- 채택된 의제는 의제발굴 T/F에서 연구조사를 시행하게 됨. 그러나 의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연구용역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연구된 의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채택되며, 각 부서에 연구결과를 송부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 VII.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표 7-1]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채택 방법

단계	주체	내용
제안	지속협, 도민, 공무원	신규의제, 지표개선, 복합의제 제안
↓		
검토	의제발굴 T/F 구성	타당성 및 정책 적용가능여부 검토
↓		
의제채택	기획조정위원회	2차 검토 및 협의 후 의제 채택
↓		
연구조사	의제발굴 T/F	채택된 의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수행
↓		
의결	전체회의 및 협의	연구조사 결과 검토 및 의결
↓		
연구결과 공유	관련부서 및 기관	관련부서에 연구결과를 송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주) 1.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시 발굴 및 채택방법을 계획함.  
 2. 기획조정위원회 구성 : 지속위 위원회(사회, 경제, 환경) 대표 00명으로 구성

### 나.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방안

- 지속가능발전 도민참여단 운영
  - 대상
    - 대학생, 회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 속해 있는 20~5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약 30~50명 도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
  - 운영기간
    -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성방법

-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거나 정책제언을 원하는 일반시민을 지원형식으로 공개 모집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 혹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관련학과 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추천함.
- 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의 지원 및 추천을 통해 구성함.

○ 활동내용

-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 일반 도민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평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충북도정 핵심정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가의견제시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평가 결과와 보고서는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며, 평가 의견을 열람한 도민 중에서 이의가 있거나 수정·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도민참여단 참가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도민들은 도정 및 주요정책 평가 등 지속위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시민참여 활성화

- ‘충청북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UCC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여 도민의 지속가능발전 참여 기회를 제공함. 또한 지속가능성 지표 제안창구를 운영하여 우수 지표의 경우 충청북도 평가지표에 반영을 검토 활용하고자 함.

## VII.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 ■ 지속가능발전 관련정책 제언 등

- 미국 뉴욕시와 캐나다 킹스턴의 경우에도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성한 바 있음.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 시 집단지성 접근방법 및 키워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의 보완 및 평가 과정에서도 도민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도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한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민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회부되어 타당성과 적용가능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음.

### □ 지속가능발전 의견 제안 콘텐츠 개발

- 추진대상
  -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도민참여단 소속 활동을하지 않는 도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 추진방법
  - 충북도청 홈페이지, 충북 지속협 홈페이지에 의견제안 콘텐츠를 개설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운영내용
  - 홈페이지에 제안된 도민들의 의견을 충청북도 지속협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의제발굴 및 채택방법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 □ 공무원 직급별 교육 실시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도정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향상과 도정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대상은 실·본부·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군 공무원 약 200여 명이며,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함.
- 대상별 교육은 간부와 실무자로 구분하여 실시함.

○ 교육내용

- 지속가능발전이 충청도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정부 및 충북 지속가능발전 현황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지속가능발전 평가 방법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수립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추진역량 강화
- 부서별 협력 체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 2. 법규와 제도 개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8월 3일자로 법률 제8612호로 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전 부분이 부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5월 22일 김상희 의원 외 17인이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음.
- 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정계획이 되므로 이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5조 제1항, 제6조 3항)에 따라 충청북도는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기반을 두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제14조 제4항), 이를 준용하여 충청북도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2017년 7월 27일 송옥주의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음.

### ■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유

-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 잡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불어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조).
- 나. 환경·경제·사회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상충될 경우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마.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4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 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 아.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체제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간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VII.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 법안이 통과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함.
- 또한 법률에 따라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제21조)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1. 제8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조례 및 행정계획의 검토·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5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거버넌스 등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3. 추진계획별 관련부서

#### 3-1. 환경영역 계획별 관련부서

전략 01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녹색 충북 조성	
아행과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li> <li>깨끗한 물 - 안심하고 물장구 칠 수 있는 하천 관리</li> <li>풍부한 물 - 갈수기에도 농촌마을에 물이 흐르도록 관리</li> </ul>	바이오환경국 수질관리과
②	지표종을 선정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 지표 - 황새와 제비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육상 지표 - 반디와 가재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유연한 도시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li> <li>극한폭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li> <li>대기환경 통합관리</li> </ul>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
전략 02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④	순환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환 에너지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률 증대</li> </ul>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
전략 03		도민중심의 교통문화 확립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⑤	교통시설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약자의 사고특성을 반영한 안전도로 조성</li> <li>생활밀착형 교통안전문화 조성</li> </ul>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 VII.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전략 04		안전한 사회기반 체계 구축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⑥	포용적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TED를 활용해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li> <li>아동과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설계 적용</li> </ul>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친화적 교통기반 조성하여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li> </ul>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⑦	혁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재난유형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마련</li> <li>AR/VR기술 활용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인프라 확대</li> </ul>	행정국 정보통신과/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⑧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화함</li> </ul>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개방형 지역공동체 조성함</li> <li>사회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li> </ul>	행정국 지역공동체과
⑨	주민안전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안전 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li> <li>마을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응능력 향상</li> </ul>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3-2. 사회영역 계획별 관련부서

전략 05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구현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①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개 시·군 간 빈곤격차 해소</li> </ul>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 보장</li> </ul>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②	지역 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보장</li> </ul>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전략 06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충북
-------	---------------------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③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통해 인권을 보장</li> <li>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li> <li>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li> <li>일·생활 균형을 위한 성평등 정책 적극지원</li> </ul>	여성정책관
④ 불평등을 줄여 살만한 충청북도 만들기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

전략 07	양질의 교육체계 지속적 지원
-------	-----------------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⑤ 가치의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체계 구축</li> </ul>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충북평생교육 진흥원

전략 08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	------------------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⑥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보장</li> <li>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질환 예방 강화</li> <li>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li> </ul>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3. 경제영역 계획별 관련부서

전략 09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	-----------------------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하는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생의 지역경제확대</li> <li>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li> <li>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환경제공</li> </ul>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

## VII.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전략 10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② 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 경제정책과, 일자리 기업과</li> <li>- 구인·구직 접근성 : 일자리기업과</li> <li>- 정보접근성 : 정보통신과, 일자리기업과</li> <li>- 창업친화성 :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기업과</li> <li>- 농민장터 사례 : 농식품유통과</li> </ul>	
③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li> </ul>		
④ 생활양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li> </ul>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전략 11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촌사회 조성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⑤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유지</li> <li>로컬푸드 이용 증대</li> </ul>	농정국 농업정책과	

전략 12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북 만들기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충청북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주민주도 경제공동체 활성화</li> </ul>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3-4. 기타영역 계획별 관련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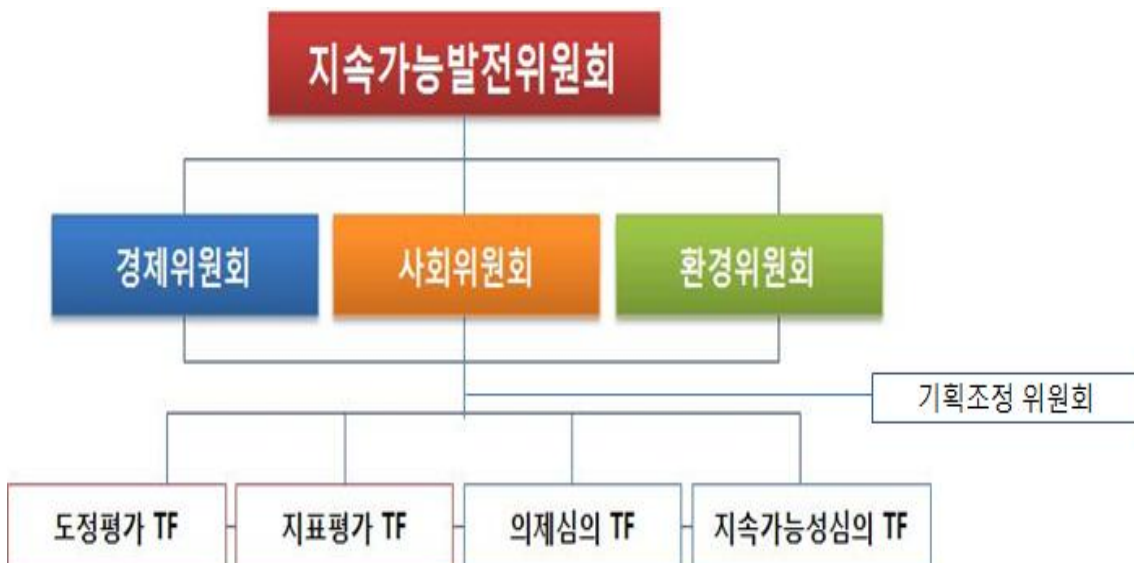
세부목표	추진계획	관련부서
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만들기</li> </ul>	충북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정의를 실현되는 충청북도 만들기</li> </ul>	청주지방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 문화 구축</li> </ul>	행정국 전체과
②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li> </ul>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확대</li> </ul>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환류 활성화</li> </ul>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4. 지속가능발전 조직체계 개편 방안

### 가. 충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 충청북도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경제, 사회, 환경 등의 10개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통합적 논의를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별 T/F를 구성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T/F는 도정평가, 지표평가, 의제발굴 심의, 지속가능성심의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며, 각 분과위원이 T/F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도정평가T/F는 향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전 분야의 도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음.
- 지표평가T/F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비생산통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필요 시 조사는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제심의T/F는 상시 의제발굴을 위한 도민 제안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과 폭넓게 교류하여야 함.
- 지속가능성심의T/F는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함.

[그림 7-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실행 조직 역할기구**로써 민간실행계획 수립·추진, 민간실행네트워크 운영, 도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함.

## 나.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설치

- 현재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분야가 전 분야에 걸쳐 도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도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부문별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자문하고 기본계획 수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신설하여 업무의 실행력을 담보하게 되었음.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의 관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정책의제 발굴,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충청북도는 지속가능발전의 연관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함.

[그림 7-2] 충북 지속가능발전 전담 조직 설치(안)



## 다. 추진체계 개편

- 충북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하여 개편하였으며, 개편(안)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추진체계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협의회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심의 및 평가의 역할을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 발굴 및 개선과 이에 따른 이행활동을 중점적으로 함.

[그림 7-3] 충북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안)



### □ 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

####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 및 이행을 총괄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표 개발·관리, 시·군 이행모델 개발 등

###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 지속가능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 의제발굴 심의, 지속가능성 점검·평가, 지표 분석·평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 개발

□ 시군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민간 차원에서 이행 추진

- 민간부문 실천사업 발굴·추진, 실천 네트워크 구축, 도민 교육·홍보

□ 충청도청 실·국

- 도 단위 이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발굴 및 개선

□ 충북 시·군

- 시·군별 전략 및 지표 개발, 이행체계 구축 등

## II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세부이행계획



## 2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세부이행계획

### 1. 세부 이행계획의 개요

#### 가.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는 현재 20년 기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장기)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세부 이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인식확산 등의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이행계획의 목표 연도 : 2018년 ~ 2022년(5년 단위 계획)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체
- 내용적 범위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여건
  -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및 세부실행계획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 체계

## 2. 환경영역 세부 이행 계획

### 1) 환경영역 이행계획 배경과 필요성

- 1987년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주창 이후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경제 패러다임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왔음
-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새롭게 수립하여 전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국토 환경자원의 투입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추구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함.
- 지속가능 발전이 기후변화 협상 등 국제적 공동 대응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국제관계와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형성하고자 함.
- 세계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방자치 도시 차원에서 공헌하기 위하여 방향성을 같이 하되 충청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환경영역 이행계획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환경 자원을 토대로 한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 차원의 기여를 강화
- 충청북도의 환경영역 지속가능성이 지향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생태)자원활용하여 깨끗한 공기, 맑고 풍부한 물, 생태의 다양성 등을 추구하는 것임.
- 국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충청북도환경적 지속가능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 정책과제, 세부실행과제를 도출함.

## □ 환경영역 정책범주 및 이행계획

분야	정책범주	세부 이행계획	주요사업
수자원	1.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① 안전한 식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오염총량 관리 적극적 대응</li> <li>노후 상하수도 교체</li> <li>도민 참여형 수질개선 대책마련</li> <li>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li> </ul>
		② 깨끗한 수자원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하천 복원사업</li> <li>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도입</li> <li>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수질관리 확대</li> <li>수자원 관리강화 및 수생태계 보전 유역관리강화</li> </ul>
		③ 풍부한 용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맑고 풍부한 물 환경 및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li> <li>물 재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li> <li>안정적인 용수 공급계획</li> </ul>
신재생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① 순환-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이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 활성화</li> <li>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li> <li>친환경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li> <li>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li> <li>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허브 타운 조성</li> </ul>
생태 보존	3. 생태의 지속 가능성	① 생태 보호 및 복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단절지점 복원사업 실시</li> <li>야생생물보호지역 확대 및 보전복원강화</li> <li>자연환경 보존관련 교육 및 캠페인</li> <li>도시생태지도 작성 및 지역생물종 DB화</li> </ul>
대기·기후 환경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 가능한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li> <li>재난안전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li> <li>첨단 기술기반 스마트 안전도시구현</li> </ul>
		② 대기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오염 물질 인벤토리 구축·배출량 산정</li> <li>도로먼지 및 비산먼지 저감확대</li> <li>지역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li> <li>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li> </ul>
안전 기반 확보	5. 포용적 환경설계로 안전한 사회기반 시설 조성	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설계) 추진</li> </ul>
		② 사회약자(여성·아동·노인 등)가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협력형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li> </ul>
교통체계 개선	6.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① 생활밀착형 교통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체계 재검토</li> <li>인구과소지역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li> <li>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li> </ul>
		② 보행약자 안전도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li> <li>안전제일의 선진교통문화 조성</li> </ul>
주민 참여	7.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①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단위 행정에 주민참여 사다리 놓기</li> <li>주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성과 계약제</li> <li>IoT기반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li> </ul>
		②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경제 육성 및 혁신가 양성</li> <li>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li> </ul>
공동체	8. 주민안전권 보장	①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여 안전대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기반조성</li> <li>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 인프라강화</li> <li>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구축</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분야	정책범주	세부 이행계획	주요사업
폐기물	9. 생활양식의 변화	① 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자원 환경에너지 타운조성 및 충북형 자원순환 마을 조성</li> <li>폐자원 통합 관리계획 수립</li> </ul>

### 3) 정책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 가.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안전한 식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오염총량 관리 적극적 대응</li> <li>도민 참여형 수질개선 대책마련</li> <li>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물소비량</li> <li>시군별 상수도보급률</li> </ul>
② 깨끗한 수자원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하천 복원사업</li> <li>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도입</li> <li>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수질관리 확대</li> <li>수자원 관리강화 및 수생태계 보전유역관리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 II등급 하천의 비율</li> </ul>
③ 풍부한 용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맑고 풍부한 물 환경 및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li> <li>물 재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li> <li>안정적인 용수 공급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수기(3-6월) 시기에도 유량이 있는 소하천 비율</li> <li>빗물 재이용률</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물 환경 인프라를 구성하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고도화된 상하수도시설, 하천 및 호소 관련 기초시설 등의 확대를 통해 오염원 관리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친화적 물 환경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관리 및 감시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주민과 연계된 기업의 후원과 관련 산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지역적 인프라 구성
- 물 산업 관련 R&D를 강화하고 핵심 물 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충청지역 물 환경 인적 인프라를 강화함.
- 자연과 함께 성장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 및 자연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 환경 및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
- 하천, 지하수, 댐, 저수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① 안전한 식수 공급

○ 수질오염총량 관리 적극적 대응

사업의 개요
충청북도의 한강수계, 금강수계 지역은 관련 법률에 의해,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량관리단위유역에 대해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관련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10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염총량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계별 오염발생량 및 배출량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채수를 통해 오염정도를 파악</li> <li>-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배출량을 예측 및 자료의 DB화를 추진하여 오염부하량을 수시 파악</li> </ul> </li> <li>■ <b>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및 호소 주변의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개발 억제</li> <li>- 하천·호소변 국·공유지를 점진적으로 수변공간으로 활용</li> </ul> </li> <li>■ <b>장기적인 총량관리 운영계획과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충분한 협의 필요</b></li> </ul>

○ 도민 참여형 수질개선 대책 마련

사업의 개요
물 관리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유역 중심의 관리로 전환되고 일선 실정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중요함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물 사랑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참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뜻한 디자인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로 물 사랑 실천 활동에 친근감 유도</li> <li>- 물 사랑 정보검색 대회 등 흥미로운 이벤트 개최를 통해 도민 참여 확대·강화</li> </ul> </li> <li>■ <b>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하천별 쓰레기 제거와 꽃길 가꾸기 등 수생태계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 지속추진</b></li> <li>■ <b>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같은 하천관리교육 및 하천정화행사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 확충</b></li> </ul>

○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사업의 개요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하여 낙후(농촌)지역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으로 도민건강 증진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시설 교체 및 취·정수·배수시설 개선</li> <li>▪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li> </ul>

○ 성과지표

- 1인당물소비량(LPCD,L/인·일) : 충북 총 물 사용량 대비 충북 총 인구수
- 상수도보급률(인구비율) : 상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편차 확인

② 깨끗한 수자원 보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 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생식물식재, 퇴적오니 준설, 어도 및 여울 등 설치를 추진</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도입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질소와 인이 미처리되어 하천과 호소로 방류하면 조류의 성장으로 잠재적인 COD 유발원인이 되고 질소에 의한 산소소모량의 증가 및 녹조 발생으로 인해 고도처리시설의 도입</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하수성상에 적합한 공정 선정</li> <li>▪ 기존의 활성슬러지 공법이 BOD 20mg/L 제거를 목적으로 개발된 공정이므로 질소 및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하수처리 공정으로 신설 및 변경</li> <li>▪ 반응조 운영 현황 및 공법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법별 운영 현황</li> <li>- SBR 계열 : Cycle 및 운전주기, Decanter 운영현황</li> <li>- A2O 계열 : 각 조의 DO, 체류시간</li> <li>- 담체 계열 : 시편 설치 여부, 계절별 부착미생물 부착정도</li> <li>- 탄소원 공급현황(내부, 외부 등)</li> <li>- 알칼리도, 응집제 주입현황</li> <li>- 내부반송, 슬러지 반송율 등</li> </ul> </li> </ul>

### ○ 수자원 관리강화 및 수생태계 보전 유역관리강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li> <li>▪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li> <li>▪ '충북 물 포럼' 활성화, '물 사랑 주간' 행사실시</li> <li>▪ 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기금지원</li> <li>▪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개선사업 기금지원</li> <li>▪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li> </ul>

## ○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수질관리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하천관리교육과 하천정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음</li> <li>- 물 사랑 환경교육이라는 하천관리교육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며, 초등학교 이상 및 시·군을 대상으로 대청호 주변의 문화 역사 생태계를 교육하는 교육임</li> <li>- 금강수계 수질오염방지 및 녹조저감을 위한 캠페인은 2014년에 개최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및 참가 단체 활동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천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사랑 환경교육 및 수질 오염 방지 및 녹조 저감을 위한 캠페인의 횟수 확대</li> <li>▪ 공익 광고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 확대</li> <li>▪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 개최</li> </ul>

## ○ 성과지표

- I~II등급 하천의 비율 : 충북 소재 지방하천의 하천수질 등급(I~II) 유지
- 수질항목 : BOD, 대장균군수

## ③ 풍부한 용수 확보

### ○ 맑고 풍부한 물 환경 및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물 환경)통합 물 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및 물 공급 안전율 90% 달성</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li> <li>▪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li> <li>▪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 공급</li> <li>▪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물 순환도시 건설</li> <li>▪ 하수 재이용등 상시 가뭄 극복 물 순환 체계 구축</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 한강수계 7개 시군</li> <li>▪ 비점오염 저감사업</li> <li>▪ 가축분뇨 적정처리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li> <li>▪ 충주댐 공업용 수도 사업</li> <li>▪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li> <li>▪ 수도시설 수질관리 강화</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물 재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의 개요
- 충청북도는 2014년 기준 하수처리시설은 34개소가 있으며, 재 이용량은 70,866톤/일 이며, 재 이용률은 39%로 나타남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물 재이용 활성화 도모</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기준 확대</li><li>- 건물 옥상이나 처마 밑에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류탱크 설치</li></ul></li><li>▪ <b>중수도 보급</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물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수도시설 활성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li><li>- 중수도를 연차적으로 의무화 검토하여 조례 등을 정비,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li></ul></li><li>▪ <b>빗물재활용시설 보급</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수도 수질기준과는 다른 빗물에 맞는 수질기준을 별도로 설정 필요</li><li>- 다량 용수소비시설의 용수절약계획 또는 빗물이용계획 수립 의무화</li><li>- 일본의 경우 물의 재활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은 건축 확인 단계에서 잡용수도 설치 등과 함께 절수대책을 기재한 "절수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li><li>- 지자체의 용수이용계획 수립 시 빗물확보계획 의무화</li></ul></li></ul>

### ○ 안정적인 용수 공급 계획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북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시·도 별 상수도 보급률은 98.3%로 전국의 98.6%, 99% 이상인 특광역시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광역·지방상수도 이용 급수 보급률은 90.1%로 전국의 96.1%보다 다소 낮은 보급률을 보임</li><li>- 국토교통부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2025년 생활용수 및 공업 용수 부족지역 발생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추가공급이 필요</li></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수도 사업 추진</li><li>▪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 교체로 인한 안정적 용수 공급</li></ul>

### ○ 성과지표

- 갈수기(3-6월) 시기에도 유량이 있는 소하천 비율
- 빗물 재활용율 : 충청도내 빗물의 재활용율

## 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b>순환·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이용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 활성화</li> <li>-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li> <li>- 친환경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li> <li>-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li> <li>-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제로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및 고효율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자립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성능 및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모듈의 초고효율화/초저가화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도심 건물용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및 형태를 갖춘 도심환경 맞춤형 차세대 태양전지(모듈) 핵심요소 기술 확보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수소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 활성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믹스 전체의 효율 향상 및 분산전원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연료전지·재생 에너지 융·복합 기술의 필요성 증대</li> <li>-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족시키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 공급망 기반기술 확보 필요성 증대</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형 건물용 SOFC 개발, 저온형 MCFC 원천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li> </ul> </li> <li>▪ 수소저장 및 운반 기술 개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공급 기반기술, 화석연료 개질에 의한 수소공급 기반기술, 수전해 방식에 의한 수소공급 기반기술 개발 등</li> </ul> </li> </ul>

○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주거형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형 태양광을 급하여 생활 밀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의 활용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주택 632,347호 중 공동주택 309,271호로 49%를 차지</li> </ul> </li> <li>- 대기전력 등 전기사용량 감소를 통한 전력 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친환경 녹색에너지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li> <li>▪ 태양광 기술 지원센터 건립</li> <li>▪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확대</li> </ul>

○ 친환경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최대 규모 한화큐셀공장 가동</li> <li>▪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시험평가센터건립</li> <li>▪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li> <li>▪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li> </ul>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공공시설)</li> <li>▪ 태양광 주택 보급</li> <li>▪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li> <li>▪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li> <li>▪ 비영리시설(복지·종교 등) 태양광 발전시설</li> <li>▪ 수상태양광(저수지, 댐) 발전소 건립</li> </ul>

## ○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효율사용 기조'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실증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솔라 허브타운 조성 필요</li> <li>- 스마트 그리드 연계형 융복합 시스템을 실증하고, 인재육성·취업활성 강화를 위한 허브 인프라 및 네트워크 조성 필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진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범위 : 충북혁신도시</li> <li>-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관련 시스템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li> </ul> </li> <li>▪ <b>사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lar 에너지 자립 실증 단지 조성 및 지역 에너지 공급 플랜트 구축</li> <li>- 에너지 융·복합 기술·제품 종합 성능·품질 표준화 기반 구축 R&amp;D 기관 설립</li> <li>-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산업·체험·관광 융합지구 조성</li> </ul> </li> <li>▪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도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li> <li>- 국가 기술표준화 선도, 기업 및 기술 유치 강화</li> <li>- 관광·환경과 에너지간의 체험을 통한 미래에너지관광 트랙조성</li> </ul> </li> </ul>

## ○ 성과지표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 :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등

## 다. 생태의 지속가능성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생태 보호 및 복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단절지점 복원사업 실시</li> <li>야생생물보호지역 확대 및 보전복원강화</li> <li>자연환경 보존관련 교육 및 캠페인</li> <li>도시생태지도 작성 및 지역생물종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제거사업</li> <li>대청호 생태습지원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지표종 서식지 비율(%)</li> <li>멸종위기 종수(종)</li> <li>야생동물 보호구역 비율(%)</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 충북의 생태계 가치 보전의 중요성 대두

- 충북 생태계위협요인 가중될 전망
- 아열대 기후변화로 생물 서식지 교란, 새로운 질병발생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예상되며 반면에, 도민들의 우수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향유 수요 증가

## ○ 대기오염을 비롯한 생태적 건강성 악화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증가 우려
- 충북의 생물종 다양성 악화우려
- 급격한 도시화, 대기 및 토양 오염 심화 등으로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생태적 균형이 파괴될(변형) 가능성이 큼

## ○ 생태계 가치증진,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증가

- 우수 생태자원의 훼손 및 생태계 교란 위협증대
- 도민들의 생활 속 생태계서비스 수요 증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소음, 빛 공해 등이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표8-1] 시군별 생물종수

구분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담수어류	기타 무척추 동물	곤충	계
청주시	672	23	176	26	60	37	793	187
충주시	892	30	158	31	57	44	1,020	2,232
제천시	1,280	27	155	34	58	36	1,635	3,225
보은군	1,180	27	137	27	50	28	816	2,265
옥천군	768	21	124	27	49	35	611	1,635
영동군	1,191	24	131	33	50	39	1,157	2,625
증평군	488	12	105	18	17	13	188	841
진천군	716	19	117	24	47	18	317	1,258
괴산군	1,044	29	148	24	49	32	617	1,943
음성군	569	19	132	20	39	26	452	1,257
단양군	1,435	32	154	31	56	29	1,301	3,038
계	1,998	42	226	37	84	72	2,946	5,405

출처) 충청북도, 충북생물다양성전략수립(2017)

○ 충청북도 보호야생 동·식물

- 충청북도 보호야생동식물 지정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 2007294호 )에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6조 및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종이 지정되어 있음
- 시·군별로는 보은군과 영동군에서 생태계교란생물이 가장 많이 나타남

[표8-2]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구분		종명	지정사유
동물(4종)	조류(1종)	백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에 서식</li> <li>• 희귀종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종</li> <li>• 생물다양성 확보</li> <li>• 도내의 우수한 자연 자원보호</li> </ul>
	양서파충류(1종)	이끼도롱뇽	
	어류(1종)	황쏘가리	
	곤충류(1종)	반딧불이	
식물(6종)		너도바람꽃, 산자고, 앓은부채, 가침박달나무, 고란초, 태백제비꽃	

출처) 충청북도, 충북생물다양성전략수립(2017)

[표8-3]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급	분류	국명	충북 종수	국내 종수
멸종 위기 야생 생물 I 급	식물	-	-	9
	포유류	사향노루 산양 수달	3	11
	조류	검독수리, 매, 흰꼬리수리	3	12
	양서파충류	-	-	2
	어류	감돌고기, 미호종개, 통사리	3	9
	무척추동물	두럭조개	1	4
	곤충	상제나비	1	4
멸종 위기 야생 생물 II 급	식물	기생꽃, 넓은잎제비꽃, 노랑붓꽃, 미선나무, 백부 자, 복주머니란, 산작약, 세뿔투구꽃, 솔붓꽃, 연잎평의다리, 왕제비꽃, 층층동굴레	12	68
	포유류	담비 무산쇠족제비 삿 하늬다람쥐	4	9
	조류	검은머리축새, 까막딱따구리, 독수리, 무당새, 벌매, 붉은배새매, 새매,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 개구리매, 올빼미, 잣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호사비 오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21	49
	양서파충류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5	5
	어류	가늌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묵납자루, 한독종개	5	16
	무척추동물	기수갈고동 염주알다슬기	2	27
	곤충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붉은점 모시나비, 왕은점표범나비	5	18

주) 해조류, 고등균류 제외 / 출처) 충청북도, 충북생물다양성 전략수립(2017)

[표8-4] 시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구분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기타 무척추 동물	곤충	계
청주시	1	1	13	3	3	-	1	22
충주시	2	5	13	3	-	-	2	25
제천시	5	6	13	4	3	-	4	35
보은군	7	4	11	2	2	-	2	28
옥천군	-	3	8	3	4	-	2	20
영동군	3	4	10	3	4	2	2	28
증평군	1	1	4	2	-	-	-	8
진천군	1	3	7	2	1	-	-	14
괴산군	3	5	14	1	4	-	-	27
음성군	-	2	8	-	-	-	-	10
단양군	11	7	16	4	3	1	2	44
충청북도	12	7	24	5	8	3	6	65

출처) 충청북도, 충북생물다양성전략수립(2017)

[표8-5] 시군별 생태계 교란생물 종 수

구분	식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계
청주시	5	-	1	2	-	8
충주시	4	-	1	2	1	8
제천시	4	-	2	2	1	9
보은군	6	-	2	2	-	10
옥천군	4	-	2	2	-	8
영동군	6	-	2	2	-	10
증평군	2	-	-	-	-	2
진천군	4	-	2	2	-	8
괴산군	2	1	1	-	-	4
음성군	1	-	1	1	-	3
단양군	5	-	-	2	1	8

출처) 충청북도, 충북생물다양성전략수립(2017)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 생태단절지점 복원사업 실시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단절지점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생태단절지점의 복원이 시급함</li> <li>- 국가 및 지자체가 생태조사를 수행 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나 집중적인 변화관찰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나 개인 활동가들의 조사와 관찰 자료를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객관화된 생태조사 부재로 인해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단체·일반인 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미흡</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현장 활동가 및 일반도민 조사자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 객관화된 조사 결과표 혹은 야장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청북도 생태 셀프모니터링 지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자 역량별(지역 현장전문가, 일반도민), 유형별(생태계 교란종, 충청북도 보호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분류군별, 서식처별(산림, 습지, 하천, 하구역) 세부지침 필요</li> <li>- 모니터링 목적, 방법, 조사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li> </ul> </li> <li>▪ 관할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자료의 검증 및 지속적인 관리</li> <li>▪ 자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DB구축에 부가 자료로 활용</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야생생물보호지역 확대 및 보전복원강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무질서한 국토 개발, 자연환경의 훼손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고유 야생생물의 멸종,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li> <li>- 충청북도 내 우수 자연환경 지역 중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li> <li>- 우수 자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이 필요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에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야생생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li> <li>▪ 충북도내 비오톱 관련 현황을 활용하여 보호 야생생물 서식 지역 파악</li> <li>▪ 지정 지역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확대 관리</li> <li>▪ 주요 생물종 보전대책 수립</li> <li>▪ 서식처 파괴 등의 원인으로 줄어드는 주요 생물종을 위한 서식처 보전활동 대책 수립</li> <li>▪ 충북의 멸종위기종 복원프로젝트 실시</li> <li>▪ 충북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관리 수립</li> <li>▪ 충북 자연환경정보 활용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li> <li>▪ 생태놀이터 조성사업</li> <li>▪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li> </ul>

### ○ 자연환경 보존관련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내 다양한 생물종, 서식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의 민간단체가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학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li> <li>- 충청북도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생물종, 주요 서식처 등 다양한 장소를 조사·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수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모니터링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li> <li>▪ 생태학 및 분류학 전문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li> <li>▪ 전문가를 활용한 초급, 중급, 고급 등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별 맞춤 교육 실시</li> <li>▪ 고급과정 이수자는 충청북도 생태해설가 및 자연환경조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관리</li> </ul>

## ○ 도시생태지도 작성을 통한 지역생물종 DB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li> <li>-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는 도시생태지도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권장하였으며, 2012년 3월 기준,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도시생태지도를 작성 완료함.</li> <li>- 충청북도에 속해있는 보은군, 단양군에서 2012년 바이오맵 지도를 제작하였으나 바이오맵 보전등급까지 설정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li> <li>- 국내 바이오맵 지도는 작성방법 등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난해하거나 평가용어의 혼용, 그리고 조사자에 따라 바이오맵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나고 있음</li> <li>- 바이오맵 자료는 그 생태계를 보전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 또는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아 사장될 가능성이 있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바이오맵 지도 선행</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대한 바이오맵 지도 제작 필요성 검토 및 추진 시 지원금 지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군·단양군이 2012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으나,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바이오맵 지도를 제작 해야 함</li> <li>-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도시비율이 높은 지역 보다는 자연경관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li> <li>* 2단계 :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li> <li>* 3단계 : 보은군, 영동군, 제천시, 충주시</li> </ul> </li> </ul> </li> </ul>

## ○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제거사업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로 유입된 외래식물종의 숫자는 1980년대에 110여종이었으나, 2002년에 이르러 총 281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 이후 5년간 추가로 유입된 외래식물종은 58종으로 전체 외래식물종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li> <li>- 외래식물 뿐만 아니라 그 외 생태계 교란종들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래종 서식 현황 정밀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외래종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li> </ul> </li> <li>▪ <b>외래종 관리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퇴치 활동</b></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대청호 생태습지원 조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건설에 따른 환경규제 피해지역 국가적 지원</li> <li>- 옥천군 면적 537.08km<sup>2</sup> 중 83.9%인 450.42km<sup>2</sup>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li> <li>- '81. 1월 대청호 가동 이후 30년 동안 옥천군에 발생한 8조 2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의 사업지원</li> <li>- 대청호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 및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장 마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댐(생태호)조성, 다단생태습지, 생태하천체험장 등 조성</li> <li>▪ 부댐 설치를 통한 수질정화공간 조성</li> <li>▪ 인근 4개 마을(동정, 화개, 지장, 안터)을 연계한 체험공간 및 학습장 조성</li> </ul>

### ○ 성과지표

- 생태지표종 서식지 비율(%)
- 멸종위기 종수
- 야생동물 보호구역 비율(%)

## 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li> <li>- 재난안전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수발생 재해건수</li> <li>▪ 홍수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인구수</li> <li>▪ 온열 질환자 수</li> </ul>
② 대기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 물질 인벤토리 구축·배출량 산정</li> <li>- 도로먼지 및 비산먼지 저감확대</li> <li>- 지역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li> <li>- 기후 변화 적응 역량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 배출량</li> </ul>

## □ 현황 및 여건

### ○ 충북의 안전위험요인 및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와 맞물려 충북 시·군내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재난 위험요인 증가. 급진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
- 신종 복합재난·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지진, 신종 바이러스 등)이 항시 우려되고 있으며, 교통수단, 등산, 스포츠, 축제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로 도민생활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향후 재난은 여러 재난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복합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 원인을 찾는 것에 용이하지만,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사전 대비하는 부분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슈퍼태풍, 지진, 가뭄, 폭염 등 극한기상현상 발생 대비 방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매년 피해가중 위험기후변화 적응 미흡 시 생태계, 농업, 건강 등의 리스크 가중

###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 2035년까지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 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체계적인 장기전략 수립
-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3대 목표: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환경
- 7대 전략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 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 신기후체계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수립

-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  
: 2030년 배출전망(BAU) : 8억 5,060만톤CO<sub>2</sub>-e
- 온실가스 감축방안4) -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 개선
- 산업계가 시장.기술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 규제정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17), 장기저탄소발전전략('18) 등 수립 예정

○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 광역시·도 및 전국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 “기후안전사회(Climature Friendly and Safe Society)” 구축전략 추진
-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의 확충,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물 공급 관리체계 조성,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경제구조로 체제 전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 강화 등

○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 충청북도의 2012년도 온실가스 총량은 31,303 천톤CO<sub>2</sub>eq으로 산정, 에너지 부문이 23,158 천톤CO<sub>2</sub>eq으로 74.0%의 배출기여, 다음으로 산업공정(2.9%) > 폐기물(1.8%) > AFOLU(1.3%) 순
- 에너지 부분과 산업공정의 배출기여가 96.9%로 상당히 높은 기여도, 산업공정의 배출기여가 2.9%나 되는 것은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크기 때문. 하지만 배출권관리업체로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가능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기여도 변화를 보면, 에너지 소비 부문의 배출기여가 다소 증가했고, 산업공정의 배출기여가 다소 감소

○ 충청북도 기후노출 전망

- 충청북도 각 시군의 2040년까지의 기후노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 홍수와 집중강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1일 최대 강수량,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횟수의 경우, 2040년이 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대폭 증가 예측

○ 충청북도 기후변화 전망

- 최대기온, 강수량 등 주요 기후변화 지표의 전망결과, RCP 8.5, RCP 4.5 시나리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강수량 25%정도 증가, 평균기온, 열대야일수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충북의 주요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현황**

-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대기분야 3296개소, 수질분야 3,38개소, 소음 및 진동분야 1,981개소로 나타남. 이는 2010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표8-6] 주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

(단위 : 개소)

구분	대기(가스·먼지·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전체	1종	2종	전체	1종	2종	
2010	2,700	68	108	3,027	23	28	3,544
2011	2,889	70	115	3,121	23	32	3,917
2012	2,810	60	101	3,060	22	31	3,969
2013	3,064	60	110	3,270	21	34	3,106
2014	3,117	58	105	3,335	24	32	1,998
2015	3,296	61	98	3,388	22	32	1,981

출처) 충북미래비전2040(기후환경)

○ **충청북도 대기오염 현황**

- 전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5년  $45\mu\text{g}/\text{m}^3$ 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반면, 충북은 2015년  $51\mu\text{g}/\text{m}^3$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평균치 이상임.
-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6년 연속(2008~2013) 전국 1위를 기록,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13.3%, 서울 대비 13.3%, 7대 광역도시 평균 대비 10.9% 높음.

**[표8-7] 미세먼지 농도 비교**

(단위 :  $\mu\text{g}/\text{m}^3$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평균	55	55	52	51	49	47	45	48	47	45
서울	60	61	55	54	49	47	41	46	46	45
7대광역도시평균	57	56	53	50	49	47	42	45	45	46
충북	57	62	61	61	62	56	51	52	52	51

주1) 평균값은 황사일자 제외 평균값

주2) 7대 광역도시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의미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2015), 각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 각시도별 통계연보(2012~)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 가능한 환경 조성

○ 충북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적응의 출발은 지속적인 감시와 예측체계 구축</li> <li>-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리스크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기후 조기탐지·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li> <li>- 부문별 수요자맞춤형 장기예보 전달체계 마련·운영</li> <li>- 가뭄 감시 및 전망, 홍수 대응 하천유역별 상세 수문 기상 예측정보 서비스,</li> <li>- 산악기상 관측망, 녹조, 미세먼지, 오존 등 이상 환경 장기예보 체계 구축 등</li> </ul> </li> <li>▪ <b>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원격탐사 기술, 무인관측 시스템, 인공위성 정보 등 첨단관측장비 활용</li> <li>-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감시체계 구축</li> </ul> </li> </ul>

○ 재난안전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신종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수</li> <li>- 실시간 스마트 재난·안전 정보 제공으로 복합재난 문제 해결 지원</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상호연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및 상황전파 실현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li> <li>▪ 종합적인 재난안전정보 제공과 IoT, GIS 등을 활용한 비정형 관측 데이터 활용</li> </ul>

○ 성과지표

- 홍수로 인한 재해 건수 및 이재민 수
- 온열질환자 수(폭염일수 대비 온열질환자 수)

## ② 대기환경 통합관리

### ○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에는 2014년 기준 3종 97개소, 4종 886소, 5종 1989개소의 중·소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요구됨</li> <li>- 충청북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의 합리적이고, 정량화된 배출량 산정 및 DB 구축을 통해 그에 적합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배출원별, 격자별로 세분화 하여 정확한 배출량을 산출하고 시스템 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보완 추진</li> <li>▪ 지역 특성에 따른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분석</li> <li>▪ 종 규모별·업종별 배출업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li> <li>▪ 국가 통계자료 및 타 지자체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비교·분석</li> <li>▪ 전문기관 용역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배출량 통계 조사 실시</li> </ul>

### ○ 도로먼지 및 비산먼지 저감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비산먼지는 많은 부분이 도로재 비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그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li> <li>-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재 비산먼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에 대한 저감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추진 시 진공청소차량과 살수 차량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 수립</li> <li>▪ 충청북도 도로먼지 제거 사업 추진 시 살수 차량 운영을 선 추진 대상으로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진공청소 차량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li> <li>▪ 살수 차량 운영 시에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li> <li>▪ 민·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노면 청소 및 비산먼지 제거 방안 모색</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지역특화 된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청북도의 경우 에너지 부분과 산업공정의 배출기여가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산업공정의 배출기여가 22.9%나 높은데 이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li></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문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li><li>▪ 화석연료에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보급 및 활용</li><li>▪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도 적극 활용 및 개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탄소포인트제도</li><li>- 탄소라벨제도</li><li>- ISO 14001</li></ul></li><li>▪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행</li><li>▪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저탄소 Green 한반도 선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상설 TF 설치 운영</li><li>- 국가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리를 선도하는 계획 수립 및 실천</li><l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li><li>- 온실가스 총량관리제에 대비한 준비체제 구축</li></ul></li></ul>

### ○ 기후 변화 적응역량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질소산화물 소량 배출 버너(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확대</li><li>▪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li><li>▪ 전기자동차 확충 및 충전시설 확대</li><li>▪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li><li>▪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li></ul>

### ○ 성과지표

- 대기오염 배출량(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

## 마. 포용적 환경설계로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 설계) 추진	▪ CPTED 인증 건 수
② 사회약자(여성 · 아동 · 노인 등)가 안전한 환경조성	- 주민협력형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	▪ 시군별 여성·아동·노인 친화 도시 건 수
③ 사람중심의 교통기반 조성하여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	-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체계 재검토 - 인구과소지역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 - 지역특성별 저비용 신 교통체계 서비스 공급 -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 안전제일의 선진교통문화 조성	▪ 무장애도시 설계적용 건수 ▪ 지역 내 인구대비 공원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 등의 비율

### □ 현황 및 여건

#### ○ 최근 10년간 충북지역 범죄 지표

- 2015년 충북 강력범죄 검거율은 96.9%, 폭력범죄 검거율은 85.6%, 지능범죄 검거율은 78.9%임
- 2015년 충북의 아동학대 사례는 64건으로 5년 전 대비 62.2% 증가하였고, 2015년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684건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충북 강력범죄는 총 68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전 724건 대비 5.1% 감소
- 2015년 충북 강력범죄를 항목별로 보면, 「강간」부문이 5년 전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살인」, 「강도」, 「방화」부문은 5년 전 대비 각각 29.2%, 58.7%, 39.7% 감소함
- 2015년 항목별 검거율은 「살인」(10.0%), 「강도」(93.0%), 「강간」(97.7%), 「방화」(86.8%)로 전체 96.9%의 검거율을 보임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표8-8] 충북 강력범죄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전대비	
								증감	증감률
합계	발생건수	724	738	685	712	711	687	-37	-5.1
	검거건수	638	604	584	642	673	666	28	4.4
	검거율	88.1	81.8	85.3	90.2	94.7	96.9	8.8	-
살인	발생건수	48	46	39	34	33	34	-14	-29.2
	검거건수	47	45	39	36	34	34	-13	-27.7
	검거율	97.9	97.8	100.0	105.9	103.0	100.0	2.1	-
강도	발생건수	104	108	83	54	55	43	-61	-58.7
	검거건수	95	92	71	51	57	40	-55	-57.9
	검거율	91.3	85.2	85.5	94.4	103.6	93.0	1.7	-
강간	발생건수	509	507	501	584	526	572	63	12.4
	검거건수	443	412	433	520	504	559	116	26.2
	검거율	87.0	81.3	86.4	89.0	95.8	97.7	10.7	-
방화	발생건수	63	77	62	40	97	38	-25	-39.7
	검거건수	53	55	41	35	78	33	-20	-37.7
	검거율	84.1	71.4	66.1	87.5	80.4	86.8	2.7	-

출처) 경찰청(경찰범죄통계)

- 2015년 충북 폭력범죄는 총 8,967건 발생했으며, 5년 전 대비 1.4% 증가함

[표8-9] 충북 폭력범죄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전대비	
								증감	증감률
합계	발생건수	8,046	8,717	8,464	8,382	8,430	8,967	921	11.4
	검거건수	6,397	6,594	6,660	6,620	6,964	7,673	1,276	19.9
	검거율	79.5	75.6	78.7	79.0	82.6	85.6	6.1	-
상해	발생건수	2,047	1,920	1,769	1,737	1,735	1,692	-355	-17.3
	검거건수	1,924	1,819	1,692	1,644	1,699	1,667	-257	-13.4
	검거율	94.0	94.7	95.6	94.6	97.9	98.5	4.5	-
폭행	발생건수	2,588	2,873	3,120	3,105	3,267	3,751	1,163	44.9
	검거건수	2,311	2,538	2,823	2,806	3,055	3,568	1,257	54.4
	검거율	89.3	88.3	90.5	90.4	93.5	95.1	5.8	-
폭력행위 등	발생건수	1,364	1,433	1,353	1,301	1,177	1,207	-157	-11.5
	검거건수	1,223	1,302	1,237	1,180	1,124	1,146	-77	-6.3
	검거율	89.7	90.9	91.4	90.7	95.5	94.9	5.3	-
손괴	발생건수	1,776	2,200	1,929	1,981	2,019	1,961	185	10.4
	검거건수	726	724	691	776	899	960	234	32.2
	검거율	40.9	32.9	35.8	39.2	44.5	49.0	8.1	-
기타	발생건수	271	291	293	258	232	356	-4	-1.1
	검거건수	213	211	217	214	187	332	-5	-1.2
	검거율	78.6	72.5	74.1	82.9	80.6	93.3	-0.1	-

출처) 경찰청(경찰범죄통계)

- 2015년 충북 지능범죄는 총 7,94건 발생하였으며, 5년 전 대비 32.3% 증가함

- 최근 5년간 발생건수를 보면 「횡령」부문이 81.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통화」부문은 53.9%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2015년 지능범죄 검거율은 78.8%로 「배임」부문에서는 96.8%의 검거율로 가장 높으며, 「통화」에서는 46.3%의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임.

[표8-10] 충북 아동학대

(단위 : 명,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전대비	
								증감	증감률
충북	아동인구	343,545	337,789	330,122	322,620	313,923	304,671	-38,87	-11.3
	아동학대사례	397	409	437	387	455	644	247	2.2
	피해아동보호율 (인구만명당)	11.6	12.1	13.2	12.0	14.5	21.1	9.6	-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 각년도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주) 아동은 만 17세 이하를 말함.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즉시 대응 및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법 및 장비 확보 및 연구 기반 구축
- 과학기술 범죄영향평가, 범죄정보 알림서비스, 범죄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구축 및 활용
- 로봇기술을 활용, 신체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착용형 로봇을 개발하여 현장경찰관의 현장대응력을 극대화
-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찰 활동에서 필요한 치안용 무인기 개발 등
- 치안과학기술사업 성장.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미래 유망 신사업 분야와 치안산업분야의 연관도도 높아지면서 국내 치안 산업 급성장
- u-City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u-Security가 정착 될 것
- 도시의 치안과 방법, 자연재해, 범죄·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분석해 관련 기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통해 침입감지, 버려진 물체 감지, 도난물체 감지, 자동 PTZ추적, 배회 물체 감지, 카메라 무단변경 감지 등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감시

#### ○ 아동보육

- 2012년 정부의 「아동학대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아동학대발생율은 27.7%로 전국6위로 보고되었음. 현 제도하에서는 발생율과 신고율 간 격차가 높는데 신고에 근거한 충북의 아동학대발견율은 2015년 아동 1,00명 당 2.32로 전국 1.32보다 높은 편임.

[표8-11] 아동관련지표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유아1000명당 보육시설 수	16.84	19.02	17.23	19.07	17.60	18.76
나홀로 아동비율(%)	22.0	-	36.0	-	37.0	-
아동학대 발견율	1.31	0.73	1.59	1.10	2.32	1.32
아동의 양육시설 보호인원	647	15,239	624	14,630	577	13,689

출처) 통계청(각 년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년도), 충북통계연보

## ○ 대중교통 문화의 다양한 문제 발생

-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욕구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의 한계, 이용자들의 불만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활밀착형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 보행약자 교통안전 문제 대응

- 최근 차량이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대응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학교주변 등의 교통취약지역 및 장애인 보조이동수단, 자전거 사용의 증가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급격한 사회변화 현상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수준임.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 ○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설계)추진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건축설계 및 도시 계획 과정에 경찰이 참여</li> <li>▪ CPTED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설계 시 빅데이터를 활용, 특정 범죄 발생 시간 및 장소, 범행의 장소적 특성, 기타 지리적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반영</li> </ul>

#### ○ 성과지표

- CPTED 인증 건 수 : CPTED 인증을 받은 인증 건수

### ② 사회적약자(여성·아동·노인 등)가 안전한 환경 조성

#### ○ 주민협력형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을 Neighborhood Watcher로서 역할을 하도록 역량강화</li> <li>-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조건하에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li> <li>- 치안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좀 더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 구축</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수요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및 치안 거버넌스 활성화</li> <li>- 도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다변화, 치안정보 공개 확대,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li> <li>-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범죄 전담조직 신설 등 다문화 사회 대응역량 강화</li> </ul> </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안전사회 구축</li> <li>-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li> <li>-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li> <li>- 학교 내 폭력과 미성년자 범죄 예방</li> <li>-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안전지대 확립</li> <li>-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대응 역량 강화</li> <li>- 충북 자치경찰청 설립</li> </ul> </li> </ul>

#### ○ 성과지표

- 시군별 여성·아동·노인 친화도시 건 수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③ 사람중심의 교통기반을 조성하여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

#### ○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체계 재검토

사업의 개요
- 인구 과소지역은 수요대응형 교통체계와 공유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생활에 필요한 교통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도록 인구과소지역 최소 교통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 버스운행체계를 재검토하여 단계별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적용.</li> <li>▪ 지역 내 관광지 등 외부인 접근 수요지에 고정 버스 노선 확충.</li> </ul>

#### ○ 인구과소지역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과소지역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도입.</li> <li>▪ 인구과소지역 자율주행 공유차량 도입.</li> </ul>

#### ○ 지역특성별 저비용 신 교통체계 서비스 공급

사업의 개요
- 주변도시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청 광역도시권내 도시간 순환 대중 교통체계를 완성하여 충청 광역권 주요 도시간 1시간 이내 통행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세종시간 대중교통축 확보.</li> <li>▪ 혁신도시~진천.음성(읍.면, 산업단지) 연결 대중교통수단 확보.</li> <li>▪ 충주시.제천시 신교통수단(트램 등) 설치.</li> <li>▪ 신교통수단과 기존 도시 내 대중교통과의 연계환승체계 구축.</li> <li>▪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거점에 무인 공유 교통 서비스 공급</li> <li>▪ 도시 내 개인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li> </ul>

#### ○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li> <li>▪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지속 확충</li> <li>▪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li> <li>▪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li> <li>▪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대중교통카드 이용률 확대</li> </ul>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계절별交通安全대책 추진</li> <li>▪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 및交通安全 교육</li> <li>▪ 민관경 합동단속 TF팀 운영</li> </ul>

○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li> <li>▪ 지방도交通安全시설 보강사업</li> <li>▪ 위임국도 유지관리 및 정비</li> <li>▪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강화</li> <li>▪ 도로 순찰 강화, 특별 제설반 운영</li> </ul>

○ 안전제일의 선진교통문화 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交通安全 5개년 기본계획 수립('22~'27)</li> <li>▪ 교통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관리 점검</li> <li>▪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 및 도민交通安全 교육</li> </ul>

○ 성과지표

- 교통사고 건수

바. 혁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기반 마련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새로운 재난 유형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마련	- 첨단 기술기반 스마트 재난안전 도시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장애 요인 통계</li> </ul>
② AR/VR 기술 활용한 재난 안전 교육 및 체험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VR 체험 및 교육 시설 수</li> <li>▪ AR/VR 체험 및 교육 이용자 수</li> </ul>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첨단 기술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기반으로 회복력강화를 위한 보강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우선</li> </ul> </li> <li>- 첨단 ICBM 기반 사전예방 구현</li> <li>- 고정밀·고신뢰 센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재난 빅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플랫폼 기술 적용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부문별 실효적 예방인프라 구현</li> <li>▪ 신규 재난안전 사고에도 신속한 대응</li> <li>▪ 태풍, 홍수, 폭설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시스템 개선</li> <li>▪ CCTV를 하나의 센서로 활용해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는 기술과 지능형 자동영상감지 기술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li> <li>▪ 무인기술/사물인터넷을 통해 무인항공기 및 드론, 방사능 상시감시체계 구축, 지능형 기상변화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등</li> <li>▪ 가상현실(AR/VR) 및 인공지능 기술로 재난대응용 소방대원 가상현실기반 훈련 시뮬레이터, 인공지능 기반 통합적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 등</li> </ul>

○ 성과지표

- 네트워크 장애요인 통계
- AR/VR 체험 및 교육 시설 수
- AR/VR 체험 및 교육 이용자 수

## 사.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거티브 방식의 충북 주민참여 법 제도 정비</li> <li>- 모든 단위 행정에 주민참여 사다리 놓기</li> <li>- 주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성과 계약제</li> <li>- IoT기반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li> <li>- CPS 기반 주민참여통합 오픈 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율</li> <li>▪ 거버넌스 구축율</li> </ul>
②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혁신가 양성</li> <li>-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마을기업)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사회적 경제주체 수</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동안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실현해 나감.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행정과정(정책결정과 서비스생산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생산에 관여하는 지방행정체계 구현.
- 지방행정의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주민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평가하고 유인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지방행정체계 구현.
- 미래의 지방자치행정이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초공간·초지능을 실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실현해야 함.
-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보다 편리하고, 지능적이며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최적의 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능화 되어야 함.
- 지역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
- 자본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추구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 필요.
-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수요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

○ 네거티브 방식의 충북 주민참여 법 제도 정비

사업의 개요
- 주민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이 없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 문턱 없는 지방자치관련 법 개정 운동'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를 전국 최초로 충북이 주도</li> <li>▪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참여하여 모든 법, 제도, 행정업무절차 등에서 주민참여 걸림돌 찾기 플래그십운동(Flag ship)</li> <li>▪ 『주민참여 조례』 제정</li> <li>▪ 충청북도에 '주민참여 전담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직 설치</li> </ul>

○ 모든 단위 행정에 주민참여 사다리 놓기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행정부서 및 행정업무 단위에서 가장 적합한 주민참여 방식을 정하고 운용</li> <li>- 법제도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일 중심의 참여토대 구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행정단위에서 참여사다리 놓기를 위한 『참여혁신계획(Reinventing for Participation)』 수립</li> <li>▪ 『참여혁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li> <li>▪ 최소 『1 부서 1 참여 수단』 선정 및 시행</li> </ul>

○ 주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성과 계약제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성과를 행정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주민이 주도하여 평가하고 성과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현</li> <li>- 진정한 의미의 운영시스템 차원에서 주민주권실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주도 성과계약제 조례』 제정 및 시행</li> <li>▪ 공무원 업무성과평가 및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 정립</li> <li>▪ 지방재정의 '성과주의예산' 및 '예산결산'과 연계</li> <li>▪ 『성과계약제 민관협력기구』설치</li> </ul>

### ○ IoT기반 첨단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의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참여지능'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적화 실현</li> <li>- 행정의 지능화와 주민참여의 지능화를 동시에 구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지방자치를 위한 『IoT네트워크 구축』</li> <li>▪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들을 단계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li> <li>▪ 지능형 주민참여를 위한 'IoT 테스트베드 구축'</li> <li>▪ '스마트도시',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 팜' 등과 연계하여 구현 확대</li> </ul>

### ○ CPS 기반 주민참여통합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행정부서 및 행정업무 단위에서 가상공간과 실제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주민참여의 초공간화와 초지능화를 구현</li> <li>- 주민이 원하면 온 - 오프라인이 동시에 연동되어 참여와 서비스 실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지방행정 『CPS오픈 플랫폼 개발과 구축계획』 수립</li> <li>▪ 『CPS오픈 플랫폼』상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세부 응용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확대</li> <li>▪ CPS기반 '주민참여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방된 개발과 확장 추진</li> </ul>

### ○ 성과지표

- 도시계획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율
- 거버넌스 구축율

②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혁신가 양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제3섹터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사회에 일자리 분야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예상되어짐</li> <li>- 지역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보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기술 기반 신기술, 사회서비스 등과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연계 활용하는 미래 산업수요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li> </ul> </li> <li>▪ <b>사회적 경제 청년창업 공모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 산업수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li> </ul> </li> <li>▪ <b>사회적 경제 조직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인력 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의 양성 및 전문화 시스템 구축</li> </ul> </li> </ul>

○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양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로 삶의 질 저하</li> <li>- 자본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추구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 필요</li> <li>-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수요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발굴, 육성</li> <li>▪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li> <li>▪ 사회적 경제조직 다양성 강화 : 도시재생사업, 아동 돌봄과 마을기업의 연계 등</li> </ul>

○ 성과지표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 수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현황 분석

## 아. 주민안전권 보장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단위 생활 안전사고 건수</li> </ul>
② 마을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응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 인프라강화</li> <li>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구축</li> </ul>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 ○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기반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충북미래 재난안전 대응전략 수립(Master Plan), 선제적 예방대책 강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li> <li>43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보완·개선(자연 9, 사회 20, 안전관리 14)</li> </ul> </li> <li><b>사고·재난 대처 대국민안전교육 인프라체계 구축('17. 5. 30 법 시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찾아가는 안전교육(80회) 등</li> <li>AR/VR기술을 적용한 체험 및 교육 시설 구축</li> </ul> </li> <li><b>주민생활과 부합하는 민방위 훈련실시(민방공위주·특성화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방공대피(8월)·지진대피(4, 10월)·재난대비훈련(3, 5, 9, 10월)</li> </ul> </li> </ul>

#### ② 마을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응 능력 향상

##### ○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 인프라강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이론위주 재난 방재교육의 실천적 체험교육으로 대폭 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업무종사자, 태풍·지진·화생방·응급처치 등 안전체험관 위탁교육</li> </ul> </li> <li><b>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목표 632지구 79% → 134지구 8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위험개선 17지구 375억원, 급경사지붕괴 위험정비 14지구 95억원</li> </ul> </li> <li><b>안정적, 미래지향적 하천정비추진 ('17목표 32.4% → 34.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수립 4개소 31.5km, 하천정비 19지구 650억원, D/B구축 등</li> </ul> </li> <li><b>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도민만족 하천관리('17목표 52.4% → 5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하천정비 44지구 17.4km 418억원, 유지보수 174개소 2,346km 53억원</li> </ul> </li> </ul>

○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구축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훈련 강화로 재난의 초기대응태세 완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5월), 민관협력체계구축, 재난심리회복지원 확대</li> </ul> </li> <li>▪ <b>국가안전대진단 대대적 실시(2.6 ~ 3.3, 54일), 안전신고 붐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40년 노후시설 안전등급검증제 시범실시</li> </ul> </li> <li>▪ <b>특별사법경찰 수사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적법수사 능력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구축, 수사실무 매뉴얼 제작 등</li> </ul> </li> </ul>

○ 성과지표

- 마을단위 생활 안전사고 건 수

## 자. 생활양식의 변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자원 환경에너지 타운조성 및 중복형 자원순환 마을 조성</li> <li>- 폐자원 통합관리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발생량</li> <li>▪ 산업폐기물 발생량</li> <li>▪ 폐기물 재활용량</li> <li>▪ 녹색기업 인증건수</li> </ul>

□ 주요사업

① 환경보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폐자원 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및 중복형 자원순환 마을 조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확보와 폐기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가능</li> <li>- 사업장 폐기물은 재사용률이 높은 것도 있으나, 분뇨, 정화조 오니, 주방쓰레기 등은 대부분 재사용이 되지 않음</li> <li>- 폐기물을 처리 및 자원화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사회시스템보다는 모든 기술과 여건이 조화된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구축인 순환형 사회시스템이 필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폐자원의 에너지화 구축 방안 제시</li> <li>▪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별 에너지화 기술 분석과 에너지 형태별 회수 현황 분석</li> <li>▪ 산·학·연 협력체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공공부문에 설치 의무화를 통한 보급 확대, 세제 및 보조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조성 등을 통한 참여 유도가 필요</li> <li>▪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는 매립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기술로 향후 확대 필요</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순환이용 장려와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 인프라 구성, 각종 자원절약 프로그램 및 자원회수체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li> <li>- 폐자원의 효율적인 에너지화로 환경문제 해결과 도민 소득도 동반성장</li> </ul> </li> </ul>

## ○ 폐자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는 폐기물 배출자 별도 신고 접수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li> <li>- 재활용 운영관리정보시스템, 울바로시스템 등 현재 국가차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한 정보지원 서비스 확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li>- 폐제품 발생량, 제품별 수거체계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수집·운반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시·군별로 지역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 통합DB에 폐자원 DB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li> <li>▪ 사용자 중심의 통계정보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며 이용 목적에 따른 사용자 층을 구분하고, 구분된 사용자 층별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함.</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자원 시스템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폐자원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li> <li>- 폐자원의 체계화된 관리로 폐자원 이용 확대</li> </ul> </li> </ul>

## ○ 성과지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산업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량
- 녹색기업 인증건수

### 3. 사회영역 세부 이행계획

#### 1) 사회영역 이행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회적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시장경제의 생산성, 출산율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가정의 역할이 원활하게 선순환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경제의 양극화 심화로 빈곤과 소득불평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고령화로 경제·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 가정의 재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2) 사회영역 이행계획의 기본방향

- 2030년 SDGs의 사회영역 기본방향성은 『빈곤, 형평성, 건강, 복지, 다양성, 삶의 질, 공동체, 평생교육, 불평등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정책 목표들을 위해 환경·경제·사회를 토대로 하여 SDGs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함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계획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형평성을 기준으로 일반적 복지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넘어 자립과 자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고 있음
- 이에 사회영역 기본방향성을 자립 및 자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실행계획을 수립함.

## □ 사회영역 정책범주 및 이행계획

분야	정책범주	세부 이행계획	주요사업
빈곤 퇴치	1. 자립기반 강화	① 빈곤격차 해소	-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②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 - 노인주거, 1인 가구,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 - 지불 가능한 저렴한 주택 보급
지역 간 격차해소	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	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간 문화적 권리 보장	- 외국인 정착지원 및 이주민 존중사회 조성 - 이주민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권리 확산을 위한 예술 교육 - 문화도시·문화마을 확대 조성
		②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 주민 밀착형 취업지원체계 구축
여성 참여	3.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실시
		②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 적극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확대 - 능동적 양성평등정책 확산
		③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통해 인권을 보장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인프라 확대 - 여성인권보호 및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④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과학치안 운용체계 정비 - 치안 R&D 및 치안산업 육성 - 도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불평등 해소	4. 불평등 해소를 근로환경 보장	①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 -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기반강화
		②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 충북형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추진
		③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취약계층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
교육	5. 지속가능한 교육	①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학습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기반 확대
건강	6. 건강한 삶 향유	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보장	- 지역중심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 차단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질환 예방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환경조성
		③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공공의료 기반 구축 -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

### 3) 정책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 가. 자립기반 강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빈곤격차 해소	-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가입율</li> <li>건강보험 가입율</li> <li>시군별 재정자립도</li> <li>기초생활 수급자 수</li> </ul>
②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li> <li>노인주거, 1인 가구,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li> <li>지불 가능한 저렴한 주택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수</li> <li>공공임대주택 보급률</li> <li>공공임대주택 신청건수 대비 대기 건수</li> <li>슈바베지수</li> </ul>

#### □ 현황 및 여건

- 충북 지니계수 : 0.358720(2010년) → 0.343298(2014년), 4.3% 소득분배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수급자수 및 비중 감소 : 3.7%(2010년) → 3.4%(2015년)
- 충북형 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산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공공 공간의 개방성 확대 및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상호 소통하는 공유도시 창조
- 저에너지 소비형의 스마트도시 시스템으로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녹색 친환경주택을 적극 보급, 스마트 친환경 녹색도시 창조
- 인구 구성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주택시장의 안정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빈곤격차 해소

-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지원</li> <li>위기가구 선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li> <li>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li> <li>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li> </ul>

##### ○ 성과지표

-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율
- 기초생활 수급자 수
- 시군별재정자립도

## ②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li> <li>▪ 신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축 지원</li> <li>▪ 친환경 주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기술 개발 지원</li> </ul>

### ○ 노인주거, 1인 가구, 전원주택, 동호인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형 실버임대단지 조성</li> <li>▪ 청년 및 여성안심 공공임대 주택 시범사업</li> <li>▪ 2.5세대 주택 등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신유형의 주택 보급 지원</li> </ul>

### ○ 지불 가능한 저렴한 주택 보급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동홈, 공유주택 마련</li> <li>▪ 중소형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li> <li>▪ 세입자 보호 정책 실시</li> </ul>

### ○ 성과지표

- 공공임대주택 수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 공공임대주택 신청건수 대비 대기건수
- 슈바베지수

## 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간 문화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정착지원 및 이주민 존중사회 조성</li> <li>- 이주민 갈등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li> <li>- 문화권리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li> <li>- 문화도시·문화마을 확대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인구 유입율</li> <li>▪ 이주민 인구현황 및 경제활동 참여율</li> <li>▪ 시군별 문화예술공간 수</li> <li>▪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li> </ul>
②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밀착형 취업지원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주민 취업률</li> <li>▪ 시군별 노인연금 수급자 수</li> </ul>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간 문화적 권리 보장

## ○ 외국인 정착지원 및 이주민 존중사회 조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적인 외국인력 유입 필요성 증대 및 기 유입된 외국인을 위한 주거, 행정, 문화적 조치 필요</li> <li>-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며 생활하기 어려움.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여 지역민과 공감하며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li> <li>- 인종, 문화의 괴리를 뛰어 넘어 서로 이웃이 되는 열린 태도 및 문화 조성</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위한 충북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치 참여 및 공공기관 외국인 채용 쿼터제</li> <li>- 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임대 쿼터제 또는 행복주택(조례제정)</li> <li>-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충북 내 정착을 위한 취업지원</li> <li>-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li> </ul> </li> <li>▪ 지역주민과 외국인 상호 간 교류협력 및 화합 프로그램 확대</li> <li>▪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의 어울림인 하모니데이(3.21 인종차별철폐의 날)개최</li> </ul>

○ 이주민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세대, 다인종 및 계층 양극화에 따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증가 예상됨</li> <li>- 공공과 민간 간 발생하는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li> <li>-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며 지자체의 신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갈등 예방 계획 수립</li> <li>▪ 공공갈등 조정관(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갈등예고제, 갈등관리평가 정례화</li> <li>▪ 정책 세대별(연령대별) 영향평가 제도 마련 및 실시</li> </ul>

○ 문화권리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삶을 누리고 예술을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인식확산 필요</li> <li>- 예술 작품 이해를 위한 레토릭 등의 교육을 통해 예술 향유</li> <li>- 예술 향유를 통해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확보 확산</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화 진행</li> <li>▪ 인권개념을 중심으로 한 프로토콜 마련</li> <li>▪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다양한 문화예술 즐기기 시작</li> <li>- 2단계 : 시범프로그램 실시(청소년, 성인, 노인 및 지역별 등)</li> <li>- 3단계 : 예술 레토릭에 대한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확산</li> </ul> </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li> </ul> </li> </ul>

○ 문화도시·문화마을 확대 조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와 문화마을의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li> <li>- 정부계획을 반영하여 충북의 차별적 지역 문화 환경 조성과 수혜 확대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문화마을 신규 조성 등을 적극 추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마을 조성 육성 방안 수립</li> <li>▪ 권역별 문화도시 지정 육성</li> <li>▪ 충북지역의 문화기반을 토대로 문화마을 신규 조성 추진</li> <li>▪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군별로 문화적 대표기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문화도시 지정 육성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요청</li> <li>-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보다 이색적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추진</li> </ul> </li>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li> </ul> </li> </ul>

○ 성과지표

- 시군별 인구 유입율
- 이주민 인구현황 및 경제활동 참여율
- 시군별 문화예술공간 수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

## ②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 ○ 주민 밀착형 취업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온-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취업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은 낮은 실정</li> <li>- 향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행정서비스에 접목되는 경우 공공부문의 유휴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휴인력의 취업지원서비스분야 활용 검토 필요</li> <li>-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고용률 제고</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li> <li>▪ 주민자치센터 취업정보카페 설치</li> <li>▪ 주민자치센터 취업상담사 배치</li> <li>▪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및 민간 취업정보망을 연계하는 통합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li> <li>- 행정분야 유휴인력 재배치 및 취업상담사 역량 강화</li> <li>- 주민자치센터 온-오프라인 취업정보카페 설치 및 취업연계서비스 제공</li> </ul> </li> </ul>

### ○ 성과지표

- 시군별 주민 취업률
- 시군별 노인연금 수급자 수

## 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위원회의 관리직 여성 비율</li> <li>▪ 여성직장인 평균 연봉</li> <li>▪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li> </ul>
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확대</li> <li>- 능동적 양성평등정책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자 성비</li> <li>▪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li> </ul>
③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통해 인권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인프라 확대</li> <li>- 여성인권보호 및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범죄 발생율 및 피해자 성비</li> </ul>
④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치안 운용체계 정비</li> <li>- 치안 R&amp;D 및 치안 산업 육성</li> <li>-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걸을 때 안전하다 느끼는 사람의 비율</li> <li>▪ 위험환경 개선율</li> <li>▪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산재된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적·제도적 통합 및 효율적 여성일자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여성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발굴, 산업현장 구인·수요 적시파악, 구인업체 육구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 시행 등으로 여성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
- 가정 내 성별 간 양육 및 가사노동 분담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양성평등의식 개선
- 모든 근로자의 직장 내 양육지원제도의 공평한 활용으로 가족생활지원 확대 및 가족 간 유대 강화
-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차별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평등하고 공정한 배분과 연결된 것으로 남, 녀 모두의 기회와 참여를 전제로 함
- 아동 및 여성 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흉포화 되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치안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과학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장비와 기법으로 치안 활동 강화하고자 함.
- 갈수록 치안위험 요인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한정된 경찰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치안안전을 구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지역 내 어디가 언제 위험한지, 치안 약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지역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역량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 ○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실시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산재된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적·제도적 통합을 통해 효율적 여성일자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li>- 따라서 여성고용 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여성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발굴, 산업현장 구인수요 적시파악, 구인업체 욕구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 시행 등으로 여성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등 네트워크구축</li> <li>▪ 여성고용대책 실무협의회(사무국 설치·운영)</li> <li>▪ 충북형 여성희망 일터 지원 사업</li> <li>▪ 여성 구인·구직 노동수요 조사 및 유망직종 개발</li> </ul>

#### ○ 성과지표

- 각종 위원회의 관리직 여성 비율
- 여성직장인 평균 연봉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적극지원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내 성별 간 양육 및 가사노동 분담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양성평등의식 개선 동반 필요</li> <li>- 모든 근로자의 직장 내 양육지원제도의 공평한 활용으로 가족생활지원 확대 및 가족 간 유대 강화</li> <li>- 보육인프라가 갖추어졌어도 0~1세아의 가정양육은 여전히 중요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껏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정착</li> <li>▪ 영유아 양육지원 가정방문서비스 실천(아이돌보미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통합지원서비스)으로 월령에 따른 방문지원 차등화</li> <li>▪ 3세대 동거 및 근거리 거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보육의 보완 또는 가정양육 시 육아부담을 덜고, 고령노인세대에 대한 돌봄의 편의성 증가로 가족 내 돌봄 가능한 환경을 지원하여 상호 돌봄 체계 마련</li> </ul> </li> <li>▪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산후도우미 보편적 지원(법률개정 필요)</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능동적 양성평등정책 확산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지위나 권한의 차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별 불평등이 잔존하는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발전은 한계가 있음</li> <li>-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차별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평등하고 공정한 배분과 연결된 것으로 남, 녀 모두의 기회와 참여를 전제로 함</li> <li>- 사회의 다양한 갈등 심화로 인해 성불평등 문제의 주변화 가능성이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질적 수준 제고, 성인지교육의 내실화</li> <li>▪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대책 수립</li> <li>▪ 생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 정책 개발</li> <li>▪ 사회서비스, 돌봄 등 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조건과 구조 개편</li> </ul>

### ○ 성과지표

- 육아휴직자 성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③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통해 인권보장

###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인프라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청주시와 충주시로 편중되어 있고 한 곳도 없는 시군이 존재함. 전국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적정 분포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나, 충북의 경우는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가 확충되는 것이 필요함.</li> <li>- 이주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통역지원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상담소 설치</li> <li>▪ 인근지역 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 기 설치된 지역의 경우 인근 시군에 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li> <li>▪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66에 이주여성 상담원을 채용하여 폭력피해 상담 및 지원 제공</li> </ul>

○ 여성인권보호 및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안심귀갓길 조성사업</li> <li>한부모가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li> <li>다문화가족 지원</li> <li>아이돌봄서비스, 워킹 맘·대디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 성과지표

- 중대범죄 발생률 및 피해자 성비

④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과학치안 운용체계 정비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과학기술 활용 치안활동 인프라 구축, 과학수사 역량 확대</li> <li>-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가시적·물리적 위주의 치안활동을 '비가시적·비물리적' 위주의 효율적 치안 활동으로 전환</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첨단 범죄예방·검거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과학적 범인 식별장치를 개발하여 사전에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한편,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ul> </li> <li> <b>가상사회 대응체계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과학 복지 기술 도입 : 모바일 친(親)고령 서비스 제공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감시 장비 보강, 치매노인을 위한 초소형 칩 제작 및 사물인터넷용 센서 개발 등 첨단과학 기술을 노인 복지 정책에 적극 활용</li> </ul> </li> <li> <b>빅데이터 활용 치안활동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정보시스템, 112신고자료, CCTV, 교통정보 등 각종 치안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 하여 '범죄위험지역 예측을 통한 방범전략 수립', '사건 발생 후 신속한 범죄자추적' 등에 활용</li> </ul> </li> <li> <b>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치안기능 첨단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 활용 첨단기술을 경찰 제반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 신속한 초동조치 및 범인검거 도모</li> </ul> </li> <li> <b>자율 주행 차량 및 무인비행장치(Drone) 관리 방안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 자동차 규격, 성능, 안전성 및 단속 기준 등을 마련하고, 무인 비행장치의 신고·등록 절차,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추적 장치, 카메라 사용 제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li> </ul> </li> </ul>

○ 치안 R&D 및 치안 산업 육성

사업의 개요
-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치안과학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관련 정책연구 및 첨단 기술·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국립치안과학원」을 유치</li> </ul> </li> <li>▪ 민간 기업의 치안관련 기술 개발 시 연구 기획 단계부터 '상용화·상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치안 산업 육성</li> <li>▪ 과학기술 분야 R&amp;D 전담기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수사는 사후대응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 및 장비 확보</li> </ul> </li> </ul>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li> <li>- 치안 거버넌스 활성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민주체 참여치안, 공동체 예방치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다변화하고 치안정보 공개 확대 등</li> <li>-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li> </ul> </li> <li>▪ <b>사회적 약자 보호로 사각지대 해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등 치안 사각지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행정적 치안 활동 전개</li> <li>-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대응</li> </ul> </li> <li>▪ <b>다문화 사회 대응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 전담조직 신설, 외국인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 강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 설치</li> </ul> </li> </ul>

○ 성과지표

- 혼자걸을 때 안전하다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위험환경 개선을
-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 라. 불평등 해소로 근로환경 보장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장애인의 일할 권리보장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 -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기반강화	▪ 장애인 취업율
②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 충북형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추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③ 평등한 기회와 근로 근로환경 보장	- 취약계층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노동취약계층(노인, 청년, 장애인) 고용율 ▪ 여성 취업율

###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 ① 장애인의 일할 권리보장

#####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li> <li>▪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li> <li>▪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li> </ul>

##### ○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기반 강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연금·수당·의료비 지원 확대</li> <li>▪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li> <li>▪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li> </ul>

##### ○ 성과지표

- 장애인 취업률

## ②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

### ○ 충북형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추진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활용으로 인간의 일자리 대체 전망</li> <li>-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 아무런 조건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급여지급은 노동 압박에서 일정 정도 해방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보장</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논의 및 단계별 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기본소득제(안심소득제) 담론 형성</li> <li>- 2단계 : 기본소득제(안심소득제) 시행방식 선정</li> <li>- 3단계 : 시범적용(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그룹)</li> <li>- 4단계 : 시범적용 검토 후 정책 반영</li> </ul> </li> <li>▪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도민 소득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제고</li> </ul> </li> </ul>

### ○ 성과지표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 ③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 취약계층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고도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li> <li>-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약계층 고용차별 관행 해소를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전개</b></li> <li>▪ <b>취약계층 신일자리 영역 발굴,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등 자립 능력 향상 지원 시책 추진</b></li> <li>▪ <b>근로시간 유연화 및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작업 및 휴식공간 환경개선 등 취약 계층 근로환경 개선시책 마련·추진</b></li> <li>▪ <b>추진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 영역을 발굴하여 관련 분야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li> <li>-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별 근로환경개선 수요조사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li> </ul> </li> <li>▪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참여 촉진</li> <li>- 취약계층 고용차별 관행 철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함께 일하는 사회 실현</li> </ul> </li> </ul>

○ 성과지표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노동취약계층(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용율
- 여성 취업률

마. 지속가능한 교육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 학습네트워크 구축</li> <li>-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기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참여형 교육·행정 거버넌스 구축율</li> <li>▪ 지속가능발전 교육투자 예산</li> <li>▪ 지속가능발전 교육 참여 도민수</li> </ul>

□ 배경 및 필요성

- 교육정책은 도민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기본적 필수요소임.
- 도민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교육사업과 지역 특화 교육 사업을 통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교육에 대한 도민수요 및 욕구가 증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사업

○ 생활밀착형 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학습네트워크 지원 강화</li> <li>- 공공 및 민간도서관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생애별, 지역의 특성별 학습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구축</li> <li>-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범도민 독서문화 운동추진</li> <li>-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내실화</li> <li>- 평생학습 세미나 및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연수</li> </ul> </li> <li>▪ <b>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li> <li>-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li> </ul> </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기반강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교육서비스 기반확대 및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li> <li>-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취약계층에게 평생학습 기반 마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약계층의 평생교육서비스 기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li> <li>-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개편 : 생활문화프로그램 주·야간 확대 운영</li> <li>-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사회 재참여 유도 프로그램 구축</li> <li>-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강화</li> </ul> </li> <li>▪ <b>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구축 및 연계</li> <li>-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li> </ul> </li> </ul>

### ○ 성과지표

- 도민 참여형 교육·행정 거버넌스 구축율
- 지속가능발전 교육 투자 예산
- 지속가능발전 교육참여 도민 수

## 바. 건강한 삶 향유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심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li> <li>-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환자 수</li> <li>▪ 독감예방접종자 수</li> <li>▪ 암질환 사망률</li> <li>▪ 흡연률</li> </ul>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질환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환경조성</li> </ul>	
③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 기반 구축</li> <li>-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수 및 병원 병상 수</li> <li>▪ 건강검진 수검율</li> <li>▪ 행복지수</li> </ul>

## □ 현황 및 여건

### ○ 지역보건의료 기반시설

- 지역의료시설 : 병의원 2010년 1,457개에서 2015년 1,641개소로 184개소 증가
  - 주로 의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 증가
  - 지역의료시설의 경우 주로 도심에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 필요

[표8-12] 지역의료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특수 병원	부속 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010	1457	10	35	768	309	325	6	4
2013	1547	11	37	774	346	364	6	9
2015	1641	12	37	811	376	389	6	10

출처) 충청북도 통계연보

-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14개소, 보건지소 96개소, 보건진료소 158개소
- 의료시설 종사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의 영향으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2010년 1,167명 → 2015년 14,947명
- 응급의료체계 현황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정보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
  - 충북의 응급의료기관은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균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시급

[표8-13] 응급의료기관 수(2015년)

(단위 : 개소)

구분	계	권역응급	전문응급	지역응급	지역응급	응급의료기관외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기관
전국	546	20	2	124	274	126
충북	21	1	-	3	13	4
비중	3.8	5.0	-	2.4	4.7	3.2

출처) 충청북도 미래비전2040(보건복지)

○ **보건의료분야의 첨단화**

-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관리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
  - 만성퇴행성질환의 대두로 환자의 자기관리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이 활용될 것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음
  - 로봇을 활용한 운동 코치의 보급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활용 증가

○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대두**

-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요구됨
-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확대할 것임

○ **고령화 관련 복지수요와 공급**

- 고령화지수 대비 복지자원의 부족
  - 고령화지수는 2016년 106.7명으로 전국(94.1)에 비해 높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복지 관련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나 여가복지시설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 고령화지수는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데 반해 노인여가복지시설 비율은 전국 수준의 절반이며 매년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가 시급함
  - 치매노인 및 초고령화로 인한 와상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요양시설 수의 증가추세가 열악함. 요양원 뿐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등의 증설이 필요함
  - 노인관련시설의 시 지역 편재로 농촌지역 형편이 열악하여 고령화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및 균형성 확보가 시급함

[표8-14]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지표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노인100명당 여가 복지시설 비율	13.47	7.44	12.98	7.18	12.46	6.86
노인요양시설수(개)	2468	-	2528	-	2574	-
노령화지수	97	83.3	101.9	88.7	106.7	94.1

출처) 통계청

□ 이행계획별 주요사업

①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및 예방강화

○ 지역중심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위험군 만성 질환자를 선별하고 조기중재를 하려고 시도하나 고위험군의 발견에만 그치고 개인별 적합한 사후관리는 힘든 실정</li> <li>-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를 연계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li> <li>▪ 지역의료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문제를 개인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U-Health care, 정밀의료 포함)</li> </ul>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 차단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기반구축</li> <li>▪ 국가 암 검진 사업(5대 암)</li> <li>▪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인공수정 등)</li> </ul>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 환경 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li> <li>▪ 결핵 예방관리 및 조기퇴치</li> <li>▪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li> </ul>

○ 성과지표

- 결핵환자 및 독감예방접종자 수
- 암질환 사망률 및 흡연율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장 및 예방강화

○ 공공의료기반 구축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li> <li>▪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료 해외진출 추진</li> </ul> </li> <li>▪ 외국인환자 유치 설명회</li> <li>▪ 충북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관 운영</li> </ul>

○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li> <li>-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li> </ul> </li> <li>▪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li> <li>▪ 구조 및 응급처치 도민교육</li> </ul>

○ 성과지표

- 병원 수 및 병원 병상 수
- 건강검진 수검율
- 행복지수

## 4. 경제영역 세부 이행계획

### 1) 경제영역 이행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 UN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채택되고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성 등 포함하는 목표를 설정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도 발전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임.
-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환경, 경제, 사회와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향성을 같이하고, 충청북도가 이행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 경제영역 이행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 충청북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장은 극대화 되고 그것을 통해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며 세대내 세대간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됨.
- 따라서 충청북도는 생태적,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자원의 활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적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과제와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함.

## □ 경제영역 정책범주 및 이행계획

분야	정책범주	세부 이행계획	주요사업
일자리 창출	1.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성장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 - 취약계층 고용확대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
		② 청년 일자리 환경제공	-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일할 권리 지원기관 운영 - 청소년 직업 체험관 설치
		③ 지역주민 및 청년 인재발굴	- 창의인재 교육시스템 전환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 미래대응 직업진로교육 확대
근로 환경	2. 근로환경보장	①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기술적 실업 대응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② 상생의 지역경제 확대	- 4차 산업혁명 수요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최적형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산업 기반	3. 산업기반 강화	① 지역 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 충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공유자원 발굴 및 비즈니스 문화 /모델 확산 - 공유경제기업 육성 및 규제적 제도 개선 - 충북형 제조업의 서비스 가치 사슬화 -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4.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 구축	①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 6+3 산업기반 신영역발굴 - 충북형 제조업의 서비스 가치 사슬화 - 도전적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 - 충북형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공동체	5. 지속가능한 공동체	① 마을주민 주도 경제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자생력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조성
농촌 경제	6.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유지	- IoT기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팜 확대 - 농업생태계 변화 대응 - 식품가공 및 초고속 유통 혁신 -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맞춤복지확대 - 농업 6차 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
		② 로컬푸드 이용 증대	-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기반조성

### 3) 정책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 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성장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li> <li>- 취약계층 고용확대</li> <li>-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임금수준 근로시간</li> <li>▪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li> <li>▪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li> </ul>
② 청년 일자리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인권보호 및 일할 권리 지원기관 운영</li> <li>- 청년 직업 체험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고용률</li> </ul>
③ 지역주민 및 청년 인재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인재 교육시스템 전환</li> <li>-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li> <li>- 미래대응 직업진로교육 확대</li> <li>-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고용률 및 실업률</li> </ul>

#### □ 환경 및 여건

##### ○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지속

- 충북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6월 기준 1,132,573명에서 2040년 937,843명으로 194,73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71.1%에서 5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봇 및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표8-15]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충북			전국		
		2017	2040	증감	2017	2040	증감
총인구		1,592,634	1,737,373	144,739	51,736,224	52,197,882	461,658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인구	1,132,573	937,843	-194,730	37,689,992	29,431,144	-8,258,848
	비율	71.1	54.0	-17.1	72.9	56.4	16.5

주)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인구/65세이상인구

출처) 행정자치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2017.06월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 2015~45년)

○ **충북 고용률 72%전략 추진**

- 민선 6기 일자리 공약으로 국가목표고용률 70%를 상회하는 충북 목표 고용률 72%를 달성하기 위해 40만개(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등 따뜻한 일자리 31만2천개, 좋은 일자리 8만8천개 목표)의 일자리창출을 제시하였음
- 민선 6기 일자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 일자리 유관기관간의 협력과 관련조례 제정 등 일자리창출 책임성의 강화
  - 지역맞춤형 인적자원 양성 중심의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 기업유치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고용 성장률의 둔화 및 청년인력의 역외 유출 증가**

- 2016년 말 현재, 16개 자치단체 중 고용률 68.5%로 2위, 실업률 2.6%로 3위로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만 15세 이상) 지표 모두 타 광역 지자체 대비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고용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임
- 전출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은 2014년 26.1%에서 2016년 27.9%로 증가 추세로 청년 인력의 역외 유출문제가 심각함

○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주력산업에서의 고용증가율**

-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및 경제협력권산업(화장품 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대표 산업군에서의 고용증가율이 전국대비 높은 상황임
- 대표산업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10~14년) : 충북 7.2% > 전국 5.6%

[표8-16] 주력산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성장률
반도체	11,667	12,282	12,333	14,307	14,389	5.4
바이오의약	4,435	4,573	4,959	5,247	5,250	4.3
전기전자부품	14,313	16,970	16,597	16,730	17,195	4.7
태양광	4,923	5,412	2,690	2,874	3,787	-6.3
동력기반기계부품	8,180	9,596	9,901	11,446	12,526	11.2

출처)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질의 일자리 및 권역별 일자리 편차

- 충북은 타 지역 대비 가장 많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하위권을 기록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월 평균 근로시간 185.6시간(2016년) 으로 전국 1위 수준
- 월 평균 급여는 2,74,278원(2016년)으로 전국 10위 수준
- 충북 내에서도 사업체 및 종사자가 청주권역에 집중되면서 권역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체수 비중(14년) : 청주권(48.3%)>북부권(26.8%)>중부권(16.3%)>남부권(8.6%)
- 종사자수 비중(14년) : 청주권(50.0%)>북부권(2.3%)>중부권(20.3%)>남부권(7.4%)
- 북부권(단양, 제천, 충주), 중부권(진천, 음성, 증평, 괴산),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미래일자리 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일자리는 로봇,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li> <li>- 미래 먹거리로서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고성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일자리 기반 확충 필요</li> <li>- 기술적 실업에 의해 감소하는 일자리를 미래 신산업 일자리로 대체하기 위한 미래 일자리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차 산업혁명 기반 고성장산업 육성전략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주력산업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ICT, 태양광, 유기농 등의 산업 분야와 연계를 가진 신기술 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에 중점</li> </ul> </li> <li>▪ <b>미래 신기술 R&amp;D특구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신기술 기반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여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신기술과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한 선순환구조 구축</li> <li>- 의약물질, 합성생물학, 항노화물질, 전기차 축전지, 자율자동차 센서, 미래형 반도체, 태양광모듈, 에너지저장장치(ES) 등</li> </ul> </li> </ul>

○ 취약계층 고용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필요</li> <li>-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직업훈련 및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워킹맘을 위한 공교육 인프라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업체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충</li> </ul> </li> <li>▪ <b>여성 고용차별 관행 철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업무 및 승진에서의 차별 등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관행 해소를 위한 캠페인 추진 및 지원제도 마련</li> </ul> </li> <li>▪ <b>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위한 新일자리 영역 발굴, 취약계층의 일자리 숙련도 향상 교육 실시</li> </ul> </li> <li>▪ <b>삶의 질을 제고하는 고용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총량제, 출산 및 양육 휴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생활 등을 제도적 또는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li> </ul> </li> </ul>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재정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li> <li>-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전략이 필요</li> <li>- 미래 신산업 및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재정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자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충북형 생산적일자리 사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실업 및 자동화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취약지역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재정일자리사업 확대 추진</li> <li>-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의 확대를 적극 추진</li> <li>- 충북형 생산적일자리사업을 기본소득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취약계층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의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li> </ul> </li> </ul>

○ 성과지표

- 지역별 임금수준 (총월급여/총근로시간)
- 근로시간 (지역별비교, 규모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및 파견직) 비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② 청년 일자리 환경제공

○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일할 권리 지원기관 운영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대두에 따른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대책 필요함</li> <li>-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 및 최저임금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종합진흥원 내 창구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li> <li>▪ 건전한 청소년 일자리창출 안내 및 캠페인 활동 추진</li> <li>▪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리 증진, 고용창출을 위한 정기적 홍보</li> </ul>

○ 청소년 직업 체험관 설치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에게 직장생활에서 얻는 경험과 일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함.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필요함</li> <li>-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자아실현을 위한 특화된 직업 상상체험시설 운영과 최신 최첨단 직업 체험관(IT, BT 등), 적성검사 등의 체험관을 구축하여 자기탐색과 진로적성을 진단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확보와 재원확보를 통한 청소년 직업체험관 조성</li> </ul>

○ 성과지표

- 청년 고용율

### ③ 지역주민 및 청년인재 발굴

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교육은 지식 주입 교육에서 창의 인재 양성으로 전환되고 공교육과 사회교육은 서로 연계되어 전 생애주기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li> <li>- 미래 직업진로 체험관을 지역 내 설치하여 충북지역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양성의 허브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li> <li>-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등으로 연계된 ICT기반 교육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CB-MOOC 등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확충하여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li> <li>- 과학기술의 변화 주기 단축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마이크로 칼리지 등의 단기 학습과정을 확대하고자 함.</li> <li>- 학위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참여가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li> </ul>

#### ○ 창의인재 교육시스템 전환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는 교육 분야에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ICT교육시스템이 정착되며, 교육은 지식의 전달 교육에서 창의인재 양성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li> <li>- 미래 ICT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수요인재를 양성하고자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기반 스마트교실 조성</li> <li>▪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학습프로그램 공모전</li> <li>▪ 전국단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li> </ul>

##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및 기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입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성인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기능 및 역할의 전환이 필요함</li> <li>- CB-MOOC 등 오픈 교육소스의 제공과 함께 단기 과정의 마이크로 칼리지 형태로 대학의 기능을 재편하여 대학이 미래 지역의 산업수요를 충족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 혁명 대응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대학 중심의 충북형 온라인 공개강좌(CB-MOOC) 개설</li> <li>▪ 지역대학 마이크로칼리지 과정 개설</li> <li>▪ 성인 평생교육 중점대학 육성</li> </ul>

## ○ 미래대응 직업진로교육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는 평생직업의 개념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진로교육의 확대와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퓨처스 잡월드 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진로설계, 창의협동 프로그램, 미래사회 체험, 미래직업 탐색, 세계관 및 생명관, 아웃도어 스쿨 등</li> </ul> </li> <li>▪ <b>직업진로 전문연구센터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평생교육원내에 직업진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도민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도록 전문화된 지원조직 운영</li> </ul> </li> <li>▪ <b>직업진로카페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도심에 개설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배치</li> </ul> </li> </ul>

## ○ 성과지표

- 지역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나. 근로환경 보장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기술적 실업 대응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 비정규직 비율 - 노동취약계층 고용률 (노인, 여성, 장애인)
② 상생의 지역경제 확대	- 4차 산업혁명 수요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최적형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 고용 규모별 기업(수) 추이(개인사업자제외) - 지역친화기업 수 - 최저임금 비율

## □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고도화 및 급속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 실업, 일자리 및 소득 양극화,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고용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 우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 고도화 및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산업분야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래 고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고용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노사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 산업 고도화에 따른 여성 등의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과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재정
- 투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신 빈곤층 전략을 예방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고성장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산업환경의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은 산업의 파생수요이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인프라로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과 인재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함.
- 현재 고용정책 거버넌스는 중앙에 의존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과 일자리 창출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지역 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통합적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 현황 및 여건

### ○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 확산

- 미래 초연결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워크가 확산되면서 근무시간의 고정성이 완화되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라이프스타일 변화 및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공유경제 기반의 서비스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 인력 또는 신규 양성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능정보 기술과 기존 산업영역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 시스템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워커(독립형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기술적 실업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인력난 심화

- 로봇, 인공지능(AI) 등의 산업현장 도입에 따른 인간 노동력의 대체, 인간의 학습능력이 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 실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관계부처합동(2016)에 따르면 국내 414개 직종(250만명)을 분석한 결과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7%가 자동화 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직업군 자동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자동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
  - 충북은 2015년 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46.6%에 달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 미래 신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단기적으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신성장산업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어짐
  - 충북의 경우 바이오산업, ICT산업, 태양광산업,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래 고성장융복합산업 인프라가 확충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
-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혁신역량의 집적화로 인해 미래 양질의 일자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충북에서 수도권으로 인력이 이동하는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시스템 및 노동시장 재편 촉진

- 현재의 주입식교육, 학위 위주의 교육은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에서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인재의 개념 및 가치 변화 : 학위, 스펙 ⇒ 창의, 도전, 협동
- 인공지능 도입 등 ICT기반 교육시스템 확산 :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대
- 주입식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수업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
- 현재 4년제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은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단기간의 학습코스로 진행되는 마이크로 칼리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은 근로자를 신기술을 습득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중간임금 근로자의 급속한 붕괴가 예상되면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① 평등한 기회와 근로환경 보장

○ 기술적 실업 대응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한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대체현상의 확산으로 인해 기술적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 기술적 실업의 양상은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가 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일자리에서의 조기 은퇴자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0플러스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일자리에서 조기 은퇴하는 신중년들의 고민과 진로를 상담하고 신규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서비스 전문지원기관을 설치</li> </ul> </li> <li>▪ <b>신중년 재취업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테크를 활용한 직업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li> <li>-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신중년 오프라인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li> <li>-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장애인과 비장애 인간에 사회적 지위 및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li> <li>- 노사 민정 협의체를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일자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양질의 일자리기업 유치 및 인력채용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수준이 높고 정규직 채용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유치기업의 인력채용을 우수인력 연계 또는 채용지원금 형태로 적극 지원</li> </ul> </li> <li>▪ <b>노동시장 이중구조 제로화를 위한 제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및 유형별 대책의 제도화 추진</li> </ul> </li> </ul>

○ 여성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지원 확대</li> <li>▪ 여성인턴제 운영</li> <li>▪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 및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 사업 확대</li> <li>▪ 직업교육훈련,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 지속적 운영</li> </ul>

○ 성과지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 비정규직 비율 : 충청도내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노동취약계층 고용률(노인, 여성, 장애인)

② 상생의 지역경제 확대

○ 4차 산업혁명 수요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인력양성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li> <li>-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재수요를 충족</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차 산업혁명 '지역 일자리 전략산업'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신산업 분야 중 일자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일자리 전략산업으로 선정</li> </ul> </li> <li>▪ <b>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전략산업 분야의 미래 기술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li> </ul> </li> <li>▪ <b>4차 산업혁명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중 미래 신기술분야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고 4차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미래 인재수요에 대응</li> <li>-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직업훈련기관은 현재 산업수요의 인력양성 역할을 담당</li> </ul> </li> </ul>

○ 4차 산업혁명 최적형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인재수요 대응과 고용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미래 과제이므로 민관 산 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 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적 고용정책 거버넌스 필요</li> <li>-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고용협력 주체들이 모여 정책방향과 전략적 틀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충청북도 미래고용대책위원회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고용대책위원회는 미래 산업 및 고용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심의기구의 형태로 설치 운영</li> </ul> </li> <li>▪ <b>충청북도 일자리본부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일자리본부는 인적자원의 확보, 양성, 공급, 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을 융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고용문제는 물론 미래 고용문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구로 운영</li> </ul> </li> </ul>

○ 성과지표

- 고용 규모별 기업(수) 추이(개인사업자제외)
- 지역친화기업 수
  - 충북전체 경제비율 대비 지역친화기업의 비율
- 최저임금 비율 : 충청도내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

## 다. 산업기반 강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역 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li> <li>- 공유자원 발굴 및 비즈니스 문화 /모델 확산</li> <li>- 공유경제기업 육성 및 규제적 제도 개선</li> <li>- 충북형 제조업의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li> <li>-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외 순수취본원 소득관리 :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NI)간의 차이</li> <li>- 공유기업 수</li> <li>- 도내 분야별 업체 수</li> </ul>

□ 배경 및 필요성

- 공유도시 선언, 관련조례제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공유경제 기반구축 및 활성화하고자 함
-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 공유허브 구축 등 공유분위기 확산뿐 아니라 교통문제, 재난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환경 및 여건

○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전환

- 소유 중심의 상업경제에서는 경험, 재능, 시간 등의 무형자원은 소유권을 정하기가 어려워 거래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나 공유경제 방식으로는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아이디어 까지 거래가 가능해질 것임
  - 거래되지 않던 자원을 거래하는 모델일수록 신규시장을 창출하며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 또한 아마추어나 개인 등이 주체로 성장하여 해당 시장을 키워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그림8-1] 공유자원의 종류

공유자원		개념	예	참여자모델
유형 ↑ ↓ 무형	물질	재활용, 재사용	유리, 종이 재활용 등	다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사용자
	재화	재분배 시장	벼룩시장, 중고시장, 자선마켓, Freecycle 등	개별공급자와 개별사용자 사이의 1:1 거래
	서비스	상품화된 서비스	집카, 넷플릭스 장난감공유, 도서관 등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사용자
	웰빙	협력적 생활방식	에어비엔비 등 p2p공유	다수의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개별사용자 사이의 거래(p2p)
	역량	집단적 공유재	인터넷, 도로 등 기반시설	다수의 공급자 집단과 다수의 집단적 사용자

출처) 서울디지털재단(2016),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 ○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유경제 시장 활성화 지원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공유경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협력성장·포용 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사회서비스 혁신 및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유도함
  -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정책 지원 효율화
  -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① 지역친화 경제기반 및 창업기반 강화

##### ○ 중복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화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중복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립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강구 제기</li> <li>- 온라인 공유 플랫폼 제공, DB 구축, 공유 활동 참여방법 안내 등</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복도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하여 중복도와 역내 민간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유형 모형 도출을 도출·상생방안 강구</li> </ul> </li> <li>▪ <b>공유 허브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사업 추진단체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li> <li>- 공유관련 자료와 사례를 아카이빙 하고 공유단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li> <li>- 다양한 공유플랫폼을 통합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공유 참여방법을 한곳에서 안내</li> </ul> </li> </ul>

## ○ 공유자원 발굴 및 비즈니스/문화 모델 확산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의 공공청사의 회의실 등 각종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li> <li>- 민간에서 토지 건물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시 시에서 설치비용 운영비 지원, 최초운영권 부여, 자녀 우선입소 등 혜택 제공</li> <li>- 충북지역의 주요 거주 지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의 시설을 공유화</li> <li>-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문화 조성</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공기관 공유자원 발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 옥상 등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li> <li>- 공공청사의 회의실 등 각종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li> <li>- 충북지역의 주요 거주 지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 시설을 공유화</li> </ul> </li> <li>▪ <b>민간기관 공유자원 발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 활용 데이케어센터 설치</li> </ul> </li> <li>▪ <b>공유문화 실천 환경 조성 : 학교 교육과 연계</b></li> <li>▪ <b>공유문화 체험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전개</b></li> <li>▪ <b>시군 별 특화 프로그램</b></li> </ul>

## ○ 공유경제기업 육성 및 규제적 제도 개선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혁신형 사회적 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유경제의 연계</li> <li>- 충청북도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추진기반을 마련</li> <li>- 교통, 문화,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 활동과 충돌되는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유기업 창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혁신형 사회적 기업 및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공모 시 공유경제를 한 분야로 지정하여 초기 사업비 및 사무공간 지원</li> </ul> </li> <li>▪ <b>공유지원조례제정 및 공유촉진위원회 구성</b></li> <li>▪ <b>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내지 별도의 「공유네트워크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가 필요함.</li> </ul> </li> </ul>

○ 중복형 제조업의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li> <li>- 이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사 중에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제조업의 업종별 서비스화 로드맵 수립 및 지원</li> <li>▪ 공공 인프라 빅데이터 공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지원</li> </ul>

○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적 지원</li> <li>▪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출 지원</li> <li>▪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촬영스튜디오 운영</li> <li>▪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li> <li>▪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개최</li> <li>▪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li> </ul>

○ 성과지표

- 지역 외 순수취본원 소득관리 :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NI)간의 차이
- 공유기업 수

## 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체계 구축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 산업기반 신영역발굴</li> <li>- 충북형 제조업의 서비스 가치 사슬화</li> <li>- 도전적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li> <li>- 충북형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li> </ul>	- 일자리 창출실적

### □ 배경 및 필요성

- 충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구조 하에서 충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 □ 현황 및 여건

-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수립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충북과학기술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통한 과학기술의 메카 충북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

[표8-1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통한 과학기술 메카 충북 건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li> <li>- 신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광역선도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강화</li> <li>- 충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amp;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확립</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 수립</li> <li>• 지역사업(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중심의 광역연계 추진</li> <li>• 바이오, 태양광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전략적 지원</li> <li>• 지역주도 R&amp;D 사업 기획역량 강화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선도형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li> <li>• 산업, 경제, 교육,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과학기술발전에 적합한 차별적인 혁신자원의발굴과 기존역량의 강화</li> <li>•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킹 재구축(충북지식산업진흥원)</li> <li>• 첨단과학기술기반의 특화클러스터 육성</li> <li>• 과학기술정보와 과학문화에 대한 공유마인드 확산과 저변 확대</li> </ul>

출처)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3.7),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3~'17)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미래관점에서의 지속적 과학기술·창업생태계 지원 필요
  - 2015년 충청북도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국의 2.09%로 17개 시·도 중 8위를 기록하였으나 1~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투자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아직까지 전국평균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과학기술혁신역량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창출된 기술을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로 측정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충북은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
  -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화학제품, 기계장비, 태양광 등 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군 주도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 산업별 성장기여도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운송장비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대표산업과 신성장산업(6+3)중심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충북은 203년부터 육성해오던 지역산업을 2015년에 8대 대표산업(5대 주력산업과 3대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재편성·육성 추진
    - 5대 주력산업 :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3대 협력 산업 :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 미래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을 발굴·육성 진행 중

[표8-18] 충북 신성장산업(6+3)구성

구분		특화분야
6대 신성장 산업	바이오산업	- 바이오의약,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당뇨바이오, 감염병 대응, 건강친화산업(웰니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바이오매스 - 신에너지 : 이차전지,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장품·뷰티산업	- 화장품산업 : 향노화물질, 기능성화장품 - 뷰티산업 : K-뷰티산업, 뷰티헬스 등
	유기농·식품산업	- 유기농산물 생산, 유기농 가공식품 및 발효식품, 기능성음료
	신교통·항공산업	- 신교통산업 : 미래철도, 자율주행자동차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 교통서비스산업 : 복합운송물류서비스
	ICT융합산업	- IT,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스마트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3대 미래 유망 산업	기후·환경산업	- 기상산업, 물 산업, 환경복원산업 (오염방지설비, 수질측정 및 관리), 자원 리사이클링산업(폐기물 처리 및 활용)
	관광·스포츠산업	- 미래형 핵심관광인프라 확충 - 스포츠테마연계 창조관광 (산악, 수상, 스포츠파크) - K-뷰티 서비스 (에듀팜, 밀레니엄타운 활용)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등 뿌리기술 산업 (특화 응용분야 : 동력기반 기계부품산업)

출처) 함창모 외(2016),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충청북도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①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 ○ 6+3 산업기반 신영역 발굴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li> <li>- 첨단 전략산업의 전체적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변화의 트렌드를 보면서 세부 방향성과 틀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형태로의 전략 추진이 요구됨</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충북의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산업기술지도 및 육성 등과 관련된 기술지도 및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추진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산업 분야별 기술 로드맵과 사업화 방향, 충북의 특화 분야 등을 설정하고 3년 또는 5년 단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함</li> <li>-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R&amp;D), 인프라 구축, 표준화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각 구성요소에 대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함</li> </ul> </li> <li>▪ <b>충북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관된 Test Bed의 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기조 상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대부분 시범사업과 Test Bed 체계를 가지고 있음. 충북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접근성 등을 토대로 충북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Test bed 유치를 추진함</li> </ul> </li> </ul>

#### ○ 충북형 제조업의 서비스 가치 사슬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li> <li>- 이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 중에 있음</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내 제조업의 업종별 서비스화 로드맵 수립 및 지원.</b></li> <li>▪ <b>공공 인프라 빅데이터 공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지원.</b></li> </ul>

○ 도전적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구조 하에서 충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첨단 분야 벤처창업생태계에 대한 Bench Marking 대상지역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로 선정하여 육성을 추진함</li> </ul> </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성장거점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전문화된 스타트업 벨리 공간 조성.</li> <li>▪ 퓨처 스타트업 벨리는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미래 기술가치 중심의 창업을 선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위치하도록 배치함.</li> <li>▪ 스타트업 벨리는 청년 창업가들이 기술혁신과 사업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동일 공간 내 거주시설 등 정주환경이 함께 조성하도록 기획되어야 함.</li> <li>▪ 벤처생태계의 구간이 되는 아이디어→창업→성장(M&amp;A)→글로벌시장 진출(M&amp;A)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li> </ul>

○ 충북형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제품의 가치상승을 위한 전문디자인 지원센터 필요</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제품 New 디자인 지원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제품디자인 지원 사업</li> <li>- 3D 프린팅 적용 바이오제품개발 지원 사업</li> <li>- 신기술 적용 대응 지역 디자인 전문가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li> </ul>

○ 성과지표

- 일자리 창출 실적

## 마. 지속가능한 공동체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마을주민 주도 경제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자생력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조성	- 사회적 경제 조직 수 - 사회적 기업 생산량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 사회적 경제 자생력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확대</li> <li>▪ 자립기반 조성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li> <li>▪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li> </ul>

#### ○ 성과지표

- 사회적 경제 조직 수 및 생산량

## 바. 지역순환체계를 갖춘 농촌공동체 지향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기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팜 확대</li> <li>- 농업생태계의 변화에 대응</li> <li>- 식품가공 및 초고속 유통 혁신</li> <li>-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맞춤형지확대</li> <li>- 농업 6차 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군의 농지면적</li> <li>- 유기농 인증면적</li> <li>- 농촌인구</li> </ul>
② 로컬푸드 이용 증대	-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매장 수 및 매출액</li> <li>-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비율</li> <li>- 로컬푸드 체계에서 생산자의 수</li> </ul>

###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식품가공, BT,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 활용하고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투입재의 후방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을 미래의 핵심인 농·생명 산업으로 육성.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식품 가공·유통의 혁신, 식품 안전과 질병 치료, 에너지/자원순환 등을 실현하는 농업의 융복합을 실현.
-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여 주민 건강 증진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현황 및 여건

- **기술 집약·복합형 농산업으로의 전환**
  - 충북의 미래 농업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기술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작물 재배, 가축사육에 한정하지 않고 종자, 농기계, 유통, 식품,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복합 산업(Complex Industry)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생태계 조성준**
  - 충청북도는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을 수립하고 ICT기반 농업·농촌과 기후변화대응의 관점에서 제반 사업을 추진 중임
- **공유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은 높으나 적용영역은 농업부분에 집중**
  - 충북은 시민사회단체 등 풍부한 시민자본, 공유경제를 선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단체(경실련)의 노력, 도민들의 사회단체 참여 등 공유경제 협력기반으로서의 사회분위기는 양호한 편임

[표8-19] 충북지역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추진 상황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농기계임대사업
2014년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확정, 시범 설치 운영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2015년 하반기	3개소 설치(6개소 지원)	2개소
2016년도	3개소 설치(9개소 지원)	3개소
2017년도	3개소 설치(12개소 지원)	3개소
2018년도	12개소 지원	4개소

출처) 충북공약추진사업, 균형발전분야,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추진자료

[표8-20] 로컬푸드 매장 설치현황(2016년)

로컬푸드 매장명		
음성농협로컬푸드매장	진천농협로컬푸드매장	충주농협로컬푸드매장
남성로컬푸드매장	상당용암직거래장터1	상당용암직거래장터2
한우리직거래장터	홍덕구청광장장터	모아모아직거래장터1
모아모아직거래장터2	두레장터	충북농협금요장터
청주MBC로컬푸드직거래장터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흙살림
청원생명블루베리농민장터	지구농부협동조합	하늘농부유기영농조합
문의공동체협동조합	가톨릭농민회 우리농	두꺼비살림
옥천푸드직매장	해인(도담)	총 23개소

출처) 충북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로컬푸드실태조사]2016년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표8-21] 로컬푸드 매장 운영현황(2016년)

매장명	위치	개장 년도	매장 규모	입지	연 매출액	일방문 객평균	참여 농가수	연간 영업일	납품 회원
음성 농협	음성	2015	120	농촌지역	-	1700	175	365	175
진천 농협	진천	2014	227	농촌지역	10억	1300	175	362	100
충주	충주	2015	198	도시내매 장형태	800억	100	150	360	50명
낭성	청주	2015	60	농촌지역	11억	80	50	365	50
상당용암직 거래장터	청주 용암	2015	550	도시내매 장없음	1억1천	200	35	35회	35
상당용암직 거래장터	우암어린 이회관	2015	300	도시내매 장없음	1천3백	200	35	15회	35
한우리직거 래장터	성화 장전	2015	950	도시내매 장없음	7천8백	300	34	30회	34
흥덕구청광 장장터	흥덕 구청 광장	2015	1000	도시내매 장없음	1억6천	300	21	30회	21
모아모아직 거래장터	주중동 마로니에 공원	2015	1500	도시내매 장없음	1억7천	800	44	40회	44
모아모아직 거래장터	내수 초정문화 공원	2015	700	도시내매 장없음	2억7천	800	44	40회	44
청주MBC로 컬푸드 직거 래장터	청주MB C앞	2015	560	도시내매 장없음	3억5천	1000	70	40회	30
두레장터	청주에버 세이브	2015	298	도시내매 장없음	1억8천	5000명	33	19회	33
충북농협금 요장터	충북농협 광장	2015	500	도시내매 장없음	3억3천	1000	26	35회	26
청원생명 블루베리 농민장터	문의 남계리	2015	1500	도시내매 장없음	2억9천	500	20	30회	20
청원친환경 농산물유통 센터	청주 오창	2009	4082	농촌지역	67억	-	500	200	500
흙살림	청주 북이	2009	2000	농촌지역	12억	-	120	200	5120
문의공동체 협동조합	청주 남일 화당	2014	500	농촌지역	7천	-	50	200	50
해인 (도담)	흥덕구 신촌	2010	2188	농촌지역	28백만	-	300	200	300
지구농부 협동조합	청주 문의 도원	2010	300	농촌지역	68백만	-	100	200	100
하늘농부 유기영농 조합법인	청주 오창 가곡	2010	300	농촌지역	58백만	-	100	200	100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 유지

#### ○ IoT기반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팜 확대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된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복합공간 조성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li> <li>- 농업과 IT, BT, NT를 융복합한 농생명 신소재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블루오션 사업</li> <li>- 농생명자원(식물·동물·곤충) + 생명과학기술 = 농생명 신소재</li> <li>- 다양한 생명자원을 토대로 농생명 소재산업이 제2의 국가 성장 동력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지원</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4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 연구, 실습, 창업지원, 체험관광 등 복합서비스</li> </ul> </li> <li>▪ <b>미래 농생명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농생명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전진기지, 전문 인력 양성 등</li> </ul> </li> <li>▪ <b>ICT 융복합 및 인터넷 활용 첨단농업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li> <li>-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li> </ul> </li> <li>▪ <b>에너지 절감시설, 목재펠릿</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li> <li>-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li> <li>-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li> </ul> </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농업생태계의 변화에 대응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가 없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내수면 육성으로 선점 명품화</li> <li>- 내륙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 SOC 기반시설 확충</li> <li>- 돌발병해충, 자연재해 등 분석·관측을 통한 적기 예방 및 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 순찰(드론) → 의심지역 분석·정보 분석(드론) → 현지 확인 → 방제</li> </ul> </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국 최대의 민물고기 테마공원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가공 판매) 수산식품산업단지 조성</li> <li>- (양식수산물 생산) 내수면양식단지 조성</li> <li>- (자연생태체험) 전국 최초의 열대관상어 전시관 건립</li> <li>- (물고기관련 축제) 물고기 생태체험장 조성</li> <li>- (먹거리 명소화) 매운탕거리 조성</li> </ul> </li> <li>▪ <b>해수 공급을 위한 해수관로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지권내 해수공급 거점지역으로 육성</li> </ul> </li> <li>▪ <b>인공지능 드론 이용 병해충 관측·방제 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센서 등을 부착하여 관측(병해충, 유해조수)·방제 관련 작업 수행</li> <li>- 농자재, 농산물 운반 및 수행기능 역할 수행(경운기→드론)</li> <li>- 현재 개발된 드론 활용 지적 및 관측센서, 중량 등 업그레이드 필요</li> </ul> </li> </ul>

### ○ 식품가공 및 초고속 유통 혁신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한 SNS의 확대로 농산물 마케팅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 필요</li> <li>-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보전,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li> <li>- 소비형태, 소비계층, 소비성향 등 유기농산물,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동향 데이터 구축으로 효과적인 시장공략</li> </ul>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구매 콘텐츠 제작 판매촉진 이벤트 등</li> </ul> </li> <li>▪ <b>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 농가에 울타리, 도색 및 벽화, 조경수, 입간판 설치 등</li> </ul> </li> <li>▪ <b>유기농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재배 농가, 경작지, 매뉴얼, 기술, 사례, 단지모델 등 데이터 구축</li> <li>- 유기농산물, 유기농식품 유통 시스템 구축</li> <li>- 소비 행태·성향·계층 등 소비자 동향 빅데이터 구축</li> </ul> </li> <li>▪ <b>농산물 산지조직화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li> <li>-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제 운영</li> <li>-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li> <li>- 공공비축 미곡 매입 추진</li> <li>- 정부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li> </ul> </li> </ul>

○ 미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맞춤형 복지 확대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농업 주역인 후계농업 경영인 양성</li> <li>▪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li> <li>▪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li> <li>▪ 안전한 농촌마을(방범용 CCTV) 조성</li> </ul>

○ 농업 6차 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li> <li>▪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li> <li>▪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li> <li>▪ 농촌중심지(읍면소재지) 활성화 사업</li> <li>▪ 활기찬 농촌프로젝트</li> <li>▪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 보전</li> </ul>

○ 성과지표

- 각 시군의 농지면적
- 유기농 인증면적
- 농촌인구

② 로컬푸드 이용 증대

○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통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기반조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각층(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포함)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li> </ul> </li> <li>▪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li> </ul> </li> <li>▪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li> <li>▪ 농업인 직거래장터 확대 지원</li> <li>▪ 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원</li> </ul>

○ 성과지표

- 로컬푸드 매장 수 및 매출액
-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비율
- 로컬푸드 체계에서 생산자의 수

## 4. 기타영역 세부 이행계획

### 1) 기타영역 정책범주 및 이행계획

분야	정책범주	세부 이행계획	주요사업
지방 행정	1. 지방행정문화 신뢰도 확보	①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문화를 구축	-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 확대 - 공직역량강화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
거버 넌스	2. 지역역량 강화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 자체예산의 확충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3. 협력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충북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

### 2) 정책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 가. 지방행정문화 신뢰도 확보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문화 구축	-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 확대 - 공직역량강화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도민 시상 실적</li> <li>위탁보육비 규모</li> <li>각 시군 예산 규모</li> </ul>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 확대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 활성화 및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li> <li>행사·축제 관련 경비 예산편성 원칙 엄격 적용</li> <li>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분석</li> <li>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통해 재정낭비 최소화 : 정기 4회, 수시</li> </ul>

## 2편. 세부이행계획 수립

### ○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전 직원 연 1일 이상)</li> <li>▪ 도민대상 및 모범도민 시상, 명예도민 위촉 확대</li> <li>▪ 양성평등 균형인사 강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 운영</li> <li>▪ 저소득층(선발인원 2%), 실업계고 졸업·예정자(기술직 3명) 임용기회 확대</li> <li>▪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 지원(2.69억원)</li> </ul>

### ○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

사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지사 맞춤형 현장대화 실시</li> <li>▪ 주민편익 증진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일제정리, 인구현황공개 등)</li> <li>▪ 도지사 현장대화(11시군) 및 시·군 부단체장 회의(매월) 실시</li> <li>▪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li> <li>▪ 연중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재능 나눔 이어가기 등)</li> <li>▪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토요일민원실 및 평일(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li> </ul>

### ○ 성과지표

- 모범도민 시상실적
- 위탁보육비 규모
- 각 시군 예산 규모

## 나. 지역역량 강화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예산의 확충</li> <li>-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견 수렴 실적</li> <li>▪ 투자심사 실적</li> <li>▪ 시군 공기업 수</li> </ul>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 자체예산의 확충

#### 사업의 내용

- 도세 징수목표액(8,631억원) 안정적 달성 및 체납액 징수 강화
- 맞춤형 세무조사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운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 입금통보제 등 고객 서비스 제공
- 관급공사 입찰 시 도내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49%) 추진
- 계약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지원(심사기간 10일→7일 이내)

####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사업의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정착 및 예산관련 도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 자문단 운영 활성화, 도민예산 참여방 운영
-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낭비 최소화(정기 4회, 수시)
-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분석
-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로 공기업 경쟁력 강화

#### ○ 성과지표

- 도민의견 수렴 실적
- 투자심사 실적
- 시군 공기업 수

### 다. 협력체계 구축

세부 이행계획	사업내용	성과지표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충북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	-

#### □ 이행계획별 사업내용

#### ○ 충북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

사업의 내용

- 도정현안 기획·조정 및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 전개
  -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주축, 주요 실천과제 추진
- 「도정 정책자문단」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대학생·청년 포럼,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추진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충북도청 통계연보(연도별 통계표)
- 한국통계연감(2016)
-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립생물자원관 연보(2011~2014)
- 충북 생물다양성 전략수립(2017)
- 한반도의 생물자원 국립생물자원관(2015)
- 자연순환정보시스템,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10~2015)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01~2016)
-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1-2015),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서자료(연도별 인증현황)
- 한국도시통계 사회복지시설 수, 행정안전부
-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2013)
- 교통사고 통계자료, 경찰청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2011, 환경부 외
-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2012)
-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확률 강우량(1967~2012)
- 기상청 국내기호자료
- 청풍명월21, 충청북도(1997)
-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국토교통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충북의 사회지표(2016)
- 지속가능발전충북포럼(2017)
-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연구, 여성가족부(20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6)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2016)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 2016), 보건복지부

-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5)
- 지역별(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2017년 08월, 고용노동통계포털
- 전라북도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2013.02.19.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 충청북도 청풍명월 21실천협의회 로컬푸드실태조사 2016년
- 충북 경찰통계, 충북지방경찰청
- 범죄분석통계(청주지방검찰청 통계자료), 검찰청
- 2016 사회조사, 충청북도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률구조현황통계, 대한법률구조공단
-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내부 청렴도
- 선거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충북생물다양성전략수립(2017), 충청북도
- 충북미래비전2040(기후환경)
- 대기환경연보(2015), 각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 각시도별 통계연보(2012~), 환경부
- 경찰청(경찰범죄통계)
- 각년도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
-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2016)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3~`17),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3)
-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함창모 외(2016)